

# 개별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방안 모색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본 정책연구용역과제는 대한민국 외교부 동아시아 경제과(East Asian Economic Affairs Division)의 연구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 입니다.

## 《참여연구원》

---

### ○책임연구원

오명석(인류학 박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장  
mysoh@snu.ac.kr

### ○연구원

엄은희(지리학 박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likemoon@snu.ac.kr

정범모(인류학 박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sao0526@hotmail.com

이요한(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prolao@hanmail.net

최경희(정치외교학 박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kallikyung@hanmail.net

이지혁(국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tankm@hanmail.net

백용훈(사회학 박사)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원  
beakyh@hanmail.net

### ○연구보조원

이유경(도시재생학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julep13@naver.com



## 보고서 요약

본 정책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는 한국기업이 동남아 국가에 진출하고자 할 때, 지역적 그리고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무엇을 고려하여 투자 및 기업진출을 모색해야 할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2016년도 전 세계는 요동쳤다. 중동의 정치적 불안, 유럽연합(EU)로부터 영국의 탈퇴결정,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 그리고 계속되는 세계경제 침체 등 세계 정치경제적 변화와 경기 후퇴는 우리로부터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이하 AEC)의 출범과 2025년 비전을 향한 집행과정은 한국경제미래에 긍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와 긴밀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총체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기업에게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6년 현재 상태에서 AEC의 산업구조를 고소득 국가군, 중진 제조업 국가군 그리고 메콩지역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고, 고소득 국가군 사례로서 말레이시아, 중진 제조업 국가군 사례로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메콩지역 개발도상국 사례로서 캄보디아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으로 삼은 개별 국가에 대한 집중적 사례분석을 우선하면서도, AEC 속의 각 개별국가가 어떤 위상과 산업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AEC 전체 구도도 부분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즉, 개별 국가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도 AEC 속에 전체 연구대상 국가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시 말해서, 각 개별국가는 첫째, AEC 속의 개별 국가의 포지셔닝 둘째,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특성 셋째,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넷째,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다섯째, 투자 및 유망업종 여섯째, 한국기업 진출 전망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무엇보다 각 연구자들이 개별 연구대상 국가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도출된 한국기업 진출 전망과 시사점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2020년 선진국 진입을 꿈꾸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소비재 기업의 동남아진출을 위해 동남아 중산층 시장의 시험대로서 말레이시아를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진국을 향한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어서 한국기업의 ICT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조언한다. 더불어 말레이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할랄의 세계화와 이슬람 금융의 확대 정책을 한국이 예의 주시하면서, 이를 잘 활용할 방법과 이를 통해 발생할 수도 있을 경제적 불이익(무역 장벽)을 미연에 예방할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30년 제7위 경제대국을 향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장 많이 투자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기업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진출은 인도네시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더 강조점이 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발전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관련한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시급히 구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거대 소비시장으로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특징과 말레이시아와 함께 ‘무슬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아세안 생산·물류 허브를 꿈꾸는 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잠재성장률 하락 등 중진국 함정이라는 부정적 요소도 있지만, AEC 출범 계기로 경제도약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태국도 AEC를 생산기지로서의 원활한 흐름과 물류의 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교통, 통신, 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강조점이 있다. 또한 동남아 10개국 중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소비구매력이 높은 태국은 한국소비재 산업 진출의 교두보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핵심 거점으로 한국의 소비재 및 한류 문화상품의 매우 중요한 소비처이다. 또한 태국 정부가 전략적 육성산업으로 의료 관광산업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료산업의 태국진출은 매우 중요한 고려지점이다.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을 기반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필리핀의 경우, 인도와 더불어 BPO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다. BPO는 일부 업무를 전문 회사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방법의 하나로, 경영상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 처리의 운영 및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올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두테르테는 범죄와의 전쟁을 부각시켜 최고 득표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미디어 보도에서는 신정부 역시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 등 이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과 현 필리핀 헌법에서 규정한 40%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완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신정부가 표방하는 또 하나의 축은 경제 불균등의 완화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게 국민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바는,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일정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현대화된 선진 공업 국가 건설을 꿈꾸는 베트남”의 경우, ‘2011-2020 사회경제 개발전략’에서 “선진화된 공업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2025년까지 베트남 공업 발전 전략, 2035년을 향한 비전’에 대한 총리 승인 결정문에 따르면 202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 부문, 즉 가공 및 제조, 전자 및 원거리 통신,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이러한 총리 승인 결정문에 제시되어 있는 산업분야에 주목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베트남에서 유망한 100대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공 인프라 부문, 제조 및 가공업 부문 그리고 소비재·유통 및 서비스 부문에서 잠재 가능성이 큰 국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빈국을 넘어 차세대 생산물류 기지를 꿈꾸는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도 산업은 섬유(의류 및 봉제)와 관광이다. 중국 및 베트남의 임금 상승에 따라 이전을 모색한 섬유 분야 기업들의 차세대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봉제제품의 주수입국인 EU, 미국의 주문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도 캄보디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다. 최근의 경제성장과 중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들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동산 건설 부문 역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축으로 부상 중이다. 관광과 제조업 생산에 이어 물류 및 건설 부문이 캄보디아의 경제상장을 견인하고 있다. 2030년까지 프놈펜의 도시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거 부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렴한 주거시설 공급으로 기존 시장과의 차별화를 둔 접근으로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의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캄보디아는 또한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대상국 중 하나로 개발협력, 환경협력, 경제협력 간의 조화와 협력이 어느 국가보다 필요한 국가이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나 틈새시장으로서의 친환경 농업생산 및 유통 부문, 농촌개발사업 등은 적극적인 관심을 요하는 부문이다.

결론적으로 2025년까지 AEC 플랜과 개별 국가의 경제발전 플랜이 제출된 상태에서 한국의 대(對) 동남아 경제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아세안 지역과 개별국가를 유기적으로 접근할 전담부서 및 팀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개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정책 제안

### □ 외교부 내에 동남아 경제 전담팀 구성을 제안함.

- 2025년까지 AEC 플랜과 동남아 개별 국가 경제발전 플랜이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한국의 대(對) 동남아 경제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 아세안 지역과 개별국가를 유기적으로 접근할 전담팀이 필요함.
- 전담팀을 통해 대(對) 동남아 경제관계의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입하는 노력을 해야 함.
- 전담팀은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외교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야함.
- 예를 들면, 한아세안 센터는 2016년까지 ‘제4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진행하면서, 2017년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인프라 계획을 “프로젝트” 사업발굴단계로 전화하려고 함. 사실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 인프라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임. 인프라는 동남아 전체 국가와 관련된 것임. 한국 경제가 동남아 인프라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정부의 전 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임.
-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민간기업의 진출을 진두지휘할 경제외교의 사령탑이 필요함.

### □ 동남아 중산층 공략을 위한 시험대(Test Bed)로 말레이시아를 삼아야 함.

- 말레이시아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3천 달러를 넘어서서 선진국 진입을 앞둔 산업국가. 한국정부와 기업은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비재 및 문화컨텐츠 시장으로서 말레이시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향후 증가할 동남아시아 중산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시험대(test bed)로서 말레이시아를 활용할 가치가 있음. 더불어 한편으론 할랄 산업 및 이슬람 금융의 세계적 선도국으로서 말레이시아를 활용할 방법과 다른 한편으론 이슬람 경제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것을 대비할 방법을 간구해야 함.

### □ 생산과 물류의 허브화를 모색하는 태국의 미래 산업을 주목해야 함.

- 한국 기업의 대 태국 진출을 위한 정책 방안은 첫째, 태국의 왕위 승계와 총선 과정 등 정치적 변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새롭게 구성될 신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그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 필요. 특히, 방콕지수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백지화 사례처럼 2017년 총선 전후 전개될 정치적 주도권을 탁신계가 잡을지 반탁신계가 잡을지를 주목해야 함. 둘째, 태국의 미래에 주목하는 산업 즉 전략적 육성 산업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확대되어야 함. 특히 ASEAN의 제조와 물류의 허브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국의 비전



을 활용하여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변동 즉 도시 인구의 급증, 소비의 현대화, 고령화 추세와 같은 태국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성공을 거둔 태국 현지 기업 및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확대하여 한국 기업의 진출에 고려해야 함.

#### □ 디지털 사회에 기초한 제9대 무슬림 소비시장 인도네시아 가치에 주목해야함.

- 2016년 세계경제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이고, 향후 오랫동안 제4차 산업혁명은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임. 다시 말하자면, 정보산업혁명에 기초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은 제조업분야와 결합하여 제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러한 생산의 변화는 인터넷 생활, 소비시장 그리고 소비문화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임. 무엇보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디지털 시대로 진입해있기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타트업 창업이 가능한 혁신적 요소가 충분한 사회임. “젊은 무슬림 세대, Generation M”의 출현은 인도네시아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무슬림 소비시장의 가치를 보여주는 코드임. 전 세계인구의 대략 25%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 시장에 대한 관심은 감히 그 규모와 확장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음.

#### □ BPO 산업의 세계적 강국 필리핀을 이용해야함.

- 제조업이나 수출 주도산업 이외에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필리핀, 이 특성에 주목하여 한국의 기업 진출과 국제협력도 발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IT 관련 인프라 구축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필리핀의 인력을 이용한 BPO 산업에 진출하는 것도 방법임. 현재까지는 영어 학습 관련 분야 중심으로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영어 교육 시장을 한국인 구매자에서 중국이나 인근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영어 교육 외에도 외국어 제공 서비스에 BPO 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 동남아 신흥공업국, 베트남 제조업 시장에 주목해야함.

- 베트남은 “2020년까지 현대화된 선진 공업 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조업 및 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경제 및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향후 2035년까지 비전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공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음. 뿐만 아니라 AEC와 FTA 등으로 인하여 아세안 역내는 물론이고 유럽 등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잠재성과 고부가 가치의 수출 상품 개발을 위한 제조업 발전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한국 정부와 기업은 ①섬유·봉제, 신발 및 농림수산물 가공업, ②전자, 정보 기술, 기계 역학, 화학 등 하이테크 산업, ③전기, 석유, 가스 탐사 및 가공 등 기간산업, ④금속 및 철강, 조선, 자동차, 농기계, 운송 장비 등 중공업 분야에서 성장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세계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차세대 생산물류기지로서 캄보디아,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틈새전략을 개발해야 함.

-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회원국 중 최빈국에 속하는 캄보디아는 저숙련·노동집약적 산업(섬유 봉제업)에서의 높은 경쟁력이 경제를 이끄는 가운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와 도시부동산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 중임. 캄보디아 경제정책은 2004년 이후 단계별로 추진 중인 사각전략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데, 역설적이지만 훈센 내각의 독주 하에 사회정치적 안정과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외국인투자자 친화적 정책 기조도 유지될 것임.
- 한국의 투자자들은 섬유봉제 산업, 건설부동산 부문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의 대(對) 캄보디아 인프라 및 산업투자의 규모에는 절대적 열세에 놓여있음. 따라서 한국의 대(對) 캄보디아 관계에서는 개발협력(ODA), 경제협력, 환경협력 간의 조화와 협력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 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나 틈새시장으로서의 친환경 농업 생산 및 유통 부문, 농촌개발사업 등은 적극적인 관심을 요하는 부문으로 추천할만함.

## 《목차》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내용	
II. 2020년 선진국 진입을 꿈꾸는 말레이시아 (이지혁) .....	8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안에서의 말레이시아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 특성	
3.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5. 투자 및 유망 업종	
6. 한국 기업의 진출 전망 및 시사점	
III. 2030년 제7위 경제대국을 꿈꾸는 인도네시아 (최경희) .....	31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안에서의 인도네시아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 특성	
3.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5. 투자 및 유망 업종	
6. 한국 기업의 진출 전망 및 시사점	
IV. AEC 내 태국의 산업 정책과 기업 진출 전략 - 생산·물류 허브를 꿈꾸는 태국 (이요한) ..	60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안에서의 태국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 특성	
3.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5. 투자 및 유망 업종	
6. 한국 기업의 진출 전망 및 시사점	
V. BPO 산업을 기반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는 필리핀 (정법모) .....	85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안에서의 필리핀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 특성	
3.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5. 투자 및 유망 업종	
6. 한국 기업의 진출 전망 및 시사점	

<b>VI. 2020년 현대화된 선진 공업 국가 건설을 꿈꾸는 베트남 (백용훈) .....</b>	<b>103</b>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안에서의 베트남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 특성	
3.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5. 투자 및 유망 업종	
6. 한국 기업의 진출 전망 및 시사점	
<b>VII. AEC 안의 캄보디아 - 최빈국을 넘어 차세대 생산물류 기지를 꿈꾼다 (엄은희) .....</b>	<b>132</b>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안에서의 캄보디아: 차세대 생산물류 기지의 꿈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 특성	
3.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IDP 2015-2025》를 중심으로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5. 투자 및 유망 업종	
6. 한국 기업의 진출 전망 및 시사점	
<b>VIII. 종합분석과 전망 .....</b>	<b>163</b>
1. 아세안경제공동체 속의 국가 포지셔닝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특성	
3.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5. 한국기업 진출과 시사점	

## 《표 목차》

I. 서론 .....	1
〈표 1〉 ASEAN 2025 비전	
II. 2020년 선진국 진입을 꿈꾸는 말레이시아 .....	8
〈표 1〉 동방정책 2.0의 중점 추진 6대 분야	
〈표 2〉 전략적 추진분야(strategic thrusts) 및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표 3〉 할랄 제도의 발전과 변화	
〈표 4〉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전개 과정	
〈표 5〉 최저임금 현황	
〈표 6〉 2016 말레이시아 fact sheet	
〈표 7〉 외부 및 내부 환경 분석	
〈표 8〉 세부 산업 환경 분석	
〈표 9〉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 진출현황	
III. 2030년 제7위 경제대국을 꿈꾸는 인도네시아 .....	31
〈표 1〉 아세안 5국의 주요산업 수요전망	
〈표 2〉 과두적 지배자들과 그들이 소유한 미디어 분야	
〈표 3〉 인도네시아 주요정당과 총선지지율	
〈표 4〉 2011년-2015년 인도네시아 거시경제지표	
〈표 5〉 DRPLN-JM 2015-2019 인프라 부문 계획	
〈표 6〉 인도네시아 GDP 산업별 성장률(2013~2015)	
〈표 7〉 주요산업 동향	
〈표 8〉 한국기업 부문별 진출현황	
〈표 9〉 투자 기대 및 수출유망품목	
IV. AEC 내 태국의 산업 정책과 기업 진출 전략 - 생산·물류 허브를 꿈꾸는 태국 .....	60
〈표 1〉 아세안 5개국의 주요 산업 배치	
〈표 2〉 2006년 이후 태국 정치의 변동	
〈표 3〉 ASEAN 인프라 격차(2016년 7월 기준)	
〈표 4〉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 태국 진출 현황	
V. BPO 산업을 기반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는 필리핀 .....	85
〈표 1〉 필리핀 10개 주요 수출 품목: 2016년 9월 기준	
〈표 2〉 수입에 대한 규제	
〈표 3〉 필리핀 경제 지표	

〈표 4〉 필리핀 내 아웃소싱 기업순위

VI. 2020년 현대화된 선진 공업 국가 건설을 꿈꾸는 베트남 ..... 103

- 〈표 1〉 베트남 최고지도부 구성(1991-2020)
- 〈표 2〉 2016~2020 제12기 정치국원 명단(19명)
- 〈표 3〉 1986-2015 베트남 GDP 증가율
- 〈표 4〉 산업부문별 성장률
- 〈표 5〉 소유부문별 연평균 성장률(%)
- 〈표 6〉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 〈표 7〉 베트남 인구의 연령별 구성
- 〈표 8〉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지리·사회·문화적 특성
- 〈표 9〉 사회문화적 특성과 소비문화
- 〈표 10〉 베트남 유망 100대 기업 업종별 분류
- 〈표 11〉 시기별 우선적으로 선정된 공업 발전 부문
- 〈표 12〉 베트남 공업 발전 목표 (2016년-2035년)

VII. AEC 안의 캄보디아 - 최빈국을 넘어 차세대 생산물류 기지를 꿈꾼다 ..... 132

- 〈표 1〉 캄보디아 경제 거시지표(추정치 포함)
- 〈표 2〉 《IDP 2015-2025》의 주요 내용
- 〈표 3〉 캄보디아의 인구 연령별 인구구성
- 〈표 4〉 최근 5년간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동향
- 〈표 5〉 한국의 對 캄보디아 투자 동향(업종별)

VIII. 종합분석과 전망 ..... 163

- 〈표 1〉 아세안 주요 5개국의 산업분야

## 《그림 목차》

I. 서론 .....	1
<그림 1> AEC의 구조적 특징	
<그림 2> 비즈니스 환경에서 변화의 힘	
<그림 2> 종합적 이해와 분석	
II. 2020년 선진국 진입을 꿈꾸는 말레이시아 .....	8
<그림 1> 전통적 모델과 프린시플(principle) 허브 모델 비교	
<그림 2>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 과정	
<그림 3> 국가 주요 산업 정책	
<그림 4>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그림 5> 스마트시티 계획	
<그림 6>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원 구성	
<그림 7>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산업 추이	
III. 2030년 제7위 경제대국을 꿈꾸는 인도네시아 .....	31
<그림 1> 아세안 공동체와 아세안 연계성 사업 관련도	
<그림 2> 제7대 대통령 조코위 정부의 주요 관료	
<그림 3> 인도네시아 최고 10대 부자 기업가	
<그림 4> 2017년 2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후보군	
<그림 5> 인도네시아 2011-2016년 경제성장률과 GDP 구성	
<그림 6> 조세사면 정책의 조세율과 기간	
<그림 7> 인도네시아 기술, 정치·법률, 경제, 시장 그리고 사회문화 특징	
<그림 8> 인도네시아 소비층과 중산층 부상	
<그림 9> 인도네시아 Generation M	
IV. AEC 내 태국의 산업 정책과 기업 진출 전략 - 생산·물류 허브를 꿈꾸는 태국 .....	60
<그림 1> 아세안 인구증가 추이(단위: 천만 명)	
<그림 2> 태국의 지니계수, 1962-2013년	
<그림 3> 태국의 소득 분위별 저축증가율	
<그림 4> 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그림 5> 산업 부문별 고용 비율	
<그림 6> 태국 인프라 구축 계획(2020년 까지)	
<그림 7> 태국 인구의 노령화 추세	
<그림 8> ‘포지셔닝-차별화-브랜드’ 삼각형	
<그림 9>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배치	

〈그림 10〉 프레지던트 베이커리 최근 재무제표

〈그림 11〉 오이시 그룹의 재무제표

V. BPO 산업을 기반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는 필리핀 ..... 85

〈그림 1〉 국가 위기 지표.

〈그림 2〉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그림 3〉 필리핀의 수출 증가율 (2015-2016)

〈그림 4〉 필리핀의 수출 상대국

〈그림 5〉 필리핀의 수입 품목

〈그림 6〉 필리핀의 수입 상대국

〈그림 7〉 필리핀 소비자 전망

〈그림 8〉 필리핀 BPO 부문별 수익 (2006-2010)

〈그림 9〉 필리핀 IT-BPO 산업 성장률 (2004-2011)

VI. 2020년 현대화된 선진 공업 국가 건설을 꿈꾸는 베트남 ..... 103

〈그림 1〉 1986-2015 베트남 GDP 증가율(%)

〈그림 2〉 베트남 인구의 남녀 비율

〈그림 3〉 홍강 델타(북부)와 메콩강 델타(남부)의 촌락 유형

VII. AEC 안의 캄보디아 - 최빈국을 넘어 차세대 생산물류 기지를 꿈꾼다 ..... 132

〈그림 1〉 GMS 경제회랑의 캄보디아 구간

〈그림 2〉 태국+1과 주요 경제특구(SEZ)의 역할

〈그림 3〉 캄보디아의 물류성과지표 변화

〈그림 4〉 캄보디아의 인구 피라미드

VIII. 종합분석과 전망 ..... 163

〈그림 1〉 AEC의 산업구조

〈그림 2〉 GMS 경제회랑의 캄보디아 구간

〈그림 3〉 아세안 연계성 플랜의 구조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랜 세계 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의 신흥국가들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에는 6.0%의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2008년에는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4.7%, 2009년에는 2.7%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2010년 7.9%로 급반등하였고, 2013년 2014년 2015년은 각각 5.0%, 4.5%, 4.6%을 기록했다. 동 시기 세계 경제성장률이 평균 3%임을 감안하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동남아 국가는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2번째로 큰 무역 및 투자대상국이다. 또한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에서 아세안(아세안 국가 총합)으로 바뀌었다.

동남아 국가의 높은 성장과 대조적으로 최근 한국 기업은 세계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한국경제의 화두는 성장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33개가 한계기업이고, 33개 한계기업을 업종별로 따져보면 건설 및 전자 관련 기업이 9개, 석유화학과 조선·기계·설비업종 기업이 각각 6개, 운송업체 3개, IT전기전자 및 철강업체 각 2개가 한계기업 상태에 해당했다. 이밖에 종합상사와 생활용품, 식음료, 에너지, 자동차·부품 업체 중에서도 각 1개도 한계기업에 포함됐다. 어려움에 처한 한국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동남아를 새롭게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이 동남아를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 삼고 있고, 한-아세안 무역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성장함에 따라 과거의 기회가 장애물로 혹은 극복과제가 새로운 기회로 변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동남아시아는 생산 및 수출 거점에서 소비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계 기업의 진출과 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단순히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서 동남아 진출을 고하려는 한국 기업에게 간과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동남아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의 출범은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제도적 제약, 관세, 그 외 한국 기업의 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던 다양한 비관세 장벽들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국가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계획되고 있고, 동남아 개별 국가도 자국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계획하는 측면에서, 신흥 시장으로서 동남아 각 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남아 각

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변화 및 국가적 특성, 그리고 새로운 경제 및 산업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국 기업이 급변하는 동남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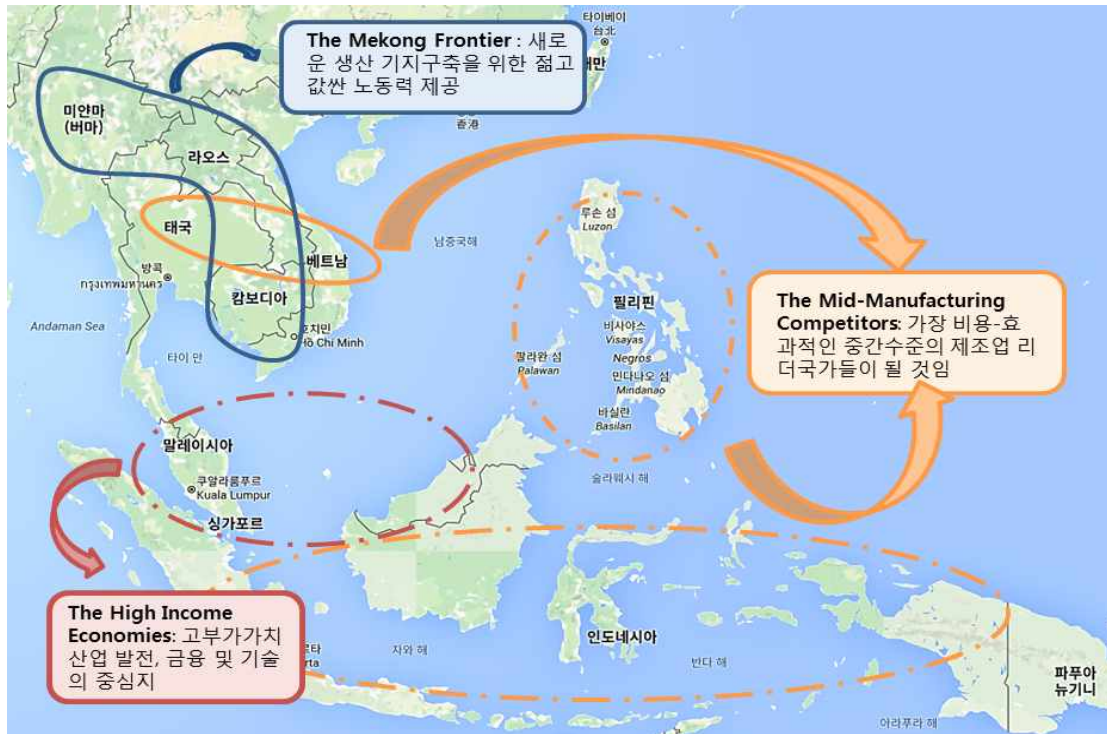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동남아 각국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각 국가의 특징에 초점을 두고 한국기업 진출에 대한 종합적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큰 틀에서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하나는 동남아 각 국의 지역적 포지셔닝(Regional positioning), 다른 하나는 개별 국가의 경제 및 산업 우선정책에 대한 분석이다(Economic priority). 전자는 이미 실체화된 아세안 경제공동체 속의 동남아 각 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2015년 말에 출범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AEC가 실체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EC는 동남아 각 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드라이브의 핵심원인 중의 하나이고 단일한 생산과 소비지대로서 AEC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AEC는 2025년까지 실현할 청사진(Blueprint)에 따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후자는 AEC가 실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개별 국가의 경제 및 산업정책의 우선성이다.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들끼리 협력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슈, 영역 그리고 상황에 따라 회원국 사이에는 ‘경쟁관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개별 국가의 경제 및 산업정책의 우선성에 대한 분석과 인식이 필요하다.

## 2. 연구대상 및 내용

본 연구의 연구대상 국가는 아래의 <그림 1>의 AEC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세 개의 영역으로 지역적 포지션(regional position)을 구분할 수 있다. AEC의 구조는 하나의 단일생산기지와 단일소비시장 아래에서 3종류의 하위지역 경제단위체의 특징을 갖고 있다(Maguire *et al.*, 2015, 5). 첫째, 메콩 선도 국가군(The Mekong Frontier)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국가를 말한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새로운 생산 기지구축을 위한 젊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중간제조업 경쟁국가군(The Mid-Manufacturing Competitors)으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말한다.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중간수준의 제조업 리더 국가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고소득 경제 국가군(The High Income Economies)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지칭한다. 아세안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금융 및 기술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하나의 생산기지 안에 위와 같은 세 개의 하위 블록은 중층적 기능의 상호보완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CLMV 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소유하고 있는 젊고, 생산적이며, 풍부한 저임금 노동인구로 인해, 중국 및 동북아에 위치한 생산기지들이 동남아로 이동

할 것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자본과 기술이 CLMV 국가들의 저임금 젊은 노동력과 결합하여 생산기지로서의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연계성(Physical connectivity)의 강화는 역내 제조산업의 분업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AEC의 구조적 특징



출처: Maguire, Glenn B. et al., 2015. ASEAN: The Next Horizon, p.5의 분류를 그림으로 표현.

본 연구의 대상 국가는 이러한 AEC의 구조적 특징 아래에서 1)메콩 프론티어 국가군의 캄보디아, 2)중간 제조업 경쟁국가군으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고소득 경제 국가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총 6개 연구대상 국가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내용은 세 가지 축이다. 첫째, ASEAN 속의 동남아 각국의 협력과 경쟁 구도의 이해 둘째, 개별 ASEAN 회원국에 대한 집중연구 셋째, 전략적 단위로서 ASEAN과 개별 회원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이다.

### (1) 2025년을 향한 AEC : 협력과 경쟁 관계

2007년에 발표하여 2015년 12월까지 실현할 목표로 시작한 1기 AEC 청사진은 2015년 10월 기준으로 92.7% 완료된 것으로 평가한다. 1기 AEC 청사진은 4가지 목표였다. 단일시장·생산기지, 경쟁력 높은 경제지대, 균형경제발전 그리고 세계경제와의 통합이었다. 2015년

말에 공식출범할 ASEAN 공동체를 앞두고 그해 11월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2025년까지 실현한 청사진(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을 발표하였고, 2기 AEC 청사진(이하 “AEC 2025”)은 5가지 범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 고도로 통합된 응집된 경제: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환경, 금융 통합, 숙련 노동 이동 등, 2) 경쟁력, 혁신, 역동적인 ASEAN: 지적재산권, 혁신, 규제개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3) 연계성 강화 및 부문간 협력강화: 교통,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관광업, 보건, 식품 및 농업, 과학기술 등, 4) 복원력, 포괄성, 사람지향, 사람중심적 아세안: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민관협력 등, 5) 글로벌 ASEAN: FTA, 지역 및 국제 파트너와의 관계 형성, 다자간 거래, 국제 및 지역 기구 참여 등이다. 2기 목표는 1기 목표를 포괄하면서 확대된 주제를 질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표 1〉 ASEAN 2025 비전

ASEAN Economic Community 2025				
A highly Integrated and Cohesive Economy	A competitive, Innovative and Dynamic ASEAN	Enhanced Connectivity and Sectoral Cooperation	-A Resilient, Inclusive and People-Oriented, People-Centred ASEAN	A Global ASEAN
제품 교역	유효경쟁 정책	운송업	극소 기업 및 중소기업체 역할 강화	전략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ASEAN 외부와의 경제관계
응역(service) 교역	소비자 보호	정보통신 기술 사업 (ICT)	민간 부문 강화	현 FTA들 검토
투자 환경	지적 재산권 /소유권 협조 강화	전자상거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파트너십	교역과 투자 프로그램 및 계획 강화 및 개선을 통한 비대화 대상국들과의 경제관계 강화
금융 통합 정도, 금융포용성, 금융 안정성	생산성 향상의 성장, 혁신, 연구 개발, 그리고 기술의 상업화.	에너지 사업	개발 격차 감소	지역 및 세계적 파트너들과 연계
사업 방문 및 숙련노동 이동 촉진	조세제도 협조	농업, 임업, 그리고 음식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지역통합 노력	다자간 교역 시스템 지원과 지역 포럼 참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강화	굿 거버넌스	관광업		세계적, 지역적 기구들과 관계 촉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결속력 있는 대응적 규제들, 모범규제관행	의료, 보건 서비스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광물 산업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와 새로운 교역 이슈	과학 기술 산업		

출처: ASEAN, 2016. *Fact Sheet on ASEAN Economic Community 2016*, p.4.

본 연구에서는 “AEC 2025” 비전과 전망에 기초하여 특정 주제와 영역을 선택하여 AEC 각 국 회원국의 역할과 위치, 강점과 약점 등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강화를 하려고 하는 AEC는 각 국의 현실적 제약이 상당히 높다. 한국의 경우도 1980년대 중반부터 세계시장의 압력이 있었지만, 전혀 국내적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갖

취져 있지 못함으로써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과 혼란의 시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현재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제도적 수준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구축이다. 경제시스템 구축에서 거버넌스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고, 거버넌스 구축에서 법제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에 관한 법률 등은 AEC 굿 거버넌스 구축에서 필요한 법률사례이다. 최근에는 법제 ODA로 동남아 국가들에게 우리나라 법제에 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험은 제2기 AEC 비전구현에 있어서 다층적으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AEC 2025”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 국가마다 처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영역과 쟁점을 도출하여 ASEAN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각 국 파트에서 “ASEAN 속의 개별국가의 포지셔닝”이라는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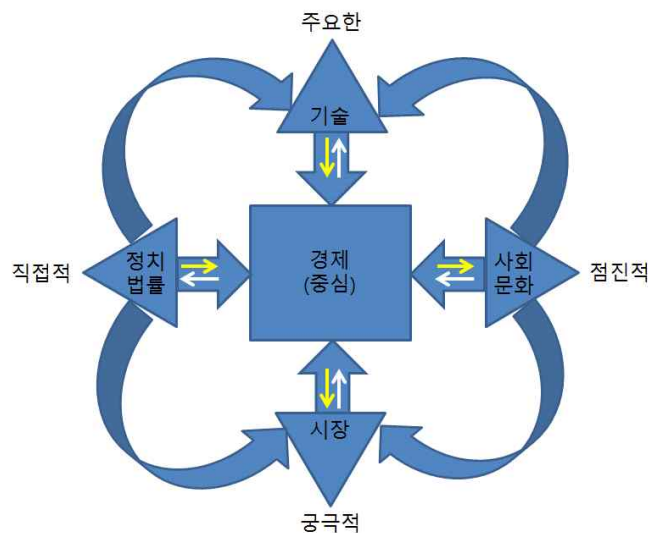
## (2) 6개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집중연구

본 연구에서는 ASEAN 내 10개 회원국 중에서 6개국을 선택하였고, 그 이유는 위에서 밝혔다. 본 연구의 핵심적 연구내용은 6개국에 대한 집중연구이다. 개별국가에 대한 집중연구 범위는 6가지 주제이다. 첫째, ASEAN 속의 각 국 포지셔닝과 특징을 다루려고 한다. AEC 또는 AC 차원에서 각 국이 갖고 있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6개 국가들의 최근 정치세력 교체가 갖는 국내 및 역내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각 국 현 정부의 산업 및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국가마다 산업정책이 변화하는 분기점에 있고, 최근 2016년을 전후로 대략 5년 또는 10년 영향을 미칠 각 국의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이다. AEC를 소비시장 맥락에서 보았을 때, 각국은 어떤 의미와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투자 및 유망업종이다. 각 국의 유력 업종이 무엇이고, 신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새로운 투자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한다. 여섯째,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각국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6가지 주제로 개별국가를 집중 연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려고 할 때, 해당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비즈니스 환경’의 총체적 구도는 ‘정치외교적 또는 법률적 환경’, ‘사회문화적 변화’, ‘경제 및 사회정책적 변화’, ‘기술적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함이다. 이 분석접근은 필립 코틀러 외(2016)의 연구로부터 시작된다. 비즈니스 환경변화의 힘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는 <그림 2>에 있는 기술, 정치·법률, 사회·문화, 경제 그리고 시장이다(필립 코틀러 외 2016, 52).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로 존재한다. 수직적 변화와 수평적 변화이다. 우선 수직적 변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기술↔경제↔시장의 변화 방향이다. 기술의 발전은 경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며 때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경제와 시장 출현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기술은 또한 디지털화를 통한 정보와 아이디어, 여론의 광범위한 확산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개방경제가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상품·서비스·자원·문화의 이동을 빠르게 만들었다. 현재 소비자들은 생활 조건과 소비 패턴, 소비자들의 교양 수준이 높아 미래에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또한 기존의 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무엇인지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수평적 변화이다. 정치·법률↔경제↔사회문화 변화방향이다. 정치·법률적 변화는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 개발과 성장을 가져오는데 필수적이다. 정치·법률적 안정과 성장은 공동체 구성원의 전반적 복지 증진을 가져온다. 정치적 변화가 우선하는 이유는 경영진과 직원들의 ‘수용’이 변화에 필요한 화합과 지지에 기반하고, 변화에 대한 수용은 ‘경제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쉽게 이행하게 한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업 문화를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회나 국가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운동은 이전보다 한층 더 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투명한 경제시스템을 가져오는데 일조할 수 있다(필립 코틀러 외 2016, 53).

〈그림 2〉 비즈니스 환경에서 변화의 힘



출처: 필립 코틀러 외. 2016,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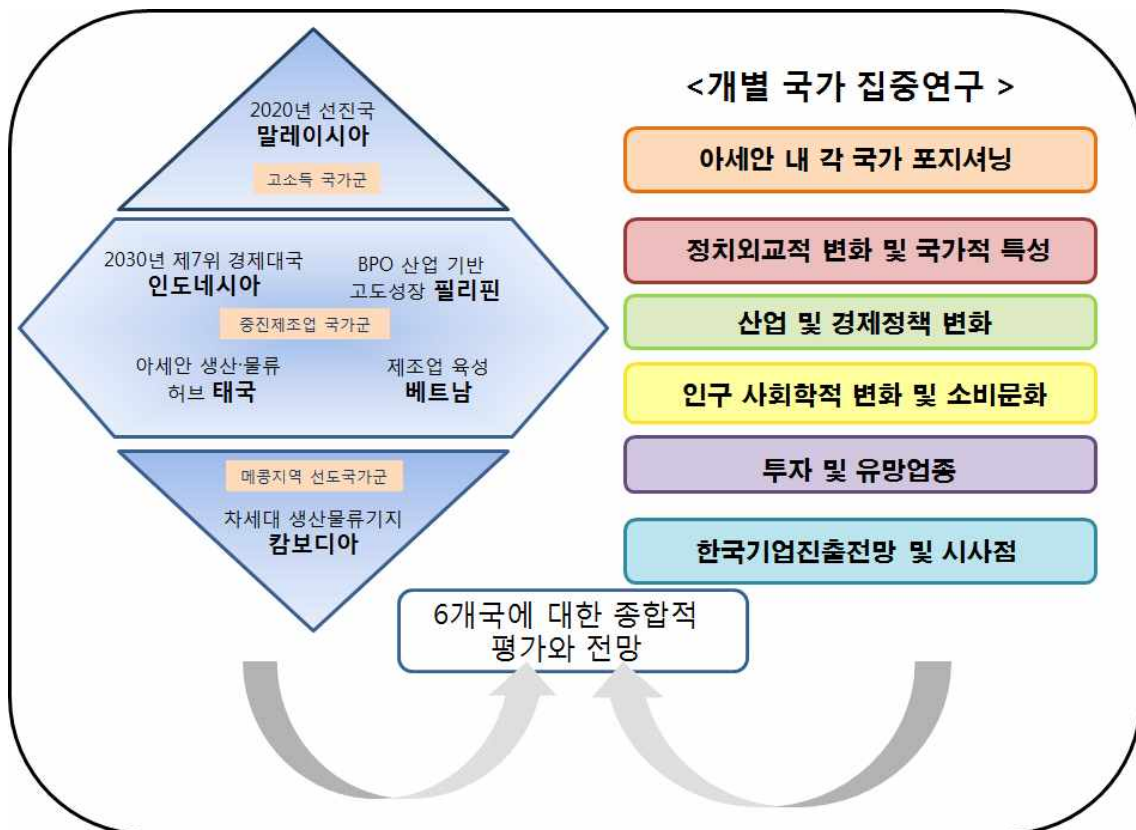
### (3) 전략적 단위로서 아세안과 개별 국가에 대한 종합적 이해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2020년 선진국 진입을 꿈꾸는 말레이시아”, “2030 제7위 경제대국을 꿈꾸는 인도네시아”, “BPO 산업을 기반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필리핀”, “ASEAN 생산·물류 허브를 꿈꾸는 태국”, “2020년 현대화된 산업 국가 건설을 꿈꾸는



베트남”, “최빈국을 넘어 차세대 생산물류 기지를 꿈꾸는 캄보디아” 로 명명된 개별국가에 대한 심층 연구를 기초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AEC 경제구조 내에서의 각 국가의 포지셔닝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리 둘째, 최근 정치지도부 변화와 리더십 및 국가특성에 대한 정리 셋째, 향후 10년간은 지속될 각 국가의 산업정책의 방향과 특징에 대한 정리 넷째, 투자 및 유력업종, 신성장 동력에 대한 정리,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과 시사점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3〉 종합적 이해와 분석



출처: 필자 작성

## II. 2020년 선진국 진입을 꿈꾸는 말레이시아

###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안에서의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ASEAN 6'로 통칭되는 동남아시아 선도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산업화를 이룩했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15,000불의 고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고, 현재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려는 단계에 이르렀다.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5-2016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18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2위)를 제외한 가장 높은 순위이며, 26위를 차지한 한국보다도 높다. 또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6 사업 환경 순위(Doing Business 2016)'에서 전체 189개 국가 중 18위를 차지할 정도로 친기업적인 환경이 잘 갖춰진 국가다. 이처럼 ASEAN 역내에서 금융, 물류,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자국이 시장통합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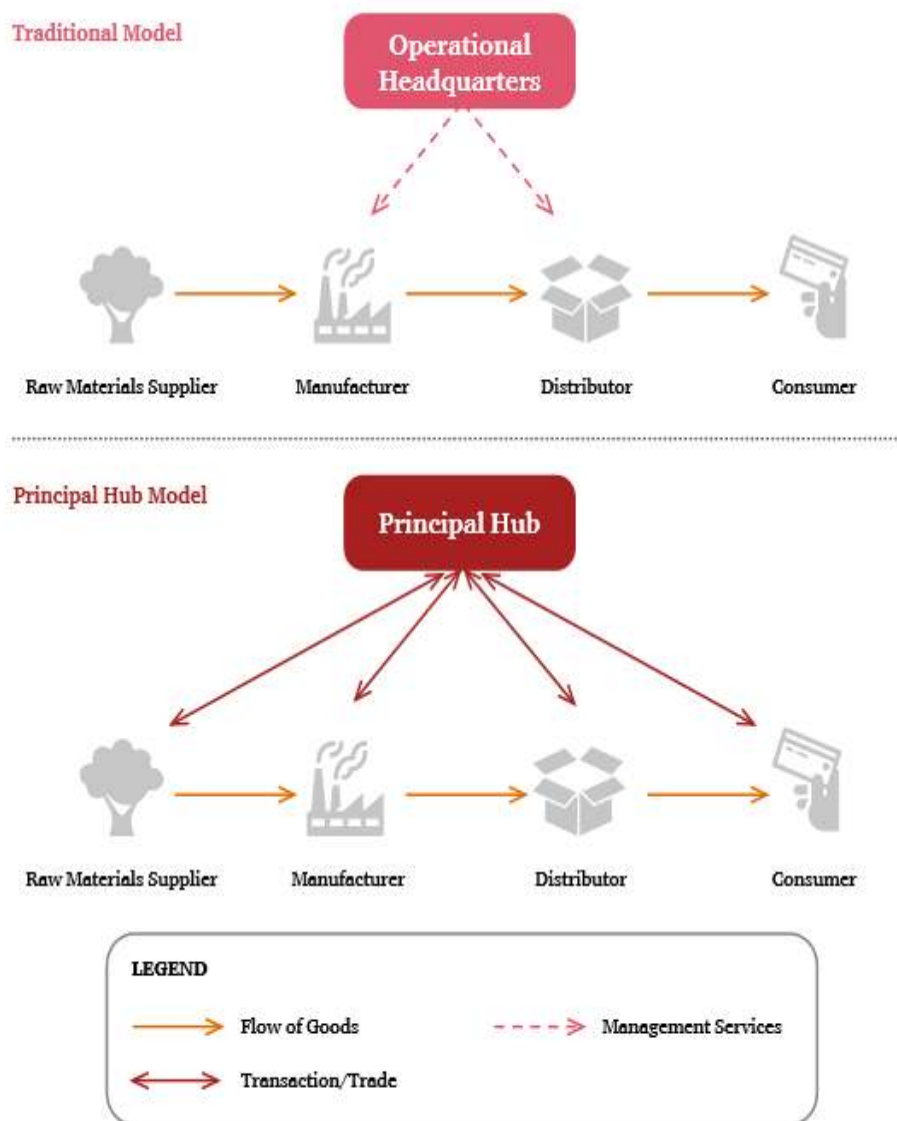
AEC의 출범이 ASEAN에 가져올 경제적 변화로 '생산 네트워크의 확장 및 집중',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생산의 집중화 현상', 'ASEAN 회원국 간 경쟁의 심화', 'ASEAN 연계성 제고' 등을 꼽을 수 있다(주아세안대표부 2016). 이러한 경제적 변화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시장 규모의 확대다. 말레이시아는 인구 3천만 명으로 비교적 작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대외 개방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에게 인구 6억 명으로 구성된 2.5조 달러의 거대시장 출현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게 확대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ASEAN이 추구하는 경제공동체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말레이시아를 동남아 중산층을 겨냥한 시장의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삼고 역내의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진출에 외부적 위협 요소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피푸트라 정책으로 인한 일부 업종의 외국인 지분 제한' 역시 AEC출범에 따라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호·신민금·정윤서 2013).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우위, 상대적으로 발달된 인프라 시설, 지리적 위치 등을 앞세워 통합되는 단일경제의 허브가 되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2015년 말레이시아는 ASEAN 경제통합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ASEAN 전 지역의 사업을 총괄할 지역본부를 설립할 경우 법인세를 0~10%로 적용하는 인센티브제도-'프린시플 허브(Principle Hub)'-를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IDA)에 따르면 프린시플 허브로 지정된 기업은 최대 10년간 단계별로 0~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함께 외국인 지분 규제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sup>1)</sup> 프린시플 허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3개국에 지사를 뒀야하고 이들을 관



리할 전략수립 및 회계 기능을 갖춘 지역본부의 역할을 인정받아야 한다(InvestKL <http://www.investkl.gov.my/>). 또한 지역본부는 적어도 명시된 3가지의 서비스-전략적 서비스(strategic service),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 service), 공유 서비스(shared service)-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제조와 분배만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지역본부가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전반을 담당하는 허브로서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림 1〉 전통적 모델과 프린시플(principle) 허브 모델 비교



출처: InvestKL, Principle Hub Incentive: Guideline and criteria

- 1) 세금 감면 혜택은 다국적기업의 가치 창출에 따라 0%, 5%, 10%로 구분된다. 감면 기간은 첫 5년 후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효과와 기업의 지출규모에 따라 5년 더 연장될 수 있다.

##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 특성

현 총리인 나집(Najib)은 독립된 말레이시아의 6대째 총리로서 2009년 임명된 후 2013년 재임에 성공했다. 60년 가까이 정권교체 없이 현 연립여당인 국민전선(BN)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총선에서 정권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총 득표수에서 야당의 국민연합(PR)이 여당을 20만 표 앞섰다. 이는 조금이나마 다음 총선에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 ■ 정치적 특징

-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와 3개의 연방 직할구로 구성되어 있고, 주지사가 있는 주를 제외한 9개 주의 술탄(sultan) 중에서 한명을 5년 임기의 국왕으로 선출하는 독특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음.
- 법적으로 국왕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지만 실질적인 국가통수권자는 의회 다수당의 총재인 총리임.
- 말레이시아의 집권연정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은 출범한 1974년 이래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음.
- 국민전선은 말레이시아의 주요한 인종을 대표하는 정당들의 연합임: UMNO(말레이계), MCA(중국계), MIC(인도계)

### ■ 최근 정치 동향

- 2009년 4월 나집 총리 임명.
- 2013년 5월 나집 총리 재선 승리.
- 2015년 7월 약 7억 달러 상당의 말레이시아 개발 유한회사(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1MDB) 자금이 나집 총리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킴.
- 2015년 7월 부총리가 나집 총리의 확실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자, 나집 총리는 7월에 부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함.
- 2015년 6월 야권연합인 국민연합(PR: Pakatan Rakyat)을 구성한 주요 3개 정당 간의 정치적 이견으로 각 당이 연합의 해체를 선언함.
- 2016년 2월 전 총리인 마하티르가 UMNO에서 탈당을 선언하면서 나집 총리의 퇴임을 요구함.
- 2016년 5월 비자금 스캔들에 휘말린 총리가 이끄는 연립여당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지닌 주 의회(사라왁) 선거에서 승리함.
- 선거 결과가 나집 총리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그의 정치적 동반자인 아드난 사템(Adenan Satem) 사라왁 주지사의 정치적 능력으로 분석됨.

- 2016년 6월에 치른 보궐선거에서 연립여당 국민전선(BN)이 압승함, 이를 통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나집 총리의 정치 기반이 굳건함을 보여줌.
- 2016년 7월 마하티르 전 총리가 나집 현 총리를 퇴진시키기 위한 야권 연대를 결성하기 위해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힘.

#### 〈 나집 총리 스캔들 〉

말레이시아 개발 유한회사(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1MDB)는 2009년 1월 나집 총리의 주도로 설립된 자산 규모 450억 링깃(약 14조8500억 원)의 말레이시아 국영투자회사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유지한 국내외 자본을 발전소 건설, 석유 탐사 등 발전사업과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해 차익을 도모하는 것이 회사의 설립 목적인데, 최초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나집 총리가 1MDB 고문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말 13조원에 육박하는 부채가 드러나면서 부실과 비리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1MDB와 관련된 중동 국부펀드의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통해 나집 총리 개인 계좌에 8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당국에 포착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말레이시아 법무부는 2013년 총선을 앞두고 나집 총리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약 8천억 원(26억 링깃)은 사우디 왕가의 기부금이며 총리는 그 중 약 7천3백억 원은 되돌려주고 나머지 약 700억 원은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발표하고, 나집 총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외 사법당국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의 사법당국이 자국 내 금융기관과 관련된 1MDB의 자금세탁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스위스 검찰은 지난 1월 말 1MDB 운영 펀드에서 약 40억 달러(4조5천800억 원)의 유용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현재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와 일부 야당 지도자, 시민단체 연합인 버르시(Bersih)<sup>2)</sup>가 총리 퇴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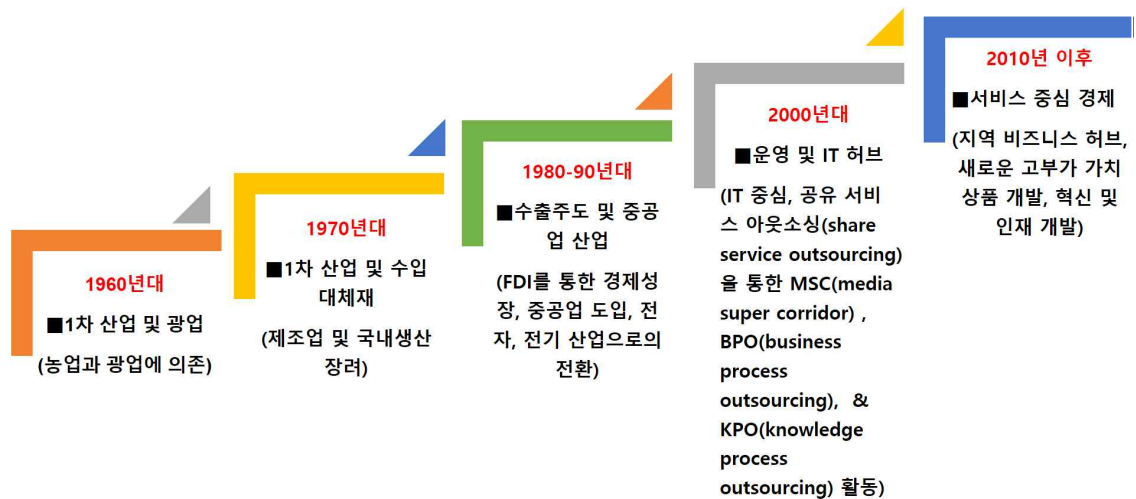
- 다음 총선까지 현 정권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나집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과 위기에 처한 국민전선이 총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에게는 처음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야당 지도자였던 안와르 이브라힘이 2015년 남색 혐의로 수감된 뒤 야당이 분열되어 집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최근 나집 총리는 2018년 중반으로 예상되었던 총선을 내년에 치를 수 있음을 밝히면서 비자금 스캔들로 인한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권에서 진행되고, 계획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중장기경제개발계획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환경은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2) 버르시는 지난 2006년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된 연합체인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연합’(Gabungan Pilihanraya Bersih dan Adil)의 약칭인데, 말레이어로 ‘깨끗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3.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말레이시아의 산업 및 거시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1971년 이후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하에 추진된 말레이를 우대하는 ‘부미푸트라(Bumiputra) 정책’<sup>3)</sup>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현지기업을 우대하는 관행으로서 외국계 기업에게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에는 ‘202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인 ‘경제개조프로그램(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 ETP)’을 발표했다. ETP는 12개의 국가핵심경제영역(national key economic areas)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민간 주도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2013년에는 제2의 동방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림 2〉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 과정



출처: MIDA and PWC analysis

1982년 마하티르 총리 시절 일본과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LEP)이 30년 동안(2012년까지) 지속되었고, 2013년 새로운 30년을 위한 제2기 동방정책(LEP 2.0)이 발표되었다. 제1기 동방정책이 인재 개발과 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제2기 동방정책은 녹색 산업, 정보통신 산업, 바이오산업 분야에서의 무역과 산업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직전인 1956년부터 5개년 단위로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말레이시아 플랜(Malaysia plan)’을 매 5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2016년은 새롭게 시작하는 11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이다. 11차 5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6대 전략기반(strategic thrusts-포용적 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인적

3) 부미푸트라는 이슬람을 믿고, 말레이 말을 말하며, 말레이 관습을 따르고, 말레이시아에 사는 말레이시아 국민을 지칭한다.

자원개발, 녹색성장, 인프라 확충,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6대 게임체인저(game changers-노동생산성 향상, 중산층 확대, 산-관-학 연계 기술직업 교육훈련 활성화, 녹색성장, 혁신, 거점도시 육성)를 포함하고 있다.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및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sup>4)</sup>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말레이시아에게 한국의 앞선 경험은 양 국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호발전 전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경제정책의 변화

말레이시아는 독립 후 지금까지 민족구성의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종족집단 간 소득불평등 및 경제적 불균형이 문제시됐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그리고 원주민으로 구성된 다종족 국가다. 그런데 소수인 중국계가 경제실권을 장악하는 반면, 다수인 말레이계가 주변화되는 경제구조로 인해 말레이계와 중국계간에 일정한 긴장관계 내지는 알력이 존재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경제정책의 핵심을 빈곤 감소에 두고, 소득수준의 증가, 모든 이를 위한 고용기회 향상, 그리고 경제적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제적 기능에 인종적 연관을 제거하는 전략이 실행되었다(보건복지부·서울대 2011). 2000년대 이후에는 빈곤해소를 넘어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과거의 정책이 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것이라면 최근의 경제 정책은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다차원(경제, 정치, 사회, 정신, 심리, 문화)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1971-1990): 빈곤 근절과 함께, 국가적 화합을 발전 목표로 하는 사회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종족 간 소득격차해소).
- 국가발전정책(National Development Policy 1991-2000): 고른 경제성장을 통한 핵심적 빈곤 및 상대적 빈곤 감소.
- 국가비전정책(National Vision Policy 2001-2010):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가건설.
- 국가개조정책(National Transformation Policy 2011-2020):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고소득 경제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통한 인간 중심의 경제 모델 도입.

국가개조정책(National Transformation Policy)은 경제개조프로그램(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과 정부개조프로그램(government transformation program)의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는 국가 산업의 지속성에 가장 중요한 12개의 경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고, 후자는 공공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한 국가가 천연자원수출에 의존하게 되면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따라서 자원 외 수출품이 경쟁력을 상실하며 임금이 상승하여 경제발전이 저해된다. 이는 자원을 더 개발할수록 국가가 더욱 더디게 성장하고, 정부의 투명성도 낮아진다는 이론이다.

〈그림 3〉 국가 주요 산업 정책

New Economic Policy	National Development Policy	National Vision Policy	National Transformation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1-1990년, 종족의 구분 없는 빈곤 근절,</li> <li>• 경제적 기능에 따른 종적 별 정체성 철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2000, 주요 산업 간 및 지역 간 큰 성장</li> <li>•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2010,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가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2020, 인간 중심의 새로운 경제 모델</li> <li>• 포괄적이고 지속적이고 고소득 경제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 도입</li> </ul>

자료: Executive Summary 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 필자 재편집

- 동방정책 2.0(Look East Policy 2.0): 경제협력을 통해 지식기반의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무역을 확대하며 산업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0년 동안 실시되었던 마하티르 전 수상 주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이 마무리되고, 2013년 8월 현 총리인 나집은 새로운 정책인 동방정책 2.0을 발표했다. 첫 번째 동방정책이 인적교류(human exchange) 및 제조업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개도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동방정책 2.0은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증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협력을 통해 지식기반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무역을 확대하고, 산업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2013년 12월 나집 총리는 동방정책 2.0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6개 영역을 발표했다(표 1 참고). 현정부는 2014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나집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동방정책 2.0과 관련해 17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합의하고 향후 협력 사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자동차, LNG 터미널, 녹색산업, 의로기기, 생명공학 등 13개 분야를, 우리 정부는 철도, 보건의료, 전통의학, 전자정부 등 4개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제안했다.

〈표 1〉 동방정책 2.0의 중점 추진 6대 분야

중점 영역	세부 사항
최첨단 기술 개발	한국·일본과 R&D 협력 확대를 통한 최첨단 기술(나노·바이오·환경 기술 등) 개발 및 도입
하이테크 역량 개발	신기술 활용을 위한 지식기반 역량 개발 및 도입
최고급(high end) 서비스 개발	숙박, 관광, 식음료, 레스토랑 등 환대산업(hospitality industry) 및 건강 분야 서비스 노하우 개발 및 도입
안전하고 재활용 가능한 에코 시스템운영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 및 수자원 공급 체계 개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추진 등
중소기업의 현대화	기술 이전과 경영지원 등을 통해 가치사슬 고도화가 가능하고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간 연계 강화
경로 우대 정책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특히 건강 문제 및 노령자 생활방식에 집중

출처: 조대현. 2015.

## (2) 제 11차 말레이시아 플랜(Eleventh Malaysia Plan)

2016년은 5개년 경제개발계획인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의 원년이다. 말레이시아는 195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2015년 5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계획을 담은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을 발표했다.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은 1991년에 만들어진 ‘Vision 2020’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은 총 2,600억 링깃(728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인프라 구축에 50%, 교육 및 보건의료분야에 30%, 사회안전망구축 및 행정 분야에 20%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제10차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6개 ‘전략적 추진분야(strategic thrusts)’와 경제성장 궤도의 근본적 변혁을 꾀하기 위한 6개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설정하고 있다.

〈표 2〉 전략적 추진분야(strategic thrusts) 및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6 strategic thrusts	
공정사회 포용력 제고	청년 리더십 및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제공, 여성취업 제고
국민 생활여건 증진	모바일 헬스케어 투자, 저소득층 전용 주택 개발, 범죄예방
인적자원 개발	지식산업 투자, 교육과정 개선, 능력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녹색성장 추진	관공서 에너지효율화, 불법 산림벌채 적발강화, 천연재해 대응력 향상
경제성장 인프라 투자	2020년까지 인구 99%에 수도 및 전기 공급, 물류 인프라 개선
산업 고부가가치화	이슬람금융/ICT/할랄 등 서비스산업 육성, 소규모 창업 지원
6 game changer	
노동생산성 향상	2020년까지 노동생산성을 92,300RM으로 향상
취약계층 지원	2020년까지 중산층을 45%로 확대
민간 직업훈련 확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수강생을 225,000명으로 확대
녹색성장 추진	산림지, 수자원 등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혁신을 통한 부의 창출	산학협력 강화, 사업화 가능 기초연구를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2020년까지 4개 도시환경 개선(주거공간 마련, 대중교통 개선 )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2015.

## (3) 국가 주도의 무슬림 산업 육성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경제의 글로벌 리더를 자처하면서 이슬람 경제를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주요 성장 동력으로 간주하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에 의해 발행된 ‘Global Islamic Economy 2014-2015’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세계 이슬람 경제지표(Global Islam Economic Indicator, GIEI) 대부분의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위치한다. 7개의 영역(음식, 금융, 의류/패션, 관광, 미디어/레크리에이션, 의약품, 화장품)으로 구성된 이슬람 경제지표에서 미디어/레크리에이션(15위), 의상/패션(4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림 4〉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출처: Malaysia Islamic Finance Report 2015.

■ 할랄 산업

- 할랄 산업은 말레이시아 경제의 중요 성장엔진 중의 하나이며 2011년 150억 링깃(50억 달러)에서 꾸준히 성장해 202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5.8%까지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정학적 위치, 이슬람 국가라는 종교적 측면, 그리고 무슬림이 인구의 주를 이루는 타 국가들에 비해 사회기반시설이 발달한 점을 내세워 세계 할랄 산업과 이슬람 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할랄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교역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할랄 산업을 정부의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2015). 말레이시아 정부는 1974년 처음 할랄 인증제를 도입하고 할랄 제품의 표준화에 앞장서고 있다. 1996년 제정된 말레이시아표준법(Standards of Malaysia Act 1996)에 따라 말레이시아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에서 할랄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로는 국가 기관인 이슬람개발부(JAKIM: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sup>5)</sup>가 있다. 할랄 인증기관으로서 세계적 공신력이 있는 JAKIM은 말레이시아표준법을 근거로 할랄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인증을 위한 제품생산, 취급, 보관 등을 다루는 종합 가이드라인인 ‘Malaysia Standard(MS)’를 수립하고 있다.<sup>6)</sup> 더불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이슬람 소비자의 할랄 제품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무슬림에 허용되고(Permissible), 건강에 좋고(Wholesome), 안전하며(Safe), 양질(Quality)’이라는 의미를 지닌 확장된 할랄 개념-‘토이반 할랄(Halal Thoyyiban)’-을 창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해마다 국제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주관으로 ‘세계 할랄 주간

5) ‘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은 (1)이슬람법의 입법화와 표준화, (2)이슬람과 관련된 행정업무의 조정, (3)이슬람 교육의 발전과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박정훈 2016).

6) JAKIM의 할랄 인증 건수는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6,736개 업체의 78,767개 제품이 JAKAIM의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그 중 한국제품은 약 200개 정도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World Halal Week)'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할랄 상품과 서비스를 세계에 알릴뿐만 아니라 할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같은 경우 세계 할랄 주간에 (1)제7회 할랄 인증기관 컨벤션(The 7th International Halal Certification Bodies Convention), (2)제13회 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쇼케이스(The 13th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 MIHAS), (3)제9회 월드 할랄 컨퍼런스(The 9th World Halal Conference 2016)가 개최되었다. 국제 할랄 쇼케이스(MIHAS)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할랄 박람회로서 316개의 말레이시아 기업과 227개의 외국 출품자들이 참가했다(Halal Focus 2016/03/31). 한편 할랄 인증과 관련하여 2013년 6월부터 한국이슬람중앙회(KMF)의 '한국 할랄 인증'이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의 인정을 받아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한국 할랄 인증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표 3〉 할랄 제도의 발전과 변화

연도	주요 사안
1974년	할랄 인증 도입: 총리실 산하 이슬람 연구소에서 할랄 인증서를 발급.
2000년	할랄보증시스템(Halal Assurance system) 구축: 할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할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완성함.
2006년	할랄산업개발공사(HDC: Halal Development Center) 설립: 글로벌 할랄 지원센터(Global Halal Support Center) 및 할랄 파크(24개 할랄 산업단지) 운영, 할랄 교육, 외국인투자유치 담당, HDC와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은행 공동으로 2.8억 MYR 규모의 할랄개발기금(Halal Development Fund) 조성 및 운영.
2008년	할랄 산업 마스터플랜(2008-2020) 수립: 말레이시아를 할랄 R&D 및 혁신센터로 만드는 계획과, 2020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함에 있어 할랄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013년	세계 할랄 리서치(World Halal Research)를 세계 할랄 회의(World Halal Conference)로 변경.

출처: 주말레이시아대사관 2015.

- 이슬람 금융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법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서, 이슬람 금융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은 세계 전체 이슬람 금융의 25.53%(약 4,230억 달러)를 차지한다(Malaysia Islamic Finance Report 2015). 말레이시아에서는 2015년 기준 16개의 이슬람 은행과 11개 이슬람 보험사가 영업 중이다. 이슬람 금융은 이자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슬람법-샤리아(Sharia)-에 따라 무이자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 거래이다. 이슬람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 거래에서 이자 및 이자로 판단되는 모든 종류의 추가적 이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은 매개의 수단으로써 원칙적으로 이익 창출에는 사용될 수 없다. 하지만 파트너십 형태로 이익을 공유

하는 것은 허용된다. 샤리아에서는 화폐의 증식을 의미하는 이자(riba)를 금하고 모든 상품 및 금융거래에는 반드시 실물이 동반돼야 한다. 1990년대까지는 이슬람 국가에서조차 이슬람 금융이 일반 금융에 비해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발전 및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축적된 중동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초 말레이인의 종교의식을 고양시키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슬람 금융이 구상되었다(나희량 2011).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 단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전개 과정

시기	내용
제1기 (1981-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조정위원회의 이슬람은행 제도의 설립 제안(1981년).</li> <li>• 최초의 이슬람 전업은행인 말레이시아 이슬람은행(Bank Islam Malaysia Bhd, BIMB) 설립(1983년).</li> </ul>
제2기 (1993-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이자 은행 시스템 도입(1994년).</li> <li>• 일반 금융기관의 이슬람 은행 업무 겸업이 인정됨-시장 경쟁이 촉진됨(1993년).</li> <li>• 국가적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샤리아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는 체제 정착: 중앙은행(Bank Negara)안에 'Sharia advisory Council'을 설치함(1997년).</li> </ul>
제3기 (2001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차원의 오일 머니 증가 및 이슬람 금융상품의 다양화.</li> <li>• 금융 및 자본시장 마스터플랜(2001)을 토대로 이슬람금융의 국제화 시도(2001년).</li> <li>•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의 외국인은행(3개)이 이슬람은행 면허취득.</li> <li>• 국내(말레이시아) 이슬람은행의 출자비율상한선이 30%에서 49%로 인상(2005년).</li> <li>• 국제 이슬람금융센터(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er, MIFC) 설립(2006년).</li> <li>• 이슬람금융 비즈니스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도 외화 단위의 거래가 인정됨(2006년).</li> <li>• 이슬람금융국제교육센터(INCEIF)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2006년).</li> </ul>

출처: 나희량(2011)을 토대로 작성

##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 (1) 인구사회학적 변화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30,261,700명, 2014년 2분기 기준)의 67%가 무슬림이고, 이슬람이 국교로 지정된 이슬람국가다. 말레이계(말레이 50.1%, 원주민 11.8%), 중국계(22.6%, 중국 남부 광둥·복건 출신), 인도계(6.7%, 남부 타밀계)와 외국인 거주자(8.2%)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헌법에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Malay)에 대해서는 헌법 160조에서 이슬람 종교를 믿으

며, 습관적으로 말레이어를 말하며, 말레이 관습을 따르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관광을 장려하는 홍보영상에서 말레이시아를 ‘진정한 아시아(Malaysia, Truly Asia)’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의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인의 월 평균 임금은 2015년 기준 2321 MYR(한화 약 63만원)이다. 2011년 이후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6년 최저임금은 900MYR(한화 약 23만 6천원)이다(표5 참고). 경제성장, 도시화 등으로 중산층 화이트칼라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고급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 증가는 전체 소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사회통합 부문에서 종족 간 격차 문제와 관련하여 민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통계부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사용 인구가 56%, 인터넷은 57%, 그리고 핸드폰 사용자는 94.2%에 달한다. 인터넷 사용자 중 60.3%는 하루에 적어도 한번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활동 중 상품 주문 및 서비스 구매가 15.3%를 차지한다(정법모 2015).

〈표 5〉 최저임금 현황

\*주당 총 근로시간 최대 48시간 이내 조건

지역	월당	시간당	일당		
			주당 근무일수		
			6일	5일	4일
말레이 반도	900	4.33	34.62	41.54	51.92
사바(Sabah)주, 사라왁(Sarawak)주, 라부안(Labuan) 금융특구	800	3.85	30.77	36.92	46.15

출처: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 (2) 소비문화

경제규모 면에서 ASEAN의 상위 4개국은 (1)인도네시아, (2)태국, (3)필리핀, (4)말레이시아이다. 이중 말레이시아는 지난 5년(2009-2014) 동안 가처분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가구당 연 가처분소득이 26,052 달러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지출의 2/3 가량(17,400 달러)을 선택소비재(discretionary item)에 사용할 수 있다(Euromonitor International 2015). 소비지출의 비중이 식료품에서 점차적으로 통신, 서비스, 여가 활동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친구 및 가족들과 함께 쇼핑, 외식, 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윌스 톱 쇼핑몰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점포보다 쇼핑몰에 있는 F&B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외식문화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옥에 부엌이 없을 정도로 외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 연중 무더운 날씨,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음식점 등의 영향이다. 그런데 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일반 서민층 소비자는 주로 길거리 노점상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건강과는 거리가 먼 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그 결과 비만, 성인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최근에는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식의 보편화와 함께 말

레이시아 소비문화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전자상거래다.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3억 3천만 달러(3천 618억 원)로,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라자다, 아마존, 이베이 등 외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말레이시아 시장에 이미 들어와 토종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한류의 영향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국가적 랜드마크인 페트로나스 빌딩, 페낭 대교 건설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위상이 매우 높다. 한국 외교부가 한국과 교류가 많은 14개 국가에서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호감도가 72.7%를 기록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레이더 A 2016).

〈표 6〉 2016 말레이시아 fact sheet

기준 연도	2015a	2011-15 평균 (%)	
인구 (m)	30.3	인구 증가율	1.5
GDP (US\$ bn; market exchange rate)	296.3	실질 GDP 성장률	5.3
GDP (US\$ bn; purchasing power parity)	814.9	실질 국내 소비 증가	7.1
GDP per head (US\$; market exchange rate)	9,768	인플레이션	2.4
GDP per head (US\$; purchasing power parity)	26,866	경상수지 (of GDP)	5.4
Exchange rate (av) M\$:US\$	3.91	FDI 유입 (% of GDP)	3.6

a Actual.

출처: EIU country summery 2016; EMIS 2016.

## 5. 투자 및 유망 업종

### (1) 산업 환경 및 시장특성 분석

말레이시아는 인구 3천만의 비교적 작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외 개방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국가다. ASEAN 역내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전체 교역액 중 ASEAN 역내 비중이 약 73%다. 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고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여 5천여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말레이시아는 대체로 대외 개방적인 정책기조를 표방하나 서비스, 농업, 건설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한적이다.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 정부조달 부문에 대한 외국인 기업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다. 내수시장의 경우 전체 상권의 절반 이상을 화인·화교가 장악하고 있어 화인·화교와의 유대관계가 마케팅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 및 제조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세부업종으로는 도소매, 정부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이 있고, 제조업의 세부업종으로는 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금속제품, 운송장비 및 설비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석유가스,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소비재 등이 있다.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 금융, 관

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 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개혁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유통산업 발달과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2015). 2020년까지 유통업과 관련된 12개의 정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유통 혁신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는 크게 현대화(modernize), 글로벌화(globalize), 혁신화(revolutionize)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현대화는 전통적인 소규모 점포의 IT 시스템, 고객 서비스, 재고관리 등 핵심 유통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화는 현지 복합물 개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혁신화는 온라인 쇼핑몰 등 신규 채널에 대한 지원과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신 유통채널에 대한 투자확대를 의미한다(리테일 매거진 2014).

한국 기업의 진출과 관련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는 온라인 쇼핑을 포함한 소비재 산업, ICT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추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등이 있다. 2016년 말 현재 말레이시아 업계 전망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말레이시아 경제는 고용시장 안정, 정부의 가치분소득 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수요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글로벌 교역 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여건이 주요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팜유, 자동차 등은 매출하락이나 정체를 예상하는 분위기인데다, 부동산은 규제로, 항공 산업은 경쟁심화로 인해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건설업은 정부주도의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업황이 추가 개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표 7〉 외부 및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sup>7)</sup>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시장 진출 거점</li> <li>◆ 전력, 교통, 물류 등 산업 인프라 발달</li> <li>◆ 영어 공용 문화권</li> <li>◆ 안정적인 정치 상황</li> <li>◆ 외국인들이 살기 편리한 생활환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적 작은 내수시장 규모</li> <li>◆ 부미푸트라 정책으로 인한 일부 업종 외국인 지분 제한</li> <li>◆ 중국, 일본 등 외국 기업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li> </ul>
내부 환경 <sup>8)</sup>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li> <li>◆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및 조선 등 업종의 비교우위</li> <li>◆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 부족</li> <li>◆ 현지에서의 금융조달 한계</li> <li>◆ 한국 기업문화와 말레이시아 기업문화의 불일치</li> </ul>

출처: 이재호·신민금·정운서 2015 자료를 참고로 작성.

7) 외부환경은 말레이시아 사업 환경에서 개별 기업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환경을 의미한다.

8) 내부환경은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하거나 성공적인 비즈니스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내부 역량 혹은 여건 등을 의미한다.

■ 세부 산업 환경 분석

〈표 8〉 세부 산업 환경 분석

분야	분석 내용
석유 가스	말레이시아 전체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 국영기업인 Petronas가 자원 개발담당기관으로 일반적인 정부조달은 자국기업에 국한되어있는 등 자국보호정책 유지 *주요동향: 말레이시아 내 정유공장 5개소 보유, 신규 석유화학 단지 RAPID 개발 중
전기 전자	반도체는 석유가스와 함께 말레이시아 대표산업으로 70년대부터 반도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여 세계 후공정(back-end)의 12%를 처리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기가 말레이시아 전체 수출액의 약 15% 차지 *주요동향: 페낭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련 기업 밀집(세계 후공정 8% 처리)
자동차	자국 및 일본 브랜드를 제외한 기타 브랜드 점유율은 20% 수준이며, 수입관세와 별도로 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자국 내 부가가치창출 정도에 따라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장벽을 유지 *2014년 점유율: Perodua(29.4%), Pronton(17.4%) Toyota(15.3%), Honda(11.6%), Nissan(7%)
철강	철강 산업은 말레이시아 GDP의 4%를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철강관련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있으나 최근 중국산 저가철강 수입 급증으로 반덤핑 및 셰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소비재	말레이시아는 문화시설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은 물론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망도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재 유통채널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다양한 인종의 소비계층이 공존하는 등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대체로 경쟁이 치열한 편임.

출처: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2015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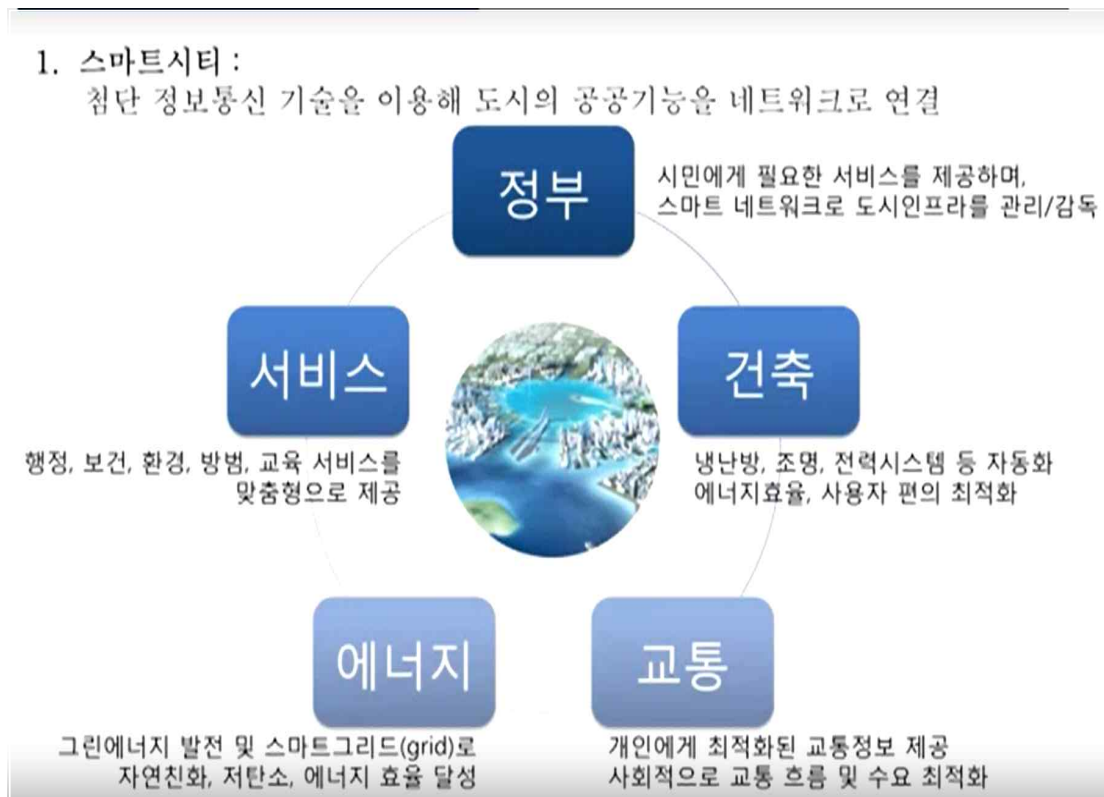
(2) 말레이시아 유망 산업

■ 스마트시티

- 말레이시아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교통체증, 공해, 각종 공공서비스의 비효율적인 분배 등 도시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6개 분야-건축&환경(building & environment), 건강(health), 에너지(energy), 교육(education), 수송(transport),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의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solution)을 찾고자 한다(Agentschap NL Ministerie van Economische Zaken). 스마트시티는 ICT 기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녹색산업'과도 연결돼 도시환경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 에너지, 수처리, 건축 등을 모두 Smart Grid로 연결시켜 간다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스마트시티 개념의 일부를 도입해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건설로 가는 과정에서 먼저

브로드밴드망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심과 교외로 나누어 각각 100MPS와 20MPS 수준의 통신망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는 사이버자야(Cyberjaya)와 조흐르주의 이스칸다르(Iskandar) 개발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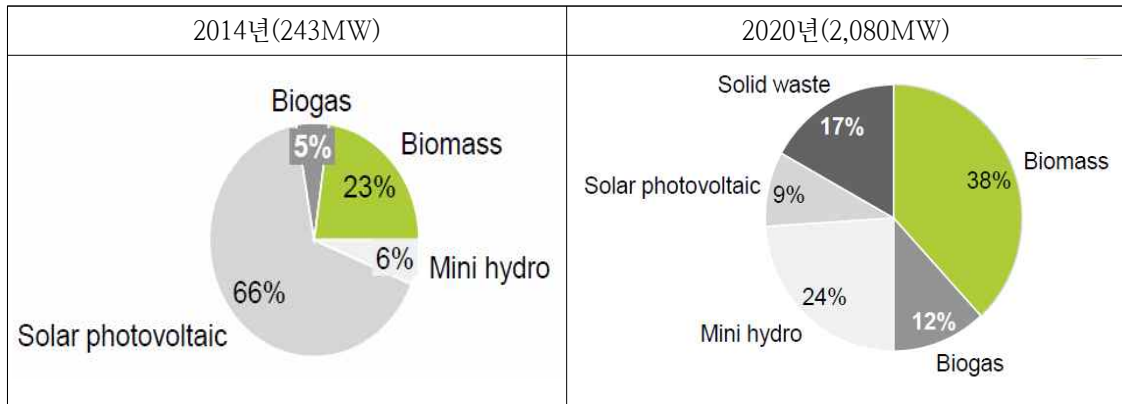
〈그림 5〉 스마트시티 계획



출처: PDS Consulting Sdn Bhd; 한국무역협회 발표자료 재인용

- 신재생 에너지
- 말레이시아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 KeTTHA)는 증가 추세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요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고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에서 202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원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7.8%(2080MW)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2015년 전력공급원의 5.5%).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는 신재생 에너지 구성을 현재 태양광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공급원으로 다변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림 6〉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원 구성



출처: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 and Economic Planning Unit; 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

말레이시아는 2009년 그린산업을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녹색기술정책(National Green Technology Policy)을 제정했다. 녹색기술정책의 5대 목표로는 (1)경제성장에 있어 에너지소비 최소화, (2)녹색기술산업 육성, (3)녹색기술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및 혁신 유도, (4)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차세대를 위한 환경보존, (5)녹색기술에 대한 공공교육 확대 및 활용 장려가 있다. 2015년 나집 총리는 2015에서 2030년까지 랑카위 섬을 말레이시아 최초의 저탄소섬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제주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과도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저탄소 도시개발, 전기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등 녹색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5).

### (3) 한국 기업 진출 유망 산업

#### ■ 프랜차이즈 산업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시장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지원과 견고한 내수 소비의 뒷받침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 755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7,005개의 가맹점들이 운영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고급 외식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식음료 프랜차이즈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알라룸푸르 및 쉐랑고르 주를 중심으로 이미 다수의 프랜차이즈가 진출해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만큼 성공적인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 경험이 있는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지역을 선정하는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류를 잘 이용하면서 치열한 한국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현지문화에 잘 접목하면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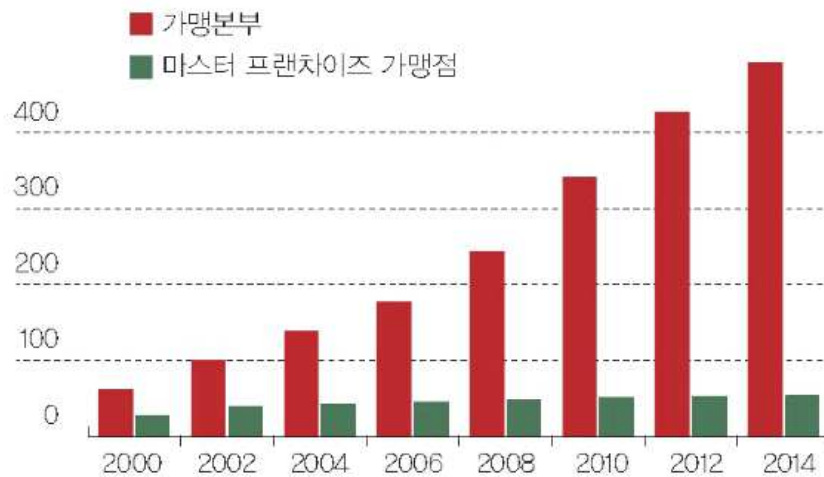
다. 한국 문화를 강조해야 할 부분과 현지문화와 융화되어야 할 점점을 적절하게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나치게 한류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 9〉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 진출현황

업종	진출방식	회사명	브랜드	진출연도	가맹점수
외식(26)	현지법인	제네시스	BBQ	2007	14
	마스터 프랜차이즈	(주)이티엔제우스	Bulgogi Bothers	2012	4
		페리카나	Pericana	2013	1
		(주)CJ푸드빌	Tous Les Jour	2013	3
		릴레이인터내셔널	Red Mango	2013	1
		(주)까페베네	Caffe Bene	2014	2
		(주)교촌 F&B	Kyochon	2014	1
		커피빈 구루나루	Coffee Gurunaru	2014	-
소매(87)	마스터 프랜차이즈	(주)더페이스샵	The Face Shop	2006	42
		스킨푸드	Skin Food	-	24
		에뛰드하우스	Etude House	-	21
		네이처 리퍼블릭	Nature Republic	-	-
서비스(114)	현지법인	대교	Eye Level	2004	-
합계	227				

출처: 이코노믹 리뷰 2014. 732.

〈그림 7〉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산업 추이



출처: 프랜차이즈자료연구원 이코노믹리뷰 2014 재인용

■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인 IT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동남아 국가 중 비교적 우수한 사회기반을 갖추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유통시장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시장은 2011년 8

억 4200만 링깃에서 2016년 19억 링깃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은 각각 67%, 35%로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보다 인프라가 우수한 편이며, 소비자들 또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충분한 시장으로 평가된다(PAGI 2015). 2015년 한국 SK플래닛의 오픈마켓 11번가는 이런 성장세를 고려해 터키, 인도네시아에 이은 세 번째 해외시장으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했다. 직접 인터넷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11번가, 큐텐(Q1000)<sup>9)</sup> 같은 기존의 플랫폼을 통해 상품 판매를 모색할 수 있다. 한편 홈쇼핑도 전자상거래와 함께 새롭게 성장할 시장으로 주목된다. GS 홈쇼핑은 2015년 1월 현지 최대 미디어그룹인 아스트로(Astro)와의 합작으로 홈쇼핑 채널 'GO SHOP'을 개국했다. 'GO SHOP'의 개국은 말레이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중소기업에게 희소식이다. 'GO SHOP'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60%가 한국 상품이고 삼성, LG와 같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뉴스 와이어 2015). 'GO SHOP'은 개국 첫해인 2015년에 5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말레이시아 소비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류에서 파생되는 긍정적인 국가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과 우수한 품질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가처분 소득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ASEAN의 다른 국가 소비들에 비해 상품의 품질과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소비재 시장은 현지문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현지문화를 깊게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대표 위성방송사인 ASTRO에서 한국 드라마, 예능, 음악 등을 소개하는 채널을 신규 편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쇼핑몰에서 한국 음식 및 프랜차이즈 매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한국 가수 공연도 매우 인기가 높다. 따라서 인터넷 인프라를 통한 온라인 쇼핑, 방송국을 통한 홈쇼핑, 프랜차이즈 방식의 매장 확장 등이 주요한 시장 진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국의 11번가와 GS 홈쇼핑이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시장 진출과 사업 확장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개방적인 이슬람 문화권,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복합사회, 한류뿐만 아니라 서구 및 타 문화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나치게 한국을 강조하기 보다는 현지문화에 잘 수용될 수 있는 한국문화의 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6. 한국 기업의 진출 전망 및 시사점

9) 큐텐은 2010년 G마켓의 창업자 구영배와 이베이(e-Bay)의 합작 투자로 설립된 벤처회사로서, 현재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등에서 B2C 기반으로 운영되는 아시아 지역 크로스 보더 인터넷 쇼핑몰(cross border internet shopping mall)이다.

말레이시아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3천 달러를 넘어서서 선진국 진입을 앞둔 산업국가다. 따라서 한국 기업 및 정부는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비재 및 문화콘텐츠 시장으로서 말레이시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한류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인 국민정서는 한국 소비재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한-ASEAN FTA관세 추가 인하 품목 및 할랄 인증 제품 등이 유망한 수출품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매력이 있고 글로벌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중산층 시장의 “테스트베드”로서 말레이시아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 투자부문에서는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한국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ICT를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및 신 재생에너지에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큰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경제 불안정성에 따라 수출 급감,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인 기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생존경쟁이 불가피하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지원이 요구된다. 말레이시아가 선도하고 있는 할랄 산업과 이슬람 금융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중동 시장을 포함한 이슬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 ◆ 한류, 동방정책 등으로 인해 형성된 친한 분위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재 및 문화 콘텐츠 시장 공략.
- ◆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된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매상품 판매를 제고할 여지가 높음.
- ◆ 동방정책 2.0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됨(최첨단 산업, 신재생 에너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 ◆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전개로 신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음.
- ◆ 말레이시아 정부가 교육, 의료서비스,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IT도입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할랄 산업 및 이슬람 금융의 세계적 선도국으로서의 말레이시아를 활용할 방법과 다른 한편으로 대비(비관세 장벽)할 방법을 강구해야 함.
- ◆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시장 진출 거점으로 말레이시아를 활용.
- ◆ 오래전부터 진출기반을 다져놓은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중국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근 교역활동이 활발해지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됨.

- ◆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 주 입찰자가 이미 선정된 경우 파생되는 하위입찰(sub-contract)에 참여하면서 현지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판단됨.
- ◆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 정부 차원의 지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 말레이시아 정부조달 프로젝트에는 실질적으로 말레이계 기업을 통해서만 입찰을 할 수 있는 환경임.

## 《참고문헌》

### ○ 국문자료

- 나희량. 2011.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2): 135-172.
- 뉴스와이어. 2015. “GS홈쇼핑, 말레이시아 합작 홈쇼핑 ‘GO SHOP’ 개국.” 2월 1일.
- 레이더 A. 2016. “창간 50주년 매경·MBN 공동기획, ASEAN에서富를 캐다. - 1부 말레이시아·브루나이” 4월 4일.
- 리테일 매거진. 2014. “해외 유통시장 분석-3. 말레이시아 유통시장.”
- 박정훈. 2016.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할랄(Halal)인증제 비교연구: 제도운영주체 결정의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23(3): 221-259.
- 보건복지부·서울대. 2011.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빈곤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이베스트투자증권. 2016. ‘뉴노멀시대’의 Heroes. 리서치 센터 투자전략팀.
- 이재호·신민금·정운서. 2013.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육상교통 인프라, 바이오에너지. Kotra\_KIEP.
- 이코노믹리뷰. 2014. “[글로벌 프랜차이즈-말레이시아①] 이슬람-경제개혁-웰빙트렌드를 읽어라.” 9월 22일.
- \_\_\_\_\_. 2014. “[글로벌 프랜차이즈-말레이시아④] 한국식 ‘덤 문화’로 공략하라.” 732호
- 정법모. 2015. 말레이시아 소비동향: 소비와 문화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동남아 이슈페이퍼 통권 10.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정영규. 2008. 이슬람 경제의 이해: 이란의 경제정책과 말레이시아 산업정책. 서울: 연경문화사
- 조대현. 2015. “말레이시아 동방정책 2.0: 지식산업과 첨단 기술 육성 목표 한국, 동방정책 2.0 적극 참여 필요.” *Chindia plus*.
- 주말레이시아대사관. 2015. “말레이시아 할랄식품 시장 현황.”
- \_\_\_\_\_. 2015.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 주요 내용.
- \_\_\_\_\_. 2016. 말레이시아 최저임금제도 현황
- 주ASEAN대한민국대표부. 2016. 한 눈에 보는 ASEAN경제공동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말레이시아 수산물 소비 및 할랄 수산식품 시장 동향.” 해외 시장정보 이슈 분석 Vol. 3.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5. “말레이시아,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박차.”
-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2015. 2016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PAGI. 2015. “말레이시아 온라인 유통망 '춘추전국시대'...한국도 가세.” 5월 22일.

○ 영문자료

A Blueprint for Growth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Progress and Key Achievements.

Agentschap NL Ministerie van Economische Zaken. Smart Cities in Malaysia.

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 Anchoring Growth on People.

Executive Summary 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 Anchoring Growth on People.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5. “Marketing to the ASEAN Consumer.”

Halal Focus. 2016. “Malaysia: World Halal Week opens in Kuala Lumpur.” March 31. <http://halalfocus.net/22979-2/>.

InvestKL. “Malaysia’s Game Changing Principal Hub Incentive Announced.” [http://www.investkl.gov.my/Relevant\\_News-@-Malaysia\\_Game\\_Changing\\_Principal\\_Hub\\_Incentive\\_Announced.aspx](http://www.investkl.gov.my/Relevant_News-@-Malaysia_Game_Changing_Principal_Hub_Incentive_Announced.aspx).

Malaysia Finance Report 2015.

Malley, Alex. 2016. “AEC to benefit Malaysia’s dynamic small businesses.” *New Straits Times*, September 29.

PWC. 2015. “The Principle Hub Incentive, Malaysia.” May.

### III. 2030년 제7위 경제대국을 꿈꾸는 인도네시아

2016년 현재 인도네시아 사회는 전환기(transitional period)를 맞이하고 있다. 독립 이후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사회를 규정지었던 과거의 권위주의 정치경제적 구조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조코위 정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정부의 모든 정책은 “전환의 계곡”을 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전환의 비용(transitional cost)”을 지불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의 구조적 위기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은 조코위 정부의 개혁정책은 인도네시아 미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다. 본 장에서는 조코위 정부의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사회의 변화방향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있어서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안에서의 인도네시아

아세안 정치안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이하 APSC), 경제(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 그리고 사회문화(ASEAN Social Culture Community, ASCC) 세 축으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이하 AC)는 2015년 12월 31일 정식 출범하였다. 공동체 세 축 가운데 하나인 AEC는 인구 6억 3천만 명을 가진 인구 규모 글로벌 3위 거대 시장이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7억 9천 만 명으로 증가하여 미래 성장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에서 인구규모와 생산력에서 40%를 담당하는 거대한 국가이다. 즉, 아세안 전체 인구 6억 3천 만 명에서 2억 5천만 명이 인도네시아 인구이고, 2014년 기준 아세안 GDP는 2.6조 달러의 40% 생산을 인도네시아가 담당하고 있다.

AEC 출범 이후, AEC는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의 단일생산기지과 단일소비시장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10개 국가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내의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림 1〉 아세안 공동체와 아세안 연계성 사업 관련도



출처: ASEAN. 2015. Vientiane Declaration on the Adoption of the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p. 15.

위의 〈그림 1〉은 AC 건설과 아세안연계성 관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AC가 공식출범과 함께 2025년까지 AC의 청사진-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을 제출한 것처럼, 아세안 연계성 플랜과 관련해서 “Vientiane Declaration on the Adoption onf the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보고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AEC는 가장 기본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내륙수로, 에너지, ICT 등에 관한 인프라 사업을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배치하고 있고, 각 국도 AC 전체와의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일시장으로서의 AEC의 의미는 10개 국가들의 산업분야가 서로 기능적으로 연결된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금융 및 하이테크 산업 국가군, 중진 제조업국가군 그리고 농업 및 개발도상국가 군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AEC 안에서 중진제조업국가군에 속하면서, 특정한 산업적 특징에서 아래와 같이 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아세안의 개별국가들은 아세안 속에서 전망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인식과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표 1〉 아세안 5국의 주요산업 수요전망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프라	AHN(아세안고속도로망), SKRL(싱가포르쿤밍철도), 해양교통시스템, 다기능통합교통시스템, APG(아세안에너지망), TAGP(아세안가스파이프라인망), AIX(아세안 인터넷교환망) 등				
	해양물류망 철강	재생에너지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연결 고속철사업		철강
제조업	자동차조립, 항공기부품	자동차부품, IT, 항공부품	자동차, 가전	친환경, 의료기기	전기·전자 오토바이
농식품· 바이오	팜오일, 커피, 쌀, 고무, 설탕, 코코아 등		팜오일, 고무 등	미래농업, 바이오	커피, 쌀 등
금융·유통· 서비스	해양물류 전자상거래	아세안물류허브 /글로벌제조생산기지	Air Asia 등 항공운송	글로벌 금융허브	글로벌수출 가공거점
기타	석유화학	의료관광	제약	AEC 리터	섬유(임가공)

출처: 박준홍 2015, “떠오르는 아세안을 주목하라” p.8의 표를 새로운 정보 추가로 재구성함.

〈표 1〉은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적 기대도 함축된 표이다. 그러나 2016년 현재로서 AEC는 단일시장으로서 산업분업이나 무역상호의존성 높은 시장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그 증거로 역내 무역지표에서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교역에 관한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국가를 순위별로 보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미국,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호주 순이다. 이 순위에서 동남아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국가를 순위별로 보면,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독일 순이다(코트라 2016). 이 순위에서 동남아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만이다. 정리하자면, 동남아 시장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국가를 주로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AEC가 더욱 단일경제단위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끼리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아세안 역내 무역 내향성이 낮은 이유는 첫째, 아세안의 대 역외 무역규모와 비중이 역내 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둘째, 아세안 역내 무역이 주로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아세안 역내 무역에서 중간재 비중이 56.9%이고, 원료는 15%, 최종재는 28.2%이다(나희량 2014, 81). 다시 말하자면, 단일생산기지와 단일시장으로서 AEC는 공식 출범했지만 하나의 단일시장으로서 역내에서 원료, 중간 그리고 최종재의 교역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즉, AEC 회원국 모두가 역내 보다는 역외 무역이 활발한 것이다. 따라서 AEC를 좀 더 유기적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무역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최소 3개 국가와 FTA 타결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와는 아세안역내무역협정, 한국, 중국, 일본과는 아세안 FTA를 이미 체결하고 있다. 지금 현재 FTA 협상중인 경우는 인니-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 인니-한국 CEPA, 인니-인도 CEPA, 인니-칠레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이다. 또, 현재 검토 중인 경우는 터기 FTA, 페루 FTA,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걸프협력기구 회원국, 이집트, EU, 파키스탄, 미국, 튀니지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외 FTA와의 강화가 역내 무역 의존성을 줄이는 계기로 작용하여 AEC의 실질적 발전을 더디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또, EU로부터 영국의 탈출(Brexit)과 미국 대선 결과로 집권하게 된 트럼프(Donald Trump)로 인해 세계는 신고립주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는 FTA 전략을 탄력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이다.

##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 특성

### (1)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와 조코위 정부 집권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국가이다. Economist에서 167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민주주의 수준에 2015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49위(7.03), 필리핀 54위(6.84), 말레이시아 68위(6.62), 싱가포르 74위(6.14), 태국 98위(5.9), 캄보디아 110위(4.27), 라오스 115위(2.21)이다. Economist 측정기준으로 민주주의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위가 노르웨이 9.93이고, 167위가 북한으로 1.08점이다. 이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4년 민주화 이후 3번째로 직선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면서 최초로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즉, 친 민주적이자 개혁주의 성향이 뚜렷한 조코위 대통령이 201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번 선거는 10년만의 정권교체이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과 유습 칼라(Jusuf Kalla) 부통령은 모두 기업가 출신으로 이전 권력계층인 군부세력과 연관이 없는 세력으로 권력을 구성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첫 문민정부 출범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인도네시아 시민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정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치는 “대통령제와 연립정부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기능하는 대통령제이기 보다는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 속에서 기능하는 “제한적 대통령제”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행정부 안에서도 정당 간 관계와 내각의 인적구도 속에서 복잡한 정치가 작동 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행정부 안에서의 정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조코위 정부는 2014년 10월 4개의 조정장관직과 30개 부서로 ‘일하는 내각(Working Cabinet)’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에 돌입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15년 10월과 2016년 7월 두 번 내각이 교체되었다. 대략 집권 2년 반 동안의 내각변화를 통해 향후 조코위 정부의 방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네시아 행정부에 있어서 조정장관은 국무총리급 역할로 정치·법·안보, 경제, 해양 그리고 인적개발과 문화 조정장관직이다. 이 4개 조정장관 중에서 해양조정장관(Coordinating Minister of Maritime Affairs)직은 신설직이다. 이것은 조코위 정부의 핵심적 정책이 “해양”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4개 조정장관 중에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부서는 메카와티의 딸 뿌아(Puan Maharani)만이 인적개발 및 문화 조정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치·법·안보 조정장관에 있었던 루훗(Luhut Binar Panjaitan)은 위란토(Wiranto)로 올해 7월에 교체되었다.

둘째, 30개 장관직 중에서 관료, 학자 및 전문가 출신이 외교부, 국방부, 재정부, 에너지·자연자원부, 무역부, 농업부, 교육부, 해양어업부, 공사 및 공공주택 관리부, 보건부, 문화와 초중등교육부, 사회부, 종교부, 정보통신부, 국가사무총장, 연구·기술·고등교육부, 여성증진·아동보호부, 국가개발부, 국영기업부, 관광부 등 총 20개 부서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PDI-P) 정치인은 내무부, 법무부, 중소기업 조정부 3개 부서에 임명되었고, Hanura 정당 정치인은 산업부, 농업 및 공간계획부, 행정 및 관료 개혁부 3개 부서에 임명되었고, NasDem 정당 정치인은 환경산림부 1개 부서에 임명되었고, 마지막 PKB 정당 정치인은 인적자원부, 마을·소외지역·이민부, 청년스포츠부 3개 부서에 임명되었다(Parlina and Widhiarto 2014).

셋째, 2016년 7월 개각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재무부 장관으로 스리 물리야니(Sri Mulyani Indrawati)의 등용이다. 2005년부터 유도요노 정부에서 재무부장관을 맡아 국세청 부패개혁을 진두지휘한 인물이지만,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대응의 하나인 센츄리 은행(Bank Century)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장관직에서 물러난 그 동안 세계은행 최고운영책임자로 역할하였다. 스리 물리야니는 인도네시아에서 전문 관료(Technocrate)이자 개혁파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서, 조코위의 재등용으로 인도네시아 재정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기대받는 인물이다. 2016년 7월 개각의 두 번째 특징은 리니 수마르노(Rini Soemarno) 국영기업부 장관의 연임이다. 리니 수마르노는 메카와티 대통령 시절 발탁된 장관인데, 조코위가 다시 발탁한 장관이다. 메카와티는 그녀를 자기의 심복으로 다시 만 들고자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교체를 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코위는 리니 수마르노를 국영기업부 장관으로 계속 일하게 하였다.

넷째, 1기부터 조코위 정부의 핵심적인 두 여성장관인 외교부 장관의 레트노 마르수니

(Retno Marsuni)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시 푸지아스투티(Susi Pudjiastuti)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조코위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로서 현재까지 조코위 정부의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가는 신뢰할만한 인물들이다. 그리고 최근 해양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 불법어선 폭파라는 강경대응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중학교 중퇴라는 사실도 인도네시아 대중의 정서를 위로하는 일이기도 하다.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두 번의 내각개편은 조코위 대통령의 자율성을 확대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자율성 확보는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책과 개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인 것이다.

〈그림 2〉 제7대 대통령 조코위 정부의 주요 관료



\* (좌측부터) 국영기업장관 리니 수마르노, 재무부장관 스리 물리야니, 외무부장관 레트노 마르수니, 해양부장관 수시 푸지아스투티

## (2) 과두지배세력, 주요정당세력과 2017년 2월 지방선거

인도네시아 정치는 가사화된 정치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 정당정치인, 내각관료 등의 정치만이 존재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 및 경제사회의 비즈니스맨들도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는 긍정과 부정의 요소 모두를 다 갖고 있다. 기업인과 종교인들도 언제나 정치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 문화와 정당 활동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회라는 장점을 갖는가 하면, 정경유착의 고리가 매우 깊은 부패의 사슬구조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배태하는 부정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특징을 소수의 정치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과두제적 특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특징들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부분 이들은 성공한 중국계 인도네시아(Chinese Indonesia) 기업가 출신들이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합리적인 사회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표 2〉는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과두적 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인물과 그가 소유한 회사를 나타낸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표 2〉를 통해서 그들이 소유한 미디어 관련 회사를 알 수 있다.

〈표 2〉 과두적 지배자들과 그들이 소유한 미디어 분야

	그룹	TV	라디오	인쇄물	온라인	다른 사업	소유주
1	Global Mediacomm (MNC)	20	22	7	1	Content production, Content distribution Talent management	Hary Tanoesoedibjo
2	Jawa Pos Group	20	0	171	1	Paper mills, printing plants, Power plant	Dahlan Iskan Azrul Ananda
3	Kelompok Kompas Grameia	10	12	88	2	Property, Manufacturing Bookstore chain, Event organizer, University	Jacob Oetama
4	Mahaka Media Gruoup	2	19	5	0	Event organizer, PR consultant	Abdul Gani Erick Thoir
5	Elang Mahkopta Teknologi	3	0	0	1	Telecommunications and IT Solutions	Sariatmaadja Family
6	CT Corp	2	0	0	1	Financial services, Lifestyle and Entertainment, Natural resources, Property	Chairul Tanjung
7	Visi Media Asia	2	0	0	1	Natural resources. Network provider, Property	Bakrie and Brotehrs
8	Media Group	1	0	3	0	Property(Hotel)	Surya Paloh
9	MRA Media	0	11	16	0	Retail, Property, Food and beverage Automotive	Adiguna Soetowo and Soetikno Soedarjo
10	Femina Group	0	2	4	0	Talent agency, Publishing	Pia Alisjahbana
11	Tempo Inti Media	1	0	3	1	Documentary Making	Yayasan Tempo
12	Beritasatu Media Holding	2	0	10	1	Property, Health services, Cable TV, Internet services provider, University	Lippo Group

출처: Nugroho *et al.*, "Mapping the Landscape of the Media Industry in Contemporary Indonesia" (Winter 2013, 26., 재인용).

〈표 2〉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인물로 접근하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은 인도네시아 최고 10대 부자를 말한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인도네시아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이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도네시아 사회변화를 좌우하는 핵심세력이 되고 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1998년 민주화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 것에 비하면, 정치적으로는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정

치활동이 자유롭게 되고 정부 주요 장관직에 임명되는 등 정치적 진출이 자유로워졌다. 이러한 변화된 지위에 맞게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조세 및 국내 투자 등 경제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또한 성공한 기업가들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저항 받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 세력의 의한 정치적 영향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인도네시아 최고 10대 부자 기업가



출처: Kartajaya. 2016. Indonesia Latest Update: Special Insight from MarkPlus, Inc. p.46.

무엇보다 민주화 이후 1999년 총선부터 4번의 총선에서 인도네시아 주요 정치행위자로서 기능했던 것은 정당이다. 〈표 3〉는 2014년 총선에서 전국적 지지율 2% 이상을 획득하고 의회에 진출한 정당은 10개 정당과 10개 주요정당의 로고이다. 10개 정당은 이념적으로 “빨찌산라”와 “이슬람” 정당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빨찌산라는 인도네시아 통치이념으로서 세속화된 정당을 특징짓는다. 빨찌산라 정당은 인도네시아민주투쟁당(PDI-P), 골카르(Golongan Karya 또는 Golkar), 그린드라(Gerindar), 민주당(Partai Democrat), 나스뎀(NasDem), 하누라(Hanura)이고, 이슬람 정당으로는 국민각성당(PKB), 국민수권당(PAN), 통일개발당(PPP), 복지당(PKS)이다. 이 정당 중에서 지난 2014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코위 대통령 후보를 추대한 정당으로 현재 집권 여당을 구성하는 정당은 PDI-P, NasDem, Hanura, PKB 4개 정당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치 특성으로 이러한 연대 또는 연합구도는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즉, 선거 국면에서도 총선과 대선과정, 대선 결선투표에서 1차와 2차 국면마다 연합구도는 계속 변모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선거에서 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곧 이어지는 선거에서 연대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정치과정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유동적인 정치상황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조건이다. 향후 인도네시아 정



당정치는 위에서 언급한 10개 정당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첫 총선에서 너무나 많은 정당이 선거에 출마해서 큰 혼란을 가져온 것에 비하면, 민주화 이후 선거가 진행될수록 유권자들의 정치적 경험이 축적되는 것과 의회 진출 봉쇄조항, 정당등록제를 수행하면서 정당의 난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화 이후 계속된 정치과정과 제도 마련으로 인도네시아 정당정치는 안정성을 취득했다.

〈표 3〉 인도네시아 주요정당과 총선지지율



시기 정당	1999		2004		2009		2014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Golkar	22.46	120	21.6	129	14.5	106	14.75	91
PDI-P	33.73	153	18.5	109	14.0	94	18.95	109
PKB	12.66	51	10.6	52	4.9	28	9.04	49
PPP	10.72	58	8.2	58	5.3	38	6.53	35
PD	-	-	7.5	55	20.9	148	10.19	61
PKS	1.36	7	7.3	45	7.9	57	6.79	40
PAN	7.12	34	6.4	53	6.0	45	7.59	47
PBB	1.94	13	2.62	11	-	-	1.46	0
PBR	-	-	2.44	13	-	-	-	-
PDS	-	-	2.13	12	-	-	-	-
PKPB	-	-	2.11	2	-	-	-	-
Gerindra					4.5	26	11.81	73
Hanura							5.26	16
NasDem							6.72	39
PKPI							0.91	0
Total			80.1	501	81.8	560	100	560

출처: Suryadinata(2005), 인도네시아선거관리위원회(KPU, 2014) 홈페이지

그러나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정치는 후보를 중심으로 정당연합이 매우 유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정당 자체는 안정적일지라도 ‘후보’를 중심으로 정치과정은 동학적이다. 내년 2017 2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이는 2019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 의미를 갖는다. 특히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가 이러한 정치적 상징을 가장 많이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는 내년 진행될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후보군이다. 가장 왼쪽의 위와 아래 사진 속 인물은 현재 자카르타 주지사 바수키(Basuki Tjahaja Purnama)와 부지사 자룻(Djarot Saiful Hidayat)이고, 가운데 후보군은 교육문화 장관인 아니스(Anies Baswedan)과 기업가인 산디아카(Sandiaga Uno)이고, 가장 오른쪽 후보군은 전 유도 요노 대통령의 아들 아구스(Agus Harimurti Yudhoyono)와 전 수라바야 시장 실비아나(Sylviana Murni)이다. 이들 후보군 속의 인물들은 향후 인도네시아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인물들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후보군을 중심으로 정당연합을 매우 유동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4> 2017년 2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후보군



출처: Jakarta Post 2016년 11월 8일자

### (3) 조코위 정부의 외교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948년 당시 부통령인 하타(Mohammed Hatta)를 통해 “독립적이고 활동적인(Independent and Active, *Bebas-aktif*) 외교”라는 기본 노선이 천명된 바 있다. 이러한 외교노선은 제1대 대통령 수카르노(Soekarno)로부터 현재 제7대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로 이어지는



인도네시아 국가의 기본 외교정신이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외교의 기본노선은 각 정부의 특성에 맞게 좀 더 구체적인 특징과 개념을 만들어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카르노는 1955년 제3세계 비동맹(Non-Aligned Movement) 노선을 이끌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외교적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면서, 2014년 10월 출범한 조코위 정부는 2015년에 60주년 “반동 기념회의”를 자카르타와 반둥 두 공간에서 대대적으로 치러 내었다. 109개국 참가, 15개국 참관, 17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매우 큰 국제회의였다. 그리고 수하르토(Suharto) 정부 시기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은 내년 2017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 “동남아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이하 아세안(ASEAN))”의 창립이다. 아세안은 1967년 8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5개 국가로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아세안 창립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매우 현격한 공헌을 하였다.<sup>10)</sup>

이러한 인도네시아 외교노선은 좀 더 구체적으로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주권국가(Free and Active Sovereignty State)” 외교로도 명명될 수 있다. 그래서 1998년 민주화 이행 이후 두 정부인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2004년-2014년)와 조코위 정부는 각각 “균형적이고 역동적인(Dynamic Equilibrium) 외교” 그리고 “민중 중심적 외교(People-centered Foreign Policy)”를 밝히면서, 인도네시아 국익에 필요한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중국과 같이 강대국 지위로서 외교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양국, 지역, 세계를 향하여 주권국가로서 이익을 수호할 외교를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국가의 외교 전략과 방법은 현대 국제정치에서 매우 새롭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현실주의가 국제정치질서를 설명하는 지배적인 접근법이지만, 이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아시아-아프리카 회의(Asian African Conference)”와 “아세안”의 예에서 인도네시아 외교가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는 외교적 틀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Wicaksana 2016).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 유도요노 정부 10년을 보냈고, 두 번째 민주정부로서 조코위가 통치하고 있다. 조코위 정부의 임기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분석에 따르면 두 정부는 매우 대조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도요노 정부는 직선제로 선출된 민주정부이지만, 그는 엘리트 군출신으로서 기존 기득권 엘리트 범주를 뛰어넘는 신분은 아니다. 하지만 유도요노 정부는 최초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정부로서 매우 많은 기대감으로 출발했던 것도 사실이고, 개혁정치를 시도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코위는 인도네시아 최초 민간인 출신 대통령으로, 평범한 중부자바(Central Java) 솔로(Solo) 지역의 성공한 중견 가구기업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현직 조코위 대통령은 과거 인도네시아 엘리트와는 질적으로 다른

10) 1965년부터 1967년 사이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지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국내 상황은 쿠데타로 수카르노에서 수카르노로 권력이 이양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1963년 말레이시아는 연방을 선포하면서, 인도네시아와 국경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1965년에는 국경문제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가 일촉즉발의 대결상태였다. 같은 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였다. 이 상황에서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접수한 수하르토는 자기권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게 자국 영토를 할애하면서까지 역내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지역협의체를 선택하였다.

출신 신분이다. 솔로 시장과 자카르타 주지사를 수행하면서 지방에서 중앙으로 그 이름이 알려졌고, 그야말로 인도네시아 국민이 선택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인 것이다. 향후 두 인물과 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인도네시아 연구영역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현재까지 두 정부의 외교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다.<sup>11)</sup>

유도요노 집권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있어 ‘외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평가되고, 1기보다는 2기에 더 많은 외교무대에서 활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발리 민주주의포럼(Bali Democracy Forum)’을 시작으로, 2003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의 구상으로부터 시작된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건설, G20에서 매우 적극적인 활동상을 보인 유도요노 대통령 그리고 2013년에는 APEC 의장국으로 ‘연계성(Connectivity)’ 개념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사회화하는데 현격한 공헌을 하였다. 유도요노 외교스타일은 “적은 없고, 수많은 국가를 친구로 만들며 외교정책은 모든 방향을 향해야 한다(a thousand friends and zero enemies and an all directions foreign policy)”라는 그의 언급으로 추론될 수 있는데, 그는 인도네시아를 많은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수립하는데 공헌하였다. 그래서 그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이란과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만들어갔다(Connelly 2015, 3).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이웃 국가들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훨씬 더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이러한 유도요노의 외교는 인도네시아를 외교적으로 ‘신흥파워’, 경제적으로 ‘신흥시장’으로서 지위를 올려놓는데 현격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도요노 외교스타일의 문제는 ‘외교적 마찰’을 피함으로써, 정작 양자적 그리고 다자적으로 문제가 있는 외교현안을 풀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처우와 인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이다.

그러나 조코위 정부의 외교는 위에서 언급한 유도요노 정부의 외교노력에 비하면 훨씬 더 ‘국내정치’에 집중된 ‘민족주의’ 외교노선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 정부였던 유도요노 정부의 정책적 결과로부터 기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유도요노 정부 10년의 집권 동안 이루지 못한 경제 및 정치개혁의 결과가 조코위 정부에게 그대로 이월되었기 때문이다. 그 상황과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결국 조코위 정부의 외교는 인도네시아를 해양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목표에 충실한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코위 정부의 핵심 외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강조점이 있다. 첫째, 해양 외교이다. 다도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0개의 이웃 국가들과 마주한 것으로, 해양강국을 위해서는 대륙을 포함하여 해양 국경분쟁해결에 대한 조속

---

11) 인도네시아 권력구조는 5년 연임제 대통령제이다. 유도요노는 2004년 시작하여, 2009년 연임되어 2014년까지 집권을 한다. 2004년-2009년까지를 1기, 2009년-2014년까지를 2기로 구분하는데, 유도요노는 집권시기 1기보다는 2기에 외교에 더욱 집중하였다. 지금 현재로서 조코위 정부는 연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차원에서 두 정부의 외교를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기도 하다. 왜냐하면, 조코위는 현재 상태에서 연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 이슈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코위 정부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1기보단 2기에서 외교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해결이 필요하다. 둘째, 단일한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위한 영토적 통합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국 다도국가로서 해양주권(maritime sovereignty)을 확보하고 모든 섬들의 안보와 번영을 단일한 국가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해양자원의 보호이다. 경제적 배타수역(EEZ) 안의 천연 및 해양자원에 대한 확보와 개발이다. 넷째, 방위외교력 강화이다. 결국 위와 같은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방위력을 증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섯째, 해양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국가들 사이의 외교력을 높이는 것이다 (Connolly 2015, 8). 해양강국건설을 위한 위와 같은 외교는 결국 관련된 이웃국가들과의 대결과 갈등 국면을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조코위 정부의 외교를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서 “주권”개념이 외교에 있어서 전면 앞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sup>12)</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도네시아는 “인도양연합(Indian Ocean Rim Association)”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IORA가 “인도양을 위한 APEC”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조코위 정부의 외교는 이전 정부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해양외교력을 강화 또는 주력하는데 강조점을 두고자 할 것이다.

### 3.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2016년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는 강점과 약점이 공존한다. 그 동안 경제구조의 약점으로 작용했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 “조세사면” 조치로 국가예산 환경이 개선된다거나 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세계 경제의 장기적 침체, 공공지출의 삭감, 공적손실의 증가, 국가재정의 취약한 구조 등 단점이 존재한다. 이 절에서는 조코위 정부 출범 전후로 인도네시아 경제 및 산업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2016년 경제적 현 상황

유도요노 집권 10년 동안 대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높았지만 집권 말 2013년과 2014년에는 경기가 심각한 침체 상태를 보였다. 아래 <표 4> 유도요노 2기 정부의 마지막 몇 년과 조코위 집권 2년에 대한 거시경제지표이다. 경제성장률은 2013년과 2014년 현격하게 저하하였고, 인도네시아 정부 부채율은 증가하였고, 인플레이션은 급증하였다. 실업률은 6%대로 높은 편이고, 수출의 저조로 2014년은 무역수지가 마이너스 상태였다.

12) 모든 국가의 외교가 국내정치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조코위 정부가 해양국가건설을 위한 강한 주권국가로서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국내적 정치상황은 조코위 정부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 조코위 정부는 현재 제도적 취약성 속에 있다(Mietzner 2016). 즉, 대통령제이면서 연립정부상태인데, 의회에서 조코위가 소속된 정당은 다수당으로서 위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지지기반이 높지 않다. 조코위 정부의 기반은 높은 대중적 지지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은 실제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도구적 기능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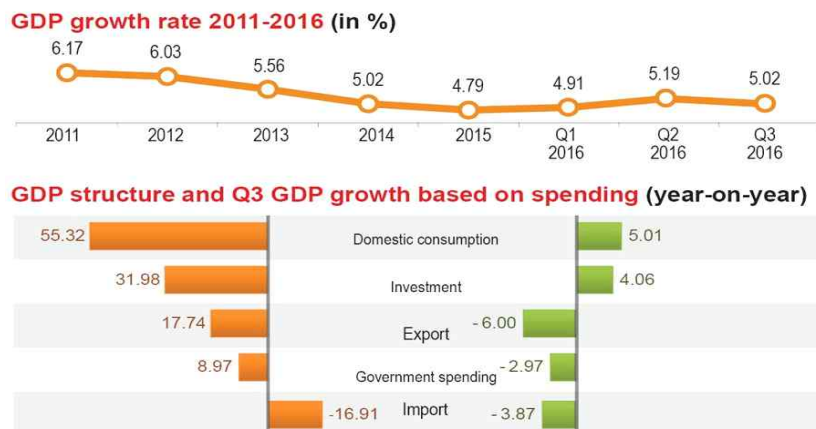
〈표 4〉 2011년-2015년 인도네시아 거시경제지표

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 내 경 제	경제성장률	%	6.50	6.30	5.80	5.02	4.79
	1인당GDP	US \$	3,703	3,759	3,680	3,533	3,514
	명목 GDP	US \$ 억	8,462	8,782	9,464	8,561	8,885
	순정부부채/GDP	%	24.6	26.2	30.4	34.8	36.1
	인플레이션	%	3.79	4.30	8.38	8.36	3.35
	종합주가지수	분기 말	3,821	4,316	4,274	5,226	4,593
	실업률	%	6.6	6.1	6.2	5.9	6.2
대 외 경 제	수출실적	US \$ 억	1,911	1,873	1,821	1,763	1,503
	수입실적	US \$ 억	1,573	1,787	1,763	1,782	1,427
	무역수지	US \$ 억	338	86	58	-19	76
	외국인투자금액	US \$ 억	195	246	286	285	293
	총외채	US \$ 억	2,254	2,524	2,599	2,929	3,107
	외환보유고	US \$ 억	1,119	1,128	1,007	1,119	1,059
	이자율	%	6.00	5.75	6.50	7.25	7.50
	환율	US \$/분기말	9,068	9,670	12,189	12,440	13,864

출처: IMF, 인도네시아 중앙은행·통계청·투자청, Bloomberg(자카르타 무역관, 2016. 『인도네시아』 p.29 표 재인용).

이러한 심각한 경제 상태를 아래 〈그림 5〉를 통해서 좀 더 가시적으로 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하락하였다가, 2016년 조금 반등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6년 올해 경제성장률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 각각 4.91%, 5.19%, 5.02%이다. 2016년 3분기까지 평균 경제성장률 5.04%이다. 그리고 2016년 3분기를 작년 대비 GDP 구성을 보면, 국내소비와 투자는 각각 5.01%와 4.06%가 성장하였지만, 수입, 수출 그리고 정부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내년 2017년에도 5%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았을 때, 조코위 정부 출범 이후 6%~7%대 경제 성장으로의 재진입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그림 5〉 인도네시아 2011-2016년 경제성장률과 GDP 구성



출처: Grace D. 2016. "State spending in hot seat," *The Jakarta Post*

이렇듯 조코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이 저조한 이유는 인도네시아 경제구조의 만성적 한계구조로부터 기인한다. 즉, 인프라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은 높아지고, 세계시장은 장기침체로 수출은 저조한 상태였다. 결국 2014년 말 정부는 심각한 재정압박 상태에 직면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루피아 약세로 드러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하는 2014년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인프라 종합 순위 142개국 중에 72번째에 위치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기업 환경 애로 요인 순위로 1위가 부패, 2위가 금융접근성의 한계 3위 인플레이션, 4위 관료주의, 5위 인프라 공급부족 6위 정책불안정성이다. 이러한 6가지 요인으로서 정치행정적 요인이 4개이고, 순수 경제적 요인 2개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인프라 개선”과 “반부패 행정개혁”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을 위해서 핵심적인 과제가 된 것이다.

## (2) 조코위 정부의 경제 및 산업정책: 해양강국건설과 해양인프라

현 조코위 정부는 2015년 ‘중기경제개발계획(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2015-2019, 이하 RPJPN 2015-2019)’을 발표하여 집행중에 있다.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은 “인프라”이고, 그 중에서도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인프라”이다. 이러한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제출한 것이 ‘중기 외부 차관 계획(Daftar Rencana Pinjaman Luar Negeri Jangka Menengah 2015-2019(List of Medium-Term Planned External Loans 2015-2019), 이하 DRPLN-JM 2015-2019)’이다. DRPLN-JM 2015-2019의 88%가 인프라 관련 재정마련 계획이고, 12%가 그 밖의 영역에 해당된다.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 및 산업정책에서 두 가지 발전계획이 존재하였다. 수하르토 집권 시기 경제발전계획과 유도요노 집권 시기 경제발전계획 프로그램이다. 수하르토 정부는 1967년 IMF 제안에 기초하여 탈출(1966), 회복(1966), 공고화 프로그램(1967)을 거친 이후, 1968년부터 세계은행 지원 하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ncana Pembangunan Lima Tahun I, 이하 Repelitia I)’을 수립하였다. 1969년부터 Repelitia I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최종적으로 5단계를 거쳐 1994년까지 총 25년간 전개되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첫 민선 대통령 집권시기인 유도요노 정부는 2011년에 만들어진 2025년까지의 경제발전계획으로 ‘MP3EI(Masterplan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2014년까지 집권이었던 유도요노 행정부의 경우 2011년에서야 이러한 발전계획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집권 말까지 정책실효성은 현저히 낮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RPJMN 2015-2019는 MP3EI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코위 정부의 중기적 계획을 밝히고 있다. RPJMN 2015-2019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주권 확보와 해양중심국가 건설이다. 인도네시아는 쌀, 설탕, 콩, 옥수수 등 농산품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주권확보는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이다. 둘째, ‘국제해양허브’를 포함한 인프라 개발 최우선 과제정책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하나로서 높은 물류비는 인도네시아 국가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 확보와 개선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관광분야, 해양관광, 에너지 주권이다.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로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고, 넷째, 투자 부양, 중소기업육성, 수출증대, 민간소비 진작이다. 다섯째, 부패, 비능률적인 정부 관료주의 극복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비능률과 부패의 극복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열쇠이다. 인도네시아 경제 및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은 ‘부패구조’에 있고, 이 부패구조의 핵심은 정부 관료의 역할에 기인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은 조코위 정부에게 있어서 매우 큰 도전이다.

〈표 5〉 DRPLN-JM 2015-2019 인프라 부문 계획

프로그램
Toll Road Development Program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National Bridges Program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National Roads Program
Drinking Water Development Program
Development of Solid Waste Management Program
Slum Allevi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Irrigation Program
Provision and Management of Bulk Water Supply Program
Dam Development Program
Mitigation of Water Hazards Program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frastructure Program
Program for Provision of Housing For Low-Income House holds
Railway Development Program
ICT and Broadcasting Infra Development Program
Electricity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

출처: DRPLN-JM 2015-2019, p.6.

DRPLN-JM 2015-2019에 밝혀진 인프라 관련 계획 크게 16개와 비인프라 관련 계획이 13개로 구분되고, 각각 하위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있다. 〈표 5〉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부에서 제출한 중기 인프라 계획이다. 유료 도로, 다리, 도로, 식수, 쓰레기, 관개시설 등 크게 16개 영역으로 나누어있고, 그 하위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650km의 국도와 1,000km의 유료 도로 확장, 49개의 관개 댐, 15개의 공항 및 24개의 항구신설 그리고 현재 5,424km의 철도를 8,692km까지 확장, 35,000MW 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하루에 30만 배럴의 기름을 정제할 수 있는 정유공장을 건설하고,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의 5만 7백 메가와트의 전력 생산량을 8만 6천 6백 메가와트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해양 인프라와 관련하여 “해양 고속도로(Sea

Tall)”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이를 통해 섬들 간 국제연계성을 높이려고 한다. 특히 항만운송의 고비용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모색 중이다(이지혁 2015, Davidson 2016).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인프라에 투여한 국가예산은 2014년 9.5%에서 2016년 14.8%로 증가하였다(Davidson 2016). 무엇보다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경제대국 7위가 가능할지 아닐지는 바로 이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이 얼마나 실현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3) 조세사면정책

조코위 정부의 첫 개혁은 2016년 7월부터 실시된 조세개혁으로 시작되었다. 이른바 “조세사면(Amnesti Pajak, Tax Amnesty)” 정책이다. 우선 1단계로서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말까지 실현하고자 한다. 이 정책의 핵심골자는 “해외에 은닉된 재산 또는 신고 되지 않는 자산을 허락된 기한 안에 자진 신고를 하면 조세에 대하여 감면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조세사면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인도네시아 재정을 관리하는 국가의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본 목적이 있다. 둘째, 재분배 정책의 효과이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부자계층의 자산이 빈곤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셋째,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자산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송환정책의 목적이다. 넷째, 투자의 활성화이다. 국내 유입된 자산 또는 투명하게 신고된 자산들이 경기진작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투자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시키고자 함이다. 여섯째, 이러한 전 과정의 운영 속에서 국가의 재정능력을 건설하게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능력을 구축하고자 함이다(Pajak 2016, 7).

다시 말하자면, 조세사면 정책은 해외로 도피한 자산과 국내에 은닉한 자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와 신고된 자산에 대해서 최소 2%와 최대 10%의 세금부과를 제외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세사면정책”이라 명명한다. <그림 6>은 “자산규모”와 “신고 시기”에 따라 “조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한 눈에 알리는 홍보물이다. 본국내 신고와 외국으로부터 신고를 구분하였고, 1기(2016년 7월-9월), 2기(2016년 10월-12월), 3기(2017년 1월-3월)를 구분하였다. 본국 내 신고 사례로 1기 2%, 2기 3%, 3기 5%를 적용하고, 외국에 있다가 신고한 사례로 1기 4%, 2기 6%, 3기 10% 적용률이다. 그리고 백만 루피아 이상과 이하를 기준으로 이상은 2%와 이하는 0.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자금이 1천 950억 달러에 달하며, 은폐된 국내자산 역시 1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이 조세사면 정책이 실효성을 얻는다면, 인도네시아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정부개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6〉 조세사면 정책의 조세율과 기간



####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 (1)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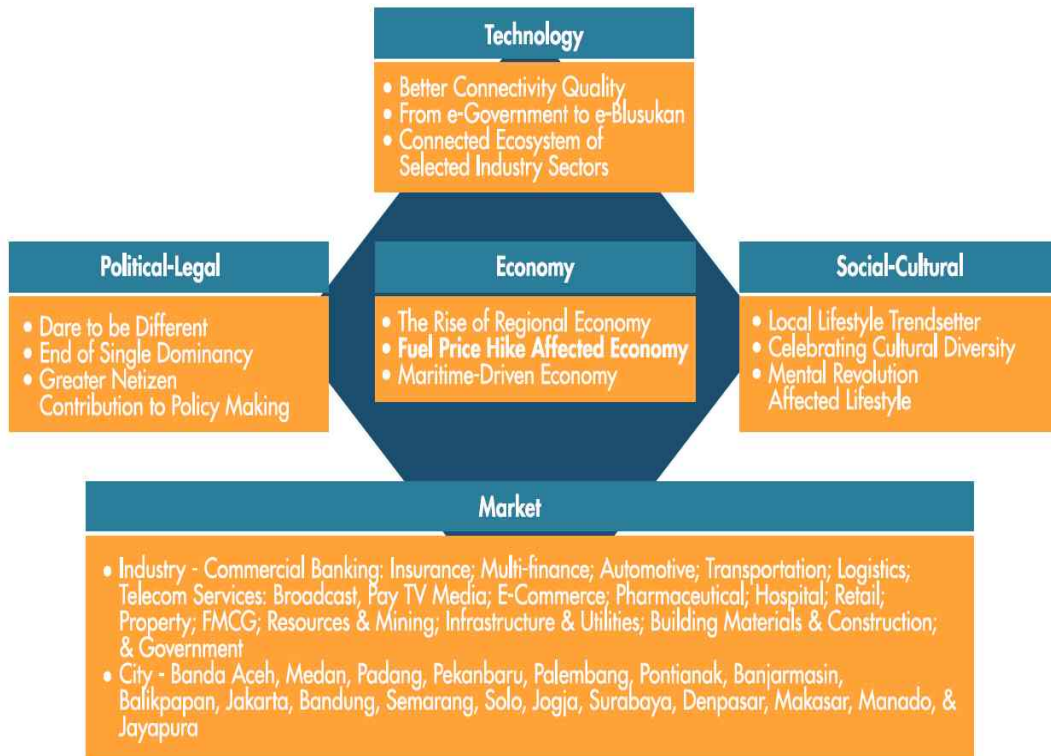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사회의 변화는 정치외교, 경제산업 정책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사회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이는 시장적 측면에서 전체 소비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오는 계기로 작동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이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구매력이 9번째 해당하는 되는 국가이다(Davidson 2016). 인도네시아 경제의 특징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적은 규모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56.4%, 말레이시아는 48.9%, 베트남은 46.6%, 태국은 37.3%, 필리핀은 26.4%인데, 인도네시아는 19.5%를 차지한다(Credit Suisse 2015).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도네시아는 내수시장 중심의 국가라는 점이다.

아래 〈그림 7〉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기술, 정치·법률,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우선 기술적인 차원에서 인도네시아는 산업화 시대 기술과 정보화 시대 기술을 기초로 연계성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국가로 진입하였다. 즉,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구비한 것이다. 정부도 ‘전자정부(e-Government)’에서 사이버 상에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정부인 ‘e-Blusukan’으로의 변화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사회는 이미 ‘디지털화’가 매우 진전된 사회이다. 1억 3천 만 명이 인터넷 유저(침투율 34%)이고,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7천 9백만 명(침투율 30%), 모바일 연계성은 3억 2천 만 명(침투율 126%)으로, 활동적인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6천 6백 만 명(침투율 25%)이기에 하이테크 스타트업의 창업, 전자상거래



가 붐이다(Kartajaya 2016). 다음으로 정치·법률적 의미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민주주의가 동남아 다른 어떤 국가와는 달리 발전된 국가로서 패권적인 정당지배체제는 사라진 상황이다. 네티즌들이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다.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은 정치법률적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지역’에 기초한 사회가 되었다. 2001년 지방자치제 도입과 2004년 6개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발전계획 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양주도의 경제(Maritime-Driven Economy)”는 현재 인도네시아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제개념의 하나이다. 넷째, 인도네시아 문화다양성은 세계적 수준이다. 종족, 종교, 언어, 음식, 자연생태계 등 2억 5천 만 명 문화다양성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인구의 다수가 무슬림이다. 그 중에서도 젊은 무슬림 세대는 인도네시아 사회문화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이다(Kartajaya 2016). 마지막으로 기술구조적으로, 정치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진보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마케팅 분야가 속출하는 것이다. 금융·서비스분야, 자동차와 교통, 물류, 통신, 미디어, 전자상거래, 의약품, 의료, 소매, 부동산 등이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지구상에서 4번째로 큰 국가로 지역도시발전은 경제적 가치가 높다. 즉, 경제성장, 디지털화 그리고 세계화는 현대 인도네시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림 7〉 인도네시아 기술, 정치·법률, 경제, 시장 그리고 사회문화 특징



출처: MarkPlus. 2015. “2015 Indonesia Market and Marketing,” p. 2.

## (2) 젊은 국가로서 인도네시아 : “Generation M”

인도네시아가 소비시장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사회적 요소는 그 중의 하나이다.

〈그림 8〉 인도네시아 소비층과 중산층 부상



출처: Kartajaya, Hermawan. 2016. “Indonesia Latest Update: Special Insight from MarkPlus, Inc.,” p.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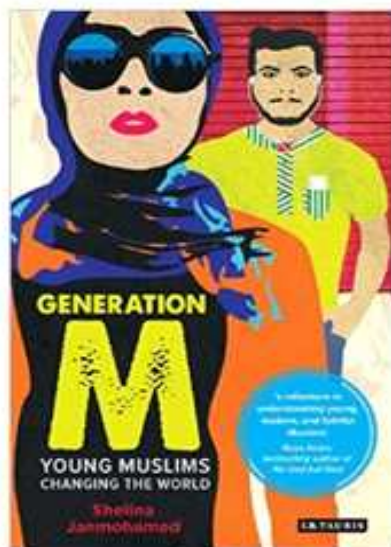
위의 〈그림 8〉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규모에서 상위층 10%, 중산층 75.6% 그리고 저소득층 14.3%로, 인도네시아는 중산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 중산층은 전체 인구규모의 75.6%로 1억 9천 2백만 인구를 말한다. 상위층은 부유층과 신흥부유층 각각 3.5%와 6.5%이고, 중산층은 상위-중-하위 세 구분하여 16.1%, 21.8%, 37.7%을 각각 차지한다. 즉,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소비재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소비시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BCG(Boston Consulting Group)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소비계층으로 유의미한 그룹인 중산층과 부유층(Middle-Affluent Consumer)이 인구의 30%로 7천 4백만인데, 2020년까지 1억 4천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3배가 되는 인구가 최대 소비층이 될 수 있는 규모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인구규모, 중산층 성장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세대 비율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 60% 이상이 20세-65세 사이의 젊은 국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인구의 27%는 15세 미만이다. 이러한 젊은 국가로서 인도네

시아에서 매우 흥미롭고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점은 “젊은 무슬림 세대(Generation Muslim)”의 등장(Kartajaya 2016)이다. <그림 9>은 인도네시아의 젊은 무슬림 세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존재하는 최대 무슬림 국가인데, 중동과는 달리 실용적이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특징이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젊은 세대에서 더욱 더 두드러져 나타난다. 인터넷에 강하고, 패션에 감각적이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등 인도네시아 사회변화를 저변으로 이끌어가는 층이다. 또한 현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젊은 무슬림 세대가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가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다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림 9> 인도네시아 Generation M

	Creating the New Platform	Leveraging the Old Platform
Commercial Business	 <p>Nadiem Makarim Founder of Go-Jek *Go-Food</p>	 <p>Dian Pelangi Hijab Fashion Designer</p>
Social Business	 <p>Dr. Gamal Albisaid Founder of Klinik Asuransi Sampah (Garbage Insurance Clinic)</p>	 <p>Ainun Naim Founder of kawalpemilu.org</p>



출처: Kartajaya, Hermawan. 2016. “Indonesia Latest Update: Special Insight from MarkPlus, Inc.,” p. 39, 44.

## 5. 투자 및 유망 업종

### (1) 산업별 동향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성장률 추이는 인도네시아 산업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변화에 맞는 투자 및 유망업종의 추이를 추론할 수 있다.

〈표 6〉 인도네시아 GDP 산업별 성장률(2013~2015) (단위: %)

산업구분	2013	2014	2015
농업/낙농업/임업/어업	3.44	3.29	4.02
광업	1.41	-0.22	-5.08
제조업	5.56	4.86	4.25
전기/가스/ 수도	5.78	5.50	1.21
건설업	6.57	6.58	6.65
무역/호텔/요식업	5.89	4.64	2.47
교통/물류	9.80	9.31	6.68
금융	7.57	5.96	8.53
서비스	5.47	5.92	8.08

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카르타 무역관, 2016. 『인도네시아』 p. 31 표 재인용)

〈표 6〉을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 광업은 현격한 성장률 저하를 보인다. 향후 인도네시아 광업의 성장은 재성장 분야로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은 금융·서비스 분야이다. 2015년의 8%대 성장률이고, 향후 인도네시아 산업성장 트렌드로 보았을 때도 금융·서비스 분야는 성장세이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이 분야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정부 차원에서 “식량자급정책”에 입각하여 농업, 낙농업, 어업 분야를 강화하고 있어서, 이 분야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14년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전기/가스/수도 또는 무역/호텔/요식업은 현격한 성장률 저하를 보였다. 건설 분야는 6%대를 유지하는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단계에서 이 분야의 6% 성장은 높은 성장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리고 〈표 7〉은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의 동향이다.

〈표 7〉 주요산업 동향

분야	전망
팜오일	세계 생산량의 약 절반을 생산. 2,700만톤 생산량에 이 중 1,900만 톤 수출. 그러나 최근 팜오일 세계시장 공급과다로 수출의 어려움. 팜오일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단순 수출보다는 국내가공을 촉진
고무	세계 2위 고무생산국. 5만 헥타르 품종개량과 신규조림 사업 통해 생산성 증가 노력

카카오	세계 3위 생산국, 카카오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인니 정부는 신규 투자함.
섬유·봉제	고용과 수출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 현재까지 서부자바와 바탐 지역에 집중
전자산업	현재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분야. TV,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 등. 1998년 인니 현지기업들이 적극적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로 외국기업과 토착기업간의 시장 확보를 위한 각축전
자동차	1993년도 이후 규제완화 조치. 조립생산단계. 자동차 시장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하여 한국, 유럽, 미국 자동차 회사가 도전. 2012년 판매대수 100만대, 2013년 123만대, 2014년 121만대 등 자동차 소비의 증가세
항공산업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 1970년대 중반 국영기업 IPTN 설립 후 외국 항공사 제휴를 통해 항공기 생산개시, 지속적으로 정부주도 산업추진 활발
석유화학	1990년대 이후 석유화학산업 적극적 육성. 비료, 비누, 고무제품, 농약, 합성세제 등 농업용 및 소비자용 화학제품 생산. 현재는 산업용 원부자재 생산도 증가
철강	300개 회사가 밸루 체인 구성하여, 총 25만 명 고용. 철강 공급능력은 2009년에서 2011년, 370만톤에서 600만톤으로 27.4% 증가. 국영철강회사인 PT.Krakatau Steel은 약 200만 톤 생산하고 있음.
건설업	2014년 신정부 수립 이후 크게 성장. 특히 해외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짐.
유통업	2007-2012년까지 연 14% 성장.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미니마켓 등. 슈퍼마켓은 점포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쇠퇴기를 겪고 있음. 온라인 시장의 빠른 성장
의료산업	연간 6% 성장률. 의료비 지출수준이 GDP 대비 공공 약 1.5-2%, 민간 약 1%로 모두 낮은 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큼.

출처: 자카르타 무역관. 2016. 『인도네시아』 p. 36-44 정리.

이러한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와 현황 속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7월 기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은 약 2,000개사에 달하며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3,000개사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 회사들은 제조업, 자원·에너지,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유통,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80만 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8〉 한국기업 부문별 진출현황

부문	업체 수	부문	업체 수	부문	업체수
농업	21	종이	5	금융·보험	15
수산업	6	가구	21	통신업·IT	50
조림업	3	금속·금형	54	공기관·공기업	19
축산업	2	산업용 기계·부품	57	컨설팅	36
광업·자원개발	46	전자제품·부품	94	법률사무소	4
식품	9	조선	2	음식점	101
사료	7	자동차·부품	22	가라오케	6
의약품	1	약기	13	관광	42
의류·섬유	454	약세사리	9	항공	2
고무	14	가발·인공모발	22	기타 서비스	36

가죽·피혁	33	건설·시공업	16	교육	28
생활용품	10	무역·도소매·유통	472	의료	3
목재	25	물류·운송	49	총계	1809

출처: 자카르타 무역관. 2016. 『인도네시아』 p. 133.

〈표 8〉에서 나타나듯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총 1809개이다. 거의 모든 산업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100개 이상 기업 진출분야는 의류·섬유, 무역·도소매·유통, 음식점 등이고, 50개 이상 기업 진출분야는 금속·금형, 전자제품·부품, 통신업·IT 등이다. 즉, 인도네시아 1차에서 3차 산업구조까지 한국기업은 다수 진출한 상태이다. KDB대우증권(2013), 우리은행(2013), 한국타이어(2011), 포스코(2010), 호남석유화학(2010), 롯데케미컬(2010), 롯데마트(2008), SK에너지(2005), CJ(1998), 삼성전자(1991), LG전자(1990), KIDECO(1982), KODECO(1981), 대우인터내셔널(1976), 삼성물산(1975), 미원(1973), 코린도(1969) 등 굴지의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에는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이 각 산업분야 진출해 있어서 한국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해야 한다.

## (2) 투자 프로젝트, 진출 유망 업종과 수출품목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조코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인프라 구축에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를 기대하는 분야도 단연 인프라 영역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산업동향과 2014년 신정부 등장 이후 인도네시아 시장이 투자를 기대하는 분야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표 9〉.

〈표 9〉 투자 기대 및 수출유망품목

분야	프로젝트
해양인프라	- 24개 항구개발 프로젝트, 83개 상업용 항구, 1,481개 비상업용 항구 확장 - 7500척의 항해선 및 12개 조선소 활성화
교통인프라	- '19년까지 2,650km 신규도로 및 1,000km 유료도로 증설 - '19년까지 15개 신 공항 증설, 초계기 20대 도입 - '19년까지 총 3,258km 철도망 증설
식량인프라	- 경작지 확대, 49개 저수지 개발 - 1000만 헥타르 규모의 관개시설 공사
에너지인프라	- 석유정제시설 건설, 도시가스 보급, 가스배관시설 건설, 부유식가스저장 플랜트, 수력 및 지력 대체에너지 개발 - 35,000MW 용량공급을 위한 240개 발전소 건설



ICT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방송(TVRI) 네트워크 디지털화</li> <li>- e-Government 인프라 구축</li> <li>- 국토 광케이블 연결 프로젝트</li> <li>- 국가 범죄정보 시스템 구축</li> </ul>
한국수출유망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밸브(인프라 추진으로 건설 및 중장비 산업에 수요 증가 전망)</li> <li>- 통신장비(대규모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등과 연계 잠재력이 큰 시장)</li> <li>- 과자 및 스낵류(수입 고급식품에 대한 선호현상 증가)</li> <li>- 포장기계(연평균 10% 내외로 성장률 초과하고 있음)</li> <li>- 공기청정기(생활가전제품의 수요증가)</li> </ul>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수요증가</li> </ul>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사회집투율이 20%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음</li> </ul>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C 단일 소비시장 겨냥 물류시장 활성화 전망</li> </ul>

출처: 자카르타 무역관. 2015/2016. 『2016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2017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종합검토 후 작성.

## 6. 한국 기업의 진출 전망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시장으로서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onesia, China), 마빈스(MAVINS: Mexico, Australia, Vietnam, Indonesia, Nigeria and South Africa), 시베츠(CIVETS: Colombia, Indonesia, Vietnam, Egypt, Turkey and South Africa), 비스타(VISTA: Vietnam, Indonesia, South Africa, Turkey and Argentina) 그리고 브아이피(VIP: Vietnam, Indonesia and Philippine)에 이르기까지 신흥시장의 핵심으로서 명명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발전한다면 인도네시아는 기대하던 2030년 제7대 경제대국으로, 2050년 전 세계 실질 GDP 성장 전망에서 중국, 미국, 인도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4번째로 자리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게 있어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까지도 매우 중요한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왔지만, 미래 한국 경제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지금 “전환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조코위 정부를 통해서 제출되는 “해양강국건설”에 따른 경제 및 산업정책, 정부 개혁 및 거버넌스 기능강화 등 개혁 정책들이 점진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2030 또는 2050년의 비전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인프라 구축” 확보와 조세개혁이 일단계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조코위 정부의 인프라 사업의 성공여부는 자금조달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 조세개혁은 정부의 자금조달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1960년대부터 2000년 현대까지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역사

를 배경으로 현재 인도네시아가 기대하는 투자분야와 업종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회변화에 기초하여 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도네시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실질화해야 한다. 해양인프라, 교통인프라, 식량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ICT 인프라 등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경험이 한국에겐 있다. 한국이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분야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제도를 이미 축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프라 사업은 거대자금,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홀로 시작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인도네시아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일정정도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별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전체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프라 관련된 영역은 인도네시아만의 요구가 아니라 아세안 저개발 국가들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한다면 훨씬 속도를 내고 진행될 수 있는 일이다.

둘째, 단일생산기지와 단일소비시장으로서 AEC의 성공은 한국경제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현재도 아세안은 한국의 2위 무역파트너, 투자 상대국 그리고 인적교류가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따라서 AEC는 한국경제파트너의 다변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AEC의 성공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AEC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앞서서도 강조했던 인프라는 아세안 전체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강조컨대 한국정부는 아세안 인프라 전담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수주와 재원마련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연계성에는 인프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인프라가 회원국 10개와 함께 연계해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제도”가 함께 작동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ICT 인프라 중에서 한국의 ICT 기술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 전자정부(e-Government)를 아세안 차원으로 확산시킨다고 보았을 때, 관련 연계 산업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인프라는 물론 “제도”와 “사람” 모든 측면에서 활성화될 것이다. 따라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이 동남아 개별국가와의 경제관계는 이미 지역적 확산을 고려한 것일 수밖에 없고, 당연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인도네시아는 아마도 신중시장의 질을 벗어나고 있는 단계로서,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일찍이 글로벌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많이 진출해있고, 인도네시아 토착기업도 민주화 이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상승과 소득증대로 도시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부유층 그리고 새로운 중산층의 등장으로 제9대 소비시장으로 인도네시아는 부상했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화두인 “제4차 산업혁명”은 한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사회에 도전영역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산업혁명과 인터넷 정보혁명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혁신 소프트웨어 기술이 제조업과 만나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생활 자체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시대로 이미 진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사회 중에 누가 더 빠르게 변모할 것인가. 한국이 선도적일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의 사회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이러한 혁신의 요소가 있다고 본다. 인터넷 사용빈도, 페이스북·트위터 등 활발한 SNS 사용, 스타트업 등장 등이다. 흔히들 인도네시아는 유선전화의 일반화 없이 바로 무선 스마트폰 사회로 도약했다고 한다. 즉, 인도네시아 사회의 변화패턴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젊은 무슬림 세대 (Generation M)”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진취적이며 현대적 감각의 무슬림을 지향하는 새로운 세대이다. 이러한 세대의 출현이 인도네시아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 사회변화를 매우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열린 당연한 기회라기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얻어질 기회라고 본다.

넷째, 무엇보다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할 영역이 소비재 산업분야이다. 한국정부도 소비재 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전략을 2016년 상반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먹는 것”, “입는 것”, “예쁘게 하는 것”, “머리와 마음에 새기는 것”,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 등 소비상품의 소비는 단순상품소비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소비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소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않은 국면과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전까지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먼저 경험한 것을 확산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소비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사회문화와 그 문화에 대한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참고문헌》

### ○ 국문자료

나희량. 2014. “아세안 경제공동체 건설과 아세안 역내무역 분야 현황과 시사점,” 『2015 아세안 공동체 건설 현황과 전망: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별 접근』 서울: SNUAC 동남아센터.

박준홍. 2015. “떠오르는 아세안을 주목하라,” 『POSRI 보고서』 (12월). 서울: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지혁. 2015. “인도네시아 인프라 현황과 시사점,” 『동남아 인프라 개발 현황과 시사점』. 서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자카르타 무역관. 2015. 『2016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서울: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2016. 『2017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서울: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2016. 『인도네시아』. 서울: 코트라.

### ○ 영문자료

ASEAN. 2015. *Vientiane Declaration on the Adoption of the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Jakarta: ASEAN Secretariat.

Budiari, Indra. “Ahok's opponents lack innovative programs” *The Jakarta Post* (2016년 11월 1일).

Connelly, Aaron L. 2015. “Sovereignty and the Sea: President Joko Widodo's Foreign Policy Challenge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37(1).

Davidson, Jamie. 2016. “Indonesia 2016: A Political and Economic Update,” SNUAC Southeast Asia Center's Presentation Paper.

Grace D. Amianti and Ina Parlina. 2016. “State spending in hot seat,” *The Jakarta Post* (2016년 11월 8일).

Kartajaya, Hermawan. 2016. “Indonesia Latest Update: Special Insight from MarkPlus, Inc.,” SNUAC Southeast Asia Center's Presentation Paper.

MarkPlus Insight. 2015. “2015 Indonesia Market & Marketing,” *MarkPlus Whitepaper 2015*, Vol.1.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2015. *List of Medium-Term Planned External Loans 2015-2019*.

Parlina, Ina and Hasyim Widhiarto. 2014. “Jokowi's Cabinet announced, here is the

lineup.” *The Jakarta Post* (26 October, 2014).

Suryadinata, L. 2005. 2005. “Indonesia: The Year of a Democratic Election.” *Southeast Asian Affairs 2005*. Singapore: ISEAS.

Wicaksana, I Gede Wahyu. 2016. “International society: the social dimensions of Indonesia's foreign policy,” *The Pacific Review* 29(5).

Winter, Jeffrey A. 2013. “Oligarch and Democracy in Indonesia,” *Indonesia* 96, 11–33.

World Global Forum. 2016.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http://www3.weforum.org/docs/GCR2016-2017/05FullReport/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6-2017\\_FINAL.pdf](http://www3.weforum.org/docs/GCR2016-2017/05FullReport/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6-2017_FINAL.pdf).

## ○ 인터넷자료

인도네시아 외교부 <http://www.kemlu.go.id/id/Default.aspx>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 <http://www.kpu.go.id/>

아세안사무국 <http://asea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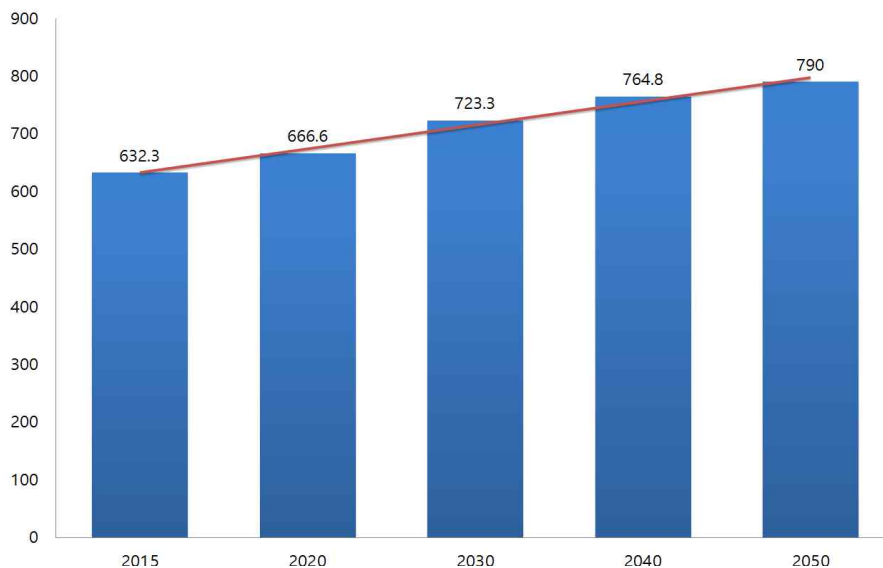
## IV. AEC 내 태국의 산업 정책과 기업 진출 전략

### - 생산·물류 허브를 꿈꾸는 태국

####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안에서의 태국

2015년 12월 출범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의 한 축인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아세안단 일시장 및 생산 기지화 자유무역지대(FTA)와 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구축하여 역내 경제통합을 지향한다(윤진표 외 2016,11). AEC 출범은 3조 달러의 경제규모와 6억 3천만 명(2015년 기준)의 거대시장의 등장을 의미하며 2050년에는 인구 규모가 약 8억 명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아세안 인구증가 추이(단위: 천만 명)



출처: UNCTAD, 2015

AEC의 등장은 생산 기지·소비 시장·물류 거점의 단일 시장이 형성됨을 의미하며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역내외국에게 기회와 도전이다(KORTA 2015c). 아세안의 소비층(consuming class)은 2014년 현재 8,100만 가구(household)에 이르며 2030년까지 1억 6,300만 가구로 현재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Woetzel et al. 2014, 110).

태국은 아세안의 원년 멤버이자 1967년 5개 외무장관의 ASEAN 출범 모임이 방콕에서 개최되는 등 현재까지 아세안의 성장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태국의 GDP는

3,975억 달러(2015년)로 아세안 내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1인당 GDP는 6,047 달러(2016년 추정)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태국은 2014년 기준으로 농업 10%, 제조업 37%, 서비스업 53%의 산업별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중간산업(mid-manufacturing) 국가이다(ADB 2016).

태국은 아세안의 경제발전 단계와 지정학적 위상을 활용하여 선발 아세안(first mover)과 후발 아세안(last mover)의 연결고리(linkage)와 인프라가 취약한 대륙부 동남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주도하고자 한다. 태국 경제는 특히 2012년에 6.5%의 경제성장을 실현한 후 반정부 시위로 정정불안이 시작된 2013년 2.9%로 성장률이 급락하였다. 쿠데타가 발발한 2014년에는 0.7%까지 하락하였으며 2015년 2.8%로 소폭의 반등에 성공하였지만 수출·투자·소비 등 전반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EIU Fact sheet, 2016). 태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2.7% 성장하는데 그쳐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져있다는 평가를 받는다(Bangkok Post, 2016년 5월 17일).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의 경제통합 가속화에 따른 태국의 산업적 포지셔닝 즉 태국이 아세안경제통합에 따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 및 산업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AEC 형성은 태국의 시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개별국가의 차원(state-level)이 아닌 지역차원(regional-level) 차원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AEC의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해 필립 코틀러의 ‘4C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태국의 정치·외교적, 경제·산업 정책,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두 번의 군사쿠데타, 7명의 총리 교체, 반복되는 시위는 태국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태국에 대한 투자와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2017년 6월로 예정된 태국 총선과 정국의 변화는 현지 진출을 위한 한국 기업의 대 태국 진출에 고려해야할 중요한 변수이다. 지난 10여 년간 탁신 대 반(反) 탁신 구도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태국 정치는 민주와 반(反)민주의 구도로 이해하기 보다는 왕실과 탁신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 중심적 구도와 더불어 지역적 빈부격차에서 기인한 경제적 대립 구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태국 정치의 불안정과 이에 따른 경제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또한 태국 산업의 정책과 변화가 어떠한 추이를 보였는지를 살펴보고, AEC 형성에 발맞춘 산업정책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현대 태국 소비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현지 및 글로벌 기업의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아세안 5개국의 주요 산업 배치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SOC, 인프라	아시아횡단철도(Trans Asian Railway) - 아세안 물류, 교통망 연결				
	해상물류망, 철강	재생에너지 (에너지순수입국)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연결 고속철 사업		철강
제조업	글로벌 조립 자동차, 항공기 부품	글로벌 조립 자동차, 항공기 부품, 역내 자동차 부품, IT	자동차 가전	친환경 의료기기	전기전자 오토바이
농업, 식품, 바이오	팜오일, 커피, 쌀, 고무, 설탕, 코코아		팜오일 고무	미래농업, 바이오	쌀
금융, 유통, 서비스	-	아세안 물류허브 글로벌 제조생산기지	항공 운송	글로벌 금융허브	글로벌 수출가공 거점
기타	석유화학	의료관광	제약	아세안경제 통합 리더	섬유 임가공

출처: 박준홍, 2015.

1980년대에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였고, 태국 현지 기업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통합되었다(Pananond 2013, 91). 초기에는 의류·신발과 같은 경공업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전자·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졌다. 태국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에서 아세안 생산 허브로 2015년 태국 자동차 생산량은 210만대에 이르며, 전기전자 산업 규모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모터, 에어컨과 같은 자동차 부품과 냉장고 세탁기 주요 부품 산업은 유망 분야이다(KOTRA 2015b, 17).

태국 IT 산업의 경우 2016년 중 LTE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며 서비스 시작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향후 5년(2016-2021년)간 370억 달러(약 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정부의 주파수 경매에 따른 입찰 수익만 최소 2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주파수를 수주한 기업은 4G 네트워크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4G 서비스가 시작되면 태국의 e-Commerce 시장, 모바일 게임, 이러닝,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확대될 것이며,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의 비율이 1%에서 2020년에는 8%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KOTRA 2015b, 1-2).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태국의 생산네트워크 패러다임이 최근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태국에 진출하는 해외기업들이 생산자주도형에서 수요자주도형으로 변모하였으며, 과거에는 태국 현지기업이 단순한 투자 유입과 기술이전의 대상에서 적극적인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상품사슬(GCC: Global Commodity Chain)에는 생산자주도형(Producer-driven)과 수요자주도형(Buyer-driven)으로 나누어진다. 생산자주도형 상품사슬은 자동차 등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다국적기업들이 규모의 경제와 선진 기술에 의해 수익을 확보한다. 반면 소비자주도형 상품사슬은 소매업 및 유통업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로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남긴다(전명숙 2006,73).

태국은 중간재 무역에서 상위 50개국 중 18위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저비용 생산 분야의 주역으로 부상하였다. 태국을 기반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유력기업들의 유형은 전자산업의 경우에는 생산자주도형의 형태를 보이며, 식료품·농업·패션의 경우에는 수요자주도형의 형태를 띤다(Pananond 2013, 97).

##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 특성

### (1) 정치적 변화

태국은 왕정체제가 유지되는 입헌군주제와 상하원 양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한다. 태국이 서구적 정치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업과 정치의 관계는 크게 세 단계로 변화해 왔는데, 첫 번째는 정당이 처음 출현한 1946년부터 1988년까지로 기업가들이 군부정부를 지원한 시기이며, 두 번째 지방 기업가들이 정치와 정당에 참여하는 시기, 세 번째는 2006년 이후 기업가 계층이 정치권력을 지배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이병도 2009, 321).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는 기업이 정치와 정당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한 반면, 세 번째 시기에는 기업의 지배적 위치에 들어서면서도 상호 갈등이 촉발되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다.

1997년 태국의 경제위기로 정치적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그해 10월 11일 ‘국민의 헌법(The People’s Constitution)’이 제정된다. 1997년 헌법은 태국에 만연했던 금권 선거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당과 선거 개혁에 관한 조항과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등 개혁적 내용이 포함되었다(조흥국 외 2011, 98). 1980~1990년대 태국 경제 성장시 최대 수혜자로 성공한 기업가들은 1997년 헌법의 발효와 함께 이후 진행된 정치에 대거 참여하였다. 2001년 탁신이 수상이 된 이후 주요 정당의 기업가 출신 행정위원 비율을 살펴보면, 집권당은 타이락타이(Thai Rak Thai)당은 63.9%, 뿌라차티뻏(Prachati Pat)당은 51%, 찻타이(Charit Thai)당은 45.76%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이병도 2009, 329).

탁신은 2001년 선거에서 승리하고 1차 집권기를 끝낸 후 2005년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었으나 부정부패와 연루되고 야당, 언론과 대립하면서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김홍구 2013, 52~53). 결국 2006년 초 자신의 주식을 싱가포르 기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불거졌고, 9월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실각하였다(조흥국 외 2011, 109). 2006년 탁신(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실각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0년간 2번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며, 7명의 총리가 교체되는 등 불안정한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Veerayooth & Kevin 2016, 373).

잉락(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는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이라는 후광으로 2011년 총선을 통해 정권을 잡았으나,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로 실각하였다. 이후 쿠데타를 주도한

프라웃(Prayut Chan-o-cha) 육군참모총장이 과도 총리로 부임하였지만, 군부 집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와 정국 불안은 지속되고 있으며 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군사 정부로의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Chris 2016, 389). 현 정부(왕정파)는 총선 실시를 통해 민정이양 계획을 밝힌바 있으나 최근 발표한 신헌법안이 군부의 개입을 제도화하고, 친 탁신 세력(공화파)의 회귀를 견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재현 2016).

군부 쿠데타의 주역인 프라웃 짠오차(Prayut Chan-o-cha)는 최고 권력기구인 국가평화질서 유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NCPO)의 의장직과 총리직을 겸직하며 과도 내각을 이끌고 있다. 2016년 8월 7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개헌안은 상원에 대한 군부의 역할 증가, 헌법재판소의 권한 강화를 통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 헌법에 비해 비민주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홍구 2016). 태국의 경우 2006년과 2014년에 걸친 두 번의 쿠데타는 부의 불평등을 조정하려는 포퓰리즘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Pasuk 2016, 420). 탁신이 총리로 재직하던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태국의 지니계수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탁신이 개혁적인 경제 입법과 농촌 지역에 대한 무료 의상 제공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의 재분배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기득권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탁신 세력을 제거하고자 연합했다는 분석도 있다(Hewison 2014, 849).

〈표 2〉 2006년 이후 태국 정치의 변동

일시	주요 사건
2006년 9월	태국 군부 탁신 친나왓 총리 축출
2007년 12월	탁신 지지당 총선 압승
2008년 12월	민주당 아피싯 총리 취임
2010년 3~5월	탁신지지 대규모 시위
2011년 7월	잉락 친나왓 총리 취임
2013년 11월	반탁신 반정부 시위
2014년 2월	조기 총선 실시, 현재 총선 무효 결정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 발생, 잉락 총리직 상실
2015년 9월	헌법 개정안 부결
2016년 8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시행 및 통과
2016년 10월	푸미폰 국왕의 서거
2017년 말	총선거 실시(예정)

출처: 필자 작성

태국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은 결국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였고, 지난 10년간의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3.3%(World Bank Data)에 불과하였으며 2016년 GDP 성장률 또한 2.8%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Veerayooth & Kevin 2016, 374). 따라서 내년 총선 실시가 군주제 네트워크(network monarchy) 즉 태국 국왕-군부-사법부-관료-민주당으로 연결된 세력과 친 탁신지지 세력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총선에서 항상 우위에 있는 친탁신계와 이를 물리력으로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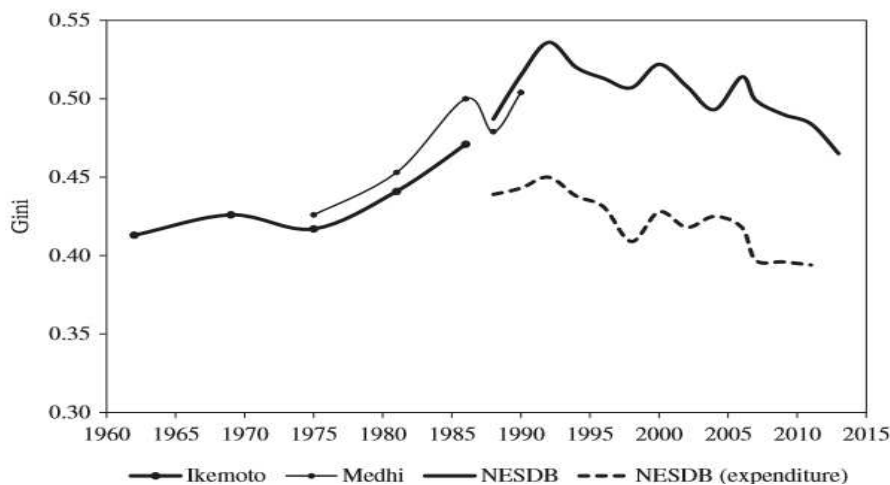
압하는 군주 세력의 태국 특유의 정치적 구도는 언제든 정치적 불안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서경교 2015, 293: Kittis 2016, 172). 태국 정부의 보고 서조차도 정부 부문의 거버넌스의 개선이 더디고, 정책결정의 절차 또한 불투명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NESDB 2012).

## (2) 정치경제적 특성

태국 정치와 경제를 연결하는 측면에서 태국 중산층의 독특성을 정치경제적 구조를 이해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성장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산층을 형성하고, 이들이 민주화의 주역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태국 중산층의 경우에는 진보적이거나 민주 적인 성향보다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의 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Veerayooth & Kevin 2016, 380). 또한 태국 북부와 북동부의 농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친탁싌 세 력에 비해 도시 중산층은 반탁싌 세력 즉, ‘국왕-군부-사법부-관료-민주당’의 연대에 더 많 은 지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태국 정치는 민주와 반(反)민주의 구도로 이해하기 보다는 왕실과 탁싌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 중심적 구도와 더불어 지역적 빈부격차에서 기인한 경제 적 대립 구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병도 2014, 61).

Acemoglu(2010)는 경제적 불평등이 클수록 민주화로 인한 조세 재분배 추진이 이루어질 위험이 크기에 경제적 기득권의 거부감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태국의 2014년 군부쿠데타 이 후 임명된 입법위원의 평균 소득은 일반 국민들의 평균 소득에 비해 32배 이상 높았다. 2014년 임명된 37명의 내각 각료의 평균 소득은 국민소득 평균의 38배나 높았다(Pasuk 2016, 406). 그들 대부분은 군부, 경찰, 공무원 또는 왕족 출신이었으며, 이들의 연계와 권력 독점은 곧 경제적 특혜로 연결되고 있다. 즉, 태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전반에 정치와 법제 이상의 영향력에 기인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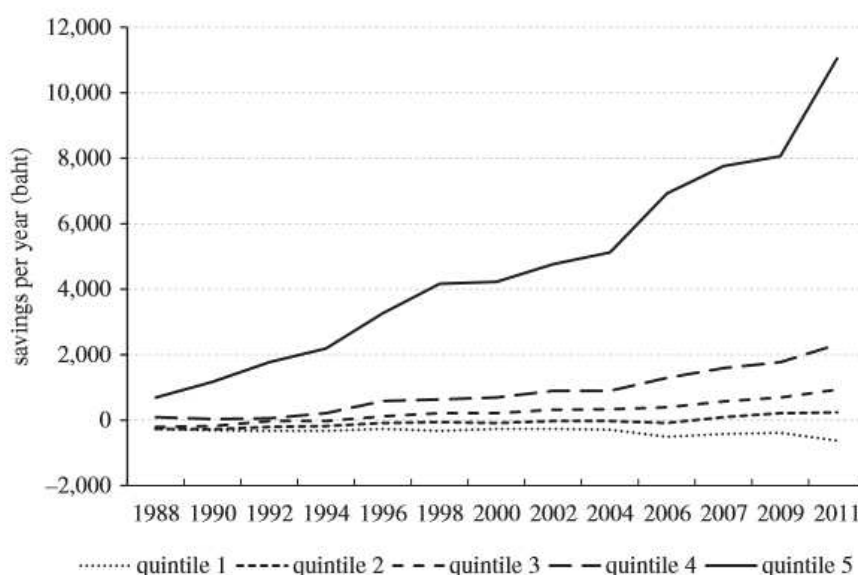
〈그림 2〉 태국의 지니계수, 1962-2013년



출처: Pasuk 2016, 407.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국의 지니계수는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였다. 1962년 0.413이던 지니계수는 1992년에는 0.536까지 치솟아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후 태국의 지니계수는 1997년 아시아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불평등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Pasuk 2016, 408).

〈그림 3〉 태국의 소득 분위별 저축증가율



출처: Kobsak 2013, 68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더욱 주목할 점은 1988-2011년 기간 동안 태국 상위 1%<sup>13)</sup>의 소득 증가율이 평균 소득 증가율에 비해 3배 가까이 빠르다는 점이다. 〈그림 3〉은 저축의 증가율을 소득 분위별로 나타내는데, 이를 포함한 지니계수는 0.7로서 부의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태국 총 은행 총 계좌 개수의 0.13%가 저축성 예금 전체의 49.24%를 차지하고 있다 (Bank of Thailand 2013). 부동산을 포함한 부의 재분배는 더욱 심각하여서 태국 상위 10%의 부동산 재벌이 전국 토지의 61%나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포함한 지니계수는 0.88로 치솟는다(Duangmanee 2016).

태국의 지역적 불평등 역시 태국 정치경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2011년 기준으

13) 격차가 태국 상위 1%는 약 60만에서 7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대규모 부동산 소유주, 전문 직동, 기업 경영인으로 국가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는 물론 다양한 특권을 누리는 집단을 의미한다(Pasuk 2016, 409).

로 태국의 국민 소득은 22,236 바트인데 반해 수도인 방콕은 41,631 바트로 약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북부와 북동부 지역은 각각 17,350 바트와 18,217 바트로 평균 소득에 크게 하회하였으며, 약 600만 명이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Hewison 2014, 849-850). 태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낮은 곡물 수매가 정책, 제조업에 대한 보호 정책, 부동산과 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등 불평등한 정책 등으로 농촌 지역의 부가 도시 지역으로 이전되어 갔다(Hewison 2014, 854). 이와 같은 북부와 북동부의 상대적 빈곤과 피해의식은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어져 탁신과 친 탁신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탁신은 '30바트 건강보험 계획'을 비롯한 저비용 주택 정책, 저가 컴퓨터와 TV 공급을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2004년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파속 & 크리스 2010, 153).

그러므로 태국 내의 기업 진출을 위해서는 현 정치 환경의 구조적 특성 즉 왕실-군부-사법부로 이어지는 군주제 네트워크와 친 탁신 세력의 갈등이 중요한 변수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탁신의 정계 진출은 자신의 통신 서비스 이권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총리 시절 역시 추종 또는 지지 기업의 기존 이권과 새로운 이권을 얻기 위해 권력을 활용하였다(파속 & 크리스 2010, 85). 2006년 쿠데타 후 군부집권자들 또한 자신의 측근들을 주요 국영 기업-타이 공항청, 항만청, 타이항공, 전신국-의 임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김홍구 2013, 67).

한국의 K-water가 2013년 잉락 전 총리의 재임 시절 11조 규모의 방콕 치수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14년 군사 정부는 잉락 전 총리의 물관리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되었고 타당성을 결여하였다며 전면 백지화하였다(연합뉴스 2015년 3월 28일). 이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변경은 정권 교체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변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프라웃 신정부가 한국의 물 관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언급한 것을 볼 때 한국 측의 문제라기보다 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기득권 중심의 프라웃 네트워크로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이 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정치적 변화 특히 최근 급변하고 있는 탁신 대 반탁신의 구도를 이해하고 군부와 기업가간의 갈등요소가 잠재되어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거의 결과에 주목해야하며, 총선 이후 군부-기업-정당간의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따라야 할 것이다.

### 3.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 (1) 산업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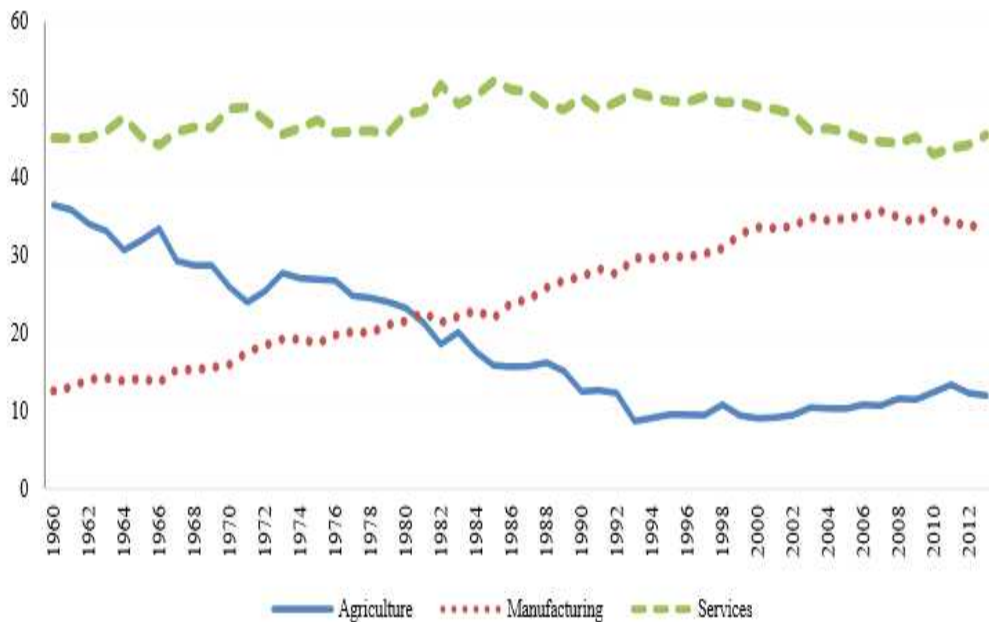
태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으나, 1980년대 일본 기업의 진출로 제조업이 육성되었다. 태국은 이후 개방적 경제체제 아래 제조업 산업국가로 빠르게 전환하

였고 농업 부문의 감소와 제조업의 성장이라는 산업구조가 정착되었다(그림 4).

태국은 1980년대 무역을 자유화하고 FDI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97년 바트(Baht)화 폭락으로 동남아 경제위기의 근원지가 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연평균 4%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무역 의존도가 110%(2016년 추정)에 이르고 경제의 주축인 자동차, 전자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아 대외경기 변동에 취약한 구조이다(NESDB 2012).

그럼에도 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농어업부터 첨단산업까지 ASEAN 국가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산업에서 고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필립 코틀러 2016). 태국의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은 수출과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은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NESDB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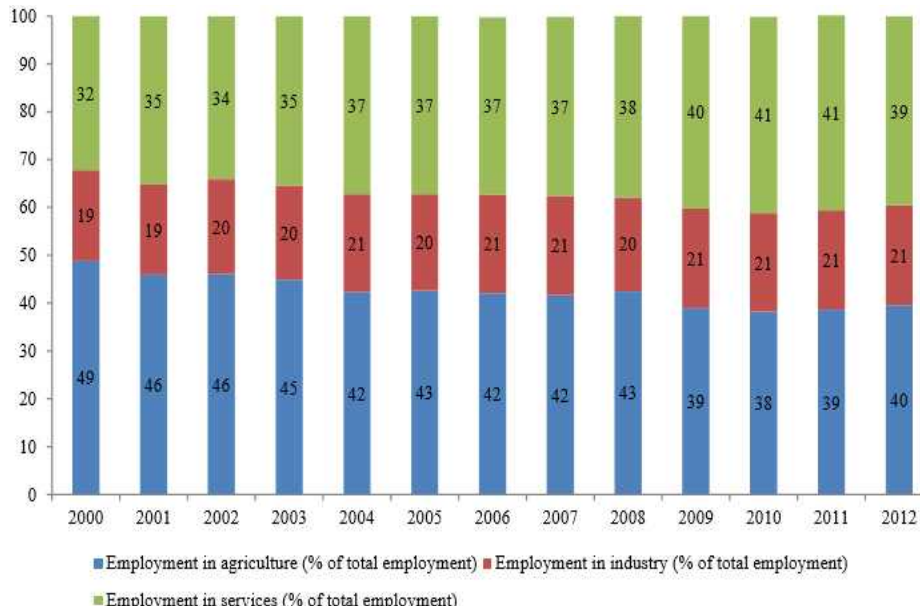
〈그림 4〉 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출처: World Bank Database

농업은 GDP의 10% 정도이지만 고용 비중은 40%에 이르며 쌀·고무·사탕수수·타피오카·냉동새우 등이 주요 생산품이다. 제조업은 주로 외국 기업 특히 'Little Japan'으로 불릴 만큼 일본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1차 협력업체 700여개 중 순수 태국기업은 23%에 불과하며 일본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다(KOTRA 2015a, 16). 서비스업은 통신·호텔·은행·물류 등이 주요 산업이며, 태국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특히 관광 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이며, 2015년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000만 명에 달한다(KOTRA 2015b, 8).

〈그림 5〉 산업 부문별 고용 비율



출처: World Bank Database

산업별 고용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농업 부문의 비율은 49%에서 40%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21%에서 19%로 변동사항이 거의 없지만 서비스 부문은 32%에서 39%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농업부문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업 부문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도 특징적이다. 2012년 기준으로 농업 부문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지만, 고용은 40%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2) AEC에 대한 태국의 대응

태국은 AEC 출범을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이고 동등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자국의 발전 수단으로 간주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AEC의 출범에 맞춰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외환 송금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투자 장려 7개년 전략(2015~2021년)을 발표하였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기계류의 수출입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주변 개발도상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태국은 기계 부품(machinery parts and components)의 ‘태국 플러스 원(Thai plus one)’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태국에 소재한 기계산업 본 공장(mother factory)을 거점으로 주변국에 위성공장(satellite factory)을 설립하여 일부 부품을 공급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태국과 주변국의 무역을 증진시킨다(Obashi & Kimura 2016, 7 & 17).

AEC 출범과 더불어 서비스 부문 역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항공·e-ASEAN(정보통신)·의료·관광 부문을, 2013년까지 유통 부문을, 2015년까지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였다(Rattanakhamfu 외 2015, 5). 태국 정부는 경제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고 AEC 통합을 주도하기 위해서 공공건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ASEAN 물류 허브화를 추진하기 위한 철도 복선화, 방콕 메트로 프로젝트, 수완나품 공항 2단계 확장을 포함하는 총 750억 달러 규모의 2015~2022년 인프라 개발 계획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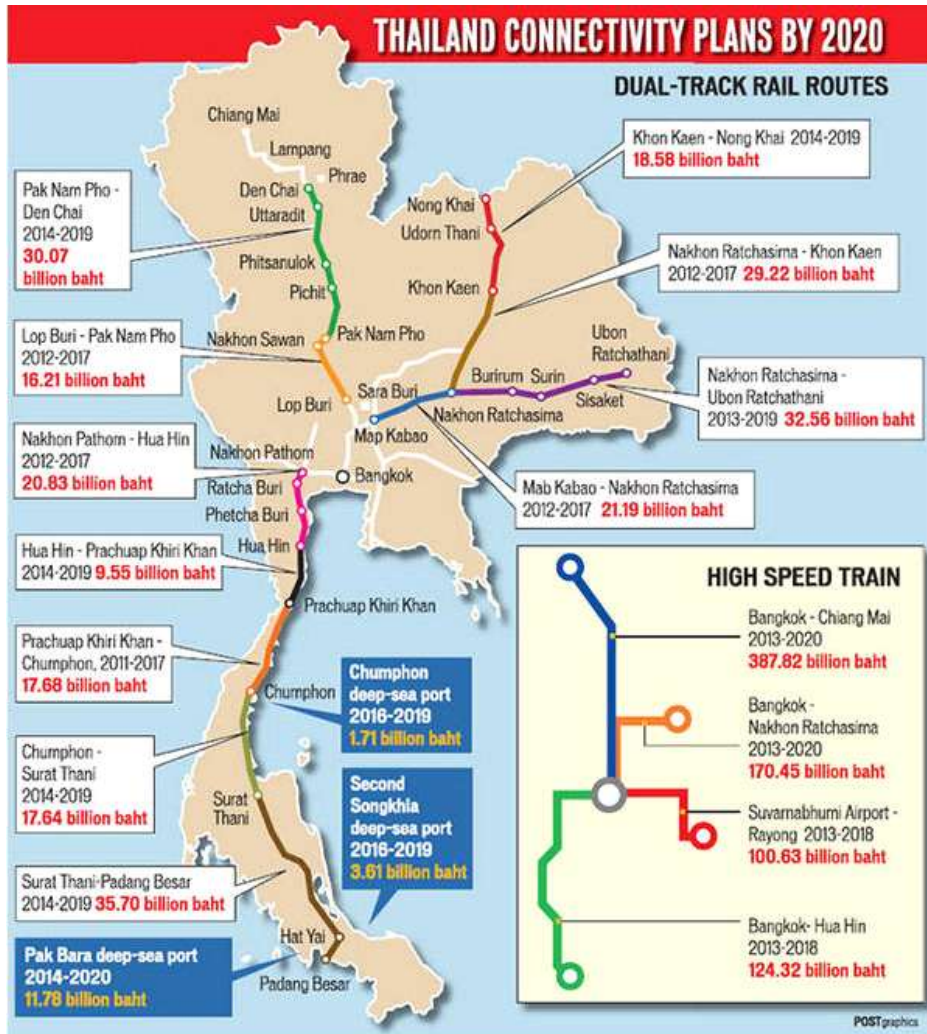
〈표 3〉 ASEAN 인프라 격차(2016년 7월 기준)

국가	물류종합지수(LPI)		인프라	
	지수(score)	순위(rank)	지수(score)	순위(rank)
브루나이	-	-	-	-
인도네시아	2.98	63	2.92	56
말레이시아	3.43	32	3.56	26
필리핀	2.86	71	2.60	75
싱가포르	4.14	5	4.28	2
태국	3.26	45	3.40	30
캄보디아	2.80	73	2.58	79
라오스	2.07	131	2.21	128
미얀마	2.46	113	2.14	137
베트남	3.15	64	3.11	44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순위는 160개국 기준)

태국은 국경 무역 활성화를 위해 메솿(Mae Sot, Aranyaprathet 등 5개 지역에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를 추진하고 있다. 각 SEZ에 교량,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8년간 국경무역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향후 5년간 50% 면제 혜택 부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인도차이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총 12개(총 길이 6,693km)의 아세안 고속도로 네트워크 및 철도 복선화,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다(KOTRA 2015c, 33-34).

〈그림 6〉 태국 인프라 구축 계획(2020년 까지)



출처: 방콕 포스트

해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 디자인, 기술 인력 양성 등 고부가가치산업이거나 태국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우 조세·비조세 혜택 등의 투자 유인책을 운영하고 있다. 태국 최저임금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력의 매력이 사라진 상황 하에서 해외투자자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법인세를 2012년 30%에서 23%까지 인하하였으며, 2013년 1월 추가로 3% 인하한 20%를 적용하였다(KOTRA 2015c, 35).

####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 (1) 인구 사회학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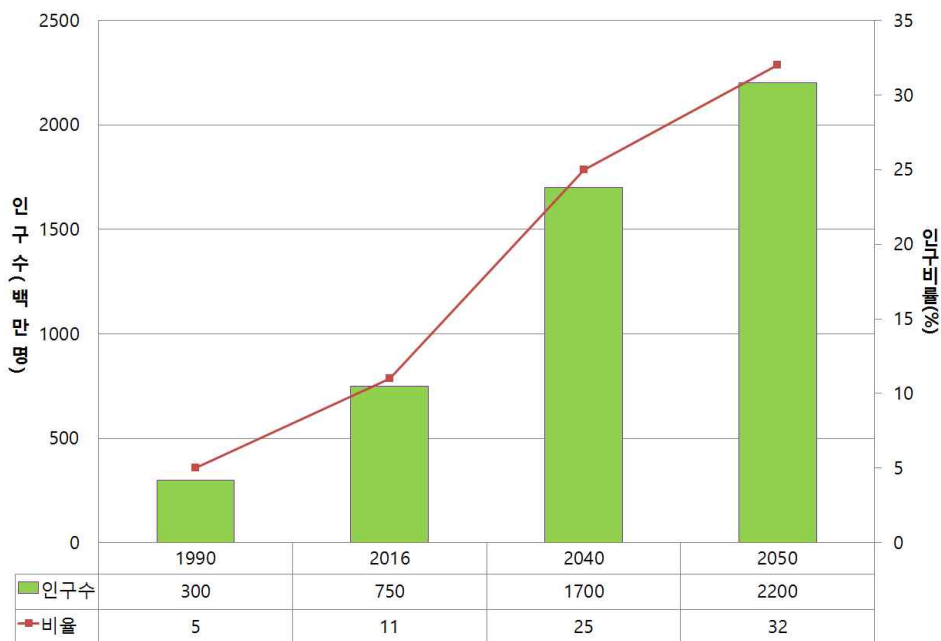


태국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의 증가로 소비문화는 크게 변화되고 있다. 2014년 태국 가계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10,129달러이며 중산층 가계는 570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1/4(25.6%)을 차지한다. 화장품, 소형 가전 등 소비재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른 여성 소비층에 대한 전략도 필요해 졌다. 페이스북(facebook), 라인(Line)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활발한 편으로 주변 지인 등의 추천이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KOTRA 2015b, 4).

태국의 1인당 GDP가 6,000 달러를 넘어서면서 구매력을 보유한 중산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비시장은 프리미엄, 중저가, 저가 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휴대폰, 인터넷을 활용한 SNS의 역할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소비참여율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간 100억 달러의 시장으로 등장한 건설업,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외국인 관광산업(호텔, 요식업 포함), 중산층의 증가에 따른 소비재 및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편의점·할인마트를 포함하는 유통업, 신세대를 타깃으로 한 인터넷·모바일 쇼핑이 투자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다.

태국 인구의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95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불과 인구 비중의 5%를 차지하였지만, 2016년에는 노인 인구가 약 750만 명으로서 전체의 11%를 차지하였다. 2040년에는 노인 인구가 1,7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이며,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2,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World Bank 2016b).

〈그림 7〉 태국 인구의 노령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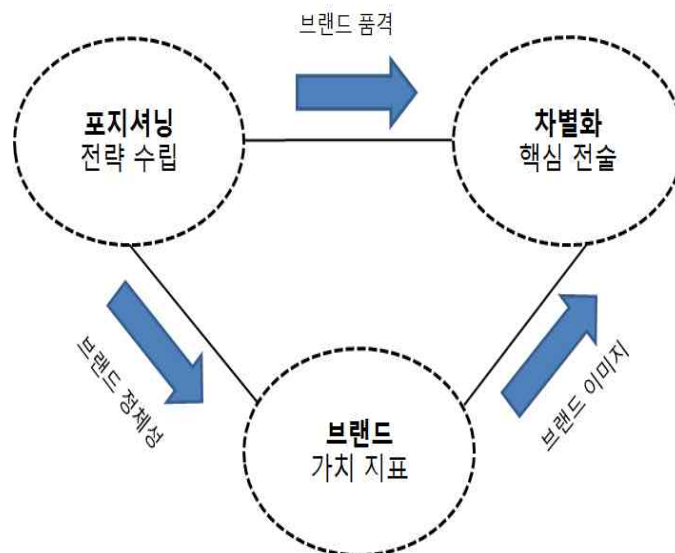


반면 출산율은 1965년 6.1명에서 2015년 1.5명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현재 4,900만 명에서 2040년 4,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World Bank 2016b). 이에 따른 국제 노동인구의 유입과 문화적 다양성은 증가하여 태국 사회문화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2010년 현재 태국 내에는 약 38만 명의 합법 노동자와 95만 명의 불법 노동자가 체류 중이다. 또한 태국의 청년층 인구의 감소는 성장잠재율의 감소와 더불어 노령 인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라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NESDB 2012).

## (2) 소비문화의 변화

세계의 디지털화와 정보 통신기술이 ASEAN 국가 간의 거리와 시간을 줄이고, 시장과 선택의 측면을 확대시킨다. 또한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증대하면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ASEAN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 시장 동향과 소비자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ASEAN 기업들은 ‘포지셔닝’, ‘차별화’ 그리고 ‘브랜드화’라는 3대 핵심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필립 코틀러 2016, 30). 포지셔닝-차별화-브랜드 삼각형(그림 8)은 기업의 사명과 전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마케팅 도구 중의 하나이며, 사업상 모든 성공의 기초이다.

〈그림 8〉 ‘포지셔닝-차별화-브랜드’ 삼각형



출처: 필립 코틀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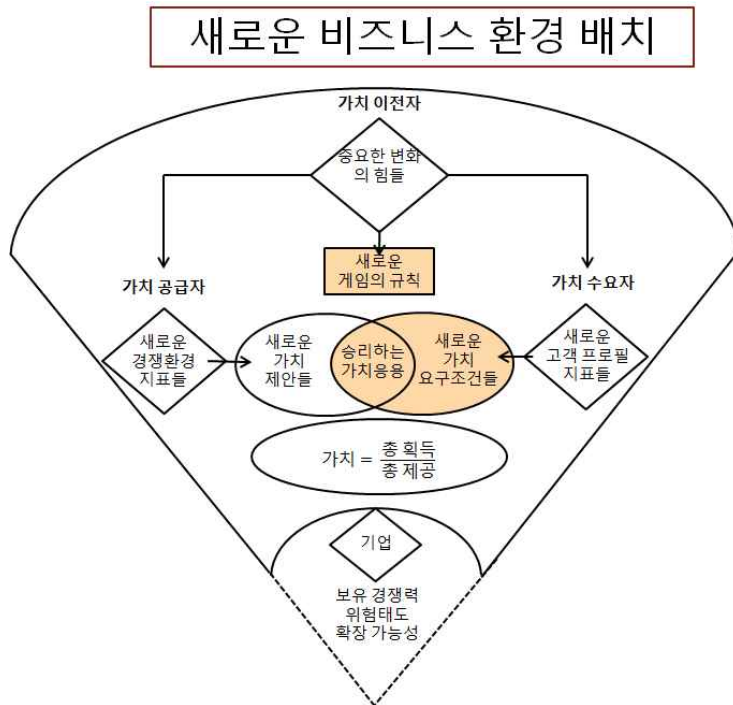
포지셔닝은 특정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이며, 이는 상품에 대한 신뢰와 브랜드의 품격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포지셔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being strategy)’이기 때문에 존재 전략이라고도 한다(코틀러 2007, 74 & 98).

포지셔닝은 확실한 차별화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차별화는 고객의 니즈(needs)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차별화는 콘텐츠(제공하는 것), 컨텍스트(제공하는 방법), 인프라스트럭처(제공하는 자원-기술-사람-시설)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코틀러 2007, 74). 브랜드는 가치 지표(value index)가 되어야 하며, 그 가치는 서비스 전략을 통해 계속 강화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마음에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코틀러 2007, 76).

포지셔닝-차별화-브랜드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현재 및 미래 시장에 강력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ASEAN에서 성공적인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필립 코틀러 2016, 130).

〈그림 9〉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배치



출처: 필립 코틀러, 2016

ASEAN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변화에 대한 경쟁력-위험 태도-확장 가능성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그림 9 참조). 새로운 가치 요구조건이 새로운 가치 제안과 부합할 때 경쟁에서 승리하는 가치의 응용이 가능해진다. 승리하는 가치의 응용을 위해서는 자사의 보유 경쟁력, 위험 태도, 확장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경쟁력은 보유 자원을 사용해서 요구 조건에 맞게 성과를 내고, 필요할 때 어떻게든 새로

운 자원을 구해 오는 능력을 의미하며, 위험 태도는 새로운 혁신을 달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불확실성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확장 가능성은 어떤 시장에 너무 일찍 진입했거나 통제 불능의 사건에 영향을 받을 때 사업의 성장을 유지하는 체력과 민첩함을 의미한다.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ASEAN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을 지지하면서도, 지역적 관점을 유지하며, 제품과 서비스 면에서 현지 챔피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코틀러 외 2016, 123-124).

### (3) 한류의 영향

태국은 K-drama(한국 드라마)에서 K-pop(한국 대중음악)까지 한류가 광범위한 인기를 누리는 곳이다. 한류로 높아진 상품 이미지를 활용한 화장품·식품·팬시 상품 등 소비재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K-beauty(한국 화장품) 산업은 2008-2009년 태국 방송 채널을 통해 한국 드라마 방송이 늘어난 영향으로 2010년대 들어 한국의 태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2년 태국에 수출된 화장품은 총 80만 달러였으나 2012년에는 7,500만 달러로 94배가 증가하였다(KOTRA 2015a, 11).

한국 화장품과 식품의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의 태국 진출은 2000년대 중반부터 태국 진출을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더 페이스샵(2004년), 스킨푸드(2005년) 화장품 프랜차이즈 매장이 진출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와서는 탐앤탐스(2010년), 본촌치킨(2011년), 교촌치킨(2012년), 할리스커피(2013년)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가 진출하고 있다(KOTRA 2015b, 21).

〈표 4〉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 태국 진출 현황

분야	브랜드	진출 연도	지점(방콕) 수
식당	BonChon	2011	9(8)
	TUDARI	2011	6(5)
	Kyochon	2012	4(4)
	Omuto tomato	2012	2(2)
	SCHOOL FOOD	2013	2(2)
커피 및 음료	RED MANGO	2007	8(7)
	TOM N TOMS	2010	12(7)
	HOLLYS COFFEE	2013	2(2)
화장품	The Face Shop	2004	22(13)
	Skin Food	2005	42(21)
	Tonymory	2009	6(5)
	Nature Republic	2009	5(4)
	Missha	2014	4(4)
신발	SPELLO	2014	3(3)

출처: KOTRA(2015b)

태국 소비의 서구화와 중산층의 확대에 발맞추어 한류를 활용한 소비재 및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진출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류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화장품, 주방용품, 가전, 잡화 등 소비재와 관련한 도소매 유통시장 규모가 80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GS 홈쇼핑과 CJO 쇼핑 등이 2011년 진출하여 홈쇼핑을 이끌고 있어 태국 내 모바일 메신저 LINE은 3,300만 명의 가입자(2014년 10월 기준)를 확보하고 있어 모바일 쇼핑을 선도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였다(KOTRA 2015b, 20).

## 5. 투자 및 유망 업종

### (1) 태국의 경제발전 계획(2012-2016)

태국의 경제개발은 1997-2001년의 제 8차 경제계획은 ‘성장 지향의 접근(growth-oriented approach)’에서 ‘인간 중심의 개발(people-centered development)’로 전환하였다. 1997년 동남아 경제위기를 통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의 폐해를 경험한 태국은 앞으로 민간 분야와, 시민 사회,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균형 경제성장(balanced economic development)을 지향할 것을 천명하였다(NESDB 2012).

태국 정부는 글로벌 경제의 환경이 투명성(transparency)과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므로, 태국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국제 기준을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가 다극화(Multi-polar) 속에서 BRICs와 ASEAN이 새로운 경제적 중심지가 될 것이며, 아시아 내의 중산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견하면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형성이 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NESDB 2012).

‘NESDB(태국경제사회개발계획) 2012-2016’에 따르면 태국의 향후 개발전략과 우선순위 산업 분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NESDB 2012). 첫째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평생학습 사회(lifelong learning society) 개발을 목표로 한다. 현재의 출생율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중장년층의 학습을 통한 재취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공공 의료 분야를 포함한 보건 부문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회적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태국 내의 교육 및 재교육 시장은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농업 부문과 식품과 에너지 안보 분야를 중점 육성 분야로 선정하였다. 생산적인 경작토지(productive arable land)를 보존하고 소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할 것을 천명하였다. 기후 및 환경 변화에 적합한 농업 활동과 기술을 제공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 및 농산물의 질과 수준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 세계

적 농산물의 공급망(supply chain)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의 기술과 지식을 농촌 사회에 파급시켜 이 분야에 대한 성장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2022년까지 일일 9백만 리터에 해당하는 에탄올과 같은 에너지량을 생산할 계획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지역적 연계성(regional connectivity)을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관련 규정과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에 맞춰 물류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인근 국가 및 동남아 국가와의 연계성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따라서 태국의 인프라 건설 시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넷째, 자동차와 전자 산업이 전체 GDP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제조업 허브화 전략을 추구하고자 한다. 태국 정부는 AEC 출범 이후 2020년 자동차 생산량을 현재보다 40% 이상 늘어난 35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소비세 감면 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자동차 생산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성공 사례

프레지던트 베이커리(President Bakery)는 1980년 티암 초크와타나(Tiam Chokwatana)가 설립한 식품회사로 사하 그룹(Saha Group)의 자회사로 도매, 패스트푸드 & 케이터링, 소매업이 주요 업종이다. 프레지던트 베이커리는 태국 소비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잘 활용하였다. 농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됨에 따라 제과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품질 높은 자체 브랜드의 제과 제품을 출시하였다. 또한 맥도날드·피자헛에도 자사 제품을 공급하였다. 프레지던트 베이커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실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코틀러 외 2016, 162-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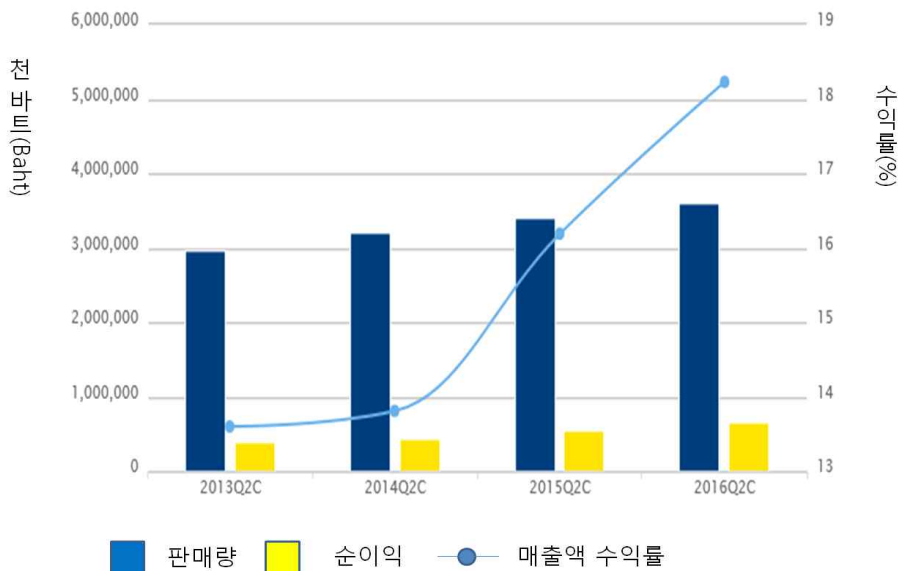
- ① 최고의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상의 원료를 사용할 것
- ②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품 개발에 매진할 것
- ③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에 투자할 것
- ④ 제품의 신선도와 청결함을 유지할 것

〈그림 10〉과 같이 2013년 2분기의 제품 판매액과 순이익은 30억 바트(약 970억 원)와 5억 5천만 바트(약 178억 원)에서 2016년 2분기에는 36억 바트(약 1,160억 원)와 6억 5천만 바트(약 212억 원)로 각각 증가하였다. 특히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2013년 13.6%에서, 2015년 16.1%, 2016년 18.2%로 크게 증가하였다.

프레지던트 베이커리의 성공 요인은 주요 기존의 태국 제과 산업은 품질이 낮고 유통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틈새를 공략하였기 때문이다. 프레지던트 베이커리는

적절한 타이밍과 강력한 고객 지향 그리고 다양한 제품라인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현지 소매점 부문에 공급하여 소매 브랜드를 보유하고, 제과 시장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그림 10〉 프레지던트 베이커리 최근 재무제표



출처: EMIS(www.emis.com)

오이시 그룹(Oishi Group)은 태국 사업가가 일본 음식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1999년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00년대에 레스토랑과 식음료 제조 및 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2011년 말 기준으로 태국 전역에 120개의 레스토랑 지점을 열었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자회사(Oishi International Holdings)도 설립하였다([http://www.oishigroup.com/en\\_aboutus\\_history.php](http://www.oishigroup.com/en_aboutus_history.php): 검색일 2016년 10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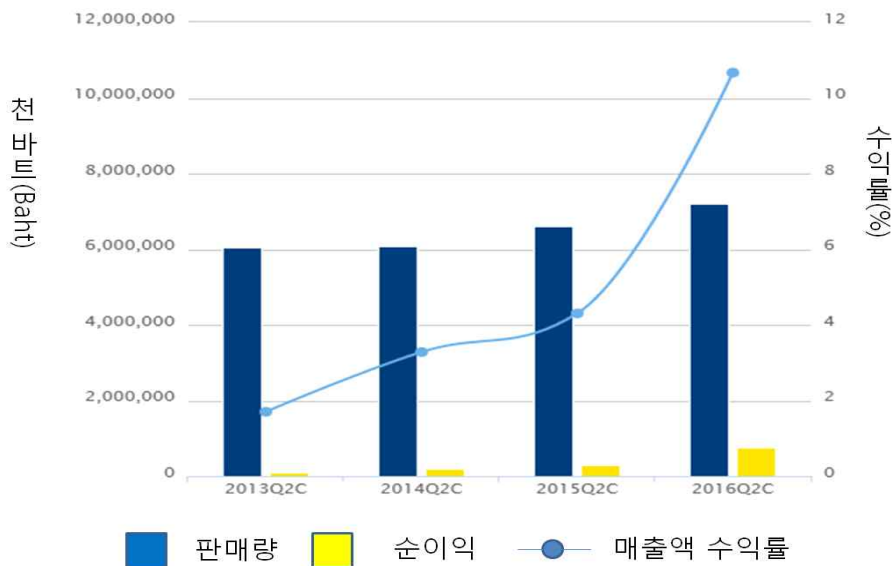
오이시 그룹은 태국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일본 식품 회사로의 포지셔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식품과 음료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현재 후지(Huji)와 쯤(Zen)이 일본식 프렌차이즈 레스토랑에서 경쟁하고 있고, 녹차 시장에서는 코카콜라가 도전하였지만 오이시 그룹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그림 11〉에 따르면 2013년 2분기의 제품 판매액과 순이익은 60억 바트(약 1,936억 원)와 1억 2천만 바트(약 33억 원)에서 2016년 2분기에는 72억 바트(약 2,320억 원)와 7억 6천만 바트(약 245억 원)로 각각 증가하였다. 특히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2013년 1.7%에서, 2016년 10.2%로 크게 증가하였다.

오이시 그룹은 첫 레스토랑인 오이시 뷔페의 성공은 태국 소비자들 사이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다른 식당과 차별화된 고급 음식을 제공하는 브

랜드로 각인되었다. 또한 오이시 라멘, 오이시 스시바 등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간단한 식사를 위한 스시 테이크아웃 전문점도 개설하였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라이브 뮤직과 오락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레스토랑을 열기도 하였다(코틀러 2016, 169).

〈그림 11〉 오이시 그룹의 재무제표



출처: EMIS(www.emis.com)

글로벌 기업인 혼다는 1964년 태국에 진출하였으며, 1986년에 AP 혼다를 설립했다. 혼다 태국은 25년간 총 2천만대를 판매하면서 업계 1위에 올라섰다. 혼다가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와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만족 때문이다(코틀러 2016, 335). 혼다는 윙센터(Wing Centers)를 대리점이자 서비스 센터라는 이미지로 확립하였다. 다양한 안전교육 소프트웨어 제공, 환경 행사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2010년에 젊은 세대에게 홍보하기 위해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을 공동 응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코틀러 2016, 336)

현지 기업과 태국 기업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새로운 소비층을 향한 브랜드를 확립하였고, 높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이다. 태국 경제의 전반적인 저성장 속에서도 성공 기업들은 마케팅을 통한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었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 중산층에 전략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국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 역시 이와 같은 ‘브랜드-차별화-포지셔닝’의 모델을 활용한 타당성 조사와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6. 한국 기업의 진출 전망 및 시사점

태국 시장은 세계 어느 국가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급변하고 있다. 태국은 ASEAN 내에서 도 농업에서부터 첨단 산업까지 가장 광범위한 산업의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태국은 또한 지정학적 중요성에 의해 인근 ASEAN국가로의 진출이 용이하기에 2015년 AEC의 출범은 커다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태국 시장으로의 진출은 경제적인 잠재력과 기대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추이도 고려해야 한다.

태국은 최근 10년간 군사쿠데타와 잦은 정권 교체와 소요 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6년 10월 태국 국왕의 서거는 정치적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실시되는 태국 총선의 결과는 앞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가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태국의 정치적 대립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닌 기저에 경제적 요인 즉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의 요소와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투쟁임을 인식해야 한다. 2000년대 들어 급부상한 탁신 세력은 경제적 불평등을 정치화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정권을 잡았지만, 군부와 민주당을 비롯한 반 탁신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탁신과 그 세력을 축출하였다. 탁신 세력이든 반 탁신 세력이든 태국 경제의 미래를 점유하기 위한 동기로 치열하게 권력 투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 진출은 태국의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태국의 AEC에 대한 대응과 주요 우선 육성 산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동남아 대륙부의 중심에 위치한 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ASEAN의 연계성에 대해 핵심적 역할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태국 정부 역시 국내적·국외적 요인 모두를 고려할 때 교통·물류 인프라 확장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발주하는 교통, 통신, 전력 분야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따라 건설 장비 및 자재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 해외 건설 시장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때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핵심 거점으로 한류의 직접 품목인 음반, 드라마, 영화 산업과 한류의 간접 품목인 화장품, 의상, 팬시용품 진출 전망은 매우 밝다. 또한 태국 정부의 전략적 육성 산업인 의료 관광분야의 성장에 따른 의료기기 및 제약 분야도 투자 전망이 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시장은 낮은 출산율로 2018년부터 노동인구가 감소하며, 잠재성장률이 3%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0.8%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 약간 회복하였지만 2~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계 부채가 GDP 대비 2008년 55%에서 2014년 85%까지 급증함에 따라 민간소비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태국은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잠재성장을 하락 등 ‘중진국 함정’이라는 부정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대 태국 FDI는 2012년 8,500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8,200만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 기간 정정 불안으로 태국의 총 FDI 유입액이 감소 추세였던 것에 반해 한국의 투자는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은 한국 기업의 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태국 내 소비시장 뿐만 아니라 ASEAN 생산·물류 허브를 추진하는 태국의 강점을 이용한 3자 물류 및 ASEAN 역내 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중간 생산·물류기지로의 활용에 대한 검토 등 한국의 대 태국 진출 기업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핵심 산업과 틈새 산업을 발굴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은 ASEAN 통합 시장에 따른 태국의 생산 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생산 분야에서는 아세안 역내 제조업의 변화에 따른 국가별 특징 즉 태국의 특징을 파악하여 산업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자원·노동력·물류·내수시장 등 필요에 따른 적절한 파트너십과의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시장에서의 중산층 급증과 단일 시장 형성으로 인한 소비규모의 확대에 대비하여 신흥시장이 필요로 하는 교육,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여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문자료

- 김홍구. 2013. “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헌정공학” 「동남아시아 연구」 23(1), 45-87.
- \_\_\_\_\_. 2016. “태국 개헌 국민투표 결과 분석과 향후 전망” [Emerics 이슈분석]. (인터넷 접속일 2016년 9월 5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5a. “2015년 태국 진출전략 보고서” KOTRA. 방콕 무역관
- \_\_\_\_\_. 2015b. “2016 태국 진출전략” KOTRA 방콕무역관.
- \_\_\_\_\_. 2015c.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5-017*. 2015년 4월 17일. 서울: KOTRA.
- 박준홍. 2015. “떠오르는 아세안을 주목하라” 「POSRI 보고서」 포스코 경영연구원 12월 9일. 1-12.
- 서경교. 2015. “태국 민주주의와 군부 쿠데타: 2006년과 2014년 쿠데타를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22(1). 269-297.
- 연합뉴스. 2015. “태국, 종합 물관리 사업 백지화..수공 사업수주 무산” 3월 28일.
- 윤진표·이충렬·최경희. 2016. 「아시아의 꿈, 아세안공동체를 말하다」 (서울: 한·아세안 센터).
- 이병도. 2009. “태국의 정당과 기업가 계층” 「국제지역연구」 13(1). 319-343.
- \_\_\_\_\_. 2014. “태국 반정부 시위, 친탁신·반탁신 갈등 지속 계층간 경제 불균형도 갈등 요인” 「친디아플러스」 88권. 포스코 경영연구원. 60-61.
- 이재현. 2016. “태국 개헌안의 분석 및 개헌의 의미와 진행” [Emerics 이슈분석 4월 26일]. (인터넷 접속일 2016년 9월 6일)
- 외교부. 2015. 「아세안 개황」 (경기: 휴먼컬처 아리랑).
- 전명숙. 2006. “의류산업의 국제생산시스템(Global Production System): 거버넌스 구조 및 생산의 공간적 패턴을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이슈별 심층분석」 한국노동연구원. 71-77.
- 조흥국·윤진표·이한우·최경희·김동엽, 2011.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심층연구 11-7.
- 존 네이스비트. 1994. 「글로벌 패러독스」 정성호 옮김. (서울: 세계일보)
- 코틀러 필립·허마원 카타자야·후이 덴 후안·산드라 류. 2007. 「필립 코틀러의 리싱킹 마케팅: 지속가능한 경영 기업, 아시아의 변화」 강경인 옮김. (서울: 케인앤피북스)
- 코틀러 필립·허마원 카타자야·후이 덴 후안. 2016. 「아세안마케팅」 홍윤주 옮김. (서울: 시그마북스)
- 파속 풍파이썬·크리스 베이커. 2010. 「탁신-아시아에서의 정치비즈니스」 정호재 옮김. (서울: 동아시아)

## ○ 영문자료

Acemoglu, D., D. Ticchi, and A. Vindigni. 2010. "A Theory of Military Dictatorships."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2(1): 1-42.

Asian Development Bank(ADB), 2016.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6*, Philippine: Manila.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ASEAN), 2004. *ASEAN Framework Agreement for the Integration of Priority Sectors Vientiane*, November 29th.

\_\_\_\_\_. 2015.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Progressive and Key Achievements*. Jakarta: ASEAN Secretariat.

Archanun Kohpaiboon & Juthathip Jongwanich. 2015. "Use of FTAs from Thai Experience," *ERIA Discussion Paper Series*, 1-116. Indonesia Jakarta.

Bangkok Post, "Innovation 'Key to escaping middle-income trap'." 2016. 5. 17.

Chris Baker, 2016. "The 2014 Thai *Coup* and Some Roots of Authoritarianism,"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6(3), 384-404.

Duangmanee Laovakul. 2016. "Concentration of Land and Other Wealth in Thailand," In *Unequal Thailand: Aspects of Income, Wealth, and Power*, edited by Pasuk Phonpaichit and C. Baker, 32-42. Singapore: NUS Press.

Hew, Denis. 2007. "Introduction: Brick by Brick - the Building of an ASEAN Economic Community" *Brick by Brick: The Building of an ASEAN Economic Communit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Handy, Charles B. 1994. *The Age of Paradox*,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Mass.

Hewison Kevin, 2014. "Consideration on Inequality and Politics in Thailand." *Democratization*. 21(5). 846-866.

Kitti Prasirtsuk, 2016. "Thailand in 2015: Bill, Blast, and Beyond," *Asian Survey*, 56(1), 168-173.

Kobask Pootrakool, 2013. "The Quality of Growth from the Perspective of Income Distribution: Problems and Solutions," Paper presented at the Bank of Thailand annual seminar, September 19.

Kotler, Philip, Hermawan Kartajaya, Hooi Den Huan & Sandra Liu. 2008. *Rethinking Marketing: Sustainable Marketing in Asia*, Singapore: Pearson/Prentice Hall.

Magashazi Aniko. 2015. "The Integration by Trade and FDI of Emerging

Economies: The ASEAN Example” *Society and Economy*, 37(2), 207–223.

NESDB(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2012. *Summary of the Eleven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2012–2016)*, NESDB,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Bangkok, Thailand.

Obashi, Ayako and Fukunari Kimura. 2016. “Deepening and Widening of Production Networks in ASEAN”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Discussion Paper Series*, 1–43. Indonesia Jakarta.

Rattanakhomfu, Sao waruj, Nutthawut Laksanapunyakul, Nichamon Thongpat and Natcha, O-charoen. 2015. “Thailand Country Study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Mid-term Review Project.”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Discussion Paper Series*, 1–112. Indonesia Jakarta.

Pananond, Pavida. 2013. “Moving along the Value Chain: Emerging Thai Multinationals in Globally Integrated Industries,” *Asian Business & Management*, 12(1), 85–114.

Phongpaichit, Pasuk. 2016. “Inequality, Wealth and Thailand’s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6(3), 405–424.

Veerayooth Kanchoochat & Kevin Hewison, 2016. “Introduction: Understanding Thailand’s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6:3, 371–387, DOI: 10.1080/00472336.2016.1173305.

Woetzel, Jonathan. Tonby, Oliver. Thompson, Fraser. Burtt, Penny. Lee, Gillian. 2014. *Southeast Asia at the Crossroads: Three Paths to Prosperity*, Mackinsey Global Institute, June.

World Bank. 2016a.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WGI) 1996–2015*, [www.govindicators.org](http://www.govindicators.org)(검색일 2016년 10월 4일)

\_\_\_\_\_. 2016b. Thailand Economic Monitor – June 2016: Aging Society and Economy(검색일 2016년 10월 17).

## ○ 인터넷자료

A Euromoney Institutional Investor Company(EMIS) – [www.emis.com](http://www.emis.com)(검색일 2016년 10월 21일)

HelpAge International – [www.ageingasia.org](http://www.ageingasia.org)(검색일 2016년 10월 17일)

## V. BPO 산업을 기반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는 필리핀

###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안에서의 필리핀

2007년 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설립 및 2020년 아세안 공동체(AC) 창설에 합의한 바 있다. 2014년 12월, 필리핀은 아세안 회원국 중 최초로 유럽연합(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lus)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코코넛, 섬유, 피복 등 6,000여개의 필리핀산 제품을 28개 EU 가맹국 중 어느 나라에도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최빈국과 저개발국가의 수출확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해당국 제품을 무관세 혹은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정부에게는 AEC 출범을 계기로 교역, 투자 부문에서 외국기업 지분 확대, 관세 인하 등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아세안과의 FTA, RCEP 협상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KOTRA 2015).

〈그림 1〉 국가 위기 지표



출처: Dun & Bradstr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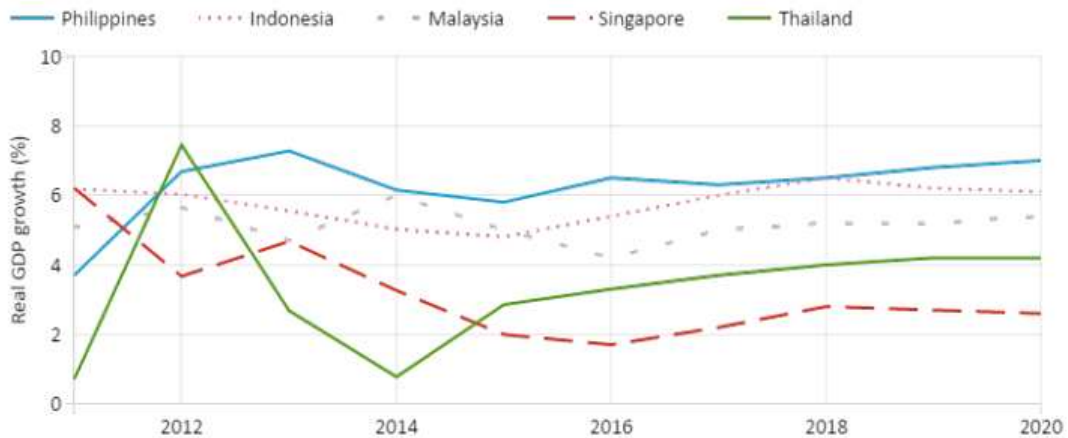
2017년 ASEAN 의장국으로서 가장 최근인 2016년 3사분기에서도 필리핀은 7.1% 성장률을 보이면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고를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9일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는 2017년부터 있을 ASEAN의 의장직을 수락했다. 그는 지역주의의 모델로서 아세안을 강조할 것이며 50주년을 맞이할 ASEAN을 이끌고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50주년을 기점으로 동체감과 공통된 정체성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공동체를 공고화“하고자 함을 수락연설에서 강조하였던 바 다<sup>14)</sup>.

14) Thai News Service 2016년 9월 12일자 (검색일: 2016-11-22)

또한 아세안이 중국과 미국 등의 열강등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필리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이 공통으로 처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나 미국의 패권 확장 등의 이슈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필리핀 현정부는 미-중 관계에서 새로운 지점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두테르테의 정책은 자칫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sup>15)</sup>. 현재 아세안에서 각국의 공통된 관심사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sup>16)</sup>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베트남과 함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은 나라로<sup>17)</sup>. 현재 BPO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과의 TPP 협약 체결과 맞물려,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 헌법 규정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 규정이 완화되는 것을 개헌이 된다면, 현재까지는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서 부진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증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그림 2〉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출처: Haver Analytic/Dun & Bradstreet

##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특성

### (1) 정치적 변화 -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두테르테 정부

필리핀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 마르코스 독재 정권을 민중혁명(People Power)을 통해 종식했고, 2000년대에는 부패 혐의를 받았던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역시 하야하게 만들었던 역사를 갖고 있다. 가장 낮은 행정단위인 동(바랑가이) 수준까지 직접 선거를 치를 정도로, 절차적

15) Intel Asia 2016년 10월 29일자 (검색일: 2016-11-22)

16) Intellasia 2016년 9월 1일자

17) Business World 2011년 3월 23일자

민주주의를 일찍이 정착했으며, 진보적인 법안이나 헌법을 아시아에서는 선구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부패와 소수 엘리트 층에 집중된 정치권력의 문제는 항상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어 왔다. 올 2016년에는 대통령 선거 이후, 튀는 언행과 비인권적 정책 집행으로 인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2016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롭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전임 아키노 대통령 재임시절부터 이어진 6% 내외의 고도성장은 계속되고 있으나, 두테르테의 정치·외교 정책은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일단 그는 선거 공약에서도, 시장개방과 제도개혁, 외국인 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출 확대를 기조로 하겠다고 했으며,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표방하고는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이 2014년 기준으로 62억달러로 259억 달러의 인도네시아, 106억 달러의 말레이시아, 127억 달러의 태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 지난 30년간 인프라 투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2.3%에 그친 데 비하여, 아키노 정부는 5% 투자를 약속했었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증가해야하지만, 헌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의회 내 소수지지 세력을 두고 있는 두테르테 정부가 처한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일단 신 정부는 최근의 미디어 보도에서는 신정부 역시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 등 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과, 현 필리핀 헌법에서 규정한 40%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완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신정부가 표방하는 또 하나의 축은 경제 불균등의 완화이다. 그는 지역의 자치를 강화하고 분쟁 지역에 대한 정치적 안정을 통해, 균형적인 연방 형태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게 국민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바는,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이것이 성공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일정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두테르테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 이후, 초사법적 살해(extrajudicial killing)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필리핀경찰청(PNP)의 발표에 따르면 두테르테 정부가 출범한 2016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5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한다. 이 중 1,391명이 자경단이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고, 1,011명은 경찰의 작전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8)</sup> 마약 관련 조사과정에서는 총 14,798명이 체포되었고, 685,740명이 자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약 밀매자, 구매자, 마약왕 뿐만 아니라, 불법 마약을 재유통하거나, 111,572명의 경찰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마약 테스트를 받게 했다. 총격을 받고 사망한 시체가 보도나 하수구에 길 위나 도로 위나 길 옆 하수구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시체와 그 옆에 판지에 적힌, “마약 거래에 가담했다”는 글귀나, 때로는 손발이 묶여 있거나 얼굴을 테이프로 감아놓는 광경이, 이 마약과의 전쟁을 상징하는 그림이 되고 있다.

두테르테는 1988년부터 다바오 시장으로 일곱 번이나 복무하면서, 다바오 처형단(Davao Death Squad)이라는 민병조직을 만들어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을 처형했다. <sup>19)</sup> 이 사병조직은

18)Manila Bulletin 2016년 9월 5일자

19) 시사인 2016년 5월 25일자

1998년에서 2005년까지 300명 이상, 2005년에서 2008년까지는 700명 이상의 살해에 혐의를 받고 현 상원에서도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 마약과의 전쟁도 다바오의 경우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 많은데, 경찰이나 바랑가이(동과 같은 행정 단위) 공무원들이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격자들에 대한 훈련과 무기를 제공하며, 대부분 살해가 있더라도 담당 경찰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늦추는 방식으로 용의자의 도피를 돕는다고, Human Rights Watch는 설명하고 있다.<sup>20)</sup> 결국 다바오시가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든 것이 현재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바오시가 가장 안전한 데에는 여러 논란이 있다. 십만 명 중의 범죄율이 2014년 958.69, 2015년 702.15로 낮은 비율인 것은 맞지만 필리핀 내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 아니며, 살인 사건의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다바오시는 강력 범죄율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무력에 의해 억누르는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슬람이나 공산계열의 무장 세력들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고 지자체장이나 토호세력이 사병들이나 사적인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화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바오의 정치적 살해에 대해 조사를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장이었으며, 법무부 장관이었던 드 리마(Lilia de Lima)를 마약과 연관시키려는 행위는 인권 조사를 무력화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테르테는 드 리마가 마약상으로부터 상납을 받았으며, 이 중간책을 드 리마가 이른바 “섹스 행각(sex escapades)”을 벌인 운전기사가 담당했다고 천명하여, 개인에 대한 도덕적인 공격일 뿐만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인권’담론에 대한 비하성격을 띠고 있다.

## (2) 외교적 변화와 아세안 내 필리핀의 정치

두테르테의 이례적인 정책 집행은 단지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안이 되었고, 직접적으로 외교관계나 대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인 사안으로 확장된 데에는 필리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기구나 외국 외교 정상들이 언급한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조사법적 살해에 대한 UN의 비판에 대하여, “\*uck you, U. N”, 그리고 “어리석은 기관”이라고 반응했으며, 사법적 절차를 지킬 것을 조언한 EU에 대해서는, “영국인은 얼마나 사람들을 죽였는가?”라면서<sup>21)</sup>, 전쟁 수행 중 희생되는 인명에 대해서는 외국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고 반응한 것이다. 유엔마약범죄국에서도 작금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현재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 중이며, 전쟁의 규율은 따로 있다”고 했다<sup>22)</sup>. 필리핀 정부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 수행중 인명이 희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호주 등의 공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20) Human Rights Watch “You Can Die Any Time: Death Squad Killings in Mindanao” Retrieved from [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philippines0409webwcover\\_0.pdf](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philippines0409webwcover_0.pdf).

21) Independent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rodrigo-duterte-eu-f-you-expletive-philippines-attack-parliament-obama-a7319836.html>에서 검색)

22) Aljazeera(<http://www.aljazeera.com/news/2016/08/rodrigo-duterte-human-rights-160806211448623.html>에서 검색)



게는 외교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했다가 수습하기도 했다.

그의 막말 퍼레이드는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라고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다분히 계산된 행동으로 보는 시각도 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기존의 우방과는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와는 별도로, 중국과 외교적 접촉을 강화하는 일련의 시도가 아세안 국가의 패권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닌가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인도네시아가 중국이나 소비에트 연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세계를 형성하려 했던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실익을 증가하고자 하는 계산된 행동이 아니냐는 의미로 보인다. 전통적인 우방을 형성한 미국과 필리핀은 2014년 1991년 반환된 미군 기지의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세 확장에 대해서 미국과 필리핀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이전 아키노 정부까지의 기조였던 것이다. 반면, 두테르테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계 속에 130달러의 무역 거래를 성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미국과의 군사협력도 종결할 수 있음을 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필리핀의 교역국으로 첫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미국, 네 번째가 싱가포르인 현 상황에서 두테르테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이 제기된다. 어쨌든, 다소의 외교적 긴장 상태까지 초래했던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표면적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은 나의 마약 척결 정책이 주권국가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며 미국이 필리핀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sup>23)</sup>. 미국과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곤 하지만, 두테르테는 미국과의 결별은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수습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최근의 그의 외교적 행보이다. 중국 방문 직후에 두테르테는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외교 정책의 분리”이며, 두테르테의 미국과의 거리두기는 “결별”이라기 보다는 ‘자주 외교’를 강조하는 정치적 언사라고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sup>24)</sup>. 2014년에 체결된 미국과의 방위협정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지만,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른 자리에서 하기도 했다. 요컨대 최근의 두테르테의 외교적 언사는, 전통적인 우방과 결별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새로운 정치, 군사 협력을 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의 양을 확대하기 위한 실리 추구 전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듯하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즉위한 이후, TPP에 대한 미국과 필리핀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아키노-오바마 시대에는 TPP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지만,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중국과의 경제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TPP에 미온적이며, 미국의 트럼프는 TPP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 3.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23) 연합뉴스 12월 3일자

24) 이정구 “두테르테는 정말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가?” 「노동자 연대」 185호 (2016년 11월 11일)

필리핀은 총GDP에 차지하는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50%를 넘을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제조업, 농업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력구조에 있어서는 농업이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아,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대비 노동력 구조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은 주로 반도체 완제품 및 부품품,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용 등이며, 한국, 미국, 일본의 글로벌 제조 기업이 주로 진출해 공장 설립 후 수입한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든 후 해당국가 또는 제 3국가로 수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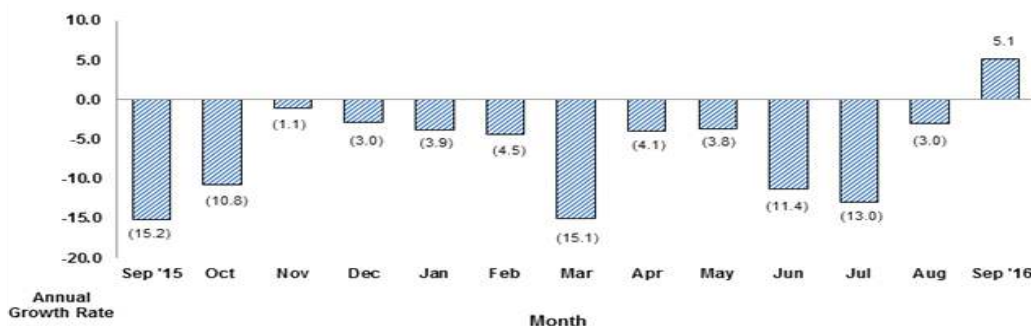
〈표 1〉 필리핀 10개 주요 수출 품목: 2016년 9월 기준  
(Year-on-Year Growth in Percent)

증가 품목		감소 품목	
Other Mineral Products	97.5	Woodcrafts and Furniture	-7.1
Electronic Equipment and Parts	66.3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3.0
Metal Components	18.2		
Chemicals	10.8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ories	8.3		
Ignition Wiring Set and Other Wiring Sets Used in Vehicles, Aircrafts and Ships	5.1		
Electronic Products	3.6		
Other Manufactures	3.2		

출처: 필리핀 통계청

필리핀은 지난 10년간 평균 5.5%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며, 향후 10년도 5~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 숙련 기술자가 부족하며, 학교 탈락률이 6.0%에 달하는 점, 그리고 GDP의 20%만이 투자에 사용되는 점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율이 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민관협력프로젝트(PPP)의 수행상의 부패나 지연 등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필리핀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를 막는 요인으로 흔히 거론되는 점은, 기득권이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비중이 커서 새로운 업종의 진출이나 경쟁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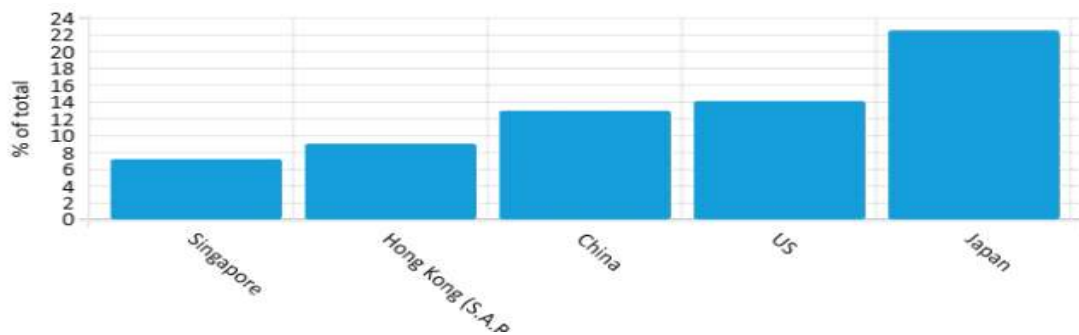
〈그림 3〉 필리핀의 수출 증가율 (2015-2016)



출처: 필리핀 통계청

1990년대 이후 필리핀은 규제완화와 자유화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였고 수출지향 제조업 부흥을 위하여 특별경제 구역을 형성하곤 하였다. 섬유나 전자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 FDI는 세계은행 등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183개 국 중에서 136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환경이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고(World Bank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12),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필리핀에서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패와 비효율적인 관료제 때문에 투명성이 낮고 투자자에게 비용을 높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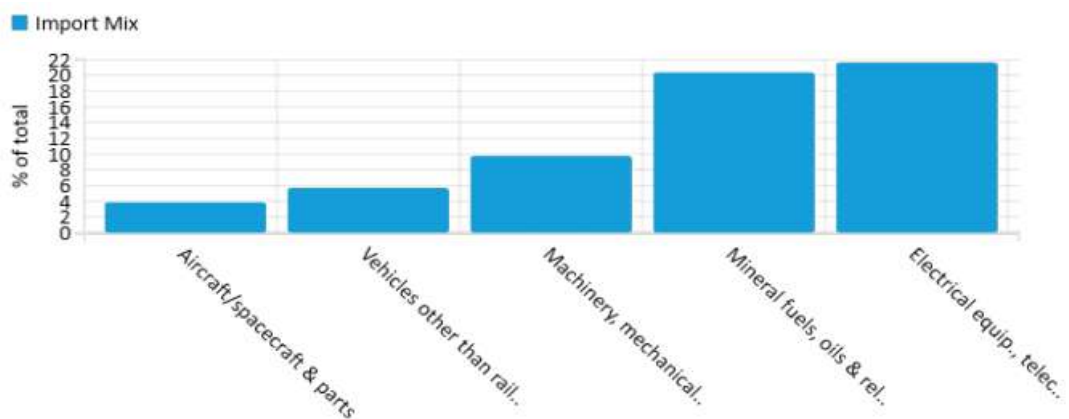
〈그림 4〉 필리핀의 수출 상대국



출처: IMF DOTS / Dun&Bradstreet

필리핀의 수출 상대국으로 전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 일본, EU 등은 아시아 권역의 중국이나 베트남이 중요하게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5) 필리핀의 수출은 2016년 9월 기준, 52억 천백만달러에 달하여 2015년 49억 6천만 달러에 비하여 5.1% 성장하였는데, 10가지 주로 수출품목 중 8개 항목이 주로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그림 5〉 필리핀의 수입 품목



출처: Comtrade / Dun&Bradstreet

25) Dun & Bradstreet 2016 “Country Insight Report: Philippines June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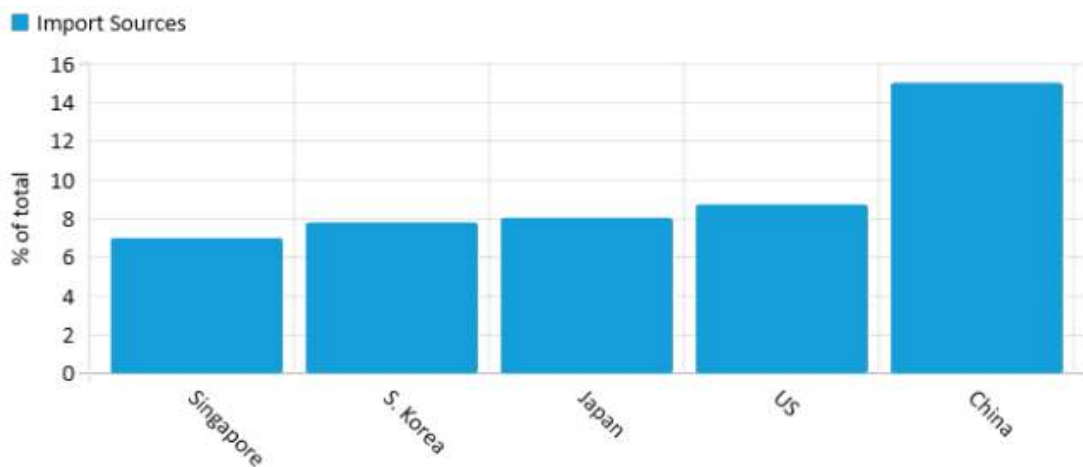
〈표 2〉 수입에 대한 규제

Tariff Barriers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Thailand
Overall Weighted Mean Tariff	5.7	2.3	3.4	0.0	3.6
Manufactures Weighted Mean Tariff	2.8	2.9	3.7	0.0	3.0
Primary Products Weighted Mean Tariffs	7.7	1.2	5.0	0.0	5.2
Overall MFN Tariff	5.5	7.7	17.1	0.0	16.9
Manufactures MFN Tariff	4.6	8.3	24.1	0.0	16.2
Primary Products MFN Tariff	6.9	2.4	3.5	0.0	21.3
Services Restrictiveness Index	53.5	50.0	46.1	14.9	48.0

출처: Haver Analytics/World Bank

필리핀의 주요한 수입 품목으로는 원재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비산유국이므로 국제 원유/정유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기존에는 전자 제품에 있어 일본이 가장 큰 공급자였지만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늘고 있다.

〈그림 6〉 필리핀의 수입 상대국



출처: IMF DOTS / Dun & Bradstreet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공산품을 비롯한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품 유통경로 등 일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아 경쟁이 제한적이며, 해당 기업이 시장가격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급자가 우위에 선 시장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분야 등 재수출 투자가 활발하며, 현지공장에서의 완제품을 생산, 인근 국가 등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필리핀 수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미쓰비시, 도요타, 삼성전기 등이 현지 공장 인수 혹은 증설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미쓰비시는 2014년 포드의 필리핀 생산 공장을 인수하였고, 도요타는 2015년 1,126만 달러 규모 공장을

증설했다. 한편 삼성전기는 2015년 2.5억 달러 규모 적층세라믹콘덴서 생산라인 증설하는 것을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다(KOTRA 2015). 저유가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 확대에 따른 구매력 유지, 공공프로젝트 관련 정부지출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중국을 위시한 주요 교역국의 경기둔화, 미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발 금융위기 등은 리스크 요인에 해당한다.

####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필리핀 소비자들의 전망을 보면, 2016년 3사분기 기준, 긍정적인 기대가 부정적인 전망을 앞서고 있다. 이는, 정치 안정성의 향상, 더 많은 고용기회, 일용품에 대한 물가 안정,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 효과적 정부 정책,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기대 및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지지, 정부 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필리핀 중앙은행은 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6)</sup>

〈표 3〉 필리핀 경제 지표

Annual data 2015		Historical averages (%)	2011-15
인구(m)	100.7	인구성장률	1.6
GDP (US\$)	292	Real GDP 성장률	5.9
GDP (US\$)	741	Real domestic demand 성장률	6.7
GDP per head (US\$)	2,899.6	인플레이션	3.3
GDP per head (US\$)	7,358.7	Current-account balance (% of GDP)	3.2
환율 P:US\$	45.5	FDI 유입 (% of GDP)	1.5

출처: EMIS.com

민간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에 달할 정도로 소비활동이 왕성하며, 특히 해외파견근로자의 국내송금(Overseas Workers Remittances)이 구매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4년 기준 160여만 명의 필리핀인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국내송금(OFW)은 GDP의 8.5% 차지하고 있다. 빈부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가 심한 편으로, 고소득층 비중이 전체 인구의 30% 미만이며,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어느 정도 품질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26) Banko Sentral ng Philipinas 2016 “BSP Consumer Expectation Report”

〈그림 7〉 필리핀 소비자 전망



출처: 필리핀 중앙은행(BSP)

## 5. 투자 및 유망업종

필리핀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편이나, 인도와 더불어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다. BPO 사업은 글로벌리제이션과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21세기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사업분야가 되고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은 일부 업무를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방법의 하나로, 경영 상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 처리의 운영 및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개념이다.<sup>27)</sup>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은 생산, R&D/디자인, IT,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되지만, 현재 필리핀은 IT 관련 서비스와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을 통합하여 IT-BPO 서비스 산업으로 통칭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경제 위기에서도 ICT 분야는 상대적으로 하드웨어도 전자 분야의 쇠퇴로 인해 수요가 적어졌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덜 받는 분야가 되고 있다. 필리핀은 2010년 기준으로 330,000명의 고용을 이끌어 내서 세계 제일의 수준이 되었으며, 비음성 기반 서비스에 있어서도 200,000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있어서 세계 두 번째 수준이 되고 있다(Abara and Heo 2013)<sup>28)</sup>

제조업이나 농업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국가 경제 발전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점과 궤를 같이 한다. 수출액이 2004년 13억 달러에서 2013년 133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고용 역시 2004년 101,000명에서 2013년 90만 명으로 9배가량 증가하였다. 영어 구사 능력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인이

27) 한국수출입은행 2011 “필리핀 BPO 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2011년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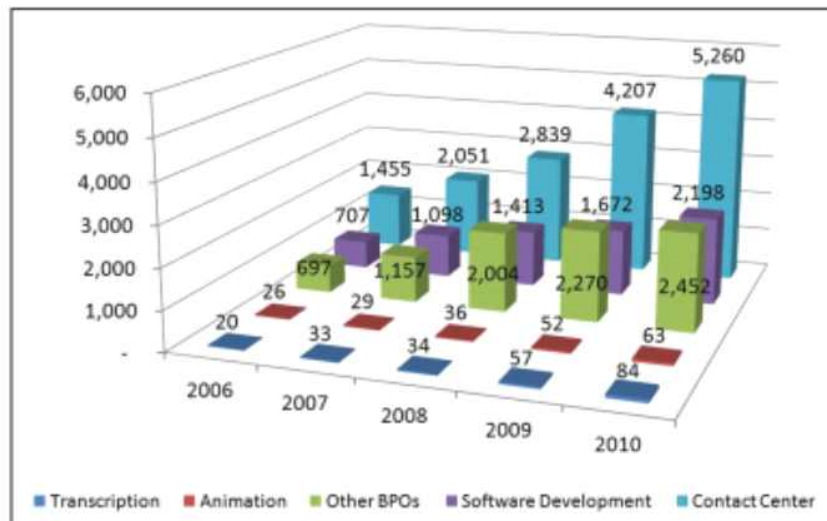
28) Abara, A. C. and Y. Heo 2013. “Resilience and recovery: the Philippine IT-BPO Industry during the global crisi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6(2): 160-183.

되었다. 필리핀의 법, 회계, 의료 및 사회 보장 체제가 미국과 유사한 점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점이 되고 있다. 또한 이 분야의 경쟁국인 인도에서의 임금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도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29)</sup> 2006년 이후 BPO 분야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6년 이후 40%에 달한다. <sup>30)</sup>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운영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이 적은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취했으며, 영어 구사력과 문화적 유사성을 이유로 필리핀은 매력적인 곳이 되었다(Kleiber 2014)<sup>31)</sup>.

외국인 직접 투자량은 많지 않지만 BPO 사업은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 영역에서 2011년 기준으로 640,000명의 고용과 1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려, 전체 GDP의 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DOST-ICT Office & BPAP 2012,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는 곳은 글로벌 음성 기반 서비스로 이 분야에서 2009년 이후로 인도를 제치고 세계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2010: 7).

필리핀은 ‘Roadmap 2016’ 플랜을 세워 BPO산업을 2016년까지 매년 20%이상 성장, 총 매출액 250억 달러를 달성해 필리핀 GDP의 9% 기여 등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BPO 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업무용 빌딩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건설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장과 같은 다른 산업의 확장을 견인하고 있다. 추정치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하드웨어 시장 매출액(컴퓨터 판매량 기준)은 25억 달러, 소프트웨어 시장은 5억 16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32)</sup>.

〈그림 8〉 필리핀 BPO 부문별 수익 (2006-2010)



출처: 필리핀 중앙은행(BSP)

29) Marketline 2016 “Country Analysis Report: The Philippines, In-depth PESTLE Insights”

30) Dun & Bradstreet 2016 “Country Insight Report: Philippines”

31) Kleibert, J. M. 2014. “Strategic coupling in ‘next wave cities’: Local Institutional Actions and the Offshore Service Sector in the Philippines.”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35(2): 245-260.

32) 아웃소싱타임즈 2012년 12월 3일자 (m.outsourcing.co.kr에서 2016-12-05 검색)



필리핀 BPO 산업의 주요 업종으로는 콜 센터(contact center), 자료 전사(data transcription),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후선 업무지원(back office) 서비스 등이 있다. 콜 센터 아웃소싱은 착신서비스와 발신서비스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착신 서비스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접수하며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주로 고객 상담, 자료 청구 접수, 상품 수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서비스, 시간외 문의 상담, 각종 유지 보수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 반면 발신 서비스는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가능 집단을 추출하고 사전에 고객의 욕구와 정보를 파악한 후, 고객 구매를 유도하는 통합 영업 고객 관리가 목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판촉 활동, 고객 관리, 고객 만족도 조사, 고객 센터 업무 진단, 상담 품질 평가, 모니터링 평가 등도 포함된다. 음성 기반 서비스 산업에는 콜 센터 산업이 그 중심을 이루며, 비음성 기반 서비스 산업에는 의학/법률, 애니메이션 분야 등이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BPO 산업은 세계 경제 위기에서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다.

〈표 4〉 2013년 세계 아웃소싱 국가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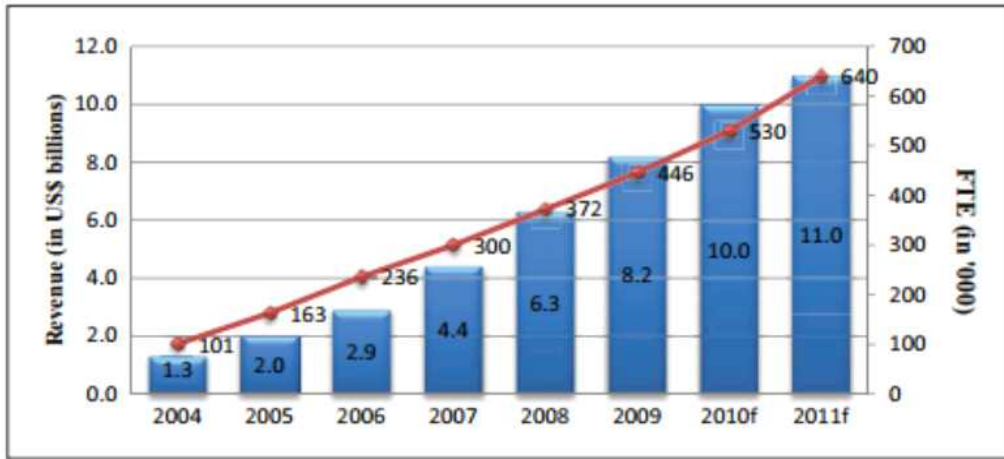
Rank 2013	Movement from Last Year	Region	Country	City
1	-	South Asia	India	Bangalore
2	-	South Asia	India	Mumbai
3	+1	Southeast Asia	Philippines	Manila (NCR)
4	-1	South Asia	India	Delhi (NCR)
5	-	South Asia	India	Chennai
6	-	South Asia	India	Hyderabad
7	-	South Asia	India	Pune
8	+1	Southeast Asia	Philippines	Cebu City
9	-1	Western Europe	Ireland	Dublin
10	+1	Eastern Europe	Poland	Kraków
11	-1	East Asia	China	Shanghai
12	-	East Asia	China	Beijing
13	+5	Central America	Costa Rica	San José

출처: 코트라(<http://news.kotra.or.kr/>)

제조업이 취약하고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를 형성하며 극심한 빈부격차와 고용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은 자신들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BPO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국가의 경제 발전 로드맵에 따르면, 2016년까지 250억 달러의 수입과 130만 명의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BPO 산업의 성장은 다른 분야의 산업의 부흥을 돕기도 하는데, 일례로 24시간 업무가 진행되는 이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나 카페 등도 동반 성장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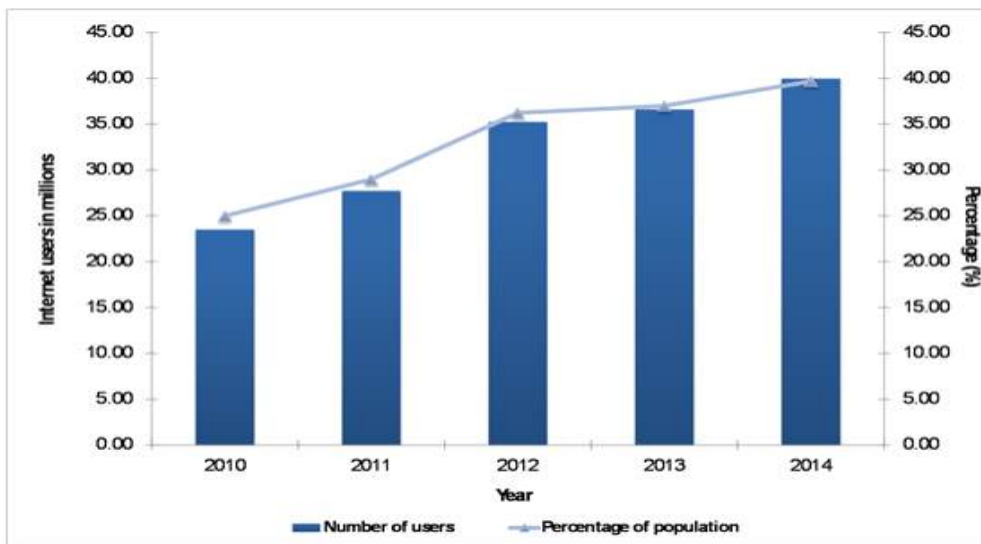
〈그림 9〉 필리핀 IT-BPO 산업 성장률 (2004-2011)



출처: 필리핀 중앙은행(BSP)

2001년 E-service의 허브를 목표로, ‘필리핀 IT 및 E-Commerce 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세금 혜택이나 관세 면제 등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175개의 IT park나 센터가 운영 중이며, IT-BPO 회사들을 유치하고 있다. PEZA는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BPO가 80% 넘는 수치가 메트로 마닐라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10〉 인터넷 사용자 증가율 (2010-2014)



출처: MarketLine

필리핀 정부는 과학 기술을 향상하기 위하여, 실리콘 벨리의 스탠포드 연구 공원(Stanford Research Park)을 모델로 하여, 필리핀 국립대학 부지에 22헥타아르에 달하는 테크노 허브를 구

축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권을 얻는 수치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이 여전히 걸림돌이지만, 인터넷이나 핸드폰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표 4〉 필리핀 내 아웃소싱 기업순위

순위	기업명	매출 규모(2012년)
1	Accenture Inc.	624.5
2	Convergys Philippines Services Corp.	384.0
3	JP Morgan Chase Bank N.A-Philippine Global Service Center	240.1
4	24/7 Customer Philippines Inc.	171.4
5	Telephilippines Inc.	160.9
6	TeleTech Offshore Investments B.V.	155.1
7	Sutherland Global Services Philippines Inc.	151.2
8	Stream International Global Services Philippines Inc.	149.7
9	Sitel Philippines Corp.	141.4
10	Deutsche Knowledge Services Pte. Ltd.	127.9
11	Sykes Asia Inc.	124.8
12	IBM Daksh Business Process Services Philippines Inc.	122.6
13	Aegis PeopleSupport Inc.	121.0
14	TeleTech Customer Care Management Philippines Inc.	120.0
15	IBM Business Services Inc.	115.8
16	Telus International Philippines Inc.	110.2
17	Shell Shared Services(Asia) B.V.	107.1
18	HSBC Electronic Data Processing(Philippines) Inc.	104.4
19	ePLDT Inc.	92.2
20	SPi CRM Inc.	77.8
21	ACS of the Philippines Inc.	77.6
22	VXI Global Holdings B.V.	72.6
23	Emerson Electric(Asia) Ltd.	71.8
24	StarTek International Ltd.	68.8
25	IBM Solutions Delivery Inc.	67.1
26	Sykes Marketing Services Inc.	61.3
27	SPi Technologies Inc.	58.4
28	Genpact Services LLC	56.7
29	Macquarie Offshore Services Pty. Ltd.	56.0
30	Thomson Reuters Corp. Pte. Ltd.	50.3
31	AIG Shared Services Corp. Philippines	52.4
32	Hinduja Global Solutions Ltd.	48.8
33	Lexmark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	43.5
34	ANZ Global Services and Operations(Manila) Inc.	41.5
35	Maersk Global Service Centers(Philippines) Ltd.	41.3
36	Manulife Data Services Inc.	38.8

출처: ABS-CBN 코트라(2014-06-25)

또한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2014년 기준 구리, 금, 은, 니켈 등의 금속광물 매장량이 79억 톤, 석회석, 대리석 등의 비금속 광물 매장량이 510억 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외국인의 광물자원 투자비율을 100%까지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었다. 또한 필리핀은 지열, 태양광, 바이오메스 등 여러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PPP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향후 유망한 진출 분야로 거론되고 있다.

## 6. 한국의 기업진출 전망 및 시사점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까지 2015년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액 누계는 7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입액의 경우 30억 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의 대필리핀 10대 주요 수출 품목은 주로 대기업 위주의 제품이지만, 중소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제품군을 찾아 수출을 다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가전/전자제품 및 부품, 자동차 부품, 화장품, 식품류 등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가능성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6년 1월 1일부로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율이 0~5%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ASEAN 시장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IT 인프라 및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인력을 기반으로 BPO 사업의 진출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이 투자를 한다면 전도가 유망한 상황이다.

한-ASEAN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2016년부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0~5%로 인하하였다.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 여지가 발생함에 따라 대필리핀 수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코트라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 우선분야(IPP) 선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우선시하는 외국인투자유치 분야를 매년 선정, 발표하여,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KOTRA 2015). 2015년 기준으로, IPP로 선정된 분야는,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와 부품, 선박 부품, 금형 기계, 화학약품, 구리선 등, 그리고 서비스업분야에서는 선박수리, 전기충전소, 산업폐기물 처리 등이 해당한다.

2014년 양국의 총 교역 규모는 2013년 대비 7.6% 증가한 134억 달러를 기록, 2013년 120억 달러 최초 돌파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은 100억 3,250만 달러로 7.0%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33억 3,124만 달러로 10.1% 성장하였다. 무역수지는 총 67억 1,25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1968년 이후 2015년 6월까지 우리 기업의 대필리핀 투자는 신규 법인설립(1,525개, 지점 포함) 기준으로는 7위를 차지하고, 투자금액(32억 8,230만 달러) 기준으로는 18위를 차지하였다. 2015년 상반기의 경우 신규 법인설립 16건, 투자금액은 5,549만 달러로, 투자금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2%의 증가세를 보였다.

〈표 5〉 필리핀 내 주요 한국 투자기업 목록

회사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합작비율	종업원수	진출시기
대덕필리핀	대덕GDS	제조업	전자기기	외투법인	약 1,000명	1996
삼성전자	삼성전자	유통업	가전기기	외투법인	약 200명	1996
삼성전기	삼성전기	제조업	전자기기	외투법인	약 3,000명	1997
선진필리핀	선진	제조업	동물사료	외투법인	약 70명	1997
대림필리핀	대림	건설업	건설	현지법인	약 100명	-
포스코	포스틸	제조업	철강제품	외투법인	약 200명	2008
외환은행	외환은행	금융업	금융	외투법인	약 20명	1981
한국전력	한국전력	발전업	발전	외투법인	약 300명	1995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조선업	조선	외투법인	약 2만명	2006
한화마닐라	한화	무역업	무역	외투법인	약 10명	1983
CJ GLS	CJ GLS	물류업	물류	외투법인	약 100명	2006
대상리코	대상	제조업	식품	합작법인	약 50명	2013

출처: 코트라(2014)

필리핀 수입시장 점유율 4위로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여, 필리핀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4년 기준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산 제품의 국가별 점유율은 4위를 기록하였다. 2010년 필리핀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액 점유율은 7.0%에서 2014년 7.8%까지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수입점유율이 2.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013년부터 최대수입국으로 부상했으며, 전통적으로 대필리핀 수출 강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점유율이 1/3로 하락하며 2014년 기준 4위인 한국과 점유율이 비슷해졌다. 2014년 기준 주요국 수입 점유율로, 중국은 15.02%, 미국은 8.72%, 일본은 8.05%, 한국은 7.82%를 나타내었다. 미국은 강점이었던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ASEAN에 밀리는 한편, 일본은 주력 분야인 전자제품에서 한국과 대만 등에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관세율 적용, 쿼터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보호주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지분참여가 40%로 제한되었으나 1991년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1996년 개정, RA7042) 제정을 통해 외국인 100% 직접투자가 이론적으로는 허용되고 있지만, 주요 업종에 대한 제한조치를 하고 있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필리핀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오랜 교역관계 및 외교 관계를 형성해 왔으나, 변화한 필리핀의 최근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정체된 이미지가 한인기업에는 여전히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필리핀의 BPO 산업을 위시로 한 지속적인 고도 경제 성장은 한국기업에게 새롭게 적응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필리핀의 최근 경제 성장과 국가적 필요에 가장 부합

하는 산업은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 및 IT 업계 기술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기업 중에 BPO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영어 교육 부문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한국만을 소비 고객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크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몇몇 한국기업인들은 중국인을 소비 시장으로 하여 영어 교육하는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영어 제공 서비스를 해야 하는 부문은 날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은 도로, 공항/항만, 에너지 등의 분야의 필리핀 국가 사업,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이 발주하는 개발 사업, 그리고 한국의 ODA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진출기회를 받고 있고, 실제 참여해 왔다. 필리핀의 전력, 수자원 개발, 도로, 항만 등은 한국 기업이 최근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예산은 보다 더 증가할 추세이다.

필리핀의 연평균 6~7% 성장이 지속될 경우 중소득국가로 진입함에 따라 인프라 중심의 지원을 축소하고 정책컨설팅 및 기술협력, 녹색성장 등의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2010-2014 필리핀의 중기국가개발 성과와 지역별 목표달성을 고려하여, 한국정부는 2016년 중 향후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2017년 차기 국가협력 전략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2020년 이후 중고소득 국가에 진입하는 경우 점차적으로 지원을 감소시키고 민간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지원방식을 안정화시켜 필리핀의 개발전략과 원조일치를 강화하고 필리핀과의 중장기 지원프로그램 협의를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점 지원 분야의 개별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관계부처통합 2012: 144)

기술적으로 본다면, 인프라 확충사업의 경우 유무상 통합의 국별 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중점지원 분야와 유망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패키지형 사업 수행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여, 유상자금 협력, 기술이전, 기술협력, 인프라 운영 및 관리,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보증, 보험 및 용자의 확충 등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ODA 자금은 물론 각종 기금 및 인프라 펀드를 활용하고, 개발협력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권율·김태운·이재호·김유미 2012)

한편, 기술적인 부문 외에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제 원칙이나 규정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정부 부문이나 민간 부문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조건이다. 한국은 경제적 효과에 방점을 두고 인프라 개발 지원을 추진해 온 결과, 필리핀 내에서 환경, 인권, 평등 등의 문제에 귀 기울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사회에서 강조하는 개발 효과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리핀의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국문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2. “필리핀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Philippines)” (www.odakorea.go.kr에서 다운로드)

권율·김태운·이재호·김유미. 2012.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2011 “필리핀 BPO 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2011년 6월호

### ○ 영문자료

Abara, A. C. and Y. Heo 2013. “Resilience and recovery: the Philippine IT-BPO Industry during the global crisi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6(2): 160-183.

BPAP 2011 Next wave cities 2010-2011. Annual Report on the top-10 next wave cities. Makati City, the Philippines

DOST-ICT Office, BPAP 2012. Philippines IT-BPO Investor primer. Retrived from <http://www.bpap.org/publications/research/investorprimer2012>.

Dun & Bradstreet 2016 “Country Insight Report: Philippines”

KOTRAM아닐라무역관 2015 “2016 필리핀 진출전략” news.kotra.or.kr (검색일 2016년 10월 22일)

Kleibert, J. M. 2014. “Strategic coupling in ‘next wave cities’: Local Institutional Actors and the Offshore Service Sector in the Philippines.”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35(2): 245-260.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2010 Global location trends annual report. IBM Corporation, Somers, NY.

World Bank,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12. Doing business 2012: doing business in a more transparent world.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Report, Washington.

World Economic Forum. 2012.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World Economic Forum, Geneva.

## VI. 2020년 현대화된 선진 공업 국가 건설을 꿈꾸는 베트남

###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안에서의 베트남

2015년 12월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가 출범하였다. 1967년 동남아시아 10개 국가의 연합으로 탄생한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지난 약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그 결과 아세안 GDP는 2015년 기준 세계 GDP의 약 3.5%(약 2조 6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세안 GDP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약 35.5%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태국 15.2%, 말레이시아 12.8%, 필리핀 12.2%, 싱가포르 12.0%, 베트남 8.1%, 그리고 미얀마 2.7%, 캄보디아 0.7%, 라오스 0.5%, 브루나이 0.5%의 순이다. 베트남의 GDP는 약 1,910억 달러(2015년) 수준이지만, 저개발 국가들(CLMV 국가들, 즉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33)</sup>

1986년 도이머이(Doi Moi)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대외개방에 나선 베트남은 1995년 아세안에 가입한 이후 역내 경제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아세안 선발 6개 회원국가들(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 베트남을 포함한 후발 4개 회원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하 CLMV)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경제 및 산업 영역에서 “작은 호랑이(a little tiger)”로 불리는 베트남은 아세안 내에서 중간제조업 경쟁국가군(Mid-Manufacturing Competitors)에 속하고 저임금의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하여 아세안 내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Quan Hoang Vuong, 2014).

아세안은 베트남이 경제적 성과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주요 동력(key impetus)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한 이후부터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베트남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수출입 실적은 1995년(US\$33억)부터 2015년(US\$421억)까지 해마다 평균 18.5%씩 성장해왔고, 그 결과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베트남의 대(對) 아세안 수출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US\$10억)부터 2015년(US\$183억)까지 연평균 8.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6년 현재, 아세안은 미국과 유럽 연합 다음으로 베트남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아세안으로 수출된 상품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주로 원유와 쌀이 아세안 시장으로 수출되었지만, 최근에는 휴대폰, 컴퓨터 및 전자 기기 부품, 철강, 기계류 및 장비, 신발 및 의류, 해산물, 커피, 그리고 고무와 같은 상품들이 수출

3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검색일: 2016.10.15.)

되고 있다. 아세안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수입은 1995년(US\$23억)에서 2015년(US\$238억)까지 연평균 10.2% 증가했다. 베트남에게 있어서 아세안은 중국과 한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상품 공급지이다.<sup>34)</sup>

2015년과 2016년은 향후 베트남의 경제 및 산업의 기회와 도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다. 2015년 8월 EU-베트남 FTA 타결 그리고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 등 다수의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 속에서의 베트남 무역 비중 그리고 AEC를 통한 역내 경제 통합의 가속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더욱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투자부문(FDI)의 증가는 베트남과 같은 새로운 잠재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기업들이 진출하며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코틀러 외, 2016). 특히, 한국은 최근 5년간 베트남 투자대상 국가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sup>35)</sup> 따라서 현 시점에서 베트남의 경제 및 산업 부문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우리 기업에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필립 코틀러의 '4C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베트남의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 경제 및 산업 정책의 변화, 인구 및 사회학적인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치·외교적 변화에 있어서 본 연구는 베트남의 지도부 인사 및 정치국 위원의 성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당의 영도 하에 매 5년마다 공산당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주요 정책 노선을 결정하고 국정을 이끌 주요 지도부와 인사들을 선출한다. 특히, 올 해 2016년에는 제 12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5년간(2016-2020) 국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 인사를 선출하였다. 따라서 베트남의 새로운 인사들과 그들의 국정운영 및 외교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제 및 산업 정책의 변화는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이하 SEDS)'과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이하 SEDP)'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베트남 공산당은 매 10년 마다 SEDS를, 그리고 매 5년마다 SEDP를 수립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올 해 2016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략 가운데 지난 5년 간의 계획 및 목표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5년 간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시기적 당면성에 직면한 시점이다. 또한, 다가올 2021-2030 SEDS 수립을 위한 준비기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AEC 출범에 맞추어 베트남이 당면한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 구성된 베트남 공산당 및 정부가 어떠한 경제 및 산업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베트남의 인구 및 사회학적인 변화를 관찰해보고자 한다. 인구학적 특성은 산업 노동력, 소비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인구 구성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지형적으로 긴 'S'자 모양의 형태로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고, 역사적으로

34) 자료: Customs Trade Statistics,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검색일: 2016.11.19.)

35) 자료: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cdKey=101084&itemIdx=16913&categoryType=003&categoryIdx=72>(검색일:2016.12.16.)



남북 분단의 경험이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남부보다 북부 지역이 유교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았다. 이러한 지형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두 지역은 식민화, 공산화, 그리고 근대화의 과정에서도 서로 이질적인 경험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정치적 수도인 북부 하노이와 경제적 수도인 남부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은 베트남인들의 소비 성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므로 베트남을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베트남 시장의 역동성을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부문으로 갈음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 특성

### (1) 베트남의 최고지도부 구성 및 변화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도이 머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정치는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고 정부와 국회의 활동을 지도하는 권력의 핵심이다. 공산당의 최고영도기관은 전당대회이다. 베트남 공산당은 매 5년마다 전당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 임기의 의결 실현 결과를 평가하고, 차기 당을 이끌어갈 주요 인사를 선출하며, 차기의 당의 노선 및 정책을 결정한다. 따라서 공산당 전당대회의 시점을 기준으로 최고지도부 구성 및 변화의 양상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래의 <표 1> 참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은 향후 베트남의 경제 개혁 속도와 방향 변화 그리고 정치외교 노선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표 1> 베트남 최고지도부 구성(1991-2020)

시기	최고지도부 구성								
	공산당 서기장			국가 주석(대통령)			총리(수상)		
	이름	출신	성향	이름	출신	성향	이름	출신	성향
1991-1997	도므어이 (Do Muoi)	북부	중도	레득아인 (Le Duc Anh)	중부	보수	보반끼엣 (Vo Van Kiet)	남부	개혁
1997-2001	레카피에우 (Le Ka Phieu)	북부	보수	쩨득르엉 (Tran Duc Luong)	중부	개혁	판반카이 (Phan Ban Khai)	남부	개혁

2001-2005	농득마인 (Nong Duc Manh)	북부	중도 개혁	쩨득르엉 (Tran Duc Luong)	중부	개혁	판반카이 (Phan Ban Khai)	남부	개혁
2006-2010	농득마인 (Nong Duc Manh)	북부	중도 개혁	응웬민찌엣 (Nguyen Minh Triet)	남부	개혁	응웬떤중 (Nguyen Tan Dung)	남부	개혁
2011-2015	응웬푸쥁 (Nguyen Phu Trong)	북부	중도 보수	쯔엥떤상 (Truong Tan Sang)	남부	개혁	응웬떤중 (Nguyen Tan Dung)	남부	개혁
2016-2020	응웬푸쥁 (Nguyen Phu Trong)	북부	중도 보수	쩨다이꽁 (Tran Dai Quang)	북부	중도 보수	응웬쑤언푹 (Nguyen Xuan Phuc)	중부	개혁 → 온건

출처: 베트남공산당(Dang Cong San Viet Nam) 홈페이지<sup>36)</sup>

최근의 정치적 변화를 살펴보면, 2011-2015년과 2016-2020년의 가장 큰 변화는 보수파의 승리로 볼 수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베트남 내의 정치적 갈등을 공산당과 행정부 사이의 경쟁 구도로 주목한 바 있다. 2011-2015년 시기에 응웬푸쥁 서기장과 응웬떤중 총리는 각각 공산당과 행정부의 핵심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 응웬푸쥁과 응웬떤중은 극단적으로 반대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응웬푸쥁 서기장은 정통 관료출신으로서 원칙주의자이고, 응웬떤중 총리는 자본주의자이다. 2016년 초 제 12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당시 총리직을 맡고 있던 응웬떤중이 공산당 서기장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결국 응웬푸쥁 공산당 서기장의 연임으로 확정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이끌어갈 최고지도부는 응웬푸쥁(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 쩨다이꽁(Tran Dai Quang) 국가 주석, 그리고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로 구성되었다. 응웬푸쥁 공산당 서기장은 1999년 제8기 4차 중앙위에서 처음으로 정치국 위원이 된 인물로, 당시 하노이시 당위원회 부비서였으며, 이후 하노이시 당위원회 비서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당 이론지 『답찌꽁싼』(Tap Chi Cong San: 공산잡지)의 편집장도 맡은 바 있었다. 정치적 성향은 중도보수적 인물로 평가된다(이한우, 2011). 따라서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고 보수적인 의제들을 고수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국가 주석으로 내정된 쩨다이꽁은 공안부 장관 출신이자 현역 군인으로서 중도보수파로 분류되고 업무 추진력이 강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총리로 내정된 응웬쑤언푹은 부총리 출신으로서 응웬떤중 전(前) 총리와 함께 개혁적인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개혁그룹에서 이탈하여 온건파로 분류되고 있다(정재완, 2016).

출신지역 및 성향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15년까지는 중부 및 남부 출신의 개혁파가 우세를 보였으나 2016-2020년에는 북부와 중부 출신의 보수 혹은 온건파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최고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최고지도부의 성향은 곧 시기별 경제 및 외교 정책의

36) <http://dangcongsan.vn/tu-lieu-van-kien/lanh-dao-dang-nha-nuoc/tong-bi-thu.html>, 검색일: 2016.11.16.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예를 들면, 남부 출신의 개혁파 인물인 판반카이 총리는 2005년에 베트남 지도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두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강화시켰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의 WTO 가입(2006년)을 지지하였고 이후 베트남은 비약적인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재정 시장과 GDP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었으며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Manyin, 2013).

하지만, 최근 베트남의 급속한 성장률은 곧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문제에 굴복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자본의 요소부존도(capital endowments)에 심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최근 베트남 공산당은 이러한 책임이 개혁 성향의 인물들에게 있다고 비판하였다(Quan Hoang Vuong, 2014). 2016-2020년 최고지도부 가운데 응웬편중 총리 등 남부 출신의 개혁적 인물들이 탈락한 이유는 성급한 개혁개방과 국영기업 개혁 부진, 그리고 부정 부패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베트남 공산당은 양적 성장을 위한 무분별한 외국인투자유치로 인하여 베트남 자국 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은 과거에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미국 및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도 외교 및 경제적으로 원만한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실용주의를 추구한다. 따라서 중도보수 및 온건파로 새롭게 구성된 2016-2020년 최고지도부는 베트남의 정치외교 및 경제사회 정책의 방향을 개혁보다는 ‘안정’에 치중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노선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 (2) 제 12기(2016-2020년)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원

베트남 공산당 중앙당 조직 가운데 정치국은 당의 주장, 정책, 조직, 인사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권력을 보유하며, 경제 건설과 관리, 안보유지, 외교활동 등 중요정책을 결정한다. 제12기 정치국원은 11기 정치국원 16명 가운데 7명이 유임되고, 12명이 새로 선출되어 인사변동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유는 기존의 정치국원들이 대부분 은퇴(65세까지 임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12기 정치국원에는 군부 출신이 4명 포함되었고, 출신 지역별로는 북부, 중부, 남부가 각각 13명, 2명, 4명으로 과거에 비해 북부 출신의 보수 성향 인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임된 12명의 정치국원 가운데 남부 2명과 중부 1명을 제외하면 9명이 북부 출신이다(아래의 <표 2> 참고). 따라서 응웬푸쑹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북부 출신의 정치국원들이 당 내부의 결속력을 보다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응웬푸쑹 서기장의 계열에 속하는 주요 보수 인물로는 단테후인 중앙서기국 상임위원(아래의 <표 2>에서 2번), 푹티푹 정치국원 부의장(10번), 그리고 브영단후에 부총리(11번)이다.

〈표 2〉 2016~2020 제12기 정치국원 명단(19명)

(베트남 공산당 홈페이지 게재순)

	이름	성별	생년	출신지역	전(前)직위 2011-2015	현(現)직위 2016-2020	비고
1	응웬푸종 (Nguyen Phu Trong)	남	1944	북부, 하노이(Ha Noi)	공산당 서기장	공산당 서기장	유임
2	딘테후인 (Dinh The Huynh)	남	1953	북부, 남딘(Nam Dinh)	중앙선교위원장	중앙서기국 상임위원	유임
3	쩨다이꽝 (Tran Dai Quang)	남	1956	북부, 닌빈(Ninh Binh)	공안부 장관	국가주석	유임
4	응웬티킴응언 (Nguyen Thi Kim Ngan)	여	1954	남부, 벤째(Ben Tre)	국회 부의장	국회의장	유임
5	응오쑤언릭 (Ngo Xuan Lich)	남	1954	북부, 하남(Ha Nam)	정치총국 국장	국방부 장관	신임
6	또람 (To Lam)	남	1957	북부, 흥옌(Hung Yen)	공안부 차관	공안부 장관	신임
7	응웬쑤언푹 (Nguyen Xuan Phuc)	남	1954	중부, 꽝남(Quang Nam)	부총리	총리	유임
8	응웬티엔년 (Nguyen Thien Nhan)	남	1953	남부, 짜빈(Tra Vinh)	조국전선 중앙위원장	조국전선 중앙위원장	유임
9	팜민쩨 (Pham Minh Trinh)	남	1958	북부, 타인호아(Thanh Hoa)	중앙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조직위원회 위원장	신임
10	푹티푹 (Tong Thi Phong)	여	1954	북부, 선라(Son La)	국회 부의장	정치국원 부의장	유임
11	브엉딘후에 (Vuong Dinh Hue)	남	1957	북부, 응에안(Nghe An)	중앙경제위원회 위원장	부총리	신임
12	쩨꾸옥브엉 (Tran Quoc Vuong)	남	1953	북부, 타이빈(Thai Binh)	당중앙 사무국 국장	중앙감찰위원회 위원장	신임
13	팜빈민 (Pham Binh Minh)	남	1959	북부, 남딘(Nam Dinh)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신임
14	쯔엉티마이 (Truong Thi Mai)	여	1958	중부, 꽝빈(Quang Binh)	국회 사회문제 위원회 위원장	중앙인민 운동위원회 위원장	신임
15	쯔엉호아빈 (Truong Hoa Binh)	남	1955	남부, 롱안(Long An)	최고인민재판소 장관	정부상임부총리	신임
16	응웬반빈 (Nguyen Van Binh)	남	1961	북부, 푸토(Phu Tho)	베트남 국가은행총재	중앙경제위원회 위원장	신임
17	보반트엉 (Vo Van Thuong)	남	1970	남부, 빈롱(Vinh Long)	호치민시 상임부서기	중앙선교위원회 위원장	신임
18	딘라탕 (Dinh La Thang)	남	1960	북부, 남딘(Nam Dinh)	교통 수송부 장관	호치민시 집행위원회서기	신임
19	호앙쑹하이 (Hoang Trung Hai)	남	1959	북부, 타이빈(Thai Binh)	부총리	하노이시 집행위원회서기	신임

출처: 베트남 공산당 홈페이지<sup>37)</sup>

37) <http://www.dangcongsan.vn/tu-lieu-van-kien/ban-chap-hanh-trung-uong/bo-chinh-tri/kh-0a-xii.html>, 검색일: 2016.11.16.

### 3. 산업 및 경제 정책의 변화

#### (1) 베트남의 경제성장 추이

1986년 도이머이 개혁개방 정책 이후 베트남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특정 시기(1998-99년과 2008-09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었다(아래의 <표 3>, <그림 1> 참고). 베트남은 1986년 이후부터 1991년까지 6% 이하의 GDP 증가율을 보여주었지만,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8~10%의 고성장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1997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하여 베트남의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 결과 1998년과 99년 GDP 증가율은 각각 5.8%와 4.8%를 기록하였다.

이후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2000년에는 6.8%로 다시 상승하였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7% 이상의 GDP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성장 시기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5%대의 하락세로 돌아섰고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5-6%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12년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 해마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은 거시경제의 영향 하에 경제성장의 질곡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평가받으며 아세안 10개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웃퍼포머(outperformer, 성장우위국)로서 주목받고 있다.

<표 3> 1986-2015 베트남 GDP 증가율

연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	2.8	3.6	6.0	4.7	5.1	5.8	8.7	8.1	8.8	9.5	9.3	8.2	5.8	4.8	6.8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6.9	7.1	7.3	7.8	7.6	7.0	7.1	5.7	5.4	6.4	6.2	5.2	5.4	6.0	6.7

출처: 1986-2000 - 베트남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01-2015 - World Bank Vietnam(검색일: 2016.10.15.)

<그림 1> 1986-2015 베트남 GDP 증가율(%)



출처: 위의 표 3의 자료를 기준으로 필자 작성

그렇다면, 베트남의 경제성장 추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선, 각 산업부문별로 성장률이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아래의 <표 4> 참고). 먼저, 베트남의 농림수산업 분야는 1989년과 1992년 그리고 1999년에 각각 7.0%와 6.9% 그리고 5.2%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 3~4%를 유지하며 큰 성장을 기록하지 않았다. 반면, 공업 및 건설 부문의 성장은 앞서 살펴보았던 베트남 GDP 증가율이 높았던 시기, 즉 1992년-1997년과 2000년-2007년에 각각 약 12-14%와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서비스 부문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1988년부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2000년대 이후 점차 회복하면서 약 6~7%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문별 성장률을 종합해보면,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공업 및 건설 부문에서의 성장이 베트남의 경제적 성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 산업부문별 성장률

연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농림수산업	3.0	-1.1	3.7	7.0	1.0	2.2	6.9	3.8	3.4	4.8	4.4	4.3	3.5	5.2	4.6
공업/건설	10.9	8.5	5.0	-2.6	2.3	7.7	12.8	12.6	13.4	12.6	14.5	12.6	8.3	7.7	10.1
서비스	-2.3	4.6	8.8	7.9	10.2	7.4	7.6	8.6	9.6	9.8	8.8	7.1	5.1	2.3	5.3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농림수산업	3.0	4.2	3.6	4.4	4.0	3.7	3.8	4.7	1.8	3.3	4.0	2.7	2.6		
공업/건설	10.4	9.5	10.5	10.2	10.7	10.4	10.2	6.0	5.5	7.2	6.7	5.8	5.4		
서비스	6.1	6.5	6.5	7.3	8.5	8.3	8.9	7.4	6.6	7.2	6.8	5.9	6.6		

출처: GSO(2004: 1106); GSO(2011: 131); GSO(2014:147); 이한우(2016: 61) 재인용  
 주: 1986-2009년간은 1994년 가격 기준, 2010-2013년간은 2010년 가격 기준.

그렇다면, 소유부문별 연평균 성장률은 어떠할까. 베트남은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국유부문, 비국유부문, 그리고 외국인투자부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래의 <표 5> 참고). 베트남의 소유부문별 연평균 성장률을 앞서 살펴 보았던 고성장 시기(1992-97년, 2000-07년)로 구분하여 결과를 확인해보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부문은 바로 외국인투자부문이다. 1986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투자부문은 세 부문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과 비교해볼 때 약 2.5배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성장 시기에 해당하는 1992년-1997년과 2000년-2007년의 외국인투자부문은 각각 24.35%와 11.05%를 차지하며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소유부문별 연평균 성장률(%)

기간	1986-91	1992-97	1998-99	2000-07	2008-09	2010-13	86-2013
경제성장률	4.67	8.77	5.30	7.20	5.55	5.80	6.54
국유부문	2.73	10.15	4.06	7.14	4.18	4.91	6.25
비국유부문	5.01	6.31	4.00	7.22	7.00	6.23	6.26
외국인투자부문	0.00	24.35	18.33	11.05	6.33	6.63	15.88

출처: Nguyen Cao Duc(2015: 11); 이한우(2016:73) 재인용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정리해보면,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개혁개방 정책을 발표한 이후 1차 고성장 시기(1992-1997)와 2차 고성장 시기(2000-2007)를 거치며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베트남의 고성장은 공업생산량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외국인투자부문의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Dang and Pheng, 2015).

## (2)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

앞서 살펴본 베트남 경제성장의 추이와 그 맥락은 베트남의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에 따른 결과이다. 베트남은 매 10년마다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성과를 검토 및 평가하면서 향후 5년의 계획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1991-2000 그리고 2001-2010 SEDS를 통해 베트남은 “저소득국, 중앙계획화된, 그리고 농업 기반의 경제 구조”로부터 “중저소득국, 급속히 성장하는, 그리고 지역(regional) 및 세계(global) 시장 기반의 경제 구조”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2011-2020 SEDS’의 기본적인 목표는 2020년까지 “현대화된 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 및 사회적 안정, 물질적으로 개선된 생활수준, 그리고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선진공업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GDP 성장률 연간 7~8% 유지,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달러 달성, 도시화 비율 45%, 그리고 GDP 가운데 공업 및 서비스 비중 85%를 달성하는 것이다.<sup>38)</sup>

## (3)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

베트남 공산당은 2016년 초에 실시한 제12차 전당대회에서 1986년 도이머이 추진 이후 30년 그리고 2011-2015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 동안(2016-2020)의 계획을

38) 자료: 공산당 잡지(제11차 공산당대회 의결 정신에 따른 2011-2020 베트남 경제 분야 발전 해법 [Giải pháp phát triển bền vững nền kinh tế Việt Nam giai đoạn 2011 - 2020 theo tinh thần Nghị quyết Đại hội XI của Đảng], <http://www.tapchiconsan.org.vn/Home/Nghiencuu-Traodoi/2012/16347/Giai-phap-phat-trien-ben-vung-nen-kinh-te-Viet-Nam-giai.aspx>, 검색일: 2016.11.1.)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응웬쑤언푹 총리는 2016년 3월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16-2020 SEDP’는 베트남 신정부의 경제 발전 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거시경제적 지표로 지난 5년간(2011-2015) 성과를 검토해보면, 베트남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5.9%를 기록하였다(위의 <표 3> 참고). 이는 베트남이 목표로 세웠던 7~8%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베트남은 경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는 지난 5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2016-2020 SEDP’의 주요 목표는 ① 거시 경제 안정화 및 경제성장률 제고 ② 경제구조 조정 및 성장 모델 변화를 통한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③ 인민의 안전, 복지, 삶의 질 개선 ④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 보호 ⑤ 국가안전 보장 ⑥ 외교업무 및 국제사회로의 통합 강화 ⑦ 국가 보호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⑧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 및 선진화된 공업국으로의 발전 등이다.

‘2016-2020 SEDP’의 주요 내용은 최근 경제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성장의 질적인 개선과 산업 고도화 및 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 수출 확대 및 교역 촉진, 도소매 유통망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강화, 농업 부문 고도화 등에 힘쓰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주택 건설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개선할 것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경영 및 인프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면(아래의 <표 6> 참고), 경제 부문에서 향후 5년간 GDP 성장률의 목표는 6.5-7.0%이다. 2020년까지 1인당 GDP는 3,200~3,500달러, GDP 대비 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85%, 총 GDP 대비 사회 투자 비율은 32~34%, 개발 및 투자는 GDP 대비 32~34%를 목표로 하였다.

이 가운데 GDP 대비 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높여 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공업 부문 육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 계획으로 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85%까지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GDP 중 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약 73%(제조업 및 건설 부문이 약 33%, 서비스 부문이 약 4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공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은 약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도 제조업 및 건설 부문의 증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6-2020 SEDP에는 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 및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법인세 감면 혹은 세제 혜택을 통해 FDI 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및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부문에서 베트남은 경제 기반의 내부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 및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노동생산성은 5%, 농업 부문 노동자 비율은 총 노동자 수 대비



40%, 직업 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은 총 노동자수 대비 65~70%, 도심 실업률 4% 이하, 2020년 도시화 비율은 38~40%, 빈곤가정 비율은 연간 1~1.5%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직업 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 65~70%(2015년 기준 51.6%<sup>39)</sup>)는 기술 양성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도시화 비율 38~40%(2015년 기준 35.7%<sup>40)</sup>)는 인프라 개선 및 건설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및 법 체계 정비, 그리고 베트남 북부와 남부 간의 고속도로, 철도 그리고 상수도 등 인프라 건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EC로 인한 운송 시스템의 필요에 따라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신지도부 체제는 지난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탄력을 받아 베트남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2016-2020 SEDP’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와 수출 그리고 진출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경제	연평균 GDP 성장률	6.5~7.0%
	2020년 1인당 GDP	US\$3,200~3,500
	GDP 대비 공업 및 서비스 부문 비중	85%
	총 GDP 대비 사회 투자 비율	32~34%
	개발 및 투자	GDP 대비 32~34%
	빈곤가정 비율	연간 1~1.5% 감소
	2020년 도시화 비율	38~40%
사회	연간 노동생산성	5%
	농업 부문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 수 대비 40%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 수 대비 65~70%
	도심 실업률	4% 이하

출처: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의결(No.142/2016/QH13)

한편, 응웬푸쑹 당서기장은 재임 인사말에서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5년 전체 167개국 가운데 112위를 차지하여 경쟁국인 인도네시아(88위)와 필리

39)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6b, 검색일: 2016.12.15.)

40) 자료: Vietstock(<http://vietstock.vn/2016/01/nam-2016-ty-le-do-thi-hoa-phan-dau-dat-368-763-454322.htm>, 검색일: 2016.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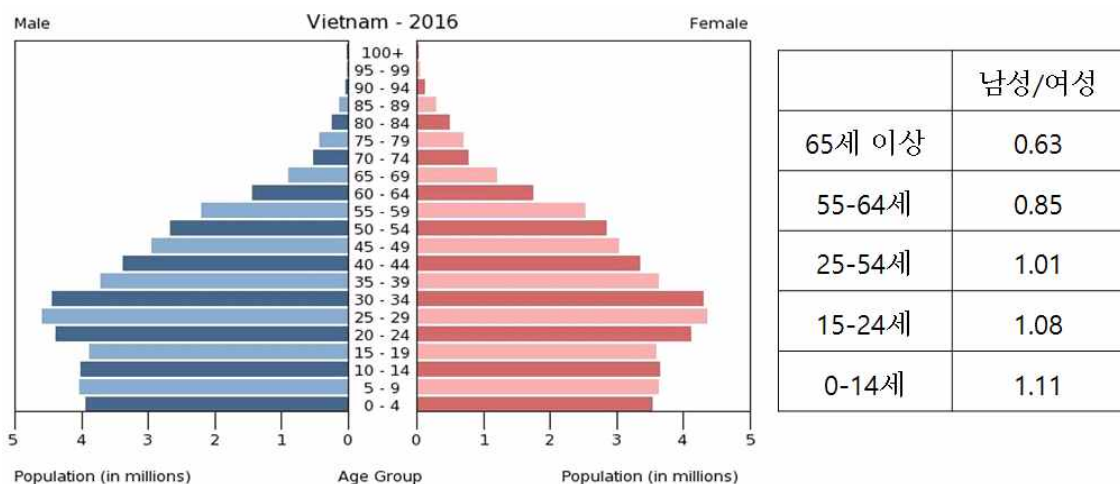
핀(95위) 등에 비해서도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 7). 최고지도부에 해당하는 쩌다이짱 국가 주석과 응웬쑤언푹 정부 수상이 각각 공안 부 장관과 부패척결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강화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정재완, 2016).

##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베트남 인구는 약 9,200만명으로 세계 14위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이다.<sup>41)</sup>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 및 소비시장으로서 베트남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국 CIA에서 발간하는 World Fact Book 2016년 자료에 따르면(아래의 <그림 2>, <표 7> 참고), 베트남 전체 인구 가운데 0세부터 14세까지는 23.84%이고, 65세 이상은 6.01%,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약 70.15%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0세부터 54세까지는 여성 대비 남성이 1.00 이상으로 남성이 더 많은 반면에 55세 이상은 1.00 이하로 여성이 더 많다. 따라서 베트남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많고 그 중에서도 젊은 남성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베트남 인구의 남녀 비율



자료: CIA World Fact Book, Vietnam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vm.html>, 검색일: 2016.10.22.)

41) 자료: 베트남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774](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774), 검색일: 2016.10.25.)

〈표 7〉 베트남 인구의 연령별 구성

연령 구간	0-14세	15-24세	25-54세	55-64세	65세 이상	총계
비율(%)	23.84	16.69	45.22	8.24	6.01	100.00
		70.15				

자료: CIA World Fact Book, Vietnam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vm.html>, 검색일: 2016.10.22.)

## (2) 베트남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소비문화: 북부와 남부의 비교

베트남은 북부 홍강 델타(Hong River Delta)와 남부 메콩강 델타(Mekong River Delta)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생태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북부와 남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회생활의 조직 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홍강 델타와 남부 메콩강 델타는 각각 북부와 남부의 주요 경작지이자 생활 중심지로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곳이다. 그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이 두 지역을 주목해왔고, 도이머이 개혁개방 이후 두 델타 지역에 거주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각각 북부 하노이와 남부 호치민시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해당 지방 사람들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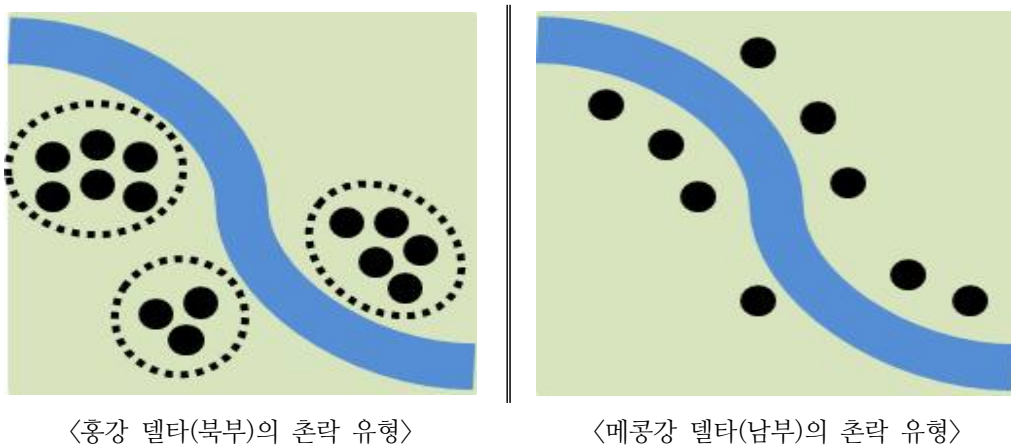
북부 홍강 델타 지역은 고저에 따른 차이가 심해 땅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배수 및 토양의 비옥도에 대한 편차가 크다. 이러한 환경 탓에 대규모 단위의 인구가 고지대의 비옥한 토지에 집중되면서 자연스레 핵 모양의 응집된 촌락 유형이 형성되었다. 또한, 산적 등의 외부 침입자들의 습격에 대비하여 나무 울타리로 보호하는 등 촌락 단위로 대처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했다(하순, 1994; 2000). 게다가, 척박한 환경에서의 노동 집약적인 쌀농사는 고유한 협동 방식과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켜 나가게 만들었다(Geertz, 1969, 1973).

이처럼 북부와 같은 촌락사회는 자연스럽게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지향하게 되고, 나아가 촌락 개별 단위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자치 기능을 발달시키게 된다. 따라서 북부 홍강 델타의 촌락은 친족, 이웃과의 친분관계, 마을 내에서의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상부상조하면서 폐쇄적인 촌락사회 내부에서 자율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그 기능이 유지되었다. 북부에 활발하게 조직되어 있는 상부상조를 위한 경조회, 계모임, 동창회 등의 비공식 친목단체들의 기원 역시 이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하순, 2000: 91).

한편, 북부와 달리 남부는 자연적으로 수량(水量)이 조절되는 우호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쌀 농업이 발달하였다. 메콩강 델타의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과 조건은 상호 협력을 위한 대규모의 밀집된 촌락 유형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남부 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토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생업에 종

사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주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핵가족 단위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새로운 농토를 개척하는 방식이 생존과 적응에 보다 유리했다(하순, 2000: 88). 북부와 같은 촌락 단위의 자발적 단체들이 남부 지역에 조직화되지 못한 이유는 지리적 환경에 따른 분산된 정착 유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Hickey, 1958; Do Thai Dong, 1991; 하순, 2000 재인용). 이상과 같은 남북부의 촌락 형태는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해볼 수 있다.

<그림 3> 홍강 델타(북부)와 메콩강 델타(남부)의 촌락 유형<sup>42)</sup>



<홍강 델타(북부)의 촌락 유형>

<메콩강 델타(남부)의 촌락 유형>

자료: 백용훈, 2011

남북부의 전통사회에서 발견되는 지리적 환경, 촌락 형태, 그리고 이에 따라 조직된 서로 다른 사회생활의 방식은 이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흡수하면서 더욱 강화된다. 북부의 경우에는 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북부는 남부에 비해 유교가 역사적으로 큰 지배력을 행사해왔다(김종욱, 1988).<sup>43)</sup> 그 이유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유교가 가지고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레(Le, 黎, 1428~1788) 왕조는 주자학을 국가 운영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였는데, 당시 대민 통제수단으로서 향약을 발전시켰다(한도현, 2003: 294, 311~2). 향약이 주로 북중부 지역, 그 가운데서도 홍강 델타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sup>44)</sup>

향약은 지역 사회의 자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한도현(2003: 315)은 향약이 강조했던 행위 규범들이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결속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42) 큰 점으로 표시한 것은 개별가구이고, 굵은 실선은 강을 나타낸 것이며, 점선은 대나무 울타리, 즉 마을(촌락) 단위의 경계를 의미한다.

43) 베트남의 종교는 전국적으로 민간 신앙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북부는 불교와 유교가 지배적인 반면, 남부는 천주교가 대중적이다. 그리고 불교의 변종인 “호아하오”(Hoa Hao, 和好)교와 유교·불교·도교 등의 혼합종교로서 신흥 종교인 “까오다이”(Cao Dai, 高台)교가 남부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구엔 귀흥, 1980).

44) 한농연구원에 남아 있는 한문본 및 쓰놈본 향약은 북부 산악지대 41건, 북부 중간지대 64건, 홍강 델타 지역 497건, 중부지방 44건 등이다(한도현, 2003).

고 해석한다. 이렇게 볼 때 유교는 북부 사회의 친족, 촌락 공동체의 결속적 연결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교의 효 덕목과 조상숭배는 일차적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조상숭배라는 신념 체계는 친족 공동체 결속의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베트남인의 조상숭배 및 의례가 세대 간의 결속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친족 집단의 유대를 확대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최호림, 2005).

남부의 경우 역시 전통사회의 분산된 촌락형태와 개방된 사회적 관계는 이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더욱 심화된다. 특히 남부의 민족적 및 종족적 다양성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북부는 역사적으로 인구의 유출입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에 남부는 다양한 이민족들이 수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이주해 들어오는데 이 때문에 종족적 다양성이 높은 특성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중부 이남의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특징이 유지된다(유인선, 1999).

남부의 촌락에서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것은 향약의 존재 여부와도 관련성이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유교의 영향력으로 평가되는 향약의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하순, 2000: 91; 한도현, 2003). 15세기 이전부터 북부의 촌락에 존재했던 향약은 18세기 말까지 남부 촌락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남부지역에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는데, 내용에 있어서 북부의 향약과 달리 촌락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유인선, 1999: 375; 하순, 2000 재인용). 이러한 배경으로는 지리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는데, 세금을 피하거나 좋은 토지를 찾아서 항시 새로운 곳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남부의 촌락민들에게는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향약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하순, 2000).

한편, 북부의 공동체적인 특성은 딘(Dinh, 亭)<sup>45</sup>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북부 촌락에서 딘은 사회 및 종교생활을 위한 중심적인 기능을 하며 촌락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촌락지도자들이며 이때 보통사람들도 음식을 가져다 향불을 피우고 절을 한다. 제사 후 열리는 잔치에는 촌락지도자들과 잔치를 위해 기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촌락민 전체가 참여한다(하순, 2000). 딘의 이러한 기능은 앞서 북부 정보제공자들의 구술 내용에서도 확인했듯이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남부 촌락에서는 딘 제사와 기타 신들에 대한 제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기는 하지만 북부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특히 남부의 딘에서 촌락 보호신에 대한 제사는 음력으로 1년에 4번 그것도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지내지며 북부에서처럼 촌락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Cummings, 1977: 88; 하순, 2000 재인용). 비록 각 가정의 세대주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지만 참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사를 지내기 시작할 때부터 마

45) 딘(Dinh, 亭)은 촌락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기능을 한다. 딘은 마을 내에서 보호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며 마을공동체의 중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회의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을의 생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전경수(1999: 72)의 연구에 따르면, 북부는 전통을 복구하려는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제사를 지내는 절차와 내용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다.

칠 때까지 상호 교제가 매우 미약하다(하순, 2000).

베트남 남북부에서 관찰되는 가족 및 친족체계는 두 지역의 차이를 더욱 확실히 보여준다. 북부 홍강 델타에서 가족 및 친족체계는 부계종족의 원칙과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 제도를 따른다. 이에 반해 남부의 메콩강 델타는 북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부에서는 대규모의 노동력이 없어도 벼농사가 가능했고, 풍부한 토지여건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옮겨 다니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개별 핵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부에서는 집안에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모두 분가를 시켰고 이에 따라 양변 친족 사회 및 말자상속제도를 따랐다. 이러한 관습은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자연조건에 따른 결과로 생겨난 남부 지역의 독자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하순, 2000).

생태적 환경에 따라 농업의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형성된 베트남 북부의 친족 및 마을 공동체는 이후 유교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친족 중심적인 에토스에 의해 강화되며 강한 연대로 구성된 폐쇄적인 형태의 연결망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이에 반해 베트남 남부는 가족, 친족 등 1차 집단의 협소한 범위를 넘어서는 개방적인 형태의 약한 연대가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로 자리 잡았다(왕혜숙 외, 2011). 이상과 같은 서로 다른 전통과 문화적인 특징은 베트남 북부와 남부가 경험해온 오랜 역사적 과정의 유산이다(아래의 <표 8> 참고).

<표 8>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지리·사회·문화적 특성

	북부(홍강 델타)	남부(메콩강 델타)
지리적 환경	배수 및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양호한 토지에 대규모 단위의 인구가 집중	풍부한 농경지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이동 및 경작이 가능
주거형태	대가족, 친족, 마을 공동체 중심의 집단적 주거형태	개인 또는 개별 핵가족 중심의 분산적 주거형태, 집단적 거주 희박
문화/종교	유교, 불교	천주교, 호아하오교, 까오다이교
전통적 자치조직	향약, 딘 발달	향약, 딘 미발달
가족 및 친족 체계	부계종족의 원칙과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제도	양변 친족 사회, 말자우대 불균등 상속제도
사회적 관계 (관혜(關係), 띠낌(情感))	친족, 촌락 공동체 중심의 폐쇄적인 형태의 강한 연결망	1차 집단의 협소한 범위를 넘어선 개방적인 형태의 약한 연결망

출처: Hickey, 1964; Cummings, 1977; Do Thai Dong, 1991; 하순, 1994, 1997, 2000; 유인선, 1999; 최병욱, 2000; 한도현, 2000, 2003; 이한우, 2002, 2007; 김종욱, 2003; 최호림, 2005; 백용훈, 2011; 왕혜숙 외 2011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북부와 남부의 서로 다른 사회 및 문화적 특성은 현재 베트남 남북부의 소비트렌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아래의 <표 9> 참고). 북부 하노이시와 남부 호치민시 소비자들의 지출 성향과 외식비를 비교 분석한 자료(Kotra 해외시장뉴스, 2013)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는 베트남 내 모든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 두 지역 별로 상품 분야 및 에이전트를 달리 하여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노이 소비자들은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반면에 값이 비싼 오토바이, 휴대전화, 핸드백, 의류, 신발, 화장품과 같은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북부 하노이 사람들은 남부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프리미엄 제품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구매력 또한 높은 편이다. 반면, 호치민시 소비자들은 충동구매에 익숙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즉, 남부 호치민시 사람들은 북부 하노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즉흥적이고 유행에 민감한 경향이 강하다. 2012년 TNS Vietnam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리미엄 제품 구매자의 36%가 하노이 거주 소비자들이었고, 19%만이 호치민시 거주 소비자들이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3).

이상과 같이 북부와 남부 사람들의 구매 성향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앞서 살펴본 북부와 남부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의 유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부는 지리적 환경과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근엄하며 거주하는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폐쇄적인 형태의 연결망을 발달시켜왔다. 따라서 북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상적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즉 평판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북부 하노이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에 신중하고 구매에 앞서 가족, 이웃, 친구, 동료 등과 집단주의적으로 많은 정보를 탐색하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개척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따라가는 보수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남부는 풍부한 농경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웠고 주거 형태 역시 분산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이고 개방적인 연결망을 발달시켜왔다. 따라서 남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잘 받아들이며 즉흥적인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특정 브랜드만을 선호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호기심이 많고 관심도가 높다.

〈표 9〉 사회문화적 특성과 소비문화

	북부 하노이시	남부 호치민시
문화적 특성	보수적, 근엄함 인내심(자존심) 강함	실리적, 자유분방함 인내심(자존심) 약함
사회적 관계	공동체적, 폐쇄적	개인적, 개방적
소비문화	과시욕 강함	과시욕 약함
소비성향	저축, 근검 절약, 프리미엄 제품 선호	즉흥적, 유행 및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
	식료품 및 외식비 지출에 엄격함	식료품 및 외식비 지출 비중이 높음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2013)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sup>46)</sup>

46)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

## 5. 투자 및 유망 업종

### (1) 베트남 유망 100대 기업 분석

각 국가의 100대 기업은 그 나라의 산업 및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6a). 따라서 Vietnam Report가 선정한 100대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산업구조 및 현황과 투자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 주요 산업 부문 등을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표 10〉 베트남 유망 100대 기업 업종별 분류

구분	주력 업종	기업수	
공공 인프라 부문	석유·가스	14	33
	전기·전력	11	
	통신	5	
	항공	1	
	항공연료	1	
	건설	1	
제조, 가공업	철강	8	24
	자동차·오토바이	6	
	전자	5	
	석탄	1	
	화학	1	
	조선	1	
	섬유·봉제	1	
	신발	1	
소비재 유통, 서비스	금융	16	43
	식품	14	
	귀금속	3	
	부동산·유통·관광	3	
	서비스	2	
	음료	2	
	의약	2	
	포장	1	
총합계		100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6a)과 prospect500.vn의 자료를 종합하여 필자가 재작성

주력 업종별로 베트남 유망 100대 기업을 살펴보면(위의 〈표 10〉 참고), 석유·가스(14개 업체), 전기·전력(11개), 금융(16개), 식품(14개) 업종이 100대 기업 중에서 55개로 전체 100개 업체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가스와 전기·전력 등 공공 인프라 부문이 33개 업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베트남이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

aIdx=125278, 검색일: 2016.11.19.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식품 등 소비재 유통 및 서비스 기업은 100대 기업 가운데 43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금융과 서비스 업체 18개를 제외하면 베트남 경제에서 소비재 유통 산업(25개 업체)이 베트남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자 및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비중은 11개 업체로 다소 낮았고 섬유·봉제 업체의 경우 1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 수는 1개에 불과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6a).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베트남 국영기업이 상위 20위 순위권에 대거 분포하고 있었다. 업종별 기업 형태로는 에너지·자원 부문은 국영기업이, 제조업 부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리고 소비재 유통·서비스 부문은 민간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6a). 베트남 유망 1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2위), 포스코(73위), 그리고 창신(96위)으로 3개 업체에 불과했다. 베트남 정부는 산업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업 부문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국 업체들은 하이테크 산업 및 부품·소재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향후 베트남에서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 (2) 2016-2025 베트남 공업 발전 정책 방향, 2035년을 향한 비전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의 지속적인 개혁 방향 및 사회경제개발전략은 “현대화된 선진 공업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다. 도이머이 30년(1986-2016)을 기점으로 베트남은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 노선을 평가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은 공업화 및 현대화 과정 속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경제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 그 효과와 질이 낮은 수준이며 GDP 가운데 공업 및 건설업 부문의 비중 역시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생산 및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하다. 인적 자원 훈련 및 양성 분야는 경제 발전과 기업 경영의 니즈에 근접하지 않았고 기업가들의 지식, 경영 능력 그리고 기업 전략의 수준이 여전히 낮다. 베트남이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업 발전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산만하며 인적 자원의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sup>47)</sup>

제12차 공산당대회 문건 토론회에서 팜쑤언드엉(Pham Xuan Duong) 중앙당위원회 중앙경제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2016-2020 현대화 및 공업화의 질적 및 양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베트남 공업 발전 정책 건설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서 베트남 정부는 2014년 6월 9일, ‘2025년까지 베트남 공업 발전 전략, 2035년을 향한 비전’에 대한 총리 승인 결정문을 발표하였다(No. 879/QĐ-TTg).<sup>48)</sup> 주요 내용은 ① 경제 부문 가운데

47) 자료: “2016-2025 베트남 공업 발전 정책 방향, 2035년까지의 비전.”[Định hướng xây dựng chính sách phát triển công nghiệp Việt Nam giai đoạn 2016-2025, tầm nhìn đến năm 2035](<http://www.tapchicongsan.org.vn/Home/PrintStory.aspx?distribution=33906&print=true>, 검색일: 2016.9.15.)

공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민영 및 외국인투자 분야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 ② 높은 질적 수준의 인력과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업 및 농촌의 현대화 그리고 공업화; 우선적인 공업 분야를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③ 기존의 우위와 국제적인 기회를 개척; 생산을 서비스 및 무역과 연결, 세계 공업 생산 가치 사슬에 주동적으로 깊이 참가하는 것, ④ 국가 안녕과 국방 서비스 공업 분야들을 주동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⑤ 녹색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보호 하에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주요 내용 가운데 2025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시기에 우선적으로 선정된 공업 발전 부문은 다음과 같다(아래의 <표 11> 참고). 우선 가공 및 제조 부문 가운데 기계 및 연금 분야를 살펴보면, 2025년까지 우선순위 공업 분야는 농업 설비 기계, 자동차 및 기계 부품, 제철이다. 2025년 이후에는 조선, 비철금속, 신재료이다. 우선, 베트남의 농업 산품, 그 중에서도 열대 과일과 쌀은 비교 우위의 분야이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규모에 해당하는 쌀 수출 국가이다. 하지만, 쌀의 품질, 수확 후 보관 체계 그리고 쌀 가공 공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농업의 현대화 및 선진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중점을 두고 관련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베트남은 자동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자 글로벌 자동차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다. 2016년 1~10월 기준 베트남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4%와 30%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부품 및 소모품, 그리고 A/S와 관련된 잠재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6c). 또한, 베트남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세안 철강 생산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생산능력, 기술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화학 물질의 경우 2025년까지 우선적인 분야는 기본적인 화학 물질, 석유화학, 수지-고무 기술 부품이다. 2025년 이후에는 의약품 분야이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의 경우 2025년까지 농산물 가공 비율 증가, 공업 분야 구조 개편 과정과 부합하는 목재 가공 비중 증가, 농산물 가공 및 생산 과정 속에 국제 표준 적용, 그리고 베트남 농산품의 경쟁력 및 상표 제작이다. 농림수산물 가공의 경우에 베트남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쌀과 농산품이 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하고 안전한 산품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목표를 명확하게 제기하였다. 특히, 베트남 농업시장은 AEC 출범으로 인해 해외 식품의 수입과 축산업 투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sup>48)</sup> 끝으로 섬유·봉제 및 가죽·신발 분야의 경우 2025년까지 내수 및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생산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유행의류 및 고급 신발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섬유·봉제 분야는 베트남에서 매년 평균 14.5%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주력 산업 분야이다. 베트남 정부는 향후 섬유·봉제 및 가죽·신

48) 자료: 총리 승인 결정문([http://www.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noidungchien\\_luocphattrienkinhtexahoi?\\_piref135\\_16002\\_135\\_15999\\_15999.strutsAction=ViewDetailAction.do&\\_piref135\\_16002\\_135\\_15999\\_15999.docid=2895&\\_piref135\\_16002\\_135\\_15999\\_15999.substract=](http://www.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noidungchien_luocphattrienkinhtexahoi?_piref135_16002_135_15999_15999.strutsAction=ViewDetailAction.do&_piref135_16002_135_15999_15999.docid=2895&_piref135_16002_135_15999_15999.substract=), 검색일: 2016.11.10.)

49) 자료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67 January 25-31, 2016

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국민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높은 이윤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으로부터 약 60%의 원재료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다.<sup>50)</sup> 따라서 베트남은 향후 기본 원자재를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출 증가와 함께 국제 공급 사슬에 참가해 나아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15년 10월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P)을 체결하였다. TPP 협정 타결로 인하여 베트남은 최대 수혜국가로 관심을 받으며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sup>51)</sup>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TPP 탈퇴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미국 등으로 관세 혜택을 받으며 수출하려던 의류 및 섬유 업체들과 신규로 투자를 진행해온 기업들은 실적 및 투자 기대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게 되었다. TPP의 지연 혹은 무산은 분명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베트남은 젊은 노동 가능 인구가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sup>52)</sup> 따라서 당장 TPP 무산에 대한 우려보다는 세계 의류 시장의 동향과 향후 베트남의 섬유·봉제 산업 전략인 유행 의류 및 고급 신발 생산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전자 및 원거리 통신 부문의 경우 2025년까지 우선 분야는 컴퓨터, 전화, 부품 설비이고 2025년 이후는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통신 기술 서비스 및 의료 전자이다. 최근 삼성과 LG전자가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초부터 호치민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백색가전 공장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V, 세탁기 등은 현재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단계적으로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까지 확대 생산될 예정이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6c). 따라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판매 및 물류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만화와 웹툰의 경우 베트남에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시장이 형성되어있지 않고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베트남은 모바일 보급률이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만화와 웹툰 시장 역시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현지 소비자들 직접 생산 및 소비할 수 있는 웹툰 플랫폼을 제공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웹툰 인지도를 확산시키며, 웹툰 IP 활용 다양한 상품화, 성급한 전면 유료화보다 단계별 부분적 유료화 등의 전략을 통해 현지의 웹툰 붐 조성을 위한 전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IBM Vietnam은 지난 2015년에 베트남

50) 자료: 베트남 계획투자부 기업개발처(<http://business.gov.vn/Tint%1%BB%A9cv%C3%A0s%1%BB%B1ki%1%BB%87n/tabid/97/catid/384/item/13949/vi%1%BB%87t-nam-m%1%BB%99t-s%1%BB%91-nganh-kinh-t%1%BA%BF-co-tri%1%BB%83n-v%1%BB%8Dng-nh%1%BA%A5t.aspx>, 검색일: 2016.12.15)

51) 자료: 아시아경제신문. “TPP 최대 수혜국은 베트남.”(<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0820531109795>, 검색일: 2016.11.29.)

52) 자료: 주간무역. “베트남 간 업체들 TPP 어찌나”(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no=24877&section=1&category=3>, 검색일: 2016.12.2.)

에서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IBM Vietnam은 대규모 파트너 업체들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분석의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sup>53)</sup>

뿐만 아니라, 9천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와 베트남 정부의 보건 분야 지출의 확대에 의해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베트남 의료기기는 90% 이상이 수입품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싱가포르로부터 의료 기기의 수입이 가장 많았다(20.4%). 그 다음이 일본 13.4%, 독일 10.8%, 미국 10.5%, 중국 10.1%, 한국 7.8%의 순이다. 베트남 현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대부분 저가의 일회용 의료용품들, 병원용 침대, 수술용 칼, 가위, 기타 일회용 기기 등이다. 베트남은 낮은 인건비 때문에 제조기반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고품질 의료기기 생산에는 어려움이 많다. 베트남 정부는 특정 목적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 부품의 수입관계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베트남의 현지 사정을 이해하여 한국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베트남 소비자들의 소비의식 향상으로 인해 건강식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 중이다. 2015년 베트남 건강식품 시장은 전년대비 12% 증가하였고 특히 화학첨가물이 최소화된 자연건강식품 시장이 15% 성장하였다.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80%는 수입산이고 이 중에서 미국산과 한국산의 비중이 높다.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재가 확산되면서 한국산 기능성 식품 역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6c). 따라서 건강식품 시장 역시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2025년까지 바람, 태양, 생물연료(biomass)와 같은 신에너지 및 재생 가능 에너지이고, 2025년 이후에는 평화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 발전, 지열과 음파와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1〉 시기별 우선적으로 선정된 공업 발전 부문

분야		2025년까지	2025년 이후
가공 및 제조	기계 및 연금	농업 서비스 설비 기계, 자동차 및 기계 부품, 철강	조선, 비철금속 및 신재료
	화학 물질	기본적인 화학 물질, 석유화학 및 수지-고무 기술 부품 생산	의약품
	농림수산물 가공	농산품, 주력 수산 그리고 공업 분야 구조 개편 과정과 부합하는 목재 가공 비중 증가, 농산품 가공 및 생산 과정 속에 국제 표준 적용, 베트남 농산품의 경쟁력 및 상표 제작	-
	섬유 및 가죽	내수 및 수출을 위한 원부재료 생산	유행 의류, 고급 신발 생산
전자 및 원거리 통신		컴퓨터, 전화 및 부품 설비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통신기술서비스, 의료전자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신에너지와 바람, 태양, 생물연료(biomass)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평화 목적에 부합하는 원자력 에너지, 지열, 파도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53) 자료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67 January 25-31, 2016

출처: “2025년까지 베트남 공업 발전 전략 & 2035 비전” 총리 승인 결정문(No. 879/QD-TTg)

구체적인 공업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다(아래의 <표 12> 참고). 베트남은 공업 성장 속도를 2020년까지 6.5~7.0%, 2021~2025년까지 7.0~7.5%, 2026~2035년까지 7.5~8.0%로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공업 생산 가치는 2020년까지 12.5~13.0%, 2021년~2025년 11.0~12.5%, 2026~2035년 10.5~11.0%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 전체 경제 구조 속에서 공업 및 건설업 비중은 2020년까지 42~43%, 2021~2025년에는 43~44%, 2026~2035년에는 40~41%를 목표로 하였다. 즉, 공업 및 건설업의 경우 성장 속도는 증가시키지만 비중을 늘리기 보다는 질적인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출 총 금액 가운데 공업 상품의 비중은 2025년까지 85~88% 달성하고, 2025년 이후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공업 분야 가운데 하이테크 공업 상품과 하이테크 응용 상품은 2025년까지 총 GDP의 45% 달성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5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ICOR(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 한계고정자본계수)는 생산량의 증가에 필요한 자본 증가의 비율을 말한다. 즉, 일정 기간 생산량 1 단위를 얻는데 있어서 몇 배의 자본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이 계수가 높을수록 자본의 생산효과가 낮고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투자 대비 효율성을 측정하는 ICOR 계수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sup>54)</sup> 2011~2015년에 베트남의 ICOR 계수는 6.91이었다. 2006~2010년에는 6.96을 기록하였다.<sup>55)</sup> 베트남은 2025년까지 3.5~4.0, 2026~2035년에 3.0~3.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공업분야 온실가스발생 비율의 경우에는 연간 평균 약 4~4.5 이내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12> 베트남 공업 발전 목표 (2016년~2035년)

	2016-2020	2021-2025	2026-2035
공업 부문 추가 증가 가치 성장 속도	6.5~7.0%	7.0~7.5%	7.5~8.0%
공업 생산 가치 증가 속도	12.5~13.0%	11.0~12.5%	10.5~11.0%
GDP 중 공업 및 건설업 비중	43~43%	43~44%	40~41%
수출 총금액 중 공업 상품의 비중	85~88%		90% 이상
하이테크 공업 상품	총 GDP의 45%		총 GDP의 50% 이상
ICOR(한계고정자본계수)	3.5~4.0%		3.0~3.5%
공업분야 온실가스발생비율	연간 평균 약 4~4.5% 이내		

출처: “2025년까지 베트남 공업 발전 전략 & 2035 비전” 총리 승인 결정문(No. 879/QD-TTg)

54)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ICOR 평균 계수는 2015년 기준 4.62로서 2014년(5.2)보다 감소하였다.

55) 자료: 베트남 투자 신문. <http://baodautu.vn/am-anh-voi-he-so-dau-tu-tang-truong-icor-d41472.html>. (검색일: 2016.11.15.)

## 6. 한국 기업의 진출 전망 및 시사점

베트남은 최근 한국의 3대 수출시장, 3대 투자지역,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대상국이자 주요 해외건설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2016년 현재 한국은 최대 투자국(누적 기준)이고, 4대 수출대상국이자 2대 수입대상국일 정도로 중요한 국가이다(베트남 투자청; 베트남 통계청 홈페이지). 또한, 베트남은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이하 ATIGA)을 포함한 약 10개의 자유무역 협정(FTA)에 참가하여 국제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5년 8월 EU-베트남 FTA 타결과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 등 다수의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2015년 말 AEC의 출범으로 인하여 향후 아세안 시장에 속한 베트남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ATIGA의 스케줄에 따라 아세안 국가 간 교역에 있어 현재까지 전체 관세부과 품목에서 8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왔고 2015년까지 추가로 1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며 나머지 7%의 관세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한다는 방침이다.<sup>56)</sup>

하지만, 베트남에서 AEC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아세안 국가 간 치열한 경쟁 구도와 유사한 경제구조 및 수출입 상품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서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전략을 살펴보았듯이 베트남은 AEC 출범 자체보다는 자국의 산업 정책에 따라 공업 부문 육성 그리고 내수시장으로서의 자국의 잠재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기업을 비롯한 베트남 진출 외국투자기업들은 당장 AEC보다는 베트남의 수출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베-EU FTA, 한-베 FTA 타결에 따른 혜택과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그리고 우선적인 공업 부문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베트남의 정치외교적 변화, 경제 및 산업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인구사회학적인 변화와 소비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정치외교적 변화에서 중요한 점은 제 12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최고지도부 인사 및 정치국 위원들이 대부분 북부 출신의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베트남은 개혁보다는 안정을 보다 중요시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제발전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및 산업 정책의 변화로는 앞서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과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베트남은 “선진화된 공업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내 한 전문가는 최고지도부가 보수적 성향으로 바뀌어도 정책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이유는 산업에 있어서 자동차와 기계 제조 그

56) 자료: ATIGA 협정[Hiệp định ATIGA](<http://www.vietnamplus.vn/hiep-dinh-atiga-nam-2018-xoa-bo-hang-rao-thue-quan-trong-asean/367029.vnp>, 검색일: 2016.10.05).

리고 섬유와 가죽 분야는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등 베트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7)</sup> 그리고 ‘2025년까지 베트남 공업 발전 전략, 2035년을 향한 비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공업 부문은 가공 및 제조, 전자 및 원거리 통신,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이다. 이러한 공업 부문 가운데 우리 기업은 2025년을 기점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된 공업 발전 분야에 주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공 및 제조 부문에서 섬유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는 베트남이 주로 FDI를 통한 가공 위주의 산업을 주로 이행해왔다면 제조와 디자인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IT 산업 역시 기술이전을 통해 한 제품 안에서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는 베트남의 인구학적 특성과 북부와 남부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인구는 약 9,200백만 명이고 그 중에서도 15세~64세까지의 노동가능인구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 이외에 거주하는 지방 노동인구가 여전히 풍부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기에 유리하다. 그리고 베트남은 인적자원 육성에 힘쓰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출은 2012년 기준 GDP의 약 6.3%에 달하고 이러한 수치는 다른 중간소득 국가의 평균 교육비보다 2% 정도 높은 수준이다.<sup>58)</sup> 베트남 정부는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여 기술 혁신을 통한 선진 공업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전체 인구 가운데 0세~24세까지의 인구가 약 40%를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소비재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향후 두터워질 중산층을 고려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sup>59)</sup>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향후 빈부격차 해소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 구축 및 주택 건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은 고속철도, 하노이와 호치민 도시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와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 베트남 전문가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당 및 정부가 강조한 산업의 확실한 목표는 제조업 부문을 강화시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제조업은 한 나라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따라서 세계 시장에 주동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기본적인 산업들에 더 집중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시멘트, 철강 등과 같은 제조 산업의 육성과 하이테크 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60)</sup>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은 1987년

57) 정보제공자: 응웬반빈(Nguyen Van Vinh), 계획투자부 발전전략연구원 부원장(인터뷰 날짜: 2016.8.3.)

58) 자료: World Bank Data,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total(% of GDP)(<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E.XPD.TOTL.GD.ZS>, 검색일: 2016.10.10.)

59) 자료: 주아세안대표부, 2016. 『한 눈에 보는 아세안경제공동체』. 휴먼컬처아리랑.

60) 정보제공자: 응웬반빈(Nguyen Van Vinh), 계획투자부 발전전략연구원 부원장(인터뷰 날짜: 2016.8.3.)

부터 FDI를 유치해왔다. 당시 베트남은 자금, 기술,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양적으로 FDI를 유치해왔고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베트남은 질적인 수준에 집중하여 기술력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FDI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베트남이 자금,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FDI에 주목했다면, 앞으로는 높은 부가가치, 환경문제, 기술력에 관한 FDI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sup>61)</sup> 먼저, 이익만 우선시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신뢰하고 있다. 한국에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만 추구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 현대, 기아, 삼성과 같은 자동차, 전자 산업 부문의 업체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할 때 이익보다는 양국 간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고 이행해왔다.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도 그렇듯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에는 베트남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FDI에서 중요한 원칙은 지역민의 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우대해주고 있는 사업들은 인프라와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 공사, 공항, 항구 등에 대해 투자를 할 경우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사회경제개발 전략 및 계획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노선을 유지해왔다. 베트남은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외 관계를 통해서 외국 및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추구하고 있다. 아세안의 “작은 호랑이(a little tiger), 베트남은 아직 포효하지 않았다. 세계 속의 베트남 그리고 AEC 출범 이후 아세안 내 베트남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을 통해 한국 경제가 희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61) 상동



## 《참고문헌》

### ○ 국문자료

- 구엔취흥. 1980. “베트남의 교회와 국가.” 『기독교사상』 264: 79-85.
- 김종욱. 1988. “베트남 민간신앙 체계에 관한 고찰.” 『동남아연구』 7: 43-66.
- \_\_\_\_\_. 2003. “베트남 경제 발전의 정치 동학(1976-1997).” 『동남아시아연구』 13(2): 251-286.
- 백용훈. 2011.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사회자본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왕혜숙·백용훈·류석춘. 2011.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사회자본 비교: 베트남의 이탈리아 해석에 대한 도전.” 『동남아시아연구』 21(3): 43-103.
- 유인선. 1999. “베트남인의 남진과 남부문화의 형성.” 『동방학지』 105: 331-394.
- 이한우. 2002. “통일 이후 베트남의 토지제도 전환과정에서 남부 농민의 영향력: 메콩 델타 농민들의 저항행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2(2): 63-95.
- \_\_\_\_\_. 2007.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의 문제.” 『아세아연구』 129: 39-63.
- \_\_\_\_\_. 2011. “베트남에서 점진적 개혁의 지속: 제11차 공산당대회 결과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21(3): 105-138.
- \_\_\_\_\_. 2016. “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따르는가?: 30년 개혁과정의 ‘발전 모델’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26(3): 51-90.
- 전경수. 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재완. 2016. “제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의 특징과 향후 정치·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6(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아세안대표부. 2016. 『한 눈에 보는 아세안경제공동체』. 휴먼컬처아리랑.
- 최병욱. 2000. “19세기 전반 베트남의 소수민족 정책: 남부의 상황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9: 127-163.
- 최호림. 2005. “사회주의 국가, 시장 및 ‘전통’의 재생: 베트남의 체제 변화와 의례 활성화.” 『사회과학연구』 13(2): 314-346.
- 코틀러 필립·허마일 카타자야·후이 덴 후안. 2016. 『아세안마케팅』 홍윤주 옮김. (서울: 시그마북스)
- 하순. 1994. “베트남의 가족제도와 베트남인의 사회적 행위.” 『외대논총』 12: 387-401.
- \_\_\_\_\_. 1997. “베트남 전통사회의 종교와 마을 공동체.” 『외대논총』 16: 371-395.
- \_\_\_\_\_. 2000. “메콩델타: 역동적인 문화와 역사의 세계.” 『국제지역연구』 4(2): 81-112.

한도현. 2000. “시장 경제 도입 이후 베트남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동남아시아연구』 10: 67-94.

\_\_\_\_\_. 2003. “향약의 조직원리와 지역가치: 베트남 모작싸(xa Mo Trach)의 사례.” 『동남아시아연구』 13(2): 287-322.

Kotra 해외시장뉴스. 2013. “베트남, 남북 간 소비트렌드 차이로 보는 마케팅 전략.”

\_\_\_\_\_. 2016a. “베트남 100대 기업을 통해 베트남 산업을 엿보자.”

\_\_\_\_\_. 2016b. “베트남 2016~2020 사회·경제개발 계획안 국회 제출.”

\_\_\_\_\_. 2016c. “2017년 대베트남 수출 유망품목 전망.”

## ○ 영문자료

Cummings. R. C. 1977. *Vietnamese Villages in the Mekong Delta: Their Articulations with the Wider Society and the Implications for Local Social Organization*. Ph.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Do Thai Dong. 1991. "Modification of the Traditional Family in the South of Vietnam," R. Liljestrom and T. Lai (eds.), *Sociological Studies on the Vietnamese Family*. Hanoi: Sciences Publishing House.

Geertz, Clifford. 1969. *Agricultural Involution: The Processes of Ecological Change in Indones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_\_\_\_\_.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Dang, Giang and Low Sui Pheng. 2015.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Developing Economies: The Case of Vietnam*. Springer.

Hickey, Gerald Cannon. 1958. *Social Systems of Northern Vietnam: A Study of Systems in Contact*.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Manyin, Mark. 2013. “U.S.-Vietnam Relations in 2013: Current Issues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guyen Cao Duc. 2015. “Long-Term Dynamics of Vietnam’s Growth in the Transition Stage towards Efficiency-Driven Stage to avoid the Middle-Income Trap.”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83:3-15.

Quan Hoang Vuong, 2014. “Vietnam’s political economy: a discussion on the 1986-2016 period.” Working Papers CEB 14-010, Universite Libre de Bruxelles.

## ○ 인터넷자료

베트남공산당(<http://dangcongsan.vn>)

베트남통계청([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

아시아경제신문([www.asiae.co.kr](http://www.asiae.co.kr))

주간무역(<http://weeklytrade.co.kr/main/index.html>)

Customs Trade Statistics,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http://www.customs.gov.vn/default.aspx>)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https://www.imf.org/external/data.htm>)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https://www.transparency.org/cpi2015/>)

World Bank Vietnam(<http://www.worldbank.org/en/country/vietnam>)

World Fact Book 2016, Vietnam(<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vn.html>)

## ○ 인터뷰

응웬반빈(Nguyen Van Vinh), 베트남 계획투자부-발전전략연구원 부원장(인터뷰 날짜:  
2016.8.3.)

## VII. AEC 안의 캄보디아

### - 최빈국을 넘어 차세대 생산물류 기지를 꿈꾼다

#### 1. 아세안 경제공동체 안에서의 캄보디아: 차세대 생산물류 기지의 꿈

이 장에서는 메콩유역 최빈국에 해당하지만 최근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캄보디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남부 중앙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메콩유역국(Mekong Riparian Countries) 중 하나이자 구 사회주의 체제에서 1990년대 이후 체제전환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아세안)의 후발그룹으로 가입한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군에 속한다. 2015년 기준 총 GDP 180억 달러, 1인당 GDP는 1,181달러로 동남아시아의 최빈국 중 하나이다. CLMV 4개국 중 GDP 3위, 1인당 GDP는 최하위에 속한다. 이에 해외개발원조가 집중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도 캄보디아를 개발협력 중점대상국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ODA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의 공식출범하였다. 공동체의 비전이 충분히 실현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적·사회문화적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지만 ‘단일시장 단일생산기지’를 내세운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비전을 통해 아세안은 역내 형평성 있는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와의 완전한 통합을 향해 진일보해 가고 있다(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08).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아세안 회원국 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은 매우 넓다. 특히 아세안 선도 6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메콩 유역의 체제 전환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개발격차는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국내적으로 분출 중인 경제발전, 교육 체제 개선, 기술과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요구 역시 점차 커져가고 있다.

상대적 저소득국가인 캄보디아 입장에서 2015년 말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가 공식출범은 매우 긍정적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생산품 기반의 단일시장화,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경제 지역화, 지역경제 통합화를 넘어 세계경제와의 통합화를 강조하고 있다. 무역장벽 해소에 따른 비용감소와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지역적 차원의 노동 시장 조건의 활용성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캄보디아가 취할 수 있는 기회의 창도 함께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파리조약과 1993년 민주적 선거 이후 외부세계와의 접촉하기 시작한 캄보디아는 지속적인 시장 개혁 및 개방을 통해 과거의 고립주의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캄보디아는 1999년 아세안의 마지막 회원국이 된 이래로 2004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고 그 밖에도 다수의 국제 및 지역 기구와 조약에 가입해왔다. 특히 아세안경제공동체에 가입함으로써 지역화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고 인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정치경제적

장애물들을 극복해 왔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으로 캄보디아가 연계 될 혜택은 다음과 같다(Pich, 2014). 첫째 캄보디아는 아세안 공동체의 일원으로 글로벌 상품사슬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이래로 국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11%가 아세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7~2014년 사이 아세안의 무역량은 총 1조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둘째, 아세안은 지역 내 국가들, 특히 CLMV 국가들의 시장 개혁과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통해 낮아진 역내 교역 비용과 캄보디아가 갖춘 낮은 투입비용(저렴한 인건비와 지리적 위치성)에 힘입어 특히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제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저렴한 가격의 수입 생산재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캄보디아의 국내 시장 환경과 소비자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내 저개발국인 캄보디아는 공동체 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 및 금융지원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공동체 내에서 경쟁도 심화될 것이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아세안 경제통합은 캄보디아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림 1〉 GMS 경제회랑의 캄보디아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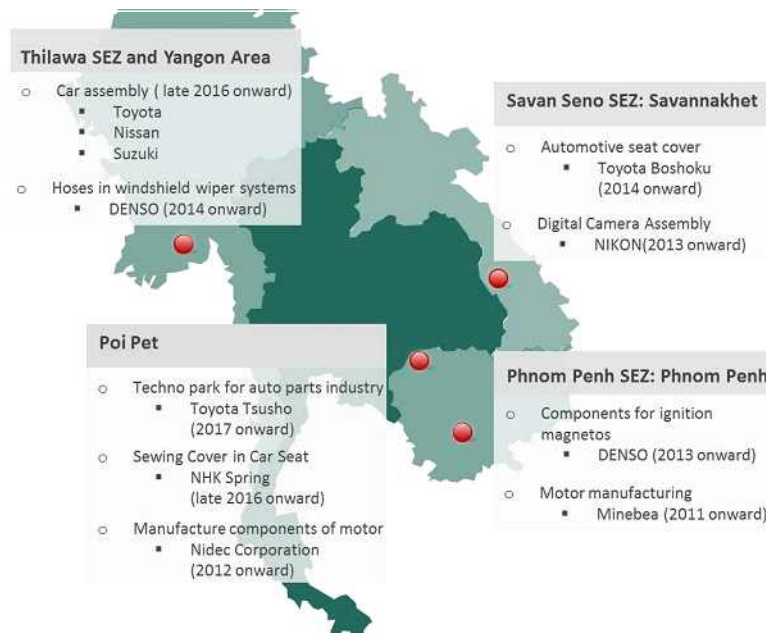
출처: Mekong Institute

한편 메콩유역국 나아가 아세안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연계성 강화 추세도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캄보디아는 GMS 경제회랑 중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남부회랑(미얀마 다웨이~베트남의 다낭 및 호치민 라인)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향후 생산

과 물류 부문의 성장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외적 조건과 경제성장을 위해 해외자본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캄보디아는 최근 5년간 평균 7%(2009년 제외) 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태국과 베트남을 이어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생산기지의 지위를 이어받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교적 인건비 등의 제조비용이 높은 방콕이나 호치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캄보디아는 유력한 대안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최근 노동집약적인 부품 제조를 인건비가 저렴한 캄보디아에서 하고, 이렇게 생산된 부품을 태국이나 베트남 공장에 납품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중이다. 특히 태국에 다수의 제조업 거점을 갖춘 다수의 일본기업들이 남부경제회랑의 통관 시기에 맞춰 동반 진출을 준비 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아세안 통합은 캄보디아 경제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변화의 조짐은 일본의 對 CLMV 정책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을 정점으로 한 다양한 제조업 성장거점을 구축해 왔는데, 남부경제회랑이 점차 구체화됨에 따라 “태국+1 구상”<sup>62)</sup>을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 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진국의 덩’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GMS의 남부경제회랑이 점점 더 구체화됨에 따라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수출지향형 제조업의 이전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Oizumi, 2013).

〈그림 2〉 태국+1과 주요 경제특구(SEZ)의 역할



출처: <https://aecplusadvisory.askkbank.com/>

62) 태국+1 구상은 태국을 생산거점으로 이웃국가의 공급사슬을 확대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일본 제조업의 입장에서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생산 집적지로 기능해왔는데, 최근 태국의 노동환경이 변화(노동력 부족과 빠른 임금상승)함에 따라 태국의 생산거점을 태국과 이웃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CLM)으로 일부 이전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 공정의 일부를 태국과 인접국 간의 국경도시에 경제특구(SEZ)를 만들어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캄보디아의 코콩, 포이펫, 라오스의 사바나켓 등이 이러한 신규 투자의 목적지로 주목받고 있다(Oizumi, 2013)

##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 특성

### (1) 정치체제 형성과정

양코르와트로 대표되는 크메르 문명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고대 캄보디아 왕국 12세기 절정을 이루었는데, 오늘날의 캄보디아, 태국 동부, 라오스 남부, 베트남 남서부 지역까지 지배력을 떨쳤다. 하지만 15 세기를 기점으로 양코르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잦은 내분과 외침으로 인하여 국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1864년에는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동부를 차지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프랑스 식민정부는 1941년부터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의 왕위를 인정했으나, 신생 독립국캄보디아왕국(Kingdom of Cambodia)의 출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10년 뒤인 1955년에야 이루어졌다.

1970년 시하누크 국왕이 소련 방문을 틈타 당시 수상이었던 론놀(Lon Nol) 장군이 도시 엘리트 세력의 후원 하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며 크메르 공화국(Republic of Khmer)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크메르 공화국 역시 5년을 채 채우지 못했다. 론놀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는 초기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무능과 부패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 이후 미국이 캄보디아 내의 베트콩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캄보디아에 개입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론놀 정부와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Khmer Rouge) 간의 내전이 발생하면서 전쟁은 참화는 더욱 번졌다.

폴 포트(Pol Pot)가 이끄는 크메르루즈가 1975년에 수도 프놈펜을 점령하고 국명을 민주 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 1975-1978)으로 선언하면서 체제 간 경쟁으로서의 내전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폴 포트 치하의 캄보디아 무차별적인 학살을 벌이며 캄보디아에 또 다른 피바람을 몰고 왔다.<sup>63)</sup> 1978년 12월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공격하여 폴 포트 정권을 무너뜨리고 헝삼린(Heng Samrin)을 대통령으로, 현 수상인 훈센(Hun Sen)을 외무부장관으로 하는 친베트남 정권 캄푸치아인민공화국 KPRP(Khmer People's Revolutionary Party: 1979-1989)을 수립시켰다. 하지만 크메르루즈에 의해 학살된 지식인, 행정가들의 부재는 행정의 공백을 가져와 사회 곳곳에 무질서와 혼란만이 팽배하였고, 무질서 하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와 다양한 자연재해를 겪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Neher, 2002; 조영희, 2007: 115-116).

지속된 내전과 국가 혼란은 결국 국제사회의 개입과 중재를 불러왔다. 결과적으로 1991년 파리 평화협정으로 장기간의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유엔의 개입 하에 과도기기구를 성립하고 1993년 최초로 국회의원 구성을 위한 총 선거를 통해 현재와 같은 정치체제와 국명이 결정되었다. 선거의 결과는 라나리드 왕자가 이끄는 푼친펙(FUNCINPEC)<sup>64)</sup>이 57석

63) '킬링 필드'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크메르 루즈 하의 참상은 심각했는데,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 약 100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죽음을 당했으며 강제노동과 집단수용을 통하여 고유한 캄보디아의 가족제도와 전통적 가치가 크게 파손되었다.

(득표율 45%), 훈센이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가 51석(득표율 38.2%)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군소정당들이 나눠가지게 되었다. 절대 다수당이 부재한 가운데 라나리드 왕자와 훈센이 공동수상에 취임하면서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온전한 캄보디아인에 의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1993년 이후 오늘날까지 31년 간이나 훈센 총리가 국가의 실질적 권한을 모두 장악하고 있음에도, 캄보디아의 정치상황은 안정적이라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동요가, 특히 주요 선거 때마다 일어나고 있다. 최초의 민선 정부였던 FUNCINPEC과 CPP 공동 정부는 1997년 훈센의 쿠데타로 라나리드 왕자가 해외 도피를 떠나며, 훈센 수상이 이끄는 단독 정부가 되었다. 1998년 선거에서도 CPP(41%)와 푼친펙(32%)이 1, 2위를 기록하며 다시 공동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삼랭시를 대표로 하는 캄보디아 구국당(CNRP)가 득표율 14%로 유일한 국회 내 야당이 되었다.

## (2) 캄보디아 현 정치상황

현재 캄보디아의 공식명칭은 캄보디아 왕국으로 국가형태상 입헌군주국이며,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임기 5년의 국회(national Assembly)와 임기 6년의 상원(Senate)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원수는 국왕의 담당하며, 각료 등 고위직 공무원, 군인, 대사, 법관 임명에 대한 서명권, 군 최고통수권, 국제조약에 대한 최종서명 및 비준권 등을 국회의 동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총리 역시 임명권자는 국왕이다. 국왕은 국회부의장의 동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제1당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며, 그 밖의 각료는 총리 내정자가 국회의원 또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국회의 신임을 얻은 후 국왕의 일괄 임명을 구하는 식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국정운영은 정부 수반인 총리가 한다.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2004~현재) 국왕이 국가 원수의 자격을 지니고 있으나 총리인 훈센(Hun Sen)이 31년 째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의 캄보디아 정치상황을 낳은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3년 7월 총선인데, 이 선거는 심각한 부정선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야당인 CNRP이 훈센의 CPP의 68석(총 123석 중)에 이어 55석을 차지하며 대거 약진하였다. 총선에서 집권당인 CPP의 축소(90석⇒68석)를 경험한 훈센은 야당 무력화와 장기집권의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왔다. 총선 후 CNRP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며 정치적 갈등이 1년 이상 심각하게 펼쳐졌으나 2014년 7월에 여야 간 협상 타결 끝에 의정활동에 복귀하였다. 훈센 정부는 2015년 일본 방문 중이던 CNRP의 대표 삼랭시에 과거의 명예훼손 사건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뒤이어 2016년 3월에는 켄 소카 부대표에게도 부패 혐의로 조사명령을 내리며 야당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캄보디아의 다음 총선은 2018년 7월로 예정되어있다. 다시 야당의 약진을 기대하는 사회

64) 캄보디아의 독립·평화·협동을 위한 민족연합전선'에 대한 불어 표현의 약자임.



적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 탄압에 따른 대안 세력의 부재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얀마의 정권 교체에 준하는 캄보디아 정치적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2018년 총선에서도 훈센의 재집권의 점치는 전망이 보다 우세한데, 독특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캄보디아의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안정성을 인정받는 역설적 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한국무역보험공사, 2016). 심각한 농촌 빈곤, 산악지역의 불법 벌목, 취약한 세수구조, 급속한 인구성장과 도시 집중, 인구 증가 속도에 대비한 직업 창출 속도의 저하 등 사회적 혼란 요소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향후 캄보디아 사회의 안정을 위한 주요 관찰 지점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 (3) 한-캄보디아 외교 관계

한국-캄보디아 간 수교는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게 이루어졌다(1996년). 하지만 1996년 외교관계가 수립되기까지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는 3번의 수교와 2번의 단교가 반복되는 거쳐 왔다(정연식, 2016). 첫 번째 수교와 단교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1년 캄보디아 특사 파견 이후 1962년 7월 프놈펜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에 공식적 수교관계가 수립되었다. 하지만 1953년 독립한 캄보디아가 반동회의(1955)의 영향으로 비동맹 외교노선을 표방한 까닭에, 한-캄보디아 수교와 거의 같은 시점에 캄보디아-북한 수교도 이루어졌다. 할슈타인 원칙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가 유지되었다. 1966년 재일동포 출신 북한권투선수가 캄보디아에서 망명을 시도했으나 캄보디아 정부를 그를 북한으로 송환하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로 총영사관을 폐쇄하면서 1차 단교가 이루어졌다.

1969년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실종된 한국인 장교와 기술자를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으로 송환하면서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때마침 론 놀이 이끄는 반공노선의 크메르공화국(Khmer Republic:1970-1975)이 수립되면서 곧바로 관계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71년 1월 한국대표부가 재설치 되었다. 이후 한국은 캄보디아에 의약품을 제공하고 캄보디아는 UN에서 한국을 지지하며 협력적 관계를 이어갔다. 1971년 캄보디아 정부도 한국에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을 최초로 설치하였다. 하지만 1975년 크메르 루즈의 프놈펜 점령 이후 민주캄푸치아공화국이 설립되면서 외교관계도 다시 단절되었다.

1991년 파리평화협정과 1993년 총선을 통해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수립되면서 수교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친한파 훈센(Hun Sen) 총리의 의지와는 달리 연립정부 내 시하누크 국왕이 수교에 반대하면서 관계 정상화는 지연되었다.<sup>65)</sup> 1996년 양국 정부가 대표부 설치를 합의하면서 23년 만에 다시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다음 해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표부는 대사관으로 승격(1997)되었으며, 2011년에는 주한 캄보디아대

<sup>65)</sup> 시하누크 국왕은 1970년 론 놀의 집권 이후 베이징과 평양을 망명지로 삼고 있었다. 1993년 귀국 후에도 2012년 서거 시까지 북한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을 정도로 북한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였음.

사관도 다시 설치되었다.

수교 후에는 양국 간 상호우호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특히 양국 지도자 간 상호방문과 회담을 통해 양국 상호협력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경제 부문의 교류와 협력 강화,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캄보디아 사회 내 한국의 호감은 현재 매우 높은 편이다.

### 3.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IDP 2015-2025》를 중심으로

#### (1) 거시 경제 조망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메콩유역의 비옥한 충적평야(flood plain)에 자리한 캄보디아는 2002~2013년 사이 연평균 7~8% 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다. 1인당 GDP는 1,160달러(PPP로는 3,498달러)로 이웃국가인 태국의 4분의 1선이며, 또 다른 이웃국인 베트남이나 라오스보다도 낮다. 인구의 20%는 여전히 절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로 ‘리엘(riel)’이라는 자국 화폐(KHR)이 있지만 경제 전(全)분야에서 여전히 미달러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는 점이다(2012년 기준 은행저축의 96%가 미달러였음).<sup>66)</sup>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조에 따라 국내 저축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총 외채도 2015년 기준 GDP의 31%까지 낮아졌다.

〈표 1〉 캄보디아 경제 거시지표(추정치 포함)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질GDP 성장률(%)	7.1	7.0	6.9	7.0	7.3	7.3
CPI 인플레이션(%)	3.9	1.2	2.8	2.9	3.1	3.2
상품수출(10억 달러)	7.45	8.49	9.27	10.45	11.43	12.32
서비스수출(10억 달러)	3.81	4.04	4.38	4.85	5.35	5.87
상품수입(10억 달러)	10.67	11.94	13.02	14.36	15.52	16.66
서비스수입(10억 달러)	1.88	2.04	2.23	2.45	2.68	2.93
수출성장률(%)	14.0	14.1	9.1	12.8	9.4	7.8
수입성장률(%)	12.4	11.9	9.1	10.2	8.1	7.4
경상수지(10억 달러)	-1.66	-1.94	-2.17	-2.11	-2.06	-2.12
경상수지(GDP 대비)	-9.9	-10.7	-10.9	-9.8	-8.9	-8.3
환율(달러 대비)	4038	4068	4068	4149	4251	4302

66) 캄보디아는 독립 직후인 1953년부터 자국통화인 리엘을 유통하기 시작했으나 1975년부터 크메르루즈 말기까지 사회간접시설 파괴로 화폐발행 시스템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1993년 평화체제 전환 이후 유엔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다량의 미국 달러가 캄보디아 경제에 도입된 이래로 달러가 기축통화로 활용되게 되었다. 현지에서 리엘은 주로 거스름돈이나 음료수 구입과 같이 소액거래에 사용되고, 대부분은 달러가 통용된다.

총외채(10억 달러)	6.81	7.82	8.67	9.57	10.01	10.37
재정수지(GDP대비 %)	-1.4	-1.1	-1.7	-1.8	-1.6	-1.2
인구(백만)	15.3	15.6	15.8	16.1	16.3	16.6
명목 GDP(10억 달러)	16.81	18.07	19.85	21.42	23.15	25.34
1인당 GDP	1096	1160	1254	1333	1419	1530

출처: Portman(2016)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선임 경제학자 포트만(Portman, 2016)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높은 수출 신장세와 해외투자의 증대 그리고 공공 지출의 확대로 2016년에도 7%에 가까운 GDP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긍정적 반등은 향후 2017~19년까지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 역시 3% 이하에서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빠른 임금 상승은 국내 저축율을 높일 뿐 아니라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수출업자를 즐겁게 할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유인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국가 세수도 꾸준히 늘면서 공공 재정 지출도 상승하고 있다.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이나 그 폭이 GDP의 2% 이내로 건전한 수준이며, 재정 적자 분은 대체로 저리의 외채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의 재증지출은 주로 인프라 개선,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숙련노동자 양성, 신규 산업 양성 그리고 복지 부문에 투여되고 있다. 2018년 선거 이후까지 상당 기간 혼센이 이끄는 CPP가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 정부 재정지출의 큰 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14년 총선에서의 야당의 약진과 이후 상당 기간 동안의 국회 보이콧을 통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 최저임금 향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세력화 등의 위험 요소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자주 돌출되는 인권 문제들에 대해 가장 큰 공여국인 EU와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정치적·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조치들도 동시에 진행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Portman, 2016).

캄보디아 정부는 WTO 가입(2004년 9월)을 계기로 총 46개에 달하는 국내법을 WTO 규범에 맞추어 개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투자환경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비효율성, 공무원들의 낮은 보수 수준에 따른 부패현상 등이 아직도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잔존한다. 2004년 7월 출범한 제3기 캄보디아 연립정부는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전략(사각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경제 정책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사각전략의 구체적 이행과 캄보디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 목표와 전략이 포함된 전략적 국가개발계획(NSDP 2014~2018)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2) 산업 구조

캄보디아의 산업구조는 2015년 기준 1차 산업(33%), 2차 산업(25%), 3차 산업(42%)이다. 크메르 루즈(Khmer Rouge) 집권기를 거쳐 전통 농업 국가로 완전히 회귀했던 캄보디아는 1991년 파리조약을 계기로 시장을 개방했다. 먼저 세계유산인 앙코르와트로 국제 관광객이 몰리면서 관광이 경제의 중요 축으로 부상했다. 프놈펜의 경제적 변화는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제조업 성장의 결과이다. 캄보디아 제조업의 GDP 기여율은 약 24%이며, 1998~2013년 사이 성장률은 12.4%에 달한다. 프놈펜과 인근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집중돼 있는데, 특히 봉제는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한다. 섬유와 관광이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는 가운데, 최근 건설과 부동산 분야의 개발 열기도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주요 산업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67)</sup>

### ○ 농업

농업은 캄보디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나 노동인구 종사자로는 7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넓은 영토(한반도의 1.8배)의 대다수가 평야지대이며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 등의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농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전 국토의 약 32%가 농업용지로 활용 중이다.

쌀은 캄보디아의 국민의 주식(국민 총 칼로리 섭취량의 75%)으로 전체 경작지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 이외의 상품작물로 슈가팜, 캐슈넛, 옥수수, 타피오카, 콩, 사탕수수, 고무, 후추 등이 주로 재배된다. 쌀과 고무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이기도 하다. 캄보디아산 쌀의 수요 수입원은 EU(2-14년 기준, 캄보디아 전체 수출량의 60%, EU 기준으로는 전체 쌀 수입량의 약 22%), 말레이시아, 중국 순이다.

국민경제와 수출에 있어 중요한 작물이지만 캄보디아의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3.3톤/ha로 동남아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sup>68)</sup> 이에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기술 개발, 토지소유권 확립, 관개 시설 및 정미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가 진행 중인데, 특히 관개 시설의 확충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 ○ 봉제산업 - 섬유/패션

봉제 산업은 캄보디아에서 거의 유일한 제조업종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봉제산업의 성장은 중국 등 주요 생산 거점국의 임금상승에 따라 이루어

67) 산업별 주요 현황은 KOTRA 프놈펜 무역관의 현지시장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함.

68) 베트남은 헥타르당 6.2톤, 인도네시아는 5.7톤, 필리핀은 4.3톤, 라오스는 4.1톤, 태국은 3.5톤의 생산량을 기록했음(ADB, 2014).

진 공장이전의 결과이다. 다른 한편 EU의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규정 개정도 큰 효과를 낳았는데, 캄보디아를 포함하는 최빈국(LDCs) 국가들이 유럽시장 수출 시 관세혜택 범위가 기존 부가가치율 70%에서 30%로 조정된 이래로 유럽지역이 캄보디아 봉제산업의 주수출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캄보디아의 봉제부문 수출은 2015년 1분기 약 17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동일 기간 수출액 약 15억 4,000만 달러 대비 11% 증가하며, 캄보디아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캄보디아 섬유 제조업체 협회(GMAC: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mbodia)에 등록 돼 있는 업체는 총 590여 곳에 이른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계 공장이며 한국 봉제 공장도 60개사 정도가 진출해 있다. 지역별로 보면 프놈펜 지역이 198개 업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칸달 지역에 51개의 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봉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약 60만 명 이상이며, 전체 제조업 부문의 50%, 총 부가가치 창출의 41%를 담당하고 있다. 봉제 부문 노동자의 약 9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섬유 봉제 산업 외국인 투자금액은 2011년 약 44만 7,000달러, 2012년 약 67만 달러 규모로 급성장한 이후 총 투자금액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3년 이후 봉제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향후 추가 투자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캄보디아는 최근 경제 발전, 노동분쟁, 정치적 영향에 따라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연 20% 내외로 지속적으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2016년 140달러에서 2017년 153달러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이웃국인 베트남 내 일부 지역보다 캄보디아의 더 높은 수치이다.<sup>69)</sup> 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임금 향상은 불가피한 문제이며, 최저임금 상승 후에도 캄보디아의 노동임금은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등과 함께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 아직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장 수는 2016년에 오히려 다소 증가했으며, 2016년 상반기 수출도 전년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건설 및 부동산업

캄보디아의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은 2010년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매년 약 1만 가구가 프놈펜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집계해 도시화의 빠른 증가와 이에 따른 건설업의 성장을 예상케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유입은 주로 봉제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성 노동력이 수도권으로 밀려들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주거 시설이 부족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한 주거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경우 2011년 주택 건설 인허가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데 힘입어 예상 성장률을 뛰어넘는 4.5%의

69) 캄보디아는 국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만 베트남은 총 4개로 구분된 지역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3년 총선 선전용으로 공공부문의 건설이 증가해 건설 전체적으로 7.2%의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건축 관련 산업은 해외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부동산에 대한 관심 증가, 인프라 투자의 증가, 그리고 도시화 수준의 증가로 2015년 이후 약 9.9%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외국인 건물 소유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개정 전에 외국인은 부동산의 49%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캄보디아 부동산 부문 투자의 큰손도 중국이다. 중국의 건설부문 투자는 2011년 17억 달러, 2012년 22억 달러, 2013년 27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 상위 10개국은 한국, 중국, 영국, 태국, 러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상업용 건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의 상업용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단계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고급 주거시설, 고급 상업용 건물 개념으로 직접 시행하는 업체가 등장해 부동산 개발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업의 경우 캄보디아 상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347개의 국제적 기업이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 기업들도 활동 중이다.

부동산 분야의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이나 현지인의 소득 수준, 주거 문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고층 고급아파트 건설 등은 수요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많은 기업이 구체적인 시장 조사나 개발 계획 없이 토지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좀 더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한 참여가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으로 보아 시장을 세분화해 판매대상에 따른 차별적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관광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연구관광 분야는 2015년 기준 전체 GDP의 29.9%를 차지하고 있고, 2016년에는 4.2%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관광 분야가 전체 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6.9%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캄보디아 전체 수출량의 약 29퍼센트 비중으로 높은 수준이다. 캄보디아 관광청에 따르면, 2014년에 450만 2775명이었던 관광객 수가 작년 477만 5231명으로 증가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앙코르와트를 지닌 캄보디아에서 관광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일례로 2014년 시엠립 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의 수는 총 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가 늘어난 것이다.

전반적인 관광업의 급성장하고 있으나 앙코르와트를 제외한 관광 자원은 아직 크게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앙코르 문화유적 관광이라는 단순 관광에서 탈피해 문화유적 관광과 휴양을 겸한 복합적인 관광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한 가장 주요한 과제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다. 아직까지 수도 시스템, 숙박시설,

도로, 교통수단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의 관광지는 큰 잠재성이 있다고 보는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까지 약 850km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프놈펜 남부의 해안도시 시하누크빌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리조트 개발이나 북동부 산악지대 및 메콩유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관광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새로운 관광 부문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민간업체나 국제개발원조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캄보디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아세안의 이웃국인 베트남이 전체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중국과 한국의 관광객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나 최근 중국 관광객의 캄보디아 방문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6년 5월 중국 대비 전략(China Ready Strategy)을 발표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조치(위안화 결제 등)를 추진 중인데, 이 문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3) 국가 산업정책 : 《IDP 2015-2025》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의 산업 및 경제발전의 방향은 2004년 제 3기 캄보디아 연립정부 출범과 더불어 발표된 사각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정책 행동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분야별 과제 선정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기능 강화를 강조하였다. 2008년 제 4기 정부 10개 분야(농업, 물 및 관계 시스템, 운수 인프라, 전력, 인재육성, 노동집약형 및 수출주도형 산업, 관광, 천연자원개발, 정보통신, 무역) 우선산업 선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현재도 유지 중이다.

2015년 8월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 IDP 2015-2025》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최초로 수립된 장기발전계획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기반의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담고 있다. 발간 기념식에서 훈센 총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고성장(sustainable and inclusive high economic growth)을 위해 경제 다각화, 경쟁력 강화,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IDP의 수립은 국가경제의 구조 개혁과 변화하는 지역 및 지구적 경제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의 착수를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sup>70)</sup>

현재 캄보디아 경제 구조는 의류, 건설, 식품가공업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IDP 2015-2025》은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중 산업부문의 비중을 2013년의 24.1%에서 30%까지 올리며,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통해 비섬유 부문의 수출을 15%까지 증대시키되, 특히 농산물 가공 상품의 수출 비중을 총 수출의 12%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2030년까지 중상위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y), 2050년 고소득국(high-income country)의 지위에 오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70) 프놈펜타임즈(2016.08.26.)

〈표 2〉 《IDP 2015-2025》의 주요 내용

주요목표	세부내용
외국인 투자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경제구역과 같은 산업단지의 조성</li> <li>• CDC<sup>71)</sup>의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li> <li>• 투자 인센티브 제도 재정비</li> </ul>
성장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제조업, 농가공 분야 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IT 부문 육성</li> <li>•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발</li> <li>• 과학 분야 인재 양성</li> </ul>
기업친화적 제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보험제도 수립</li> <li>• 조세와 국가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 수립</li> <li>• 노동분쟁 전담 해결기구로 노동법원 신설</li> </ul>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경제구역 신설</li> <li>• 기존 특구 내 생산 및 수출 인프라 시설 구축(발전 시설, 수도공급원, 도로망, 철도 등)</li> <li>• 호치민~방콕을 연계하는 고속화 도로 개발</li> </ul>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sup>72)</sup>

1. 캄보디아 왕립정부(RGC, Royal Government of Cambodia)는 “사각 전략-3단계”를 표명하는 2030을 향한 장기 비전에 따라 국가의 산업화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산업발전정책(IDP,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고성장, 경쟁력 강화, 생산성 증대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2. 이 정책의 출발은 국가경제와 변화하는 지역 및 국제 경제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필요성에서 유래한다. 특히 아래와 같은 고려사항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첫째, 캄보디아와 경제과 산업을 아세안경제공동체를 비롯한 지역 내 경제 자유화 프레임과 연계시킴에 있어 유리한 지정학적 파급효과. 둘째, 산업 성장을 위해 개방 경제, 인구구조 상의 특성, 주요 구조적 변화의 맥락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부문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고려. 셋째,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될 농업과 서비스와 같은 주요 경제 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도구로서의 산업 정책의 중요성. 넷째, 장기적으로 경제적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중진국 함정’을 피해가는 데 요구되는 경제 구조 및 거버넌스 상의 개혁에 초점을 둔 산업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

3. 캄보디아의 산업 부문은 봉제 및 식품 가공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전히 다수의 제조업

71)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의 약자로 캄보디아의 투자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이다. 1994년 캄보디아 정부는 수상실 직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신규 투자 신청에 대한 One-Stop Service 차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인센티브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하에 Cambodian Special Economic Zones Board (CSEZ), The Cambodia Investment Board (CIB),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CRDB) 등이 포함되어 있다.

72) 이하는 《IDP 2015-2025》 실행요약보고서(execute summary)의 번역한 결과임.



활동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영세한 가족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등 여전히 저숙련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폭이 좁고 유약하다. 캄보디아 산업의 주요 특성으로 산업 기반의 다양성 부족, 비공식적 혹은 중간 구조의 부재, 낮은 기업가정신, 도시에 집중된 산업 구조, 낮은 부가가치, 낮은 기술 수준 등을 꼽을 수 있다. 소기업(micro-enterprises) 수가 총기업의 97%를 차지하지만 고용 창출의 30%, 총 수익의 12% 정도만을 담당한다. 반면 대기업의 수는 0.6%에 불과하지만 고용 창출의 63%, 총 수익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내 수공업 형태로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는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가정신도 매우 낮은 상태인데, 현재 캄보디아에 등록된 기업의 42%가 2008년 이후 설립되었다. 대규모 제조업체의 63%가 외국인투자기업이며 내수보다 수출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도시 지역 편중도 심각한데, 대규모 제조업체의 68%가 프놈펜에, 13%가 칸달 주에 위치하고 있다.

4. 캄보디아 산업부문의 발전은 다음의 다섯 가지 큰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전력, 인프라, 물류, 인적 자원, 기술 그리고 그 밖의 제도적 인프라와 같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리더십, 조정 역량, 효율적인 의사결정 역량이 부족하다. 둘째, 저숙련 노동력을 숙련 노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과 기술이 희소하다. 셋째, 전력, 깨끗한 용수, 통신네트워크, 하수 처리, 공공서비스 조달과 같은 필수 산업 인프라의 준비가 부족하다. 넷째, 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한 자본 조달과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메커니즘과 같은 금융 시장의 발전 정도가 미약하다. 다섯째, 적절한 노동력의 공급, 생산성 증대, 노동자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노동 시장 안정화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5. 캄보디아 정부의 비전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2025년까지 현재의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를 숙련 기반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캄보디아 산업 구조의 현대화를 지향한다. 지역 및 지구적 가치 사슬과의 연계, 국내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아세안)의 생산 네트워크와의 연계 및 상호 연계된 생산 클러스터의 개발, 기술 주도·지식기반 현대 산업의 발전을 향한 진전. 이러한 비전의 실현은 국가의 경제발전,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경제적 부가가치의 증대, 캄보디아 국민의 임금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IDP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targets)을 설정한다. 첫째, 2025년까지 산업 부문의 GDP 기여율을 30%(2013년 기준 24.1%)로 높이며 특히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20%(2013년 기준 15.5%)까지 증대시킬 것이다. 둘째, 2025년까지 비섬유상품의 수출 비중을 15%로, 가공농산물의 수출은 12%까지 확대시키는 등 수출 품목을 다양화할 것이다. 셋째, 2025년까지 영세기업의 등록률을 80%로, 중소기업의 등록률을 95%까지 높이도록 독려하며, 영세기업의 50%와 중소기업의 70%로 하여금 적절한 회계장부를 갖추도록 계도할 것이다.

7. 위에서 언급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아래의 4대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대규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만든다. 둘째, 영세 및 중소기업(SMEs)의 현대화를 유도한다(제조업 기반의 확대와 강화, 기업 등록의 현대화, 기술이전 및 산업 연계성 증진). 셋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환경(투자 환경과 무역 활성화, 시장 정보 공개, 비공식비용 절감 등)을 점

검한다. 넷째, 정책(인적 자원 개발, 기술 훈련, 노사관계 증진, 교통/물류, 정보통신시스템, 전력 및 용수 공급, 공공·사회·금융 서비스) 간 연계성을 높인다.

8. IDP의 전략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통해 제조업 부문과 농가공 산업의 발전을 촉진 하려는 것이다. 지역 및 국제 생산사슬과의 통합, 최소임계량 확보, 경제적 연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의 입론(positioning), 경제회랑의 개발, 경제특구(SEZs) 및 신규 산업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조업과정의 연계. 이상의 접근의 범위와 주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시장을 뚫을 수 있거나 높은 부가가치, 혁신적인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과 제조업 부문. 둘째, 모든 부문에서 SMEs의 역량 강화. 셋째, 수출 및 내수 시장을 위한 농업 생산의 증대. 넷째, 농업, 관광, 봉제 부문이 국제 생산가치 사슬에 보다 잘 포섭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산업의 장려. 다섯째, 역내 생산 사슬을 지원하되 궁극적으로 미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의 지원.

9. 이상의 전략적 접근 그리고 이행과정을 이끌 책임 있는 기구들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는 종합적이며 상호 연계된 정책 수단과 행동계획을 제도화해왔다. 이러한 정책 수단과 행동계획은 다음을 포괄한다. 첫째, 투자환경 개선 및 SEZs의 개발과 산업지구 조성, 둘째, 등록을 통한 공식화 장려, 인센티브 제공, 적절한 회계 활동의 장려, 농산업 부문 장려 등을 통해 중소기업(SMEs)의 강화와 현대화. 셋째, 무역 활성화 수단과 수출 장려, 산업기준 및 산업재산권 강화, 세금 징수의 촉진,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전담기구 설립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 환경 개선. 넷째,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과 혁신의 장려, 산업 인프라 조성 및 금융수단 등을 중심으로 한 각종 지원 정책 간의 조율.

10. 이상의 정책 수단과 행동계획에 더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IDP의 이행 특히 캄보디아의 경쟁력과 투자 유인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전략을 구성하는 4대 구체적인 수단을 2018년까지 적용하고자 한다. 4대 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산업단지용 전력비용 절감 및 송전범위 확대와 공급 안정도 증진. 둘째, 다중모달 교통 및 물류 시스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이행. 셋째, 노동시장과 숙련기술 개발을 관리할 메커니즘의 개발과 강화. 넷째, 시하누크빌 주의 다중 목적 경제특구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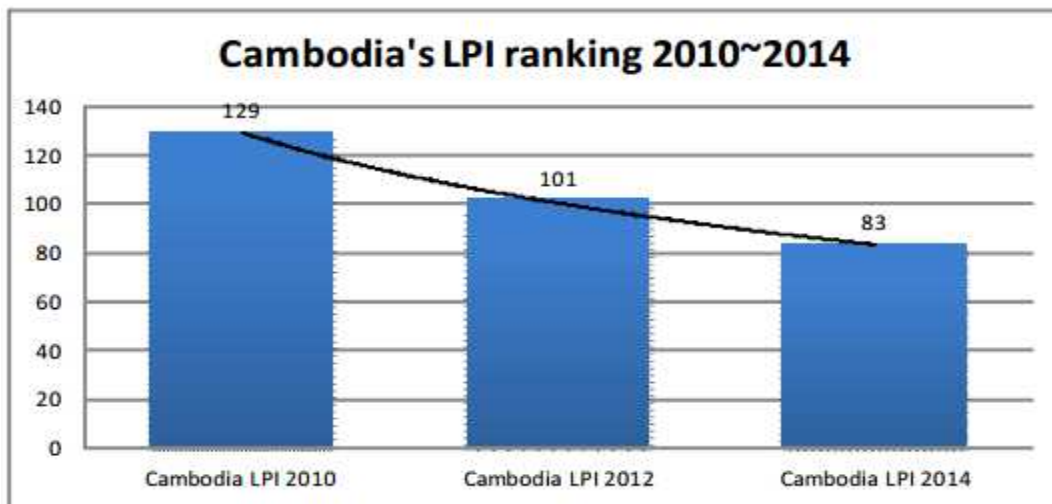
11. 캄보디아 정부는 IDP를 이끌고,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구성과 개발을 위하여 캄보디아발전위원회(CDC, 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이며, 이 기구에 정책결정, 계획의 수립과 이행, 주요 장애물에 대한 대응과 같은 핵심 기능을 전적으로 부여할 것이다. 개혁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첫째, 이미 설립된 ‘경제재정 정책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and Financial Policy)’와 ‘민간 부문 발전 실무위원회(Private Sector Development Steering Committee)’ 뿐 아니라 새롭게 설립될 ‘캄보디아 산업발전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for Industrial Development of Cambodia)’ 등과 조율하여 IDP의 지도, 승인, 성과 모니터링, 이행 전반을 관장하는 정책 리더십 기능을 CDC에 부여하고 강화한다. 둘째, 산업개발 증진에 필요한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캄보디아 투자청(CIB, Cambodia Investment Board)의 기능을 검토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캄보디아 복구 및 개발 위원회(CRDB, Cambodia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의 기능을 개발협력 및 공공

투자계획과 연동시킨다. 넷째, 산업개발 과정의 정보 공유 및 민간 부문의 참여 촉구를 위해 민관 포럼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상호 연계시킨다.

12. 마지막으로 IDP의 점진적 진보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CDC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개발토록 할 것이다. 첫째, 분기별 및 연간 보고 시스템 구축. 이행과정과 문제점, 즉각적인 이행에 요구되는 수단 등을 논의하는 부처 간 위원회 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하고 이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함. 둘째, 노사분규 해소, 메커니즘의 구축. 셋째, 2018년까지 IDP의 4대 주요 수단의 진행과정과 이행률에 대한 평가의 실시 및 다음 단계 이행을 위한 검토와 목표 재설정의 준거로서 2020에 중기 종합평가를 실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DP 2015-2025》는 제조 및 봉제업의 효율화를 이룰 넘어서는 산업부문의 다각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CDC의 권한을 적극 강화했으며, 특별경제지구와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 과 교통/물류 등의 인프라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발표된 《국가전략발전계획,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이나 《캄보디아 교역통합 전략, Cambodia Trade Integration Strategy 2014-2018》에서도 유사한 비전과 목표가 발견되며, 특히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3〉 캄보디아의 물류성과지표 변화



출처: 김미림(2016: 12)에서 재인용

세계은행이 발표한 물류성과 지표(LPI, Logistic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10년 세계 129위에서 2014년 83위로 순위가 46계단이나 상승하였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교통 네트워크와 물류 서비스의 수준은 발전의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에는 여전히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김미림, 2016). 캄보디아와 인근 국가들을 잇는 주요 국내도로와 국제 고속도로

는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여전히 국내의 주요 도시들과 지방을 잇는 도로들 그리고 도시 내 교통 시스템은 미발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프라에 대한 국가 공적 투자가 낮고, 통관절차 상의 제도적 비효율성이 높은 것도 여전히 큰 한계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14 투자기후평가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ADB는 교역물류 청사진을 만들고 조정 기구로서 국가 물류 전담팀을 창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ADB, 2015). 인프라 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인프라 재원은 국가 예산, 국내외 차관 및 차입, 공적개발원조가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인프라에 대한 공적 투자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며, 특히 공적개발원조 부문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수반되는 개도국 부패의 문제에 대한 우려 및 공여국의 구속성 차관(tied loan)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개발재원의 확보는 점점 더 민간 영역에 의존하는 식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에 캄보디아 역시 민관협력(PPPs) 방식의 인프라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향후 캄보디아는 민간 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제도적 환경 개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닌 강력한 감시 기능과 공공 입찰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 (1) 인구구조

캄보디아의 추정인구는 약 1,595만 명이며, 종족구성으로는 크메르족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공용어도 크메르(Khmer)가 주되게 사용된다. 인구 성장율은 1.56%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2016년 추정으로 출산율은 인구 1000명 당 23.4명으로 그리 낮은 편은 아니지만 높은 AIDS 유행률로 인해 순인구증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73)</sup> 하지만 중위 연령(median age)이 24.9세(남성 24.2세, 여성 25.6세)로 매우 젊으며, 24세 미만 인구가 총 인구의 50.6%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꾸준한 인구 성장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최초로 시행된 센서스 조사에서 캄보디아의 도시화율은 17%에 불과했지만 2013년 말 캄보디아의 도시인구는 전체의 21%에 달했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인구가 80%에 달하는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 ~ 2015년 사이 연평균 도시화율도 2.65%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과 비교할 때 그리 빠른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캄보디아의 행정구역은 수도인 프놈펜 특별행정구역과 24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인구 100만을 넘는 도시와 주는 프놈펜(150만), 칸달 주(126만), 바탐방 주(106만)에 불과하다. 주요도시는 태국과의 국경지대 혹은 프놈펜을 둘러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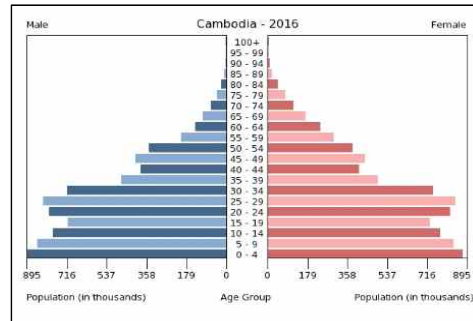
73) 출처: CIA 국가정보(<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b.html>)

〈표 3〉 캄보디아의 인구 연령별 인구구성

연령대(세)	인구수(명)	비율(%)
0-14	4,984,290	31.24
15-24	3,034,570	19.02
55-54	6,409,928	40.18
55-64	866,177	5.43
65세이상	661,258	4.14

출처: CIA World Factbook(2016. 07추정)

〈그림 4〉 캄보디아의 인구 피라미드



## (2) 캄보디아의 중산층과 변화하는 소비풍경

캄보디아는 내수 인구가 약 1,545만 명으로 매우 적고 그 중 85% 이상이 1인 GDP 1,135 달러에 허덕이는 세계 최빈국인 만큼 캄보디아 내수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진출에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캄보디아에서도 이른바 중산층이 등장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소비풍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적 기준에서 중산층은 꽤 잘 사는 사람들로 이해되지만 사실 중산층에 대한 규정은 국가경제 규모와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2013년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1,000 달러를 돌파했으며, 같은 해 세계은행의 발표한 캄보디아의 중산층의 정의는 ‘일일 소비지출 2.6~5.1달러인 가구’이다. 추가적인 특징으로 이 구간의 가구는 텔레비전과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 구간에 속하는 캄보디아인은 전체 인구의 20%로 대부분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 같은 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아시아태평양 노동시장 보고서는 보다 보수적인 중산층 정의를 내놓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절대적 측면에서 하루 4% 이상의 수입을 얻는 이들을 중산층으로 규정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전체인구의 약 10%가 속한다.

프놈펜 포스트에 게재된 프놈펜의 신흥 소비계층에 대한 기사는 캄보디아 중산층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공해준다(The Phnom Penh Post, 2014-09-06). 이 기사는 치혼이란 이름의 한 봉제공장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편과 딸 하나를 둔 치혼 가족의 월 소득은 200달러 정도로, 하루 5달러 내외로 일상을 살아가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여성은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TV, 휴대전화, 최신 오토바이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50달러 정도씩 저축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 (3) 프놈펜의 소비경관 변화

캄보디아, 특히 프놈펜과 칸달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의 청년층은 이 나라의 소비지형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4년 여름 프놈펜의 소비 지형도가 크게 달라지는 일대 사건이 있었다. 일본계 대형 쇼핑몰 체인인 이온(AEON)이 프놈펜에 개장한 것이다. 이온몰

은 2014년 1월 베트남 호찌민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에는 캄보디아의 프놈펜,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압도적 규모의 쇼핑몰을 개장하면서 동남아 진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인구 9,000만의 베트남이나 수도권 인구만 2,500만을 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와는 달리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인구는 150만에 불과하다. 이온몰은 신규 몰의 개장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반경 5km 이내의 인구수, 세대수, 소비 행태를 꼼꼼히 조사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러한 이온몰이 프놈펜에 입점한 것은 그만큼 캄보디아의 중산층이 증가하고 소비문화가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징표로 읽힐 수 있다(엄은희, 2016).

프놈펜 이온몰에서는 세련된 고가 상품도 판매되지만 앞서 언급한 치혼과 같은 새로운 소비층을 겨냥한 특별한 영업 기능을 갖추고 있다. 프놈펜 이온몰은 자회사인 이온 마이크로파이낸스(AEON Microfinance)와 동반 진출하였다. 경제성장에 따라 캄보디아 내에서도 월 소득 200~500달러에 달하는 신흥 중산층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월급 수준에서 오토바이, 최신 휴대폰, TV, 냉장고 등은 여전히 바싼 품목이다. 이온몰은 이 품목을 판매할 때 자회사의 신용 대출을 앞선함으로써 할부 구매를 장려하고 이로써 이온몰을 자주 찾도록 만드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월 임금 150만 내외의 봉제공장 여공들 역시 이온몰이 겨냥하는 소비계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자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들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신흥국 경제의 기본 생산자이며 동시에 막 소비에 눈 뜬 강력한 BoP(Bottom of Pyramid) 소비자이다. 이들이 주도하는 소비문화가 향후 캄보디아 사회의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 5. 투자환경 및 유망 업종

### (1) 투자 환경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캄보디아는 현재 매우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2013년 선거에서 야당의 약진과 이후 부정 선거 의혹으로 정국이 불안정했으나 훈센 총리와 집권여당인 CPP의 권위주의적 조치로 인해 역설적인 정치적 안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통관 및 행정부문과 관련한 캄보디아 관료들의 심각한 부정 부패, 심각한 부의 편중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점은 여전히 수출 및 투자 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 캄보디아는 봉제 및 의류 산업이 캄보디아 상품 수출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한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또한 수출 대상이 일부 국가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전반적으로 캄보디아 경제를 바라보는 대내외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전반적인 경제성장 기조와 정부 및 국제기구들의 발전전략 제시에 따라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경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의 상당수를 공적자금이 아닌 민관협력(PPP)방식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까닭에,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투자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단, 헌법에 명시된 토지 소유는 예외로 함). 즉,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부문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며, 동일한 수준의 규제 및 투자유인을 적용하고 있다.

최초의 외국인 투자법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1989년에 채택되었으나 명목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은 개혁개방 이후인 1994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외국인 투자법(1994)이다. 같은 해 설립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는 대(對) 캄보디아 투자 뿐 아니라 산업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 산업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2003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제도적 노력에 힘입어 투자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15년 발표된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도 투자 및 산업 발전 간의 상호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처럼 캄보디아의 투자 촉진을 위한 캄보디아의 제도적 장치는 주변국에 비해 잘 마련된 상태인데, 특히 제조업 부문에 대한 법인세 인하, 원자재 수입관세 면세, 완성품 수출 완전 면세 등의 다양한 우대조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27개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SP)를 받는 의류 봉제 부문을 제외한 다른 제조업 부문의 발전은 여전히 더딘 편이다. 이처럼 캄보디아 경제 구조는 전반적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대외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 경제이익 추구보다는 장기적 전망과 정확한 타깃팅을 위한 포괄적 시장 분석이 요구된다.

## (2) 투자 유의사항

캄보디아는 여전히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이나 소비 시장 및 유통 부문의 투자에 있어 매력적인 시장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로 상대적인 저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이 경제 성장을 견인 중이다. 숙련 노동시장의 강화,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현대화, 아세안 및 국제 생산네트워크와의 연계성 강화 등을 목표로 경제산업의 구조 개혁의 청사진이 마련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투자 고려 시 주요한 포인트로 꼽히는 사회 간접 자본 중 도로, 전기, 용수 사정이 원활하지 않으며 인건비 역시 크게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고려 시, 사전에 다방면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

### ○ 인프라 미흡: 전기 부문을 중심으로

캄보디아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며 도로망, 철도 운송 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돼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고 있다. 전기, 철도 등 인프라가 크게 낙후되어 기업진출과 경제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 ~2015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인프라 경쟁력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109위로 낮은 수준이며, 분야별로는 전력공급(110위), 공항(106위), 철도(98위) 등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특히, 캄보디아는 전력 가격이 높은데다 열악한 전력 인프라로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자체 발전기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2013년 기준 캄보디아의 전기 자급률은 49.8%로 매우 낮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기를 수입에 의존해 공급하기 때문에 단위 전력 당 전기료가 평균 0.3달러/kwh로 베트남(약 0.08 달러/kwh)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발전용 댐 건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댐 건설에 따르는 사회·환경적 논란으로 인해 계획된 댐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이다. 전력 보급률 또한 19%에 불과해 공장 설립 시 발전 및 송배전망에 추가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밖에 도로, 철도, 항공 등 운송수단에 기초한 교통 물류망의 발달이 취약하며, 농업 현대화에 필요한 관개시설, 창고 보관시설 등 미약하다. 정보통신 인프라에 있어서도 유선통신망 구축이 미흡해 대부분 무선통신망에 의존하지만 이마저도 잘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낳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3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공공부문 예산을 약 14억 6,000만 달러로 책정했으며, 2020년까지 약 850km, 2040년까지는 약 2,230km의 도로 건설 계획을 세우는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 ○ 행정 및 규제 환경

외국인 투자 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과 행정조직 개편 및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에 있어 중앙 조절 기능은 미진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행정 조직에 만연한 부패와 비효율은 심각한 상황이다. 투자를 승인한 후 잦은 세제 변경과 신규 세제 시행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되기도 하며 관련 정부 기관과 부처의 부정이 만연해 금전적, 시간적인 손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통관 시 세관, 경제 경찰, 검사 기관 등의 중복적인 개입과 부당한 뇌물 관행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가 현지 투자 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행정처리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이익(급행료, 수고비 등)이 생기지 않는 부분의 행정처리 속도는 아주 느리다. 또한 행정전산화 정도가 미흡해 기본적인 자료, 정보 축적 잘돼 있지 않으며, 직원의 근무강도가 매우 낮다.

## ○ 최저임금제 이슈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구조가 지배적인 캄보디아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



적 소요와 노사관계 갈등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캄보디아 봉제협회(GMAC)에 따르면, 5년간 캄보디아 노동자 파업건수는 2010년 45건에서 2013년 147건, 2014년(1~10월) 86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캄보디아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된 노동쟁의 건수는 2010년 145건에서 2013년 285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 및 시위가 일부 요인으로 작용해 2014년 9월부터 캄보디아 노동자문위원회(Labor Advisory Committee)를 중심으로 최저 임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14년 11월에 2015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100달러에서 28달러 인상한 128달러로 최종 발표했으며, 2016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2015년에 비해 9% 인상된 140달러였다.

〈표 4〉 최근 5년간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동향

	2013	2014	2015	2016	2017
최저임금	80	100	128	140	153
실수령액	80	117	145	157	170(예측)
인상율	31	25	28	9	9

출처: 코트라와 LAC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함.

지난 10월 말에는 2017년 1월부터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는데, 전년대비 9% 인상된 153달러로 최종 고시되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훈센 총리가 직접 LAC의 결정에 개입하여 5달러 추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중산층 확대와 소비의 활성화를 기대하겠다는 국가적 고려를 담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사회적 소요를 줄이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이해된다. 하지만 2016년 대략 150개의 봉제 공장이 문을 닫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 증가에 비해 생산성 개선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에 있어 저임금 제조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며, 더 나아가 부가가치가 큰 다른 업종(숙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 (3) 유망투자 분야

김형근(2015)은 2015년 발표된 《IDP 2015-2025》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부문을 유망 혹은 잠재성 높은 투자처로 소개한 바 있다. 첫째, 숙련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이 정책적 설계와 대내외 원활한 자금 유입을 전제로 한 경우이기는 하나 현재 캄보디아는 섬유, 봉제업에 대한 편중된 제조업 구조를 개편하여 중공업 및 IT 분야로의 구조 전환이 크게 요구된다. 이러한 분야의 제조업은 기존의 섬유/봉제 부문에 대해 높은 수준의 투자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물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숙련 제조업 및 중공업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여부가 이 부문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을 타진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에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둘째, 은행 사업 진출. 현재까지 캄보디아 금융의 중심은 은행보다 소액금융대출기관이었으며, 기업의 자본형성도 금융기관 차입보다 자기 자본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과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에 대한 신규 진출 역시 주요한 투자 고려의 대상으로 부상 중이다. 최근 경제 성장과 함께 캄보디아 국민의 저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의 예금자 보호제도 수립은 은행업에 대한 투자에 청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셋째, 인프라 산업에 대한 투자.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 산업 인프라의 미발달은 캄보디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력과 교통 부문에서의 인프라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전력 인프라 부문에서는 발전소 뿐 아니라 송전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며,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는 수요 대비 국내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유통, 운송업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ADB가 주도하는 GMS 경제 회랑 건설 사업에 따라 방콕-호치민 연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교통, 물류 허브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육상 물류 운송을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 (4)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투자 잠재력<sup>74)</sup>

이상의 4대 부문 이외에 필자는 캄보디아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 관련된 제반 환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 ○ 캄보디아 에너지/전력 수급 현황

2013년 캄보디아의 총 1차 에너지 공급량은 5,974 Ktoe, 최종 에너지 공급량은 5,221 Ktoe였다.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와의 차이는 전력 생산 활용 분, 에너지 변환에 따른 손실, 에너지 공급자 사용 분, 송/변전 손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과 석유는 전량 수입(전체 공급량의 약 32.6%)에 의존하며 지형적 조건이 수력발전에도 불리한 까닭에 캄보디아의 에너지원의 약 67%가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에 의존하고 있다. 요약하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도 높은 편이며, 전체적으로 에너지 자급률이 낮다.

소비의 영역에서 봤을 때, 캄보디아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가정(56%), 수송(22%), 산업(17%), 기타 및 공급(5%)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 부문으로 가정용 에너지 소비가 높다는

74) 한국에너지공단의 최근 보고서를 기초로 재구성함.

점은 캄보디아 산업 인프라의 부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편 수송 부문은 전량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유 수입 분의 총 90%가 수송용 연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원의 수급은 전력수급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2013년 기준 캄보디아의 총 전력 생산량은 1,778 GWh 이었으며, 수입을 통한 전력 수급량은 2,050 GWh로 전력 부문의 대외의존도는 53%에 달했다. 2014년 신규 댐 완공으로 2015년 캄보디아의 전기공급율은 다소 높아져 31.1%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전력 자급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력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전력 요금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력의 대부분도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밖의 산업 단지는 자체 전력 생산 기능을 구동 중이며,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여전히 전력 공급에서 소외되고 있다.

### ○ 에너지/기후 정책

캄보디아 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2007년 발표한 《캄보디아 전력개발 계획, Cambodia Power Development Plan 2008-2021》에 근거하고 있다. 이 계획에 근거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 전역에 합리적이고 알맞은 가격의 전기를 적절하게 공급함. 둘째, 적절한 가격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투자 촉진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함. 셋째, 사회적·환경적으로 국민의 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에너지원의 개발을 장려하며 경제 전 분야의 전략화를 위해 노력함. 넷째,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고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함. 이상과 같은 방향성에 더하여 2020년까지 캄보디아 농촌 지역에 전력화를 추진할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량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전력원을 다양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현재 캄보디아 광물 에너지부의 계획에서는 목표 전력 생산의 50%를 대 수력 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확대 예정 발전 용량은 4,279MW로 현재 생산량에 버금가는데, 여기에는 대 수력 9건, 석탄 8건, 석탄 혹은 가스 1건 등의 발전 계획의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력의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송배전망 설치에 있어서는 국가 송전망 확대와 GMS 및 아세안 전력망과의 계통 통합을 목표로 삼고 있다.

캄보디아는 2001년 전기법(Electricity Law)을 제정하면서 에너지/전력 관련 입법이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에너지원별 목표가 적시된 통합 에너지/전력 정책이나 에너지 효율 정책 등은 부재한 상태이다.

한편 캄보디아는 하위 소득국으로 분류되는 개발도상국이지만 기후변화라는 당면한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UNFCCC에 이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s, Intende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BAU 대비 27%이며, 캄보디아 정부는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감축 노력을 현실화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sup>75)</sup>

## ○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가능성

IEA 통계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2013년 신재생에너지 전략생산량은 1,030 GWh에 달했으나, 여기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016 GWh로 압도적이었다. 다시 말해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원은 쌀겨, 캐슈열매 껍질, 사탕수수 및 카사바 등의 농산품의 부산물 등으로 구성된 바이오매스이며, 이러한 바이오매스에 기초한 1차 에너지 공급량은 6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캄보디아는 국가전략개발계획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목표에서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 및 활용을 증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캄보디아의 에너지/전력 공급에서 지역별 편중(수도권 중심)이 심하며, 현재 가장 높은 개발 목표를 지닌 대 수력 위주의 공급 정책이 향후 심각한 사회·환경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물론 수력 발전은 국제사회에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청정개발 체제(CDM)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수력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기업 중에는 캄보디아 북동부 산악 지대에 위치한 세산 강에서의 댐 건설 계획의 시공사로 참여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 수력댐 건설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소수력 발전 등 다른 방식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2013년에는 캄보디아에 GS칼텍스, 굿네이버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력하여 이뤄낸 사회적 기업 형태의 태양광 에너지센터가 개소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도 과거 캄보디아 캄팟주(Kampot)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에너지팜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발명하여 캄보디아 시장에 내놓았다. 라오스에도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해 탑솔라, 아세안비즈 등의 기업이 진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대체로 on-grid 방식이 아닌 분산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와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높이는 전력 생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민관협력형 ODA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까닭에, 한국과 캄보디아 양 국의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75) 2015년에는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1<sup>th</sup> Conference of Parties, COP21)가 진행되었다. COP21의 주요 의제는 교토 의정서 체제 이후의 새로운 신기후체제에 관한 것이었다.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가 있었던 것과 달리 신기후체제에서는 개도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감축에 동참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COP21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사전에 국기별 자발적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도 2015년 9월 30일에 INDC를 제출하였다. 캄보디아의 INDC를 보면 에너지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수력발전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포함시켜 기후변화 완화의 수단으로 채택하였다(RGC 2015)

## 6. 한국의 기업의 진출 전망 및 시사점

### (1) 한국의 투자 현황

한국은 캄보디아와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해 왔다. 2012년의 경우 수출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약 5억 4천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51.7%가 증가한 약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통적으로 캄보디아로의 수출에서는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큰 섬유류와 기계류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한류 열풍이 커지면서 담배, 면류, 음료 등의 수출도 증가하였다. 특히 KT&G(담배)와 박카스(에너지 드링크)는 한국의 브랜드 자체로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이 외에도 한국 자동차,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제품업체의 수출과 현지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신의철, 이형중, 2013)

한국 기업의 대 캄보디아 투자 진출은 1997년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된 이후 본격화됐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투자 승인 기준 1994~2014년간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투자 진출 실적(누계)은 약 4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CDC 투자 승인 기준 총 10억 982만 달러 규모를 기록해 동년에는 우리나라가 제1위 투자국이였다. 1994~2014년간 투자실적(누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에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제2위 투자국을 기록했다. 세계 경제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한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액은 2013년 대비 20.7% 감소한 6,500만 달러를 기록해 대 캄보디아 투자국 4위를 차지했다. 내국인 투자는 약 5억 8,200만 달러로 2013년 대비 82.2% 감소했으나 FDI의 경우 2013년 대비 16.8%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투자 감소의 배경에는 2013년 7월 선거 이후 정국불안과 2014년 초 대규모 파업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sup>76)</sup>

〈표 5〉 한국의 對 캄보디아 투자 동향(업종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2008	64.2	19.5	25.6	254.7	50.8	817.0	94.6
2009	5.8	2.1	38.6	152.0	10.2	71.4	18.0
2010	9.9	1.0	26.5	20.0	26.5	9.5	32.1
2011	35.7	1,039.4	45.4	10.9	17.5	17.5	12.3
2012	22.3	-	61.9	9.8	11.4	3.0	31.8
2013	7.2	-	57.3	19.6	8.0	4.1	41.1
2014	7.5	1.0	39.2	3.4	11.7	3.4	21.9
2015	12.4	33.2	19.4	1.8	26.8	6.0	74.9
누계	165.0	1105.2	313.9	472.2	162.9	931.9	326.7

출처: 한국수출입 은행(신고액 기준)

76)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과는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이 시기 동안 봉제 및 관련 산업에의 신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총투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는 캄보디아의 경제구조 및 투자에서의 친 중국화의 가속화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대 캄보디아 투자 진출은 중고 오토바이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업을 시작으로 초기에는 광산, 식당, 호텔, 관광 등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1996년부터 다수의 봉제 공장이 진출함으로써 대 캄보디아 투자 진출이 본격화됐으며, 최근에는 여타 제조업, 건설, 농가공, 조립 등에 이르기까지 투자 분야가 확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고 부가가치 산업인 전력, 통신 및 인터넷과 같은 산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캄보디아에 일고 있는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건설 분야의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봉제 등 노동집약형 산업 투자 이외에 자원 활용형 농업 분야의 투자 비중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진출은 합작 투자보다 단독 투자가 선호되는 특징을 보였으나 최근 현지인과의 합작 투자 비율도 늘고 있다. 현지인과의 합작 투자로 현지인 지분 51% 이상의 법인 설립 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3월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 신고 된 캄보디아로 진출한 한국 기업은 누적기준 총 721여개로 봉제업을 선두로 한 제조업부분이 가장 많고, 그 뒤로 부동산 및 임대업, 도·소매업, 건설업, 관광객 수요에 발맞춘 호텔, 숙박, 음식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 (2) 결론 및 요약

2011년 이후 매년 6~7%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캄보디아 경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도 산업은 섬유(의류 및 봉제)와 관광이다. 캄보디아는 중국 및 베트남의 임금 상승에 따라 이전을 모색한 섬유 분야 기업들의 차세대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봉제제품의 주수입국인 EU, 미국의 주문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도 캄보디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다. 최근의 경제성장과 중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들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동산 건설 부문 역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축으로 부상 중이다. 관광과 제조업 생산에 이어 물류 및 건설 부문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수도 인근과 접경지대인 포이펫(Poipet, 태국 접경)과 바벳(Bavet, 베트남 접경)에서 대규모의 경제특구(SEZ)가 조성되어 아시아의 주요 자본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건설 PF 사업과 부동산 투자의 과열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프놈펜에 향후 공급될 대부분의 아파트가 캄보디아인들이 거주하기엔 가격이 너무 높아 대부분의 수요는 외국인 투자자로 제한되고 있다. 그렇지만 2030년까지 프놈펜의 도시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거 부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렴한 주거시설 공급으로 기존 시장과의 차별화를 둔 접근으로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의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캄보디아는 또한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대상국 중 하나로 개발협력, 환경협력, 경제협력 간의 조화와 협력이 어느 국가보다 필요한 국가이다. 예컨대 본문에서 강조한 재생에너지 부

문의 투자나 틈새시장으로서의 친환경 농업생산 및 유통 부문, 농촌개발사업 등은 적극적인 관심을 요하는 부문이다. 캄보디아는 생산, 소비, 유통 부문에서 성장잠재력이 상당히 높다.

최근 캄보디아는 투자대상국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2015년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외자 유입은 캄보디아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경상수지 부문의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그 원인이 늘어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증가 그리고 건설 부문의 수입자재가 늘어난 결과이다. 따라서 무역수지와 경성수지 부문의 적자폭도 궁극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sup>77)</sup> 장기적인 측면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봉제와 관광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산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2003년 이후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향상, 인프라 및 신설,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인력 양성 등의 4개의 과제를 설정하고 각각의 과제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적인 대외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 캄보디아의 경제 단기적 성장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위험요소도 분명하다. 경제 성장 속에 캄보디아에서는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의 조짐 역시 보이고 있으며 봉제공장의 노사분규 및 최저임금 상승, 높은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존재한다. 특히 캄보디아는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무력 충돌과 파업의 진통을 겪었다.<sup>78)</sup> 전력과 교통 체계 등 인프라의 대부분이 태부족하고,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한 양질의 노동인구 확보의 어려움도 캄보디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정적 요소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에 대한 국가 안팎의 전망은 긍정적인 편이다. 캄보디아는 2013년경 총인구 1500만 명을 넘어선 캄보디아는 평균 연령이 27세에 불과한 젊은 국가로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산층이 확대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 해 7월에 캄보디아가 저소득국가(low income country)를 벗어나 하위중소득국가(low middle income country)에 들어선 것은 이러한 가능성 실현을 보다 가깝게 만들고 있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캄보디아를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프론티어 시장’으로 보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소비부문 진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피로회복제인 박카스가 2015년 캄보디아에서만 1억 캔 이상 팔리며 캄보디아의 ‘국민 음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일본계 대형물 체인인 이온몰도 2014년 베트남에 이어 프놈펜에 2014년 프놈펜에 상륙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형성과 소비문화 확산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

77) 2015년에는 세계유가 하락으로 7%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7%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IIMA, 2016).

78) 그러함에도 노동 불안정 및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봉제산업 투자는 지속적인 확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최저 임금 꾸준히 오르는 편이지만 바로 옆의 두 국가(태국과 베트남)와 비교할 때 여전히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는 봉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 부문의 일부 중소기업 투자처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하며 정확한 타겟팅을 갖춘다면 소비재 시장이나 숙련 제조업으로의 진출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캄보디아의 위치적 장점과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 나아가 아세안 경제 공동체 내에서의 캄보디아의 전략적 위치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간의 경제교류, 경제협력,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의 전망과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이상의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국가 현황 및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국문자료

- 글로벌전략실, 2016, 개도국 에너지 이슈 리포트(2016년 4월호), 한국에너지공단.
- 김미림, 2016, 캄보디아 출장보고서(KIEP 내부 자료).
- 김형근, 2015,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 발전 계획 발표”,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2015년 12월 호), 법무법인 지평([http://www.jipyong.com/newsletter/gbc/17\\_201512/data/c\\_cambodia.pdf](http://www.jipyong.com/newsletter/gbc/17_201512/data/c_cambodia.pdf))
- 신의철·이형중, 2013, 내일이 더 빛나는 나라 캄보디아: 캄보디아 현장에서 본 개발협력(ODA)와 투자(FDI), 라이스메이커.
- 세계도시연구센터 편집팀, 2015, “세계인프라 시장동향”, 계간 세계와 도시 9호, 81~91 (<https://seoulsolution.kr>).
- 엄은희, 2016, “프놈펜판 강남개발로 눈부신 변화, 제조업 성장에 늘어나는 중산층”, 친디아 플러스 2116 4월호, 38-39.
- 정연식, 2016. in 이충열·홍석준·윤대영 편저, 『한-아세안 관계: 우호와 협력의 25년』, 눌민. 172-184
- 조영희, 2007, 민주화 이후 캄보디아의 이회정치와 정당정치: 의회의 정당 간 합의능력과 대(對) 행정부 견제능력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7(1) 115-146.
- 코트라, 2015, 2016년 캄보디아 시장진출 전략.
-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부 국별산업조사팀, 2016, 캄보디아 정치·경제 동향( [file:///C:/Users/User/Downloads/160909\\_캄보디아\\_정치경제동향.pdf](file:///C:/Users/User/Downloads/160909_캄보디아_정치경제동향.pdf))

### ○ 영문자료

- ADB. 2015. Cambodia's Investment Climate Assessment 2014: Creating Opportunities for Firms in Cambodia. Phnom Penh: World Bank.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 2016, カンボジア経済 : 今後も 7%の成長か? imma News lwtter(No. 11).([http://www.iima.or.jp/Docs/newsletter/2016/NL2016No\\_11\\_j.pdf](http://www.iima.or.jp/Docs/newsletter/2016/NL2016No_11_j.pdf))
- Neher, Clark D. 2002. “Cambodia”, Southeast Asia in the New International Era. Boulder: Westview Press. 235-267.
- Oizumi, K., 2013, The Potential of the “Thailand-Plus-One” Business Model-A New Fragmentation in East Asia, Pacific Business and Industries 13(50), 2-20(<https://www>).

jri.co.jp/MediaLibrary/file/english/periodical/rim/2013/50.pdf)

Portman, C., 2016, Country Economic Forecast : Cambodia, Oxford Economics(2016-10-13)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14.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 ([http://cdc-crdb.gov.kh/cdc/documents/NSDP\\_2014-2018.pdf](http://cdc-crdb.gov.kh/cdc/documents/NSDP_2014-2018.pdf))

\_\_\_\_\_, 2015, Cambodia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5: Market Orientation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Industrial Development.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content/uploads/2015/09/IDP-English-Version-FINAL1.pdf>)

\_\_\_\_\_. 2015. Cambodia's Intende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http://www4.unfccc.int/submissions/INDC/Published%20Documents/Cambodia/1/Cambodia's%20INDC%20to%20the%20UNFCCC.pdf>).

## ○ 인터넷자료

카시콘은행 아세안경제공동체 페이지([https://aecplusadvisory.askkbank.com/EN/AEC/Intelligence/Pages/Thailand\\_Plus\\_One\\_20160524.aspx](https://aecplusadvisory.askkbank.com/EN/AEC/Intelligence/Pages/Thailand_Plus_One_20160524.aspx))

프놈펜포스트(<http://www.phnompenhpos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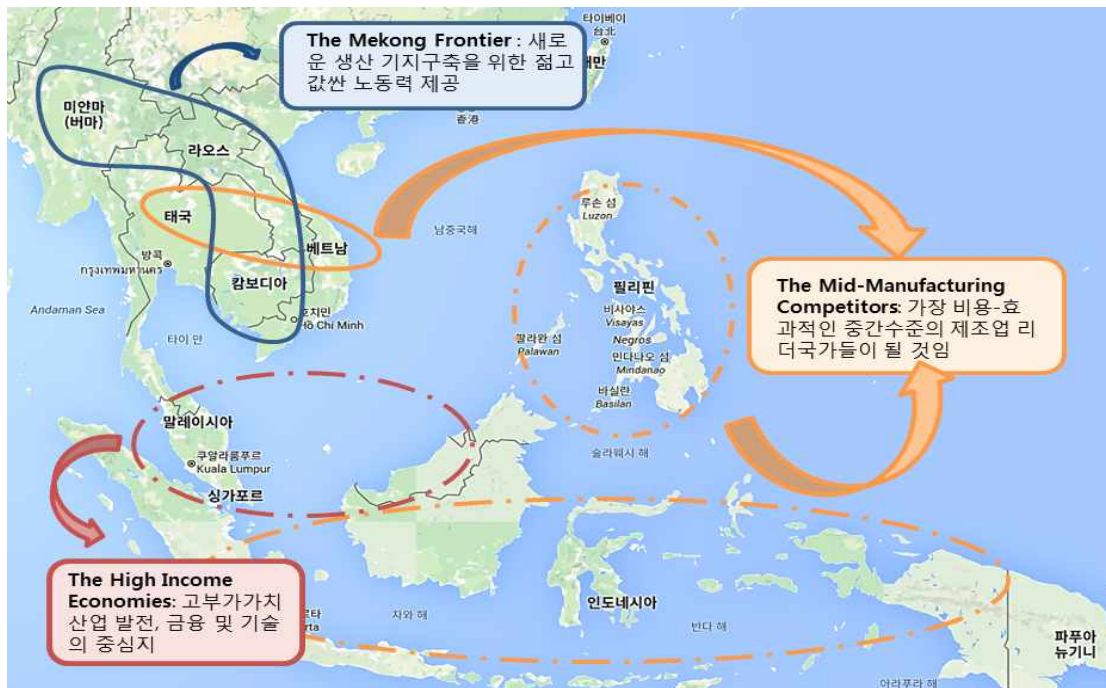
CIA 국가정보 CIA 국가정보(<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b.html>)

## VIII. 종합분석과 전망

### 1. 아세안경제공동체 속의 국가 포지셔닝

2015년 12월 31일 AEC가 출범하였다. 1967년 동남아시아 10개 국가의 연합으로 탄생한 아세안은 지난 약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그 결과 아세안 GDP는 2015년 기준 세계 GDP의 약 3.5%(약 2조 6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세안 GDP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약 35.5%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태국 15.2%, 말레이시아 12.8%, 필리핀 12.2%, 싱가포르 12.0%, 베트남 8.1%, 그리고 미얀마 2.7%, 캄보디아 0.7%, 라오스 0.5%, 브루나이 0.5%의 순이다. 앞으로 AEC 출범이 갖는 효과는 ‘생산 네트워크의 확장’과 ‘집중’,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생산의 집중화 현상’, ‘아세안 회원국 간 경쟁의 심화’, ‘아세안 연계성 제고’ 등을 꼽을 수 있다. 단일생산기지와 단일 소비시장으로서 AEC는 향후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분업구조 속에서 서로 협력과 경쟁을 통해 공생해 나갈 것이다. 고소득 국가군으로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중진제조업 국가군으로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메콩지역 개발 국가로서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 등이다.

〈그림 1〉 AEC의 산업구조



출처: Maguire, Glenn B. et al., 2015. ASEAN: The Next Horizon, p.5의 분류를 그림으로 표현.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대상 국가들의 AEC 속의 포지셔닝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우위, 상대적으로 발달된 인프라 시설, 지리적 위치 등을 앞세워 통합되는 단일경제의 허브가 되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2015년 말레이시아는 ASEAN 경제통합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ASEAN 전 지역의 사업을 총괄할 지역본부를 설립할 경우 법인세를 0~10%로 적용하는 인센티브제도-‘프린시플 허브(Principle Hub)’-를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IDA)에 따르면 프린시플 허브로 지정된 기업은 최대 10년간 단계별로 0~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함께 외국인 지분 규제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프린시플 허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3개국에 지사를 뒀야하고 이들을 관리할 전략수립 및 회계 기능을 갖춘 지역본부의 역할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지역본부는 적어도 명시된 3가지의 서비스-전략적 서비스(strategic service),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 service), 공유 서비스(shared service)-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제조와 분배만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지역본부가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전반을 담당하는 허브로서의 지역본부를 유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은 중진제조업 국가군으로서 서로에게 경쟁국이 될 수도 있는 부분과 분업적 산업구조의 발전을 통해 서로에게 기능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의 <표 1>를 보면, 주요 아세안 5개국이 분야별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필리핀이 중진제조업 국가군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아직 같은 그룹의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과 견주어 갈 길이 조금 남아있다.

이러한 도약의 필리핀을 기대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은 의미가 있다. 2014년 12월, 필리핀은 아세안 회원국 중 최초로 유럽연합(EU)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6,000여개의 필리핀산(Made in Philippines) 제품에 0%의 관세가 적용되는데, 필리핀 진출 우리 기업 역시 유럽 수출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최빈국과 저개발국가의 수출확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해당국 제품을 무관세 혹은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AEC 출범을 계기로 교역, 투자 부문에서 외국기업 지분 확대, 관세 인하 등의 변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ASEAN과의 FTA, RCEP 협상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리핀은 2017년도 아세안 공동체 의장국으로서 그 역할을 주목받고 있다. 당선된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자칫 아세안 중심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현재 아세안에서 각국의 공통된 관심사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 당사국으로서 아세안이라는 틀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지도 여유 있게 지켜볼만 하다.

〈표 1〉 아세안 주요 5개국의 산업분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프라	AHN(아세안고속도로망), SKRL(싱가포르쿤밍철도), 해양교통시스템, 다기능통합교통시스템, APG(아세안에너지망), TAGP(아세안가스파이프라인망), AIX(아세안 인터넷교환망) 등				
	해상물류망 철강	재생에너지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연결 고속철사업		철강
제조업	자동차조립, 항공기부품	자동차부품, IT, 항공부품	자동차, 가전	친환경, 의료기기	전기·전자 오토바이
농식품 ·바이오	팜오일, 커피, 쌀, 고무, 설탕, 코코아 등		팜오일, 고무 등	미래농업, 바이오	커피, 쌀 등
금융·유통 ·서비스	해양물류 전자상거래	아세안물류허브 /글로벌제조생산기지	Air Asia 등 항공운송	글로벌 금융허브	글로벌수출 가공거점
기타	석유화학	의료관광	제약	AEC 리더	섬유 (임가공)

출처: 박준홍 2015, “떠오르는 아세안을 주목하라” p.8의 표를 새로운 정보 추가로 재구성함.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콩지역 개발도상국가로서 캄보디아의 포지셔닝이다. 캄보디아는 메콩유역 최빈국에 해당되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으로 캄보디아가 얻게 될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는 아세안 공동체의 일원으로 글로벌 상품사슬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아세안은 지역 내 국가들, 특히 CLMV 국가들의 시장 개혁과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통해 낮아진 역내 교역 비용과 캄보디아가 갖춘 낮은 투입 비용(저렴한 인건비와 지리적 위치성)에 힘입어 특히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제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저렴한 가격의 수입 생산재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캄보디아의 국내 시장 환경과 소비자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내 저개발국인 캄보디아는 공동체 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 및 금융지원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공동체 내에서 경쟁도 심화될 것이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아세안 경제통합은 캄보디아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으로 자리하고 있다. 메콩유역국 나아가 아세안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연계성 강화 추세도 캄보디아의 경제발전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캄보디아는 GMS 경제회랑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남부회랑(미얀마 다웨이~베트남의 다낭 및 호치민 라인)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향후 생산과 물류 부문의 성장가능성이 높다.

〈그림 2〉 GMS 경제회랑의 캄보디아 구간



출처: Mekong Institute

주지하는 바와 같이, AEC 출범에 대한 가치는 미래적 기대가치이지 지금 현재 그러한 효과와 가치는 발휘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AEC가 더욱 단일경제단위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끼리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까지 아세안 역내 무역 내향성이 낮은 이유는 첫째, 아세안의 대 역외 무역규모와 비중이 역내 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둘째, 아세안 역내 무역이 주로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아세안 역내 무역에서 중간재 비중이 56.9%이고, 원료는 15%, 최종재는 28.2%이다. 다시 말하자면, 단일생산기지와 단일시장으로서 AEC는 공식 출범했지만 하나의 단일시장으로서 역내에서 원료, 중간 그리고 최종재의 교역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즉, AEC 회원국 모두가 역내 보다는 역외 무역이 활발한 것이다. 따라서 AEC를 좀 더 유기적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AEC가 단일경제단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계획된 “아세안 연계성” 플랜은 아세안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리적, 제도적 그리고 인적 연계성으로 구성된 아세안 연계성 플랜은 아래 〈그림 3〉에서 보여주듯, 10개의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1) 소비층의 증가, 2)생산성과 경쟁력 증진, 3)중진제조업군의 부상, 4)인프라 기회, 5)세계 공급 흐름의 변화, 6)기술변화, 7)혁신적인 기술 배열, 8)자원혁명, 9)세계경제와의 연계성 내 밀화, 10)지정학적 위상 변화 등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갖고 2025년까지 AEC는 많은 변화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한국이 깊이 있게 AEC와 연계될 때, 미래의 한국경제도 AEC가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아세안 연계성 플랜의 구조

Relevance for ASEAN Connectivity dimensions			
Trend	Physical	Institutional	People-to-people
1 Consuming class		Intra-ASEAN trade	Intra-ASEAN tourism
2 Productivity & competitiveness	Need to reduce logistics costs	Improve border management & trade facilitation; attract FDI	Skills development to move up value chain
3 Rise of the middleweights	Infrastructure spend to connect middleweights; focus on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Intra-ASEAN trade boost to middleweight cities	New skills needed as people move from agricultural jobs to urban jobs
4 Infrastructure opportunity	\$3.3 trillion of infrastructure needed to 2030		
5 Transformation of global flows		Coordination with other cooperation frameworks (e.g., APEC, GH, GMS)	
6 The skills challenge			Focus on skills development and labour mobility
7 Deploying disruptive technologies	Development of digital infrastructure	Regulatory frameworks to support digital technologies	Retraining of workers
8 The resource revolution	Development of APG;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Sharing of expertise on resource efficiency	
9 The patchwork global economy		Ability to attract FDI; G-2-G interest in connectivity agenda	
10 Geostrategic concerns	Alignment of infrastructure with national priorities		Need for MPAC 2025 to be seen as relevant to ASEAN population

Legend: Large (Dark Blue), Medium (Medium Blue), Limited (Light Blue)

출처: ASEAN. 2015. Vientiane Declaration on the Adoption of the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p. 35.

## 2.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국가특성

말레이시아는 현 총리인 나집(Najib)은 독립된 말레이시아의 6대째 총리로서 2009년 임명된 후 2013년 재임에 성공했다. 60년 가까이 정권교체 없이 현 연립여당인 국민전선(BN)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총선에서 정권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총 득표수에서 야당의 국민연합(PR)이 여당을 20만 표 앞섰다. 나집 총리는 2015년 7월 약 7억 달러 상당의 1MDB(Malaysia Development Berhad) 자금이 나집 총리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총선까지 현 정권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나집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과 위기에 처한 국민전선이 총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국



가이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서 167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민주주의 수준에 2015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49위(7.03), 필리핀 54위(6.84), 말레이시아 68위(6.62), 싱가포르 74위(6.14), 태국 98위(5.9), 캄보디아 110위(4.27), 라오스 115위(2.21)이다. Economist 측정기준으로 민주주의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위가 노르웨이 9.93이고, 167위가 북한으로 1.08점이다. 이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4년 민주화 이후 3번째로 직선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면서 최초로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즉, 친 민주적이자 개혁주의 성향이 뚜렷한 조코위(Joko Widodo) 대통령이 201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번 선거는 10년만의 정권교체이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과 유습 칼라(Jusuf Kalla) 부통령은 모두 기업가 출신으로 이전 권력계층인 군부세력과 연관이 없는 세력으로 권력을 구성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첫 문민정부 출범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인도네시아 시민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태국은 왕정체제가 유지되는 입헌군주제와 상하원 양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한다. 태국이 서구적 정치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업과 정치의 관계는 크게 세 단계로 변화해 왔는데, 첫 번째는 정당이 처음 출현한 1946년부터 1988년까지로 기업가들이 군부정부를 지원한 시기이며, 두 번째 지방 기업가들이 정치와 정당에 참여하는 시기, 세 번째는 2006년 이후 기업가 계층이 정치권력을 지배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탁신은 2001년 선거에서 승리하고 1차 집권기를 끝낸 후 2005년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었으나 부정부패와 연루되고 야당, 언론과 대립하면서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결국 2006년 초 자신의 주식을 싱가포르 기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불거졌고, 9월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실각하였다. 2006년 탁신(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실각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0년간 2번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며, 7명의 총리가 교체되는 등 불안정한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태국정치의 구조를 만들어왔던 푸미폰 국왕이 별세했다. 태국은 1년간의 애도기간을 갖는데, 애도기간이 이후 태국정치는 어디로 갈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필리핀도 올해 두테르테 신정부가 등장하였다. 아키노 대통령의 재임시절에는 6% 내외의 고도성장을 계속했으며, 경제 정책의 중심으로 시장개방과 제도개혁, 외국인 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출 확대를 기조였는데, 과연 2016년 5월 선거 이후 새로이 출범한 신정부가 과거 정부의 경제 기조를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가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최근 대통령으로 당선된 두테르테는 범죄와의 전쟁을 부각시켜 최고 득표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쌀 지원이나 연 50만 폐소(약 1천2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소득세 인하, 빈곤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 프



로그래 등 파퓰리스트 성향을 보이는 점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베트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이끌어갈 최고지도부는 응웬푸쑹(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 쩌다이꽁(Tran Dai Quang) 국가 주석, 그리고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를 구성하였다. 응웬푸쑹 공산당 서기장은 1999년 제8기 4차 중앙위에서 처음으로 정치국 위원이 된 인물로, 당시 하노이시 당위원회 부비서 이었으며, 이후 하노이시 당위원회 비서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당 이론지 『땀찌꽁싼』(Tap Chi Cong San: 공산잡지)의 편집장도 맡은 바 있었다. 정치적 성향은 중도보수적 인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고 보수적인 의제들을 고수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국가 주석으로 내정된 쩌다이꽁은 공안부 장관 출신이자 현역 군인으로서 중도보수파로 분류되고 업무 추진력이 강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총리로 내정된 응웬쑤언푹은 부총리 출신으로서 응웬떤중 전(前) 총리와 함께 개혁적인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개혁그룹에서 이탈하여 온건파로 분류되고 있다. 출신지역 및 성향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15년까지는 중부 및 남부 출신의 개혁파가 우세를 보였으나, 2016-2020년에는 북부와 중부 출신의 보수 혹은 온건파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최고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최고지도부의 성향은 곧 시기별 경제 및 외교 정책의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예를 들면, 남부 출신의 개혁파 인물인 판반카이 총리는 2005년에 베트남 지도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두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강화시켰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의 WTO 가입(2006년)을 지지하였고 이후 베트남은 비약적인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재정 시장과 GDP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었으며 국영기업의 주식사회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현재 캄보디아의 공식명칭은 캄보디아 왕국으로 국가형태상 입헌군주국이며,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임기 5년의 국회(national Assembly)와 임기 6년의 상원(Senate)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원수는 국왕의 담당하며, 각료 등 고위직 공무원, 군인, 대사, 법관 임명에 대한 서명권, 군 최고통수권, 국제조약에 대한 최종서명 및 비준권 등을 국회의 동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총리 역시 임명권자는 국왕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국정운영은 정부 수반인 총리가 한다.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이 국가 원수의 자격을 지니고 있으나 총리인 훈센(Hun Sen)이 31년째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의 캄보디아 정치상황을 낳은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3년 7월 총선인데, 이 선거는 심각한 부정선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야당인 CNRP이 훈센의 CPP의 68석(총 123석 중)에 이어 55석을 차지하며 대거 약진하였다. 총선에서 집권당인 CPP의 축소(90석 ⇒ 68석)를 경험한 훈센은 야당 무력화와 장기집권의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다. 총선 후 CNRP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며 정치적 갈등이 1년 이상 심각하게 펼쳐졌으나 2014년 7월에 여야 간 협상 타결 끝에 의정활동에 복귀하였다. 캄보디아의 다음 총선은 2018년 7월로 예정되어 있다. 다시 야당의 약진을 기대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 탄압에 따른 대안 세력의 부재가 해소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얀마의 정권 교체에 준하는 캄보디아 정치적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2018년 총선에서도 훈센의 재집권의 점치는 전망이 보다 우세한데, 독특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캄보디아의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안정성을 인정받는 역설적 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정치적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영역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정치적 불안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 정치적 안정이 국민과 다른 정치세력을 배제한 채 강요된 안정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정치체제는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동남아 국가들이 만들어온 각자의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정치의 본령이자 보편적 가치인 ‘국민복지’, ‘자유, 평등, 인권’, ‘법의 지배’ 등과 같은 가치가 동남아 개별 국가에 내면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아세안공동체(AC)의 하나의 축인 정치안보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이러한 지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가 역내에서 현실화된다고 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정치과정을 좀 더 민주적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 3. 산업 및 경제정책의 변화

말레이시아에게 있어 2016년은 5개년 경제개발계획인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의 원년이 다. 말레이시아는 195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2015년 5월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계획을 담은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을 발표했다.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은 1991년에 만들어진 ‘Vision 2020’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은 총 2,600억 링깃(728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인프라 구축에 50%, 교육 및 보건의료분야에 30%, 사회안전망 구축 및 행정 분야에 20%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제10차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6개 ‘전략적 추진분야(strategic thrusts)’와 경제 성장 궤도의 근본적 변혁을 꾀하기 위한 6개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 단계 경제정책은 1971-1990년의 신경제정책, 1991-2000년 국가발전정책, 2001-2010년 국가비전정책을 이어서 2011년에서 2020년까지 계획된 국가개조정책의 연장이다. 국가개조정책은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고소득 경제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통한 인간 중심의 새로운 경제 모델 도입하려는 목적으로, 경제개조프로그램과 정부개조프로그램의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는 국가 산업의 지속성에 가장 중요한 12개의 경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고, 후자는 공공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대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핵심은 무슬림 산업육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경제의 글로벌 리더를 자처하면서 이슬람 경제를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주요 성장 동력으로 간주하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7개의 영역(음식, 금융, 의류/패션, 관광, 미디어/레크리에이션, 의약품, 화장품)으로 구성된 이슬람 경제지표에서 미디어/레크리에이션(15위), 의상/패션(4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할랄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교역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할랄 산업을 정부의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74년 처음 할랄 인증제를 도입하고 할랄 제품의 표준화에 앞장서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 조코위 정부는 2015년 ‘중기경제개발계획(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2015–2019, 이하 RPJPN 2015–2019)’을 발표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발전계획의 핵심은 “인프라”이고, 그 중에서도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인프라”이다. 이러한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제출한 것이 ‘중기 외부 차관 계획(Daftar Rencana Pinjaman Luar Negeri Jangka Menengah 2015–2019(List of Medium-Term Planned External Loans 2015–2019), 이하 DRPLN–JM 2015–2019)’이다. DRPLN–JM 2015–2019의 88%가 인프라 관련 재정마련 계획이고, 12%가 그 밖의 영역에 해당된다.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 및 산업정책에서 두 가지 발전계획이 존재하였다. 수하르토 집권 시기 경제발전계획과 유도요노 집권 시기 경제발전계획 프로그램이다. 수하르토 정부는 1967년 IMF 제안에 기초하여 탈출(1966), 회복(1966), 공고화 프로그램(1967)을 거친 이후, 1968년부터 세계은행 지원 하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ncana Pembangunan Lima Tahun I, 이하 Repelitia I)’을 수립하였다. 1969년부터 Repelitia I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최종적으로 5단계를 거쳐 1994년까지 총 25년간 전개되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첫 민선 대통령 집권시기인 유도요노 정부는 2011년에 만들어진 2025년까지의 경제발전계획으로 ‘MP3EI(Masterplan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2014년까지 집권이었던 유도요노 행정부의 경우 2011년에서야 이러한 발전계획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집권 말까지 정책실효성은 현저히 낮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RPJMN 2015–2019는 MP3EI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코위 정부의 중기적 계획을 밝히고 있다. RPJMN 2015–2019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주권확보와 해양중심국가 건설이다. 인도네시아는 쌀, 설탕, 콩, 옥수수 등 농산품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주권 확보는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이다. 둘째, ‘국제해양허브’를 포함한 인프라 개발 최우선 과제정책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하나로서 높은 물류비는 인도네시아 국가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 확보와 개선이 경제발전에서 있어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관광분야, 해양관광, 에너지 주권이다.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로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고, 에너지 넷째, 투자부양, 중소기업육성, 수출증대, 민간소비 진작이다. 다섯째, 부패, 비능률적인 정부 관료주의 극복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비능률과 부패의 극복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열쇠이다. 인도네시아 경제 및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은 ‘부패구조’에 있고, 이 부패구조의 핵심은 정부 관료의 역할에 기인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은 조코위 정부에게 있어서 매우 큰 도전이다.

태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으나, 1980년대 일본 기업의 진출로 제조업이 육성되었다. 태국은 이후 개방적 경제체제 아래 제조업 산업국가로 빠르게 전환하였고 농업 부문의 감소와 제조업의 성장이라는 산업구조가 정착되었다. 그럼에도 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농어업부터 첨단산업까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산업에서 고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의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은 수출과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은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이고 동등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자국의 발전 수단으로 간주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AEC의 출범에 맞춰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외환 송금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투자 장려 7개년 전략(2015~2021년)을 발표하였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기계류의 수출입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주변 개발도상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태국은 기계 부품(machinery parts and components)의 ‘태국 플러스 원(Thai plus one)’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태국에 소재한 기계 산업 본 공장(mother factory)을 거점으로 주변국에 위성공장(satellite factory)을 설립하여 일부 부품을 공급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태국과 주변국의 무역을 증진시킨다. AEC 출범과 더불어 서비스 부문 역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항공·e-ASEAN(정보통신)·의료·관광 부문을, 2013년까지 유통 부문을, 2015년까지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였다. 태국 정부는 경제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고 AEC 통합을 주도하기 위해서 공공건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ASEAN 물류 허브화를 추진하기 위한 철도 복선화, 방콕 매트رو 프로젝트, 수완나폼 공항 2단계 확장을 포함하는 총 750억 달러 규모의 2015~2022년 인프라 개발 계획도 발표하였다.

필리핀은 전체 GDP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50%를 넘을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제조업, 농업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력구조에 있어서는 농업이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아, 전체적으로 산업구조 대비 노동력 구조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은 주로 반도체 완제품 및 부품품,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용 등이며, 한국, 미국, 일본의 글로벌 제조 기업이 주로 진출해 공장 설립 후 수입한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든 후 해당국가 또는 제 3국가로 수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 10년간 평균 5.5%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며, 향후 10년도 5~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 숙련 기술자가 부족하며, 학교 탈락률이 6.0%에 달하는 점, 그리고 GDP의 20%만이 투자에 사용되는 점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율이 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민관협력프로젝트(PPP)의 수행상의 부패나 지연 등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필리핀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를 막는 요인으로

흔히 거론되는 점은, 기득권이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비중이 커서 새로운 업종의 진출이나 경쟁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필리핀은 규제완화와 자유화 정책으로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였고 수출지향 제조업 부흥을 위하여 특별경제 구역을 형성하곤 하였다. 섬유나 전자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 FDI는 세계은행 등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183개 국 중에서 136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 환경이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필리핀에서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패와 비효율적인 관료제 때문에 투명성이 낮고 투자자에게 비용을 높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베트남은 매 10년마다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성과를 검토 및 평가하면서 향후 5년의 계획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1991-2000 그리고 2001-2010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을 통해 베트남은 “저소득국, 중앙 계획화된, 그리고 농업 기반의 경제 구조”로부터 “중저소득국, 급속히 성장하는, 그리고 지역(regional) 및 세계(global) 시장 기반의 경제 구조”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2011-2020 SEDS 단계의 기본적인 목표는 2020년까지 “현대화된 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 및 사회적 안정, 물질적으로 개선된 생활수준, 그리고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선진공업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GDP 성장률 연간 7~8% 유지,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달러, 도시화 비율 45%, 그리고 GDP 가운데 공업 및 서비스 비중 85%를 달성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현재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을 실현 중에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2016년 초에 실시한 제12차 전당대회에서 1986년 도이머이 추진 이후 30년 그리고 2011-2015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 동안(2016-2020)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2016-2020 SEDP는 베트남 신정부의 경제 발전 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캄보디아의 산업 및 경제발전의 방향은 2004년 제 3기 캄보디아 연립정부 출범과 더불어 발표된 사각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정책 행동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분야별 과제 선정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기능 강화를 강조하였다. 2008년 제 4기 정부 10개 분야(농업, 물 및 관개 시스템, 운수 인프라, 전력, 인재육성, 노동집약형 및 수출주도형 산업, 관광, 천연자원개발, 정보통신, 무역) 우선산업 선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현재도 유지 중이다. 2015년 8월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 IDP 2015-2025》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최초로 수립된 장기발전계획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기반의 강화와 투자확대를 위한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담고 있다. 발간 기념식에서 훈센 총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고성장을 위해 경제 다각화, 경쟁력 강화,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IDP의 수립은 국가경제의 구조 개혁과 변화하는 지역 및 지구적 경제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의 착수를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캄보디아

경제 구조는 의류, 건설, 식품가공업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IDP 2015-2025》은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중 산업부문의 비중을 2013년의 24.1%에서 30%까지 올리며,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통해 비섬유 부문의 수출을 15%까지 증대시키되, 특히 농산물 가공 상품의 수출 비중을 총 수출의 12%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국, 2050년 고소득국의 지위에 오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 4.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소비문화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30,261,700명, 2014년 2분기 기준)의 67%가 무슬림이고, 이슬람이 국교로 지정된 이슬람국가다. 말레이계(말레이 50.1%, 원주민 11.8%), 중국계(22.6%, 중국 남부 광둥·복건 출신), 인도계(6.7%, 남부 타밀계)와 외국인 거주자(8.2%)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헌법에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Malay)에 대해서는 헌법 160조에서 이슬람 종교를 믿으며, 습관적으로 말레이어를 말하며, 말레이 관습을 따르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관광을 장려하는 홍보영상에서 말레이시아를 ‘진정한 아시아(Malaysia, Truly Asia)’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의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인의 월 평균 임금은 2015년 기준 2321 MYR(한화 약 63만원)이다. 2011년 이후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6년 최저임금은 900MYR(한화 약 23만 6천원)이다. 경제성장, 도시화 등으로 중산층 화이트칼라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고급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 증가는 전체 소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사회통합 부문에서 종족 간 격차 문제와 관련하여 민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통계부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사용 인구가 56%, 인터넷은 57%, 그리고 핸드폰 사용자는 94.2%에 달한다. 인터넷 사용자 중 60.3%는 하루에 적어도 한번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활동 중 상품 주문 및 서비스 구매가 15.3%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기술, 정치·법률,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소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기술적인 차원에서 인도네시아는 산업화 시대 기술과 정보화 시대 기술을 기초로 연계성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국가로 진입하였다. 즉,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구비한 것이다. 정부도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그 전자정부가 실효성이 높은 기능하는 정부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사회는 이미 ‘디지털화’가 매우 진전된 사회이다. 1억 3천 만 명이 인터넷 유저(침투율 34%)이고,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7천 9백만 명(침투율 30%), 모바일 연계성은 3억 2천 만 명(침투율 126%)으로, 활동적인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6천 6백 만 명(침투율 25%)이기에 하이테크 스타트업의 창업, 전자상거래가 붐이다. 다음으로 정치·법률적 의미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민주주의가 동남아 다른 어떤 국가와는 달리 발전된 국가로서 패권적인 정당지배체

제는 사라진 상황이다. 네티즌들이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다.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은 정치·법률적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지역’에 기초한 사회가 되었다. 2001년 지방자치제 도입과 2004년 6개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발전계획 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양주도의 경제”는 현재 인도네시아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제 개념의 하나이다. 넷째, 인도네시아 문화다양성은 세계적 수준이다. 종족, 종교, 언어, 음식, 자연생태계 등 2억 5천 만 명 문화다양성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인구의 다수가 무슬림이다. 그 중에서도 젊은 무슬림 세대는 인도네시아 사회문화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구조적으로, 정치·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진보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마케팅 분야가 속출하는 것이다. 금융·서비스분야, 자동차와 교통, 물류, 통신, 미디어, 전자상거래, 의약품, 의료, 소매, 부동산 등이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지구상에서 4번째로 큰 국가로 지역도시발전은 경제적 가치가 높다. 즉, 경제성장, 디지털화 그리고 세계화는 현대 인도네시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인구규모, 중산층 성장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세대 비율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 60% 이상이 20세-65세 사이의 젊은 국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인구의 27%는 15세 미만이다. 이러한 젊은 국가로서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흥미롭고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점은 “젊은 무슬림 세대(Generation Muslim)”의 등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존재하는 최대 무슬림 국가인데, 중동과는 달리 실용적이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특징이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젊은 세대에서 더욱 더 두드러져 나타난다. 인터넷에 강하고, 패션에 감각적이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등 인도네시아 사회변화를 저변으로 이끌어가는 층이다. 또한 현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젊은 무슬림 세대가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가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다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태국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의 증가로 소비문화는 크게 변화되고 있다. 2014년 태국 가계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10,129달러이며 중산층 가계는 570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1/4(25.6%)을 차지한다. 화장품, 소형 가전 등 소비재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른 여성 소비층에 대한 전략도 필요해 졌다. 페이스북, 라인 등 SNS 이용이 활발한 편으로 주변 지인 등의 추천이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태국의 1인당 GDP가 6,000 달러를 넘어서면서 구매력을 보유한 중산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비시장은 프리미엄, 중저가, 저가 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휴대폰, 인터넷을 활용한 SNS의 역할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소비참여율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간 100억 달러의 시장으로 등장한 건설업,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외국인 관광산업(호텔, 음식점 포함), 중산층의 증가에 따른 소비재 및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편의점·할인마트를 포함하는 유통업, 신세대를 타깃으로 한 인터넷·모바일 쇼핑이 투자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다. 태국 인구의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95년 65

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불과 인구 비중의 5%를 차지하였지만, 2016년에는 노인 인구가 약 750만 명으로서 전체의 11%를 차지하였다. 2040년에는 노인 인구가 1,7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이며,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2,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출산율은 1965년 6.1명에서 2015년 1.5명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현재 4,900만 명에서 2040년 4,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국제 노동인구의 유입과 문화적 다양성은 증가하여 태국 사회문화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2010년 현재 태국 내에는 약 38만 명의 합법 노동자와 95만 명의 불법 노동자가 체류 중이다. 또한 태국의 청년층 인구의 감소는 성장잠재율의 감소와 더불어 노령 인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라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베트남 인구는 약 9,200만 명으로 세계 14위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 및 소비시장으로서 베트남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 전체 인구 가운데 0세부터 14세까지는 23.84%이고, 65세 이상은 6.01%,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즉, 생산가능 인구는 약 70.15%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0세부터 54세까지는 여성 대비 남성이 1.00 이상으로 남성이 더 많은 반면에 55세 이상은 1.00 이하로 여성이 더 많다. 따라서 베트남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많고 그 중에서도 젊은 남성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전통 및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소비문화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베트남은 북부 홍강 델타(Hong River Delta)와 남부 메콩강 델타(Mekong River Delta)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생태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보유함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생활의 조직 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홍강 델타와 남부 메콩강 델타는 각각 북부와 남부의 주요 경작지이자 생활 중심지로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곳이다. 북부 홍강 델타 지역은 고저에 따른 차이가 심해 땅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배수 및 토양의 비옥도에 대한 편차가 크다. 이러한 환경 탓에 대규모 단위의 인구가 고지대의 비옥한 토지에 집중되면서 자연스레 핵 모양의 응집된 촌락 유형이 형성되었다. 또한, 산적 등의 외부 침입자들의 습격에 대비하여 나무 울타리로 보호하는 등 촌락 단위로 대처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했다. 게다가, 척박한 환경에서의 노동 집약적인 쌀농사는 고유한 협동 방식과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켜 나가게 만들었다. 이처럼 북부와 같은 촌락사회는 자연스럽게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지향하게 되고, 나아가 촌락 개별 단위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자치 기능을 발달시키게 된다. 따라서 북부 홍강 델타의 촌락은 친족, 이웃과의 친분관계, 마을 내에서의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상부상조하면서 폐쇄적인 촌락사회 내부에서 자율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그 기능이 유지되었다. 북부에 활발하게 조직되어 있는 상부상조를 위한 경조회, 계모임, 동창회 등의 비공식 친목단체들의 기원 역시 이로부터 유래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북부와 달리 남부는 자연적으로 수량(水量)이 조절되는 우호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쌀 농업이 발달하였다. 메콩강 델타의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과 조건은 상호 협력을 위한 대규모의 밀집된 촌락 유형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남부 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토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주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핵가족 단위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새로운 농토를 개척하는 방식이 생존과 적응에 보다 유리했다. 북부와 같은 촌락 단위의 자발적 단체들이 남부 지역에 조직화되지 못한 이유는 지리적 환경에 따른 분산된 정착 유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캄보디아는 내수 인구가 약 1,545만 명으로 매우 적고 그 중 85% 이상이 1인 GDP 1,135 달러에 허덕이는 세계 최빈국인 만큼 캄보디아 내수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진출에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캄보디아에서도 이른바 중산층이 등장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소비풍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적 기준에서 중산층은 꽤 잘 사는 사람들로 이해되지만 사실 중산층에 대한 규정은 국가경제 규모와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2013년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1,000 달러를 돌파했으며, 같은 해 세계은행의 발표한 캄보디아의 중산층의 정의는 ‘일일 소비지출 2.6-5.1달러인 가구’이다. 추가적인 특징으로 이 구간의 가구는 텔레비전과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 구간에 속하는 캄보디아인은 전체 인구의 20%로 대부분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 같은 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아시아태평양 노동시장 보고서는 보다 보수적인 중산층 정의를 내놓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절대적 측면에서 하루 4% 이상의 수입을 얻는 이들을 중산층으로 규정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전체인구의 약 10%가 속한다. 프놈펜 포스트에 게재된 프놈펜의 신흥 소비계층에 대한 기사는 캄보디아 중산층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공해준다(The Phnom Penh Post, 2014-09-06). 이 기사는 치훈이란 이름의 한 봉제공장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편과 딸 하나를 둔 치훈 가족의 월 소득은 200달러 정도로, 하루 5달러 내외로 일상을 살아가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여성은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TV, 휴대전화, 최신 오토바이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50달러 정도씩 저축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 5. 한국기업 진출과 시사점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의 정치·외교적 변화, 인구사회학적 변화, 산업구조·산업정책변화 그리고 투자 및 유망업종 분석을 전제로 각 개별국가에 대한 한국기업 진출과 시사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3천 달러를 넘어서서 선진국 진입을 앞둔 산업국가다. 따라서 한국 기업 및 정부는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비재 및 문화콘텐츠 시장으로서 말레이시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한류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인 국민정서는 한국 소비재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한-ASEAN FTA관세 추가 인하 품목 및 할랄 인증 제품 등이 유망한 수출품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매력이 있고 글로벌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중산층 시장의 “테스트베드”로서 말레이시아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 투자부문에서는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한국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ICT를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및 신 재생에너지에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큰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경제 불안정성에 따라 수출 급감,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인 기초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생존경쟁이 불가피하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지원이 요구된다. 말레이시아가 선도하고 있는 할랄 산업과 이슬람 금융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중동 시장을 포함한 이슬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 ◆ 한류, 동방정책 등으로 인해 형성된 친한 분위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재 및 문화 콘텐츠 시장 공략.
- ◆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된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매상품 판매를 제고할 여지가 높음.
- ◆ 동방정책 2.0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됨(최첨단 산업, 신재생 에너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 ◆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전개로 신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음.
- ◆ 말레이시아 정부가 교육, 의료서비스,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IT도입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할랄 산업 및 이슬람 금융의 세계적 선도국으로서의 말레이시아를 활용할 방법과 다른 한편으로 대비(비관세 장벽)할 방법을 강구해야 함.
- ◆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시장 진출 거점으로 말레이시아를 활용.
- ◆ 오래전부터 진출기반을 다져놓은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중국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근

교역활동이 활발해지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됨.

- ◆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 주 입찰자가 이미 선정된 경우 파생되는 하위입찰(sub-contract)에 참여하면서 현지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판단됨.
- ◆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 정부 차원의 지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 말레이시아 정부조달 프로젝트에는 실질적으로 말레이계 기업을 통해서만 입찰을 할 수 있는 환경임.

##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시장으로서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onesia, China), 마빈스(MAVINS: Mexico, Australia, Vietnam, Indonesia, Nigeria and South Africa), 시베츠(CIVETS: Colombia, Indonesia, Vietnam, Egypt, Turkey and South Africa), 비스타(VISTA: Vietnam, Indonesia, South Africa, Turkey and Argentina) 그리고 브아이피(VIP: Vietnam, Indonesia and Philippine)에 이르기까지 신흥시장의 핵심으로서 명명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발전한다면 인도네시아는 기대하던 2030년 제7대 경제대국으로, 2050년 전 세계 실질 GDP 성장 전망에서 중국, 미국, 인도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4번째로 자리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게 있어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까지도 매우 중요한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왔지만, 미래 한국 경제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금 “전환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조코위 정부를 통해서 제출되는 “해양강국건설”에 따른 경제 및 산업정책, 정부 개혁 및 거버넌스 기능강화 등 개혁 정책들이 점진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2030 또는 2050년의 비전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인프라 구축” 확보와 조세개혁이 일단계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조코위 정부의 인프라 사업의 성공여부는 자금조달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 조세개혁은 정부의 자금조달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1960년대부터 2000년 현대까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역사를 배경으로 현재 인도네시아가 기대하는 투자분야와 업종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회변화에 기초하여 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도네시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실질화해야 한다. 해양인프라, 교통인프라, 식량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ICT 인프라 등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경험이 한국에겐 있다. 한국이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분야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제도를 이미 축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프라 사업은 거대자금,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홀로 시작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인도네시아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일정정도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별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전체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프라 관련된 영역은 인도네시아만의 요구가 아니라 아세안 저개발 국가들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한다면 훨씬 속도를 내고 진행될 수 있는 일이다.

둘째, 단일생산기지와 단일소비시장으로서 AEC의 성공은 한국경제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현재도 아세안은 한국의 2위 무역파트너, 투자 상대국 그리고 인적교류가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따라서 AEC는 한국경제파트너의 다변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AEC의 성공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AEC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아세안 연계성”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앞서서도 강조했던 인프라는 아세안 전체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강조컨대 한국정부는 아세안 인프라 전담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수주와 재원 마련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연계성에는 인프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인프라가 회원국 10개와 함께 연계해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제도”가 함께 작동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ICT 인프라 중에서 한국의 ICT 기술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 전자정부(e-Government)를 아세안 차원으로 확산시킨다고 보았을 때, 관련 연계 산업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인프라는 물론 “제도”와 “사람” 모든 측면에서 활성화될 것이다. 따라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이 동남아 개별국가와의 경제관계는 이미 지역적 확산을 고려한 것일 수밖에 없고, 당연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인도네시아는 아마도 신중시장의 질을 벗어나고 있는 단계로서,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일찍이 글로벌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많이 진출해있고, 인도네시아 토착기업도 민주화 이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상승과 소득증대로 도시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부유층 그리고 새로운 중산층의 등장으로 제9대 소비시장으로 인도네시아는 부상했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화두인 “제4차 산업혁명”은 한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사회에 도전영역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과 인터넷 정보혁명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혁신 소프트웨어 기술이 제조업과 만나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생활 자체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시대로 이미 진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사회 중에 누가 더 빠르게 변모할 것인가. 한국이 선도적일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의 사회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이러한 혁신의 요소가 있다고 본다. 인터넷 사용빈도, 페이스북-트위터 등 활발한 SNS 사용, 스타트업 등장 등이다. 흔히들 인도네시아는 유선전화의

일반화 없이 바로 무선 스마트폰 사회로 도약했다고 한다. 즉, 인도네시아 사회의 변화패턴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젊은 무슬림 세대 (Generation M)”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진취적이며 현대적 감각의 무슬림을 지향하는 새로운 세대이다. 이러한 세대의 출현이 인도네시아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 사회변화를 매우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열려진 당연한 기회라기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얻어질 기회라고 본다.

넷째, 무엇보다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할 영역이 소비재 산업분야이다. 한국정부도 소비재 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전략을 2016년 상반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먹는 것”, “입는 것”, “예쁘게 하는 것”, “머리와 마음에 새기는 것”,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 등 소비상품의 소비는 단순상품소비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소비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소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않은 국면과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전까지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먼저 경험한 것을 확산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소비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사회문화와 그 문화에 대한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 태국

태국 시장은 세계 어느 국가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급변하고 있다. 태국은 ASEAN 내에서 농업에서부터 첨단 산업까지 가장 광범위한 산업의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태국은 또한 지정학적 중요성에 의해 인근 ASEAN 국가로의 진출이 용이하기에 2015년 AEC의 출범은 커다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태국 시장으로의 진출은 경제적인 잠재력과 기대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추이도 고려해야 한다.

태국은 최근 10년간 군사쿠데타와 잦은 정권 교체와 소요 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6년 10월 태국 국왕의 서거는 정치적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실시되는 태국 총선의 결과는 앞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가늠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태국의 정치적 대립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닌 기저에 경제적 요인 즉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의 요소와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투쟁임을 인식해야 한다. 2000년대 들어 급부상한 탁신 세력은 경제적 불평등을 정치화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정권을 잡았지만, 군부와 민주당을 비롯한 반 탁신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탁신과 그 세력을 축출하였다. 탁신 세력이든 반 탁신 세력이든 태국 경제의 미래를 점유하기 위한 동기로 치열하게 권력 투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 진출은 태국의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태국의 AEC에 대한 대응과 주요 우선 육성 산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동남아 대륙부의 중심에 위치한 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ASEAN의 연계성에 대해 핵심적 역할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태국 정부 역시 국내적·국외적 요인 모두를 고려할 때 교통·물류 인프라 확장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발주하는 교통, 통신, 전력 분야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따라 건설 장비 및 자재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 해외 건설 시장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때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핵심 거점으로 한류의 직접 품목인 음반, 드라마, 영화 산업과 한류의 간접 품목인 화장품, 의상, 팬시용품 진출 전망은 매우 밝다. 또한 태국 정부의 전략적 육성 산업인 의료 관광분야의 성장에 따른 의료기기 및 제약 분야도 투자 전망이 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시장은 낮은 출산율로 2018년부터 노동인구가 감소하며, 잠재성장률이 3%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0.8%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 약간 회복하였지만 2~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계 부채가 GDP 대비 2008년 55%에서 2014년 85%까지 급증함에 따라 민간소비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태국은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잠재성장률 하락 등 ‘중진국 함정’이라는 부정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대 태국 FDI는 2012년 8,500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8,200만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 기간 정정 불안으로 태국의 총 FDI 유입액이 감소 추세였던 것에 반해 한국의 투자는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은 한국 기업의 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태국 내 소비시장 뿐만 아니라 ASEAN 생산·물류 허브를 추진하는 태국의 강점을 이용한 3자 물류 및 ASEAN 역내 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중간 생산·물류기지로의 활용에 대한 검토 등 한국의 대 태국 진출 기업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핵심 산업과 틈새 산업을 발굴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은 ASEAN 통합 시장에 따른 태국의 생산 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생산 분야에서는 아세안 역내 제조업의 변화에 따른 국가별 특징 즉 태국의 특징을 파악하여 산업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자원·노동력·물류·내수시장 등 필요에 따른 적절한 파트너십과의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시장에서의 중산층 급증과 단일 시장 형성으로 인한 소비규모의 확대에 대비하여 신흥시장이 필요로 하는 교육,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여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 필리핀

2014년 12월, 필리핀은 아세안 회원국 중 최초로 유럽연합(EU)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6,000여개의 필리핀산(Made in the

Philippines) 제품에 0%의 관세가 적용되는데, 필리핀 진출 우리 기업 역시 유럽 수출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C 출범을 계기로 교역, 투자 부문에서 외국기업 지분 확대, 관세 인하 등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특히 아세안과의 FTA, RCEP 협상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리핀은 최근 5년 지속적으로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며 특히 최근 인도를 넘어선 BPO 부분의 성장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두테르테는 범죄와의 전쟁을 부각시켜 최고 득표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미디어 보도에서는 신정부 역시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 등 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과, 현 필리핀 헌법에서 규정한 40%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완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신정부가 표방하는 또 하나의 축은 경제 불균등의 완화이다. 그는 지역의 자치를 강화하고 분쟁 지역에 대한 정치적 안정을 통해, 균형적인 연방 형태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게 국민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바는,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이것이 성공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일정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소비자들의 전망을 보면, 2016년 3사분기 기준, 긍정적인 기대가 부정적인 전망을 앞서고 있다. 이는, 정치 안정성의 향상, 더 많은 고용기회, 일용품에 대한 물가 안정,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 효과적 정부 정책,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기대 및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지지, 정부 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필리핀 중앙은행은 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편이나, 인도와 더불어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은 일부 업무를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방법의 하나로, 경영 상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 처리의 운영 및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개념이다. 필리핀은 2010년 기준으로 330,000명의 고용을 이끌어 내서 세계 제일의 수준이 되었으며, 비음성 기반 서비스에 있어서도 200,000 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있어서, 수출액이 2004년 13억 달러에서 2013년 133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고용 역시 2004년 101,000명에서 2013년 90만 명으로 9배가량 증가하였다. 영어 구사 능력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까지 2015년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액 누계는 7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입액의 경우 30억 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의 대필리핀 10대 주요 수출 품목은 주로 대기업 위주의 제품이지만, 중소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제품군을 찾아 수출을 다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가전/전자제품 및 부품, 자동차 부품, 화장품, 식품류 등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가능성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6년 1월 1일부로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율이 0~5%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ASEAN 시장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IT 인프라 및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인력을 기반으로 BPO 사업의 진출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이 투자를 한다면 전도가 유망한 상황이다.

## ○ 베트남

베트남은 아세안 내에서 중간제조업 경쟁국가군(Mid-Manufacturing Competitors)에 속한다. AEC 출범 이후 베트남은 아세안 선발 6개 회원국가들(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 후발 4개 회원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베트남은 EU 그리고 한국을 비롯하여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베트남과 같은 신흥 잠재 시장으로의 투자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에 기반 하여 본 연구는 AEC 출범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베트남 시장의 역동성을 자국 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부문의 특성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 베트남은 정치외교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매 5년마다 공산당 전당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올 해 2016년에는 제 12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5년간(2016-2020) 국정을 이끌어갈 신 지도부 인사들을 선출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최고지도부 인사(공산당 서기장, 국가 주석, 그리고 총리) 그리고 정치국 위원들(19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북부 출신의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베트남은 개혁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개방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정책을 보다 우선시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치적 변화와 함께 2016년은 베트남의 경제 및 산업 부문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베트남 공산당은 매 10년마다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을, 그리고 매 5년마다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올 해 2016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략 가운데 지난 5년간의 계획 및 목표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5년간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시기적 당면성에 직면한 시점이다. 또한, 다가올 2021-2030 SEDS 수립을 위한 준비기간이기도 하다.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과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에서 베트남은 “선진화된 공업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2025년까지 베트남 공업 발전 전략, 2035년을 향한 비전’에 대한 총리 승인 결정문에 따르면 가공 및 제조 분야, 전자 및 원거리 통신 분야,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해 202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세부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이러한 총리 승인 결정문에 제시되어 있는 우선적으로



선정된 공업 발전 분야에 주목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베트남에서 유망한 100대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공인프라 부문, 제조·가공업 부문 그리고 소비재·유통 및 서비스 부문에서 잠재 가능성이 큰 국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주로 FDI를 통한 가공 위주의 산업을 주로 이행해왔지만 향후 베트남이 기술이전을 통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끝으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지형적으로 긴 'S'가 모양의 형태로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역사적으로 남북 분단의 경험이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남부보다 북부 지역이 유교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았다. 이러한 지형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두 지역은 식민화, 공산화, 그리고 근대화의 과정에서도 서로 이질적인 경험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정치적 수도인 북부 하노이와 경제적 수도인 남부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베트남 남북부의 맥락은 베트남인들의 소비 성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하노이를 중심으로 베트남 북부는 지형적 환경과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근엄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폐쇄적인 형태의 연결망을 발달시켜왔다. 따라서 북부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 부터 평판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개척하기보다는 기존 제품을 선호하고 소비 의사 결정에 있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남부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동이 자유로웠고 주거 형태 역시 분산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이고 개방적인 연결망을 발달시켜왔다. 따라서 남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변화에 대해 잘 받아들이면서 즉흥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만을 선호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의 인구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가운데 15세~64세까지의 노동가능인구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기에 유리하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기술 혁신을 통한 선진 공업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체 인구 중 0세~24세까지의 인구 역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베트남 소비재 시장이 유망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베트남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중산층이 더욱 두터워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 기업들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사업 및 소비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캄보디아

2011년 이후 매년 6~7%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캄보디아 경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도 산업은 섬유(의류 및 봉제)와 관광이다. 캄보디아는

중국 및 베트남의 임금 상승에 따라 이전을 모색한 섬유 분야 기업들의 차세대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봉제제품의 주수입국인 EU, 미국의 주문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도 캄보디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다. 최근의 경제성장과 중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들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동산 건설 부문 역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축으로 부상 중이다. 관광과 제조업 생산에 이어 물류 및 건설 부문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수도 인근과 접경지대인 포이펫(Poipet, 태국 접경)과 바벳(Bavet, 베트남 접경)에서 대규모의 경제특구(SEZ)가 조성되어 아시아의 주요 자본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건설 PF 사업과 부동산 투자의 과열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프놈펜에 향후 공급될 대부분의 아파트가 캄보디아인들이 거주하기엔 가격이 너무 높아 대부분의 수요는 외국인 투자자로 제한되고 있다. 그렇지만 2030년까지 프놈펜의 도시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거 부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렴한 주거시설 공급으로 기존 시장과의 차별화를 둔 접근으로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의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캄보디아는 또한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대상국 중 하나로 개발협력, 환경협력, 경제협력 간의 조화와 협력이 어느 국가보다 필요한 국가이다. 예컨대 본문에서 강조한 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나 틈새시장으로서의 친환경 농업생산 및 유통 부문, 농촌개발사업 등은 적극적인 관심을 요하는 부문이다. 캄보디아는 생산, 소비, 유통 부문에서 성장잠재력이 상당히 높다.

최근 캄보디아는 투자대상국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2015년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외자 유입은 캄보디아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경상수지 부문의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그 원인이 늘어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증가 그리고 건설 부문의 수입자재가 늘어난 결과이다. 따라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부문의 적자폭도 궁극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봉제와 관광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산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2003년 이후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향상, 인프라 및 신설,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인력 양성 등의 4개의 과제를 설정하고 각각의 과제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적인 대외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상 캄보디아의 경제 단기적 성장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위험요소도 분명하다. 경제 성장 속에 캄보디아에서는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의 조짐 역시 보이고 있으며 봉제공장의 노사분규 및 최저임금 상승, 높은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존재한다. 특히 캄보디아는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무력 충돌과 파업의 진통을 겪었다. 전력과 교통 체계 등 인프라의 대부분이 태부족하고,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한 양질의 노동인구 확보의 어려움도 캄보디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정적

요소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에 대한 국가 안팎의 전망은 긍정적인 편이다. 캄보디아는 2013년경 총인구 1500만 명을 넘어선 캄보디아는 평균 연령이 27세에 불과한 젊은 국가로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산층이 확대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 해 7월에 캄보디아가 저소득국가(low income country)를 벗어나 하위중소득국가(low middle income country)에 들어선 것은 이러한 가능성 실현을 보다 가깝게 만들고 있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캄보디아를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프론티어 시장'으로 보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소비부문 진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피로회복제인 박카스가 2015년 캄보디아에서만 1억 캔 이상 팔리며 캄보디아의 '국민 음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일본계 대형물 체인인 이온몰도 2014년 베트남에 이어 프놈펜에 2014년 프놈펜에 상륙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형성과 소비문화 확산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는 봉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 부문의 일부 중소규모 투자처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하며 정확한 타겟팅을 갖춘다면 소비재 시장이나 숙련 제조업으로의 진출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캄보디아의 지리적 장점과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 나아가 아세안경제 공동체 내에서의 캄보디아의 전략적 위치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간의 경제교류, 경제협력,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의 전망과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이상의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국가 현황 및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